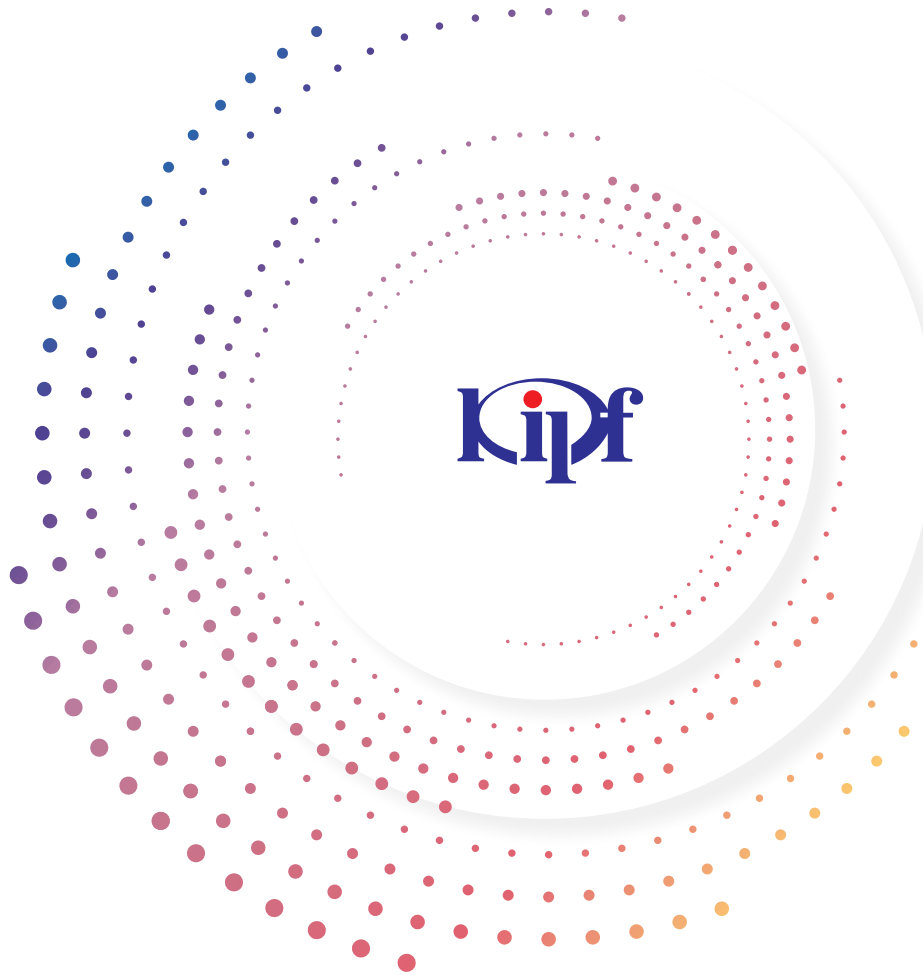


2024. 12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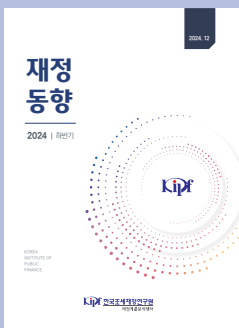
2024 | 하반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재정 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연구진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 센터장

김정환 재정제도분석팀장

강민채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EU)

구윤모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미국)

김은숙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김진아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호주)

박신아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스웨덴)

박지혜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스웨덴)

염보라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독일)

오윤서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미국)

이정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일본)

이정인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프랑스)

하에스터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네덜란드)

황보경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IMF, OECD)

김미영 재정지출분석센터 위촉연구원(대한민국)

2024. 12.

재정 동향

2024 | 하반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
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Contents

제1부

국내 재정동향

I. 국내 재정동향	2
1.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2
2.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표	3
3.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발표	4
4. 2025년 예산 국회 확정	5
5.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	7
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통보	7
7.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8

제2부

국제기구 재정동향

I. 유럽연합(EU)	12
1. 유럽연합(EU) 예산	13
2. European Semester	21
3. 주요 정책 및 이슈	44
4.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49
II. 국제통화기금(IMF)	66
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67
2. 연례협의	76
3. 금융지원	82
4. 기타	84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7
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87
2. 주요 경제지표 동향	98

제3부

주요국 재정동향

I. 미국	106
1. 예산 및 결산	107
2. 주요 정책 및 이슈	126
II. 일본	156
1. 예산 및 결산	157
2. 주요 정책 및 이슈	174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185
III. 독일	189
1. 예산 및 결산	190
2. 주요 정책 및 이슈	200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213
IV. 프랑스	224
1. 예산 및 결산	225
2. 정책적 이슈	237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245
V. 영국	257
1. 예산 및 결산	258
2. 주요 정책 및 이슈	266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279

VI. 호주	295
1. 예산 및 결산	296
2. 주요 정책 및 이슈	303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316
VII. 네덜란드	319
1. 예산 및 결산	320
2. 주요 정책 및 이슈	328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342
VIII. 스웨덴	349
1. 예산 및 결산	350
2. 주요 정책 및 이슈	358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380
[주요 자료 출처]	384

2024년 하반기 재정동향

제 1 부

국내 재정동향

I. 국내 재정동향

I 국내 재정동향¹⁾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01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2024. 7. 3.)

- '24년 하반기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
 - '민생현장 동행팀'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여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

표 1-I-1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주요 내용
(1) 소상공인·서민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 추진 ※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지원, 재기지원, 인프라 구축 -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
(2)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 위해 재정지원, 공공요금, 시장 감시 등 정부·공공기관·소비자단체 공동 대응 -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 중소기업 근로자·실업자 등 생활안정 지원
(3)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 건설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 소비 보강, 국내관광 유도, 투자·수출 촉진
(4) 잠재리스크 관리	- 부동산PF 시장 안정화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조 유지 -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 7. 3., pp. 3~9 바탕으로 저자 정리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미영 위촉연구원(mykim21@kipf.re.kr)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보도 발표·게재자료 등을 발췌·정리하여 작성

-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7. 3.)」 추진 병행
 - 역동경제(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 ‘국민 삶의 질 개선’ +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

표 1-I-2 역동경제 로드맵(3대 분야 10대 과제)

기본 방향	주요 과제
(1) 혁신생태계 강화	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②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③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2) 공정한 기회 보장	④ 균등한 기회 ⑤ 정당한 보상 ⑥ 능동적 상생
(3) 사회이동성 개선	⑦ 가계소득·자산 확충 ⑧ 핵심 생계비 경감 ⑨ 교육 시스템 혁신 ⑩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2024. 7. 3., p. 5; p. 15.

02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표(2024. 8. 27.)

- 국세감면액(감면율) 2024년 71.4조원(15.3%), 2025년 78조원(15.9%) 전망
 - '23년 국세감면액은 69.8조원으로 '22년 대비 6.2조원 증가,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3%)를 1.5%p 상회
 - '24년 국세감면액은 '23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71.4조원으로 전망,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
 - '25년 국세감면액은 '24년 대비 6.6조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

표 1-I-3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단위: 억원,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국세감면액(A)	697,664	714,305	780,178
국세수입총액(B) ¹⁾	3,703,803	3,949,465	4,122,410
국세감면율[A/(A+B)]	15.8	15.3	15.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²⁾	14.3	14.6	15.2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23년은 결산, '24년, '25년은 세입예산 기준)

2)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조세지출예산서」, 2024. 8. 27., p. 1.

- 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 분야 분류로 일원화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 사회복지 + 보건 → 보건·복지·고용(371,146억원)
 - 교통 및 물류 + 국토 및 지역개발 → SOC(11,203억원)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과학기술 → R&D 분야 신설(29,839억원)

03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발표(2024. 10. 28.)

-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경과
 - 2024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고 민생·경기 영향 최소화
 -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
 -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시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소통 강화
 -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 및 국정감사 통해 재정 대응방안 논의
 - (관계부처·지자체) 지방 재정여건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민간 전문가) 재정 대응방안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 노력 강화
-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국세 부족분 △29.6조원은 가용자원 14조~16조원 + 교부세(금) △6.5조원 수준 + 불용 △7조~9조원으로 대응 계획

- (가용재원) 공자기금, 외평기금 등 약 14조~16조원 수준 활용
- (지방교부세·금) 지자체 재정여건 등 감안, 약 3.2조원 교부
- (불용) 전년 수준의 통상적인 불용 전망(7조~9조원)

표 1-I-4 재정 대응방안 세부 내용

(단위: 조원)

세부 내용	활용 규모
합 계	29.6조원 내외
(1)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14.0~16.0
① 공공자금관리기금	4.0 내외
② 외국환평형기금	4.0~6.0
③ 주택도시기금	2.0~3.0
④ 기타(국유재산관리기금 등)	3.0 내외
(2) 교부세(금) 배정 유보(교부세 50%, 교부금 80%)	△6.5
(3) 통상적 불용	△7.0~△9.0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세수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2024. 10. 28., p. 3.

04 2025년 예산 국회 확정(2024. 12. 10.)

- 2025년 총지출은 677.4조 → 673.3조원(△4.1조원) 축소, 총수입은 651.8조 → 651.6조원 (△0.3조원)으로 조정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적자폭은 3.8조원으로 개선, 국가채무(GDP 대비) 규모는 3.7조원 감소

표 1-I-5 2025년 확정예산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본예산 (A)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
총수입	612.2	651.8	651.6	△0.3	39.3	6.4
총지출	656.6	677.4	673.3	△4.1	16.7	2.5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91.6 (△3.6)	△77.7 (△2.9)	△73.9 (△2.8)	3.8 -	17.8 -	- -
통합 재정수지 (GDP 대비 %)	△44.4 (△1.8)	△25.6 (△1.0)	△21.7 (△0.8)	3.8 -	22.7 -	- -
국가채무 (GDP 대비 %)	1,195.8 (47.4)	1,277.0 (48.3)	1,273.3 (48.1)	△3.7 -	77.6 -	-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예산안 국회 확정」, 2024. 12. 10., p. 2.

표 1-I-6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2025년 정부안(A)	2025년 최종(B)	증감 (B-A)
총지출	656.6	677.4	673.3	△4.1
1.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248.7	△0.3
2. 교육	95.2	98.5	98.5	△0.0
3. 문화·체육·관광	8.7	8.8	8.8	△0.1
4. 환경	12.5	13.0	13.0	△0.0
5. R&D	26.5	29.7	29.6	△0.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28.2	△0.1
7. SOC	26.4	25.5	25.4	△0.0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25.9	△0.0
9. 국방	59.4	61.6	61.2	△0.3
10. 외교·통일	7.5	7.8	7.7	△0.1
11. 공공질서·안전	24.4	25.1	25.0	△0.1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110.7	△0.6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예산안 국회 확정」, 2024. 12. 10., p. 3.

05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
(2024. 12. 12.)

-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0.7%,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69.7%로, 각각 전년 대비 0.9%p, 1.3%p 상승
 - (일반정부 부채(D2)) 2023년 일반정부 부채는 1,217.3조원으로 2022년 1,157.2조원 대비 60.1조원 증가
 -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58.6조원) 등에 기인
 - (공공부문 부채(D3)) 2023년 공공부문 부채는 1,673.3조원으로 2022년 1,588.7조원 대비 84.6조원 증가
 -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

표 1-I-7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연도별 추이 및 세부내역

(단위: 조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810.7	39.7	945.1	45.9	1,066.2	48.0	1,157.2	49.8	1,217.3	50.7
공공부문 부채(D3)	1,132.6	55.5	1,280.0	62.2	1,427.3	64.2	1,588.7	68.4	1,673.3	69.7

자료: 기획재정부,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2024. 12. 12., p. 7.

0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통보(2024. 12. 31.)

-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및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등 「2025년 예산 집행지침」 통보
 -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
 - 지자체 보조사업의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통상 10~15일 소요 → 7일 이내 목표) 등 신속집행 지원

-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및 집행요건 완화
 - 일반용역비,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활용 개선 등 재정집행 자율성 제고
 -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 연장(~'24. 12월 → ~'25. 6월까지) 등 중소기업체 지원
- 신규 정책 조기정착 지원 및 효율적 집행 위한 제도 개선
 -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25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 정책홍보 강화
 - 공식 행사 및 선물용 업무추진비 사용 시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 반영

07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025. 1. 2.)

- 정부는 1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 2025년 경제 전망
 - (성장) 수출을 중심으로 2024년보다 둔화 전망(2.1 → 1.8%)
 - (고용)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17만명)보다 축소된 12만명 전망
 - (물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024년(2.3%)보다 낮은 1.8% 전망
 - (경상수지) 2024년(900억달러)보다 흑자폭 축소(800억달러) 전망

표 1-I-8 2025년 경제 전망

	2024년	2025년
• 경제성장률(%)	2.1	1.8
• 취업자증감(만명)	17	12
- 고용률(%, 15세 이상)	62.7	62.8
• 소비자물가(%)	2.3	1.8
• 경상수지(억불)	900	800
- 통관수출(%)	8.2	1.5
- 통관수입(%)	△1.6	1.6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 1. 1., p. 4.

◦ 2025년 경제정책방향

- (정책목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 (추진방식)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국회·민간부문과 소통·협력 강화, 즉각적 Action + 대응 Frame 구축 병행

표 1-I-9 경제정책방향 세부 내용

4대 정책 분야	주요 내용
(1) 민생경제 회복	(경기) 경기보강 강화 + 민생 신속지원
	(경기) 소비·건설 등 부문별 활력 제고
	(민생)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민생)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청년·중고령층·소상공인·취약근로자)
(2) 대외 신인도 관리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 투자(FDI) 촉진
	잠재리스크 관리
(3)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신대외경제전략 추진
	전략적 수출 지원
	공급망 안정
(4) 산업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혁신
	유망 신산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핵심인프라 확충(전력·인재 등)
	투자환경 개선 및 중소·벤처 활성화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 1. 1., p. 5.

제2부

국제기구 재정동향

I. 유럽연합(EU)

II. 국제통화기금(IMF)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 유럽연합(EU)²⁾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I-1 EU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항목
2024. 7. 17.	EU 이사회, 2025년 EU 예산초안에 대한 입장 채택	EU 예산
2024. 7. 15.	EU 이사회(유로그룹), 2025년 유로지역 재정기조에 대한 성명 채택	
2024. 10. 23.	EU 의회, 2025년 EU 예산 수정안 채택	
2024. 11. 16.	EU 이사회·의회, 2025년 EU 예산 합의	
2024. 7. 26.	EU 이사회, EU 차원의 경제·사회 정책 조정을 위한 연간 European Semester와 함께 올해 재정감독(Fiscal surveillance) 타임라인을 발표	European Semester
2024. 7. 16.	EU 이사회, European Semester의 일환인 국가별 권고사항에 동의	
2024. 7. 16.	EU 이사회,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결론 채택	
2024. 9. 23.	EU 이사회, 초과적자시정절차 현황 업데이트	
2024. 11. 15.	EU 집행위원회, 2024년 가을 경제 전망 발표	
2024. 11. 25.	EU 집행위원회, 2025년 유로지역 국가 예산초안에 대한 평가 발표	
2024. 11. 25.	EU 집행위원회, EU 회원국이 제출한 중기 재정구조계획(Medium-term fiscal structural plans)에 관한 평가 보고서 발표	
2024. 11. 25.	EU 집행위원회,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발표	
2024. 11. 25.	EU 집행위원회,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회원국에 대한 경제 상황과 정책 이행을 감독하는 사후감독보고서 발표	
2024. 9. 12.	유럽중앙은행(ECB), 현행 정책금리 인하 결정	
2024. 10. 17.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인하 결정	
2024. 12. 12.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하향 조정	
2024. 12. 10.	EU 이사회,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 개별 회원국 계획의 수정안 승인	기타 정책
2024. 10. 23.	EU 이사회, 우크라이나에 최대 350억유로 거시금융지원 승인	경제통계
2024. 8. 20.	EU 통계청, 유로지역 연간 물가상승률 발표	
2024. 9. 6.	EU 통계청,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및 고용통계 발표	
2024. 10. 17.	EU 통계청, 2024년 9월 유로지역 및 EU 물가상승률(HICP) 발표	
2024. 12. 6.	EU 통계청,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및 고용통계 발표	재정통계
2024. 7. 22.	EU 통계청, 2024년 1분기 재정통계 발표	
2024. 10. 22.	EU 통계청, 2024년 2분기 재정통계 발표	
2024. 9. 9.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3 발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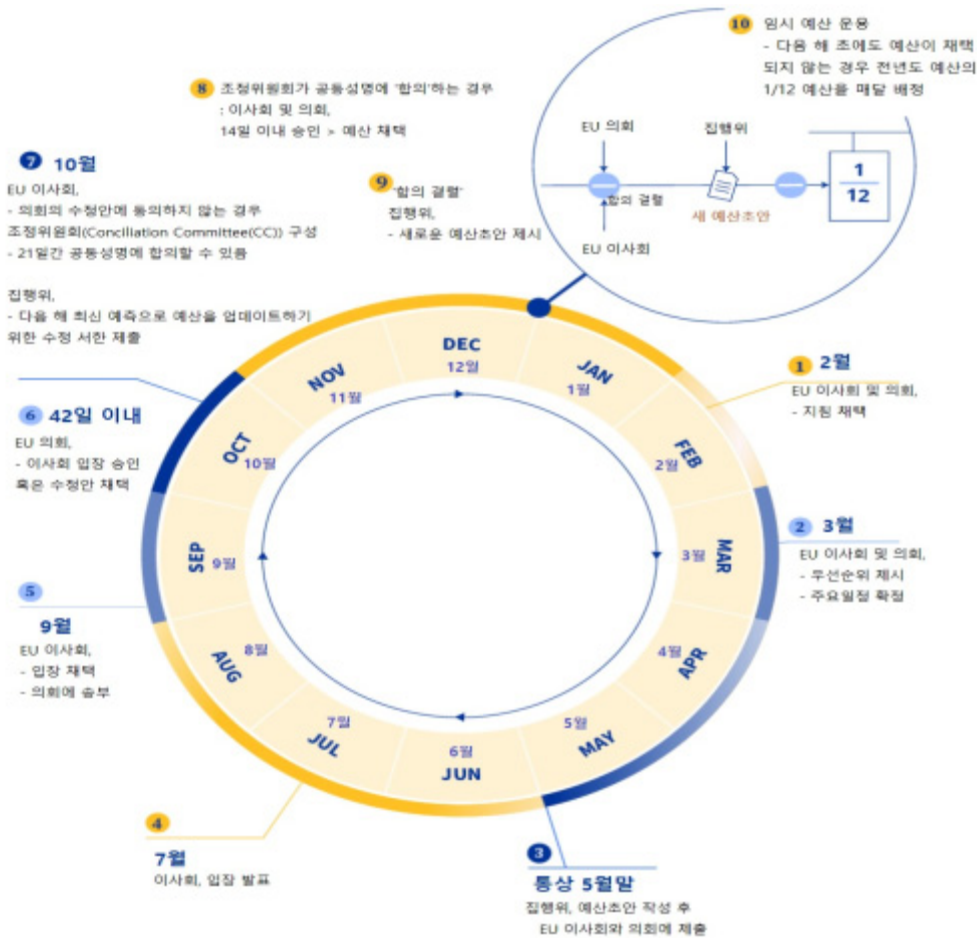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민채 선임연구원(mckang@kipf.re.kr)

01 유럽연합(EU) 예산

※ EU 연례 예산은 EU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국가 예산을 보완하여 농촌·저개발 지역 개발, 환경 보호, Erasmus+ 등 교육·연구 지원, EU 국경 보호, 국제 개발 촉진, 인권 증진 등을 지원함. EU 집행위원회가 7년간의 장기 예산인 다년도 재정체계에서 합의된 지출 우선순위와 한도 내에서 매년 연례 예산을 편성하고 EU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 순으로 EU 예산이 확정됨³⁾

그림 2-I-1 EU 연간 예산 일정



자료: EU 이사회. *Infographic - EU budget timing*, 2024. 2. 8. 업데이트,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budget-timeline/>, 검색일자: 2024. 10. 31.

3) European Union, "How the EU budget is adopted," https://european-union.europa.eu/institutions-law-budget/budget/how-eu-budget-adopted_en, 검색일자: 2024. 10. 14.

표 2-I-2 EU 연간 예산 일정

통상 시기	주체	내용	2024년	
2월	EU 이사회 및 의회	예산편성 지침 채택	3. 12.	EU 이사회, 예산편성지침 채택
3월	EU 이사회 및 의회	우선순위 제시, 주요 일정 합의		
통상 5월 말	EU 집행위	예산초안 작성 후 EU 이사회 및 의회에 제출	6. 19.	EU 집행위, 예산초안 발표
7월	EU 이사회	예산초안에 대한 입장 발표	7. 17.	EU 이사회, 예산초안 입장 발표
9월	EU 이사회	입장 채택 및 의회에 송부		
42일 이내	EU 의회	이사회로부터 입장 전달받은 후 42일 이내 의회는 이사회 입장 승인 혹은 의회 수정안 채택	10. 23.	EU 의회, 예산 수정안 채택
10월	EU 이사회	의회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소집되고, 21일간 공동성명(Joint text)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 부여		
	EU 집행위	다음 해 최신 예측으로 예산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수정 서한 제출	10. 10.	EU 집행위, 수정 서한
11월~	(조정위원회 합의) 이사회와 의회	14일 이내에 승인 → 예산 채택	11. 16.	EU 이사회 · 의회, 공동성명 합의
	(조정위원회 합의 결렬) 집행위	새로운 예산 초안을 제출	11. 25.	EU 이사회, 공동성명 채택
새해 초		새해 초에도 연간 예산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 임시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1/12 규모의 예산을 매월 할당		-

자료: EU 이사회. "Infographic - EU budget timing," 2024. 2. 8. 업데이트,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budget-timeline/>, 검색일자: 2024. 10. 31.

■ EU 이사회, 2025년 EU 예산초안에 대한 입장 채택(2024. 7. 17.)⁴⁾

- ※ 2024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녹색·디지털 전환 촉진,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등을 중점으로 하는 2025년 EU 예산안을 발표함(승인기준 1,997억유로, 지급기준 1,527억유로 규모⁵⁾로 2024년 예산(수정예산 포함) 대비 승인기준 2.3%, 지급기준 4% 증가한 규모⁶⁾)
-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와 EU의 지속적 연대, 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 예산이 중요하고, 예산초안이 EU의 장기 예산인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개정 합의와 일치함을 환영
- 이사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취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유 자금을 남겨 두는 것을 목표로 함
- EU 이사회는 2025년 EU 예산초안에 대해 승인기준 1,915억유로, 지급기준 1,462억유로를 채택해 집행위의 예산초안 대비 각각 15.2억유로, 8.76억유로 감액 - 승인기준으로 '회복 및 복구', '사회적 결속 및 가치' 부문이 포함된 '회복력 및 가치' 분야에서 8.1억유로 감액 조정이 제안되었고, 전 세계 EU 파트너 지원 등 '파트너 및 세계' 분야는 약 2천만유로 증액
- (향후 일정) 9월 13일까지 공식 서면 절차를 완료한 후 의회와 심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EU 연간 예산의 법정 합의 도출 기한은 11월 1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음

4) EU 이사회, "EU annual budget for 2025: Council agrees its position on the draft budget," 2024. 7. 1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7/17/eu-annual-budget-for-2025-council-agrees-its-position-on-the-draft-budget/>, 검색일자: 2024. 7. 19.

_____, "Draf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5:Council position," 2024. 7. 15.,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2082-2024-INIT/en/pdf>, 검색일자: 2024. 7. 19.

5) EU 예산안은 승인기준(Commitments)과 지급기준(Payments)으로 구분. 승인기준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또는 이후 여러 해 걸쳐 사용하는 법적 약속을 의미하고,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혹은 이전 회계연도에 실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임.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2024, pp. 2~5를 참고 바람(<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14>)

표 2-I-3 2025년 EU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이사회 입장(A) (7. 17.)		집행위 2025년 예산초안(B) (6. 19.)		예산초안과 이사회 차이(A-B)	
	승인 기준	지급 기준	승인 기준	지급 기준	승인 기준	지급 기준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0,734	20,216	21,378	20,439	-643	-222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7,319	41,044	78,128	41,619	-809	-574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66,360	30,259	66,360	30,259	-0	-0
2.b. 회복력 및 가치	10,959	10,785	11,768	11,360	-809	-574
3. 천연자원 및 환경	57,271	52,680	57,275	52,682	-4	-2
4. 이주 및 국경관리	4,711	3,120	4,777	3,201	-66	-81
5. 안보 및 국방	2,612	2,127	2,617	2,129	-5	-2
6. 파트너 및 세계	16,280	14,427	16,258	14,406	22	21
7. 유럽 공공 행정	12,599	12,599	12,614	12,614	-15	-15
합계 ¹⁾	191,527	146,215	193,047	147,090	-1,520	-876
GNI 대비(%)	1.04%	0.79%	1.05%	0.80%	0.00%	0.00%

주: 1) 기타 특수 기금 제외

자료: EU 이사회, "EU annual budget for 2025: Council agrees its position on the draft budget," 2024. 7. 1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7/17/eu-annual-budget-for-2025-council-agrees-its-position-on-the-draft-budget/>, 검색일자: 2024. 7. 19.

■ EU 이사회(유로그룹⁷⁾), 2025년 유로지역 재정기조에 대한 성명 채택(2024. 7. 15.)⁸⁾

- (경제) 2024년과 2025년 유로지역 경제 활동은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조건이 유지되고 있음
 - 올해 5월 EU 집행위 봄 전망에 따르면 물가상승 추가 둔화와 탄력적인 노동 시장으로 소비가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용조건 개선과 회복·복구기금 지원으로 투자 증가 예상

7) EU 회원국 중 유로지역(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국가) 국가들의 비공식적 재무장관 회의

8) EU 집행위, "Eurogroup statement on the fiscal stance for the euro area in 2025," 2024. 7. 1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7/15/eurogroup-statement-on-the-fiscal-stance-for-the-euro-area-in-2025/>, 검색일자: 2024. 7. 17.

- (재정) 2024년 유로지역 재정기조는 에너지 지원 조치 종료 등으로 긴축으로 전환 예정
 - 2020~2022년 동안 경제 충격 완화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 완화정책 이후 2023년 중립 기조로 전환, 2024년에는 에너지 지원 조치 종료로 재정 긴축 예상
 - 2025년 유로지역 GDP 대비 재정적자는 2.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공 부채는 2023~2025년 동안 GDP 대비 약 90% 수준으로 전망
 - (주요 의견) 유로지역은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앞으로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가 계속적으로 필요함
 - 이와 동시에 재정건전화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 제고, 경쟁력이 있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해 현 투자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함
 - 회원국들은 2025년 예산부터 국가별 재정정책에 개정된 재정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2025년 유로지역 전반적으로 재정 긴축정책 운용이 예상됨
- EU 의회, 2025년 EU 예산 수정안 채택(2024. 10. 23.)⁹⁾
- (방향) EU 의회는 보건, 교육 및 연구, 기후 대응에 초점을 맞춘 EU 예산을 요구
 - 건강 문제 대응, 청년 지원, 농업·농촌 지원, 자연재해 피해 지원, 기후 행동 강화, 이주 및 안보 관리, 지정학적·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한 EU 지원 필요
 - (수정안) EU 의회 예산 수정안 규모는 승인기준¹⁰⁾ 2,010억유로, 지급기준 1,535억유로
 - (집행위 대비) 2024년 6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예산초안¹¹⁾의 법적 한도인 승인기준 1,997억유로에 비해 12.4억유로 증액한 2,010억유로로 수정
 - (이사회 대비) 2024년 7월 이사회 수정안에서 삭감한 15.2억유로를 복원하여 지급기준 1,535억유로로 편성

9) EU 의회, "EU budget for 2025 to focus on research, health, education, and climate action," 2024. 10. 2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1017IPR24737/eu-budget-for-2025-to-focus-on-research-health-education-and-climate-action>, 검색일자: 2024. 10. 24

10)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혹은 그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6월호 재정동향」, 『kip 재정동향』, 2024, pp. 2~5, 2024. 5. 13.,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14>, 검색일자: 2024. 10. 2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출 상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두 배 높아진 점에서, EU 이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인 Erasmus+, R&D 등의 분야 예산을 삭감함
 - (주요 내용) 보건 1.1억유로, Erasmus+¹²⁾ 프로그램에 7천만유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보호 4,200만유로, 농업 9,600만유로, 인도주의 지원에 1.2억유로, 동남부 지역 지원에 1.1억유로 등 추가 증액 요구
 - (향후 일정) EU 의회와 이사회 입장 조정을 위해 3주간(10월 29일~11월 18일)의 협상이 이뤄질 예정
- EU 이사회·의회, 2025년 EU 예산 합의(2024. 11. 16.)¹³⁾
- (우선순위)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일자리 창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여 유럽의 회복력(Resilient)을 더욱 높이고 미래를 대비
 - EU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동시에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난민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
 -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EU 역량은 다년도 예산의 중간 개정¹⁴⁾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EU 연대기금과 긴급구호예비기금을 확대
 - (지속적 지원) 시리아 난민과 발칸반도 서부 등에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

12) Erasmus 프로그램은 1987년에 설립되어 대학생 해외 유학 및 교직원 교류 등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지원 중심의 EU 프로그램이었으나, 2014년부터 Erasmus+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예산 규모를 늘리고, 교육·직업 훈련·청소년·스포츠로 영역을 넓혀 EU의 다양한 국제 협력 및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첫 번째 주기를 진행하였고(지난 7년간 250만명에 대해 해외에서의 학업, 훈련, 자원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두 번째 주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은 약 262억유로로 첫 번째 주기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됨 (EU 집행위원회, "Erasmus to Erasmus+: history, funding and future," <https://erasmus-plus.ec.europa.eu/about-erasmus/history-funding-and-future>, 검색일자: 2024. 10. 30.)

13)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5: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4. 11. 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16/eu-budget-for-2025-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4. 11. 18.

_____, "Council gives go-ahead to EU annual budget for 2025," 2024. 11. 2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25/council-gives-go-ahead-to-eu-annual-budget-for-2025/>, 검색일자: 2024. 11. 26.

EU 집행위원회, "EU annual budget 2025: pursuing our political priorities and addressing crises," 2024. 11.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5866, 검색일자: 2024. 11. 18.

_____, "Questions and Answers – Agreement on the EU Annual Budget 2025," 2024. 11.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4_5867, 검색일자: 2024. 11. 18.

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재정동향』, 2024, pp. 7~9,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4>, 검색일자: 2024. 11. 27.

- (규모) 2025년 확정예산은 미래 지불 금액을 포함한 승인기준¹⁵⁾ 1,927억 6,860만유로, 해당 연도 지불 계획인 지출기준 1,496억 1,570만유로로 편성(기타 특수 기금 제외)
 - (차입 비용) 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 비용 증가로 2025년 EU 예산안 재원 배분 의사결정에 관한 이사회와 의회 간의 입장차가 있었으나, 새로운 체계 도입으로 조정¹⁶⁾
- (주요 내용) 2025년 예산은 EU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여력을 유지하고자 함
 -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연구 및 혁신 지원 프로그램(Horizon Europe) 128억유로, 유럽 우주 기술 개발 지원 20.5억유로, 운송·에너지·통신에 관한 유럽연결프로젝트¹⁷⁾ 28억유로 등 약 215억유로 지원
 -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EU 내 지역 발전을 위한 유럽지역발전기금¹⁸⁾ 4억유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유럽사회기금 플러스¹⁹⁾ 1,718만유로, EU 저소득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돕는 결속기금(Cohesion Fund)²⁰⁾ 872만유로 등 약 780억유로 배정
 - (3. 천연자원 및 환경) 유럽농업보증기금(EAGF)²¹⁾ 399.8억유로,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 132억유로,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²²⁾ 15억유로 등 약

15)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 몇 년에 걸쳐 지출을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액. 지급기준(payments)은 현재 혹은 이전 회계 연도 동안 EU 예산에서 반영된 계획에서 발생한 지출 금액을 의미.

1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경제 회복 패키지인 '차세대 EU 프로그램'을 통해 2026년 말까지 EU 집행위원회가 통합 자금 조달 형태로 최대 7,120억유로를 차입하여 EU 예산에 추가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차세대 EU 이자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원 재배정, 장기 예산의 특별 수단 활용, 다년도 예산 상한을 초과하는 예외적 수단 동원 등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여 조정하기로 함

17) 유럽연결프로젝트(Connecting Europe Facility(CEF))는 운송, 에너지, 통신 등 세 개 분야 회원국 간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여 EU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함.

18) 유럽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EU 내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둠.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다각화 및 디지털화, 사회적 통합과 고용 기회 확대 등 지원

19) European Social Fund Plus(ESF+)는 EU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포용, 고용 촉진, 교육, 훈련 등을 지원

20) 1인당 GNI가 EU 평균 90%이하인 국가를 대상으로 유럽연합의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지원기금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 증진,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등을 목표로 하며, 지역보다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점을 둠(EU 집행위원회, "Cohesion Fund,"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cohesion-fund_en, 검색일자: 2024. 11. 26.)

21) 유럽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과 유럽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은 EU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주요 재원 수단으로, 2021~2027년 다년도 재정체계에서 공동 농업 정책에 할당된 3,866억유로 중 유럽농업보증기금에 2,911억유로,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에 955억원이 지원되고, 유럽농업보증기금은 주로 농가 소득 지원, 농업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은 농촌 지역 발전과 농촌 개발 프로그램 지원, 농촌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보증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EU 집행위원회, "Common agricultural policy funds," https://agriculture.ec.europa.eu/common-agricultural-policy/financing-cap/cap-funds_en, 검색일자: 2024. 11. 27.)

22) 2050년까지 EU의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럽 그린딜 차원에서 공정전환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로 2021~

567억유로 편성

- (4. 이주 및 국경관리) 망명·이주 및 통합 기금²³⁾ 18.7억유로, 국경 관리 및 비자 도구 12.3억유로, 세관 관리 지원 체계 1.5억유로 등 47.9억유로 편성
 - (5. 안보 및 국방) 유럽연합의 공동 안보 및 방위를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방위 프로젝트 개발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유럽 방위 기금(EDF) 비연구 분야 10.3억유로, 연구분야 4억유로 등 총 26.3억유로 지원
 - (6. 파트너 및 세계) 이웃, 개발 및 국제 협력 기구²⁴⁾ 108.9억유로,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id, HUMA)²⁵⁾ 19.4억유로 등 총 163억유로 편성
 - (7. 유럽 공공 행정)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재정수단에 66.7억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43.2억유로 등 총 128.5억유로 지원
- (향후 단계) 2025년 EU 연간 예산은 향후 EU 의회와 EU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야 하고, 최종 절차인 본회의 표결은 2024년 11월 27일로 예정됨

2027년 결속 정책의 새로운 수단.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여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격차 감소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EU 집행위원회, "Just Transition Fund,"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just-transition-fund_en, 검색일자: 2024. 11. 26.)

23) 망명, 이주 및 통합 기금(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AMIF)는 2021-2027년 동안 98억 8천만유로의 예산으로 국가의 이민 역량을 높이고 이주 관리 절차를 개선하며, 연대와 책임 분담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4) 이웃, 개발 및 국제 협력 기구(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NDI CI)는 유럽연합의 주요 대외 협력 자금 지원 기구로 총 795억유로의 예산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장기 개발 과제 해결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25) 인간이 초래한 재해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

표 2-I-4 2025년 EU 확정예산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²⁾	지급기준 ³⁾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480	20,461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7,980	44,445
3. 천연자원 및 환경	56,731	52,092
4. 이주 및 국경관리	4,791	3,204
5. 안보 및 국방	2,633	2,143
6. 파트너 및 세계	16,308	14,426
7. 유럽 공공 행정	12,845	12,845
합계	192,769	149,616
기타 특수 기금 ¹⁾	6,670	5,594
기타 특수 기금 포함 합계	199,438	155,209
EU 27개국 GNI 대비 %	1.08%	0.84%

주: 1) 'Special instruments'는 예산의 유연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특정 예산 항목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연대 및 긴급 원조 예비비(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브렉시트 조정 예비비(Brexit Adjustment Reserve)' 등이 해당됨(EU 집행위원회, "Flexibility and special instruments,"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long-term-eu-budget/2021-2027/spending/flexibility-and-special-instruments_en?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4. 11. 26.)

2)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몇 년에 걸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3)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자료: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5: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4. 11. 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16/eu-budget-for-2025-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4. 11. 18.

02 European Semester

※ European Semester는 EU 회원국들의 경제·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정에 맞추어 조율하기 위한 연간 순환과정임

- EU 이사회, EU 차원의 경제·사회 정책 조정을 위한 연간 European Semester와 함께 올해 재정감독(Fiscal surveillance) 타임라인을 발표(2024. 7. 26.)²⁶⁾




26) EU 이사회, "European Semester 2024: next steps in fiscal surveillance," 2024. 7. 26.,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ropean-semester-2024/#0>, 검색일자: 2024. 7. 29.

- ※ European Semester는 매년 11월 EU 집행위원회의 경제·사회 우선순위 발표로 시작되고, 다음 해 10월 EU 회원국들의 예산초안 제출로 마무리되는 연간 순환 형태로,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준칙에 EU 회원국의 재정·경제 정책이 부합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거시경제 안정, 건전한 EU 재정 보장을 목표로 함
- 올해 4월 30일 기존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 조정에서 국가별 4~7년 기간 동안의 지출 경로 및 개혁·투자 우선순위를 담은 중기 재정 구조계획 제출로 새로운 경제거버넌스 체계 시행
 - 연간 European Semester 일정과 함께 경제거버넌스 체계, 초과적자시정절차를 통한 EU 차원의 조정 및 감시를 진행
 - (경제거버넌스 체계) 새로운 체계 시행으로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9월에 제출할 중기 구조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에 관한 참조 궤적과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였고(6월), 9월 중기 구조계획 발표 후 11월 EU 집행위, 12월 EU 이사회 권고 예정
 - (European Semester) 전년 11월 EU 집행위는 가을 패키지를 통해 EU 경제·고용·사회 정책 우선순위, 거시경제 불균형을 파악하는 경보체계보고서 등을 발표하였고, 6월 국가별 보고서와 국가별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봄 패키지를 통해 거시경제 불균형 해결 촉구
 - (초과적자시정절차) 7월 EU 집행위는 EU 이사회에 초과적자 시정이 필요한 국가들을 선별하여 초과적자 시정절차 시행을 제안하고 이사회 승인 시 시행되며, 10월 유로지역²⁷⁾ 국가들은 내년 예산초안을 EU 집행위·이사회에 제출하여 재정준칙 준수 등을 검토받음

27) 유로지역 국가(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임. (유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EU 회원국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 총 7개국)

표 2-I-5 2024년 European Semester 재정감독(Fiscal surveillance) 타임라인

일자	분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경제거버넌스 체계		
	European Semester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2024. 4. 30.	경제거버넌스 체계	새로운 경제거버넌스 체계 발효	-
2024. 6. 19.	European Semester	EU 집행위원회, 봄 패키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보고서(경제·사회 발전과 과제 분석, 국가 정책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과 과제의 해결 범위 및 효과 평가) - 국가별 권고사항(경제, 예산,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지침/국가별 확인된 불균형 시정 조치 권고) -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에 따라 거시경제 불균형이 확인된 국가들에 대한 평가(이전 경고체계보고서 (Alert mechanism report, 전년 11월 발표 내용))
2024. 6. 21.	경제거버넌스 체계	EU 집행위, 참조 궤적(Reference trajectories) 및 기술 정보(Technical information) 발표	국가별 제출 예정인 중기 재정 구조계획에 포함될 다년도 지출 목표(Target)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참조 궤적 및 기술정보 발표
2024. 7. 8.	초과적자시정절차	EU 집행위,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시 대상) 7개국 대상 초과적자시정절차 개시(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 (유지 대상) 루마니아 초과적자시정절차 유지
2024. 7. 16.	초과적자시정절차	EU 경제금융이사회, EU 집행위 초과적자시정절차 제안사항 동의	초과적자시정절차 개시(위 7개국) 및 유지(루마니아)
	European Semester	EU 이사회, EU 집행위 봄 패키지의 국가별 권고사항 동의/거시경제 불균형 절차에 따른 심층검토 결론 승인	국가별 권고사항 동의/거시경제 불균형 절차에 따른
2024. 7. 26.	초과적자시정절차	EU 이사회, EU 집행위 초과적자시정절차 제안사항 동의	초과적자시정절차 개시(위 7개국) 및 유지(루마니아)
2024. 9. 20.	경제거버넌스 체계	EU 회원국, 중기 재정 구조계획 제출	국가별 4~7년 기간 동안의 지출 경로 및 개혁·투자 우선순위를 담은 중기 재정 구조계획(중기 재정 구조계획은 EU 집행위와 EU 이사회에서 평가받을 예정(유로 지역 국가들은 국가별 내년 예산초안과 함께 평가))
2024. 10. 15.	초과적자시정절차	유로지역 국가, 2025년 예산초안을 EU 집행위 및 EU 이사회에 제출	
2024. 10. 17~18.	European Semester	EU 정상 이사회, 국가별 권고사항을 논의	
2024. 10월 말	European Semester	EU 이사회, 국가별 권고사항 채택	

분류		경제거버넌스 체계
		European Semester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일자	분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24. 11월말		EU 집행위, 가을 패키지 발표	가을 패키지 - 연간 지속성장조사(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 -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 유로지역 권고사항을 위한 제안 - 공동고용보고서 초안(Draft joint employment report)
		EU 집행위, 회원국의 중기재정구조계획에 대한 이사회 권고를 기초로 제안 제시	
		EU 집행위, 유로지역 국가들의 2025년 예산초안에 대한 의견 발표	
		8개국의 초과적자 시정을 위한 이사회 권고사항을 제안	8개국(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2024. 12. 9		유로그룹(유로지역 이사회), -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2025년 예산초안 및 예산 상황 및 전망 평가 - 2025년 유로지역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2025년 1월 국가별 권고사항 확정 대비)	
2024. 12. 10		- EU 경제금융이사회, 논의	- 2025년 지속가능성장조사 - 경고체계보고서 - 유로지역 경제정책 정책권고 초안
		- EU 이사회, 중기 재정 구조계획 EU 이사회 권고의 사전 준비	
		- EU 이사회, 초과적자시정절차의 사전 준비	
2025. 1. 20		유로그룹(유로지역 이사회), 2025년 유로지역 경제정책 권고사항 논의	
2025. 1. 21		- EU 경제금융이사회, 2025년 유로지역의 경제정책에 관한 권고 승인 - EU 경제금융이사회, 2025년 연간 지속가능성장조사, 경고체계보고서, 유로지역 경제정책에 대한 권고 초안 결론을 승인	
		- EU 이사회, 중기재정구조계획에 대한 이사회 권고사항 사전 준비 계속 진행	

자료: EU 이사회, "European Semester 2024: next steps in fiscal surveillance," 2024. 7. 26.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ropean-semester-2024/#0>, 검색일자: 2024. 7. 29.

■ EU 이사회, European Semester의 일한인 국가별 권고사항에 동의(2024. 7. 16.)²⁸⁾

※ 국가별 권고사항은 EU 회원국의 경제, 고용, 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조정하는 European Semester의 단계적 절차의 일부. 올해 4월 30일부터 적용된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정사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가을까지 제출할 중기 재정구조 계획에 국가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재정조정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

- 4월 30일부터 적용된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재정준칙 등 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올해 가을까지 순지출 경로와 개혁 및 투자를 포함한 중기 재정구조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중기 재정구조 계획의 재정 조정 기간은 4년으로 각 회원국의 개혁 및 투자 이행 약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가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7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
- 국가별 공통적 권고사항으로는 중기 재정구조 계획의 적시 제출, 순지출 증가 제한* 등 제시²⁹⁾

* 개정된 안정성장협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5년 순지출 증가를 일률적으로 제한. 특히 회원국들의 중기 일반정부 부채가 적정 수준의 하향세를 나타내도록 하고, 일반정부 적자를 협약 기준값인 GDP 대비 3%로 감소하도록 순지출 경로를 계획하도록 함

- (공통 권고사항) 회복·복구 계획³⁰⁾내 REPowerEU³¹⁾의 빠른 이행을 통한 개혁과 투자 완료(2026년 8월까지), 결속 프로그램의 실행 가속화,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이용하여 경쟁력 향상
- (프랑스) 복잡한 과세 제도 개선, 정량적 예산 절감 목표 설정, 기술 부족 문제 해결(특히 녹색 전환 관련), 저숙련자 교육 참여 촉진, 행정부담 감소로 사업 환경 개선 등
- (독일) 연금 제도 개혁으로 재정 여력 확대, 숙련 노동자 부족 해결, 교육 성과 개선, 공공 행정 디지털화 확대,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가속화

28) EU 이사회, "European Semester 2024: Council agrees on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 2024. 7. 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7/16/european-semester-2024-council-agrees-on-country-specific-recommendations/>, 검색일자: 2024. 7. 18.

29) 국가별 권고사항은 EU 27개 회원국에 대해서 개별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하 본 재정동향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이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문을 참고

30)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은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인 Next Generation EU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고자 함.

31) 2022년 5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급 다각화, 청정 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에너지 가격안정화를 이루고자 함(EU 집행위원회, "REPowerEU,"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repowereu-affordable-secure-and-sustainable-energy-europe_en, 검색일자: 2024. 7. 30.)

- (네덜란드) 신규 주택 건설 촉진,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장기 요양 시스템을 비용 효율적으로 개편, 구조적 노동·기술 부족 문제 해결, 전기 송전 및 배전망 투자 촉진, 재생에너지 설치 가속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 강화 등
 - (스웨덴)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불균형 감소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축소, 재산세 인상, 주택건설 촉진, 교사 부족 문제 해결 등 교육 성과 개선,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 (향후 일정) 2024년 10월 이사회는 국가별 권고사항을 논의한 후 European Semester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별 권고사항을 공식 채택할 예정
- EU 이사회,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³²⁾ 결론 채택(2024. 7. 16.)³³⁾
- ※ EU 회원국들이 경제, 고용, 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조정하는 European Semester의 일부로 EU 경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거시경제 불균형 발생을 식별하여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4년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를 거쳐 심층검토 결과를 발표
 - 2023년 경제 둔화 이후 EU 경제는 국가마다 상이한 속도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거시경제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함
 - 검토 결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더 이상 거시경제 불균형 상태가 아닌 것으로 평가
 - (프랑스) 정책적 노력이 경쟁력과 낮은 생산성 관련 취약성 감소에 도움 되었고, 높은 공공 부채 취약성이 남아 있어 개정된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모니터링 예정
 - (포르투갈) 높은 수준의 민간, 정부, 대외 부채와 관련된 취약성을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스페인) 높은 민간·대외 부채와 관련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뤘으며, 정부 부채를 감소시킴

32) 거시경제 불균형은 경상수지, 일반정부 채무, 실업률 등 14개의 주요 지표와 추가 보조 지표들을 기초로 평가되며,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를 통해 1차 검토를 수행 후 →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필요한 대상 국가를 선별하여 → 불균형이 심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과불균형절차(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EIP)를 시행할 수 있음. 초과불균형절차가 시행되면 대상 회원국은 수정된 재정구조계획을 제시해야 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11월호 참고

33) EU 위원회, "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Council approves conclusions." 2024. 7. 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7/16/macroeconomic-imbalance-procedure-council-approves-conclusions/>, 검색일자: 2024. 7. 18.

-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불균형(imbalance) 상태
 - 슬로바키아는 최근 몇 가지 개선이 있었으나, 비용 경쟁력과 대외 부문, 주택 시장 및 가계 부채 관련 취약성이 지속되므로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
 - 사이프러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은 계속해서 불균형 상태 유지
 -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2023년 과도한 불균형(excessive imbalance) 상태로 평가된 후 2024년에는 불균형(imbalance) 상태로 평가
 - 그리스는 높은 정부 부채와 부실 채권이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나 취약성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부문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
 - 이탈리아는 높은 정부 부채와 낮은 생산성 관련 취약성이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대외적으로 파생되는 금융 부문의 일부 약세가 남아 있어 취약성 해결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
 - 루마니아는 2023년 불균형 상태로 판단되었으나, 현재는 대외 부문 취약성 등으로 과도한 불균형(excessive imbalance) 상태
 - 높은 정부 적자와 연계된 대외 부문의 취약성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남아 있으며, 가격 및 비용 압력이 증가하였고 정책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음
 - 이사회는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의 전면적 시행을 요청하고, 거시경제 불균형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회복·복구계획과 European Semester의 국가별 권고사항을 포함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정책 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
 - 거시경제 불균형 판단과 국가별 권고사항 간의 강력하고 명확한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
- EU 이사회, 초과적자시정절차 현황 업데이트(2024. 9. 23.)³⁴⁾
- (목적) EU 회원국의 부채를 낮게 유지하거나, 높은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고자 함
 - (시행 기준) 기존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4월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초과

34) EU 집행위, "Excessive deficit procedure," 2024. 9. 23. 업데이트,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xcessive-deficit-procedure/#0>, 검색일자: 2024. 9. 24.

위험이 있는 경우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여부를 평가함

-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적자 기준은 GDP 대비 3%, 부채비율은 GDP 대비 60%
- (적자 기준 현재 시행 국가) 2024년 7월 26일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EU 이사회는 7개 회원국에 초과적자가 있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루마니아는 2020년부터 초과적자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23년 초과적자가 확인된 7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³⁵⁾ 재정적자는 이탈리아 7.4%, 헝가리 6.7%, 프랑스 5.5%, 폴란드 5.1%, 몰타 4.9%, 슬로바키아 4.9%, 벨기에 4.4%
 - 루마니아는 초과적자 시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³⁶⁾되어 시정절차 유지(루마니아 6.6%)
 - 루마니아는 2020년 4월 초과적자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2022년까지 적자 감소를 목표하였으나, 2021년 6월 팬데믹으로 인해 개정 권고안을 통해 2024년까지 연장된 후 2023년 재정적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점과 EU 집행위 권고에 비해 높은 순지출 증가율(권고 0.9%, 실제 12%) 등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2024년 7월 이사회가 평가함
- (부채 기준) 2024년 4월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준칙 시행에 따라 준칙 준수 여부를 아직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부채 기준 초과적자시정절차는 2024년에 개시되지 않음
 - 회원국은 순지출 경로를 포함한 중기 재정 구조계획을 EU 집행위에 9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함
 - 높은 부채 상태의 국가가 집행위가 권고하는 순지출 경로를 따라 부채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로에 이르고 적절한 감소세를 보이는 경우 부채 기준의 초과적자시정절차를 적용받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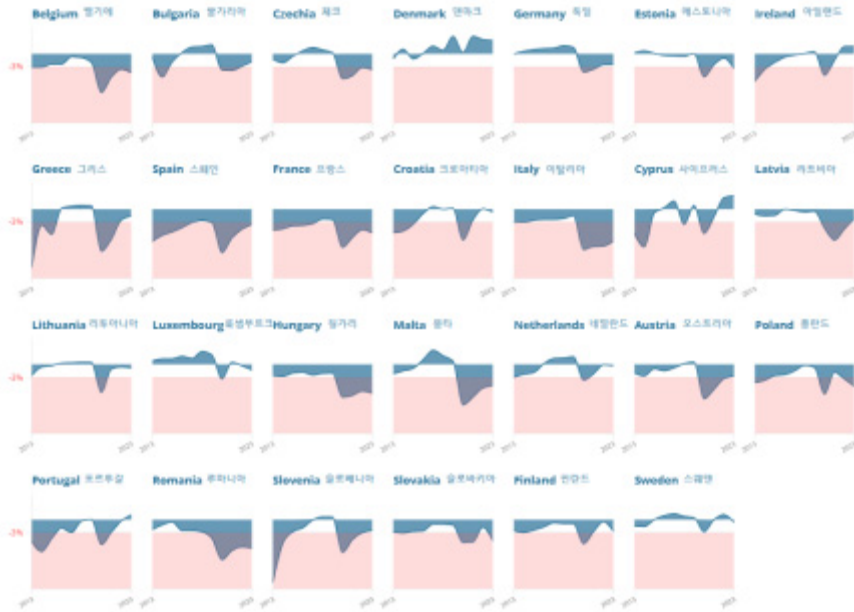
35) 일반정부 범위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

36) 기한까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회원국이 권고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유로지역 회원국 전년도 GDP의 최대 0.05%에 해당하는 벌금을 6개월마다 부과하는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계속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제재를 강화할 권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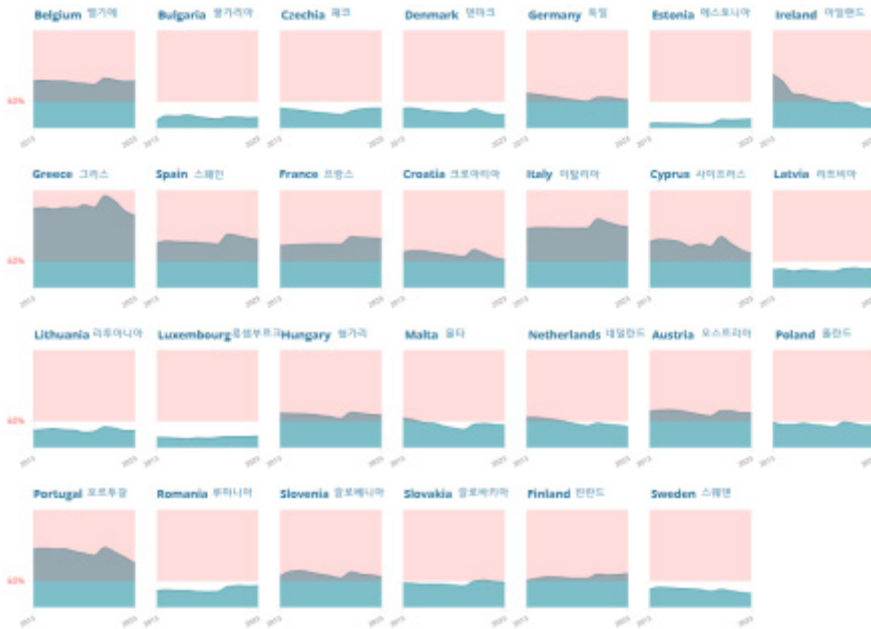
그림 2-I-1 EU 회원국별 재정적자(상) 및 부채(하) 추이(2013~2023년)

(단위: GDP 대비 %)

재정적자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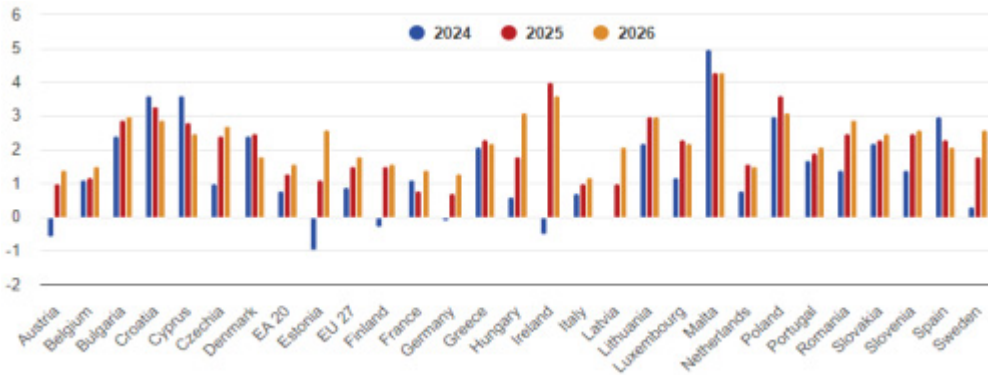
자료: EU 집행위, "Excessive deficit procedure," 2024. 9. 23. 업데이트,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xcessive-deficit-procedure/#0>, 검색일자: 2024. 9. 24.

■ EU 집행위원회, 2024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4. 11. 15.)³⁷⁾

- (동향) EU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침체에 이어 올해 1분기에 성장을 재개했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완화되는 가운데 2분기와 3분기에는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됨
 - 경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대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경제성장률) 2024년 EU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0.9%로 올해 5월 봄 경제 전망에 비해 0.1%p 하락하였고, 유로지역³⁸⁾은 0.8%로 봄 전망과 동일
 - (2025년) EU에서는 소비 증가와 투자 반등으로 GDP 성장률은 최대 1.5%로 전망되고, 유로지역 역시 소비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1.3%로 전망
 - 2026년 EU 경제성장률은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1.8%, 유로지역은 1.6%로 전망

그림 2-I-2 2024년-2026년 EU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EU 집행위원회, “Autumn 2024 Economic Forecast: A gradual rebound in an adverse environment,” 2024. 11.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autumn-2024-economic-forecast-gradual-rebound-adverse-environment_en, 검색일자: 2024. 11. 18.

37) EU 집행위원회, “Autumn 2024 Economic Forecast: A gradual rebound in an adverse environment,” 2024. 11.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autumn-2024-economic-forecast-gradual-rebound-adverse-environment_en, 검색일자: 2024. 11. 18.

38)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채택한 20개 회원국이 유로지역에 해당되고, 2024년 기준 유로지역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며, 비유로지역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임.

- (물가) 2022년 말부터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여 EU 물가상승률은 2023년 6.4%에서 2024년 2.6%로, 유로지역은 5.4%에서 2.4%로 각각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물가는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2025년 2.4%로 하락한 후 2026년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지역은 2025년 2.1%, 2026년 1.9%로 감소 전망
 - 에너지 중 가스와 전기 요금은 2025년 수준에서 2026년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에너지 상품 가격 상승 압력은 식품 및 비에너지 산업재³⁹⁾의 물가가 안정되면서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노동) 2024년 상반기에 75만명의 노동자가 신규 취업되어 EU 노동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노동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나, 고용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 (실업률) 2024년 10월 EU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인 5.9%로, 2024년 연간 실업률은 6.1%에서 2026년 5.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 실업률은 2024년 6.5%로 전망되고 2025년과 2026년 각각 6.3%로 하락 전망
 - (고용) 2024년 고용 성장률은 0.8%에서 2026년 0.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임금) EU의 임금 상승률은 2024년 4.9%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2025년 3.5%, 2026년 3%로 오름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 속도보다 높아 2023년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을 임금 상승분으로 완전히 만회하는 실질 구매력 회복 시점은 EU는 2025년, 유로지역은 2026년으로 전망

39) 비내구재(개인용 전자제품, 의약품, 신문), 준내구재(의류, 신발, 서적, 여가활동 장비), 내구재(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PC)로 구성

표 2-I-6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¹⁾			실업률			재정수지 ²⁾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유로지역(20개국)	0.8	1.3	1.6	2.4	2.1	1.9	6.5	6.3	6.3	-3.0	-2.9	-2.8
EU(27개국)	0.9	1.5	1.8	2.6	2.4	2.0	6.4	5.9	5.9	-3.1	-3.0	-2.9

주: 1) 소비자물가조화지수(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 기준. 소비자물가조화지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국가 간 소비자물가 변동을 비교하는 물가지수로 각 국가의 특수성과 가중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달리 EU 전역에서 표준화된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며 일반적으로 자가 거주 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2) 재정수지는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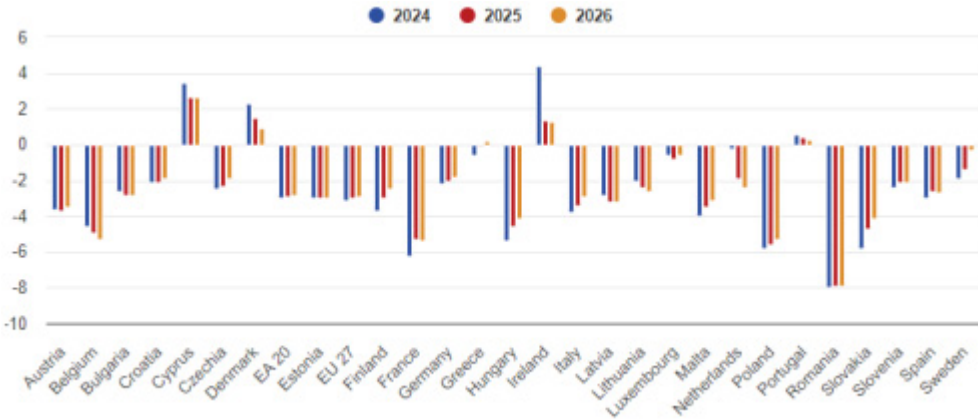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4," 2024. 11.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7173e7c9-3841-4660-8d6a-a80712932f81_en?filename=ip296_en.pdf, <Table. 1>편집, p. 1, 검색일자: 2024. 11. 27.

- (재정) EU의 일반정부 적자는 2024년 3.1%에서 2026년 2.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지역은 2024년 3.0%에서 2026년 2.8%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2024년 EU의 재정적자는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한 GDP 대비 3.1%로 전망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예상
 - 2025년에는 재정긴축 효과가 수입 부족으로 상쇄되며 재정적자가 GDP 대비 3.0%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는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2.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재정기조) EU 기금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 재량 재정정책은 다소 긴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대체로 중립적 영향을 미칠 전망
 - (2024년) 긴축 재정기조는 EU 자금 지출의 일시적인 감소와 이탈리아의 주택세 공제의 단계적 폐지에 주로 기인함
 - (2025년) 기초 순경상지출의 긴축이 '회복·복구기금' 및 '기타 EU 기금' 활용 증가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
 - (총부채) EU 총부채 비율은 2023년 GDP 대비 82.1%에서 2026년 83.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지역은 2023년 88.9%에서 2026년 9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EU 총부채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약 10%p 감소하였고 이후 여전히 높은 적자로 인해 금리 상승의 영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

그림 2-I-3 2024년~2026년 EU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EU 집행위원회, "Autumn 2024 Economic Forecast: A gradual rebound in an adverse environment," 2024. 11.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autumn-2024-economic-forecast-gradual-rebound-adverse-environment_en, 검색일자: 2024. 11. 18.

- (위험) EU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위험은 하방 요인이 높음
 - (지정학적 위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갈등 심화는 지정학적 위험과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음
 - (보호무역) 교역 상대국의 보호 무역주의 조치가 더 증가할 경우 세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EU 개방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낮은 생산성) 낮은 생산성 성장률은 임금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게 하고 기업들이 노동을 줄이거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위험을 높임
 - (긴축 정책) 회복·복구기금⁴⁰⁾의 집행 지연이나 2026년 중기재정구조계획이 실행되면서 엄격한 재정 긴축 정책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
 - (자연재해)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홍수와 같이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범위의 증가는 경제·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보여줌

40)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EU 회원국의 경제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개혁 및 투자를 촉진하도록 지원함

- (국가별 전망) EU 27개국 및 후보 국가 9개국에 대한 경제 전망을 다루고 있음
 - (프랑스) 공공 지출과 대외 무역 증가로 2024년 경제성장률은 1.1%로 안정세를 보이고, 2025년에는 재정 조정으로 0.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자금 조달 비용 감소와 민간 수요 증가로 성장률이 1.4%로 회복될 전망
 - (독일) 2024년 경제성장률은 -0.1%로 전망되고, 높은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가 억제되고 있으며, 산업재에 대한 대외 수요 약화로 무역 전망이 악화되고 있음
 - 2025년에는 실질 임금 증가로 국내 수요가 회복되면서 GDP 성장률은 0.7%로 예상되고, 2026년 1.3%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네덜란드) 2023년 경제 침체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0.8%, 2025년 1.6%, 2026년 1.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실질 임금이 개선되어 향후 민간 소비 증가가 전망되며, 세금 감면과 부당 납세에 관한 법원 판결⁴¹⁾의 영향으로 2025년 재정적자는 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6년에는 군인연금 개혁 관련 지출로 인해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스웨덴) 2024년 경제 성장 둔화 이후 금융 여건 완화와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실질 소득과 내수 증가를 통해 2025년 경제가 회복되고 2026년에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실질 GDP성장률은 2024년 0.3%로 전망되고, 2025년 1.8%, 2026년 2.6%로 전망
 -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로 2024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9%에서 2026년에는 세수 증가로 일반 정부 재정수지가 거의 균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총부채 비율은 2024년 GDP 대비 32.8%, 2025년 32.7%, 2026년 31.7%로 계속 감소 예상
 -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력(Resilient)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역량 회복, 높은 국방비 지출, 가계 수요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2024년 3.5%로 전망
 - 2024년 경제 반등 이후 노동력·에너지 부족 등 투입 제약으로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 재건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5.9%로 반등 전망

41)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9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 pp. 55-57,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30>, 검색일자: 2024. 11. 27.

표 2-I-7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벨기에	1.1	1.2	1.5	4.4	2.9	1.9	5.6	5.7	5.6	-4.6	-4.9	-5.3
독일	-0.1	0.7	1.3	2.4	2.1	1.9	3.3	3.3	3.4	-2.2	-2	-1.8
에스토니아	-1	1.1	2.6	3.6	3.6	2.4	7.5	7.7	7.2	-3	-3	-3
아일랜드	-0.5	4	3.6	1.4	1.9	1.8	4.4	4.4	4.5	4.4	1.4	1.3
그리스	2.1	2.3	2.2	3	2.4	1.9	10.4	9.8	9.2	-0.6	-0.1	0.2
스페인	3	2.3	2.1	2.8	2.2	2	11.5	11	10.7	-3	-2.6	-2.7
프랑스	1.1	0.8	1.4	2.4	1.9	1.8	7.4	7.5	7.6	-6.2	-5.3	-5.4
크로아티아	3.6	3.3	2.9	4	3.4	2	5.1	4.7	4.6	-2.1	-2.1	-1.9
이탈리아	0.7	1	1.2	1.1	1.9	1.7	6.8	6.3	6.2	-3.8	-3.4	-2.9
사이프로스	3.6	2.8	2.5	2.2	2.1	2	4.9	4.7	4.5	3.5	2.7	2.7
라트비아	0	1	2.1	1.2	2.2	2.2	6.7	6.7	6.5	-2.8	-3.2	-3.2
리투아니아	2.2	3	3	0.9	1.7	1.6	7.5	7	6.9	-2	-2.4	-2.6
룩셈부르크	1.2	2.3	2.2	2.3	2.4	1.8	6	6	5.8	-0.6	-0.8	-0.6
몰타	5	4.3	4.3	2.5	2.2	2	3.2	3.1	3	-4	-3.5	-3.1
네덜란드	0.8	1.6	1.5	3.2	2.4	1.9	3.7	3.8	3.9	-0.2	-1.9	-2.4
오스트리아	-0.6	1	1.4	2.9	2.1	1.7	5.3	5.3	5	-3.6	-3.7	-3.5
포르투갈	1.7	1.9	2.1	2.6	2.1	1.9	6.4	6.3	6.2	0.6	0.4	0.3
슬로베니아	1.4	2.5	2.6	2.1	3.2	2.1	3.5	3.6	3.6	-2.4	-2.1	-2.1
슬로바키아	2.2	2.3	2.5	3.1	5.1	3	5.5	5.3	5.1	-5.8	-4.7	-4.1
핀란드	-0.3	1.5	1.6	1	2	1.8	8.2	7.9	7.5	-3.7	-3	-2.5
유로지역 20개국	0.8	1.3	1.6	2.4	2.1	1.9	6.5	6.3	6.3	-3	-2.9	-2.8
불가리아	2.4	2.9	3	2.5	2.3	2.9	4.3	4	3.8	-2.6	-2.8	-2.8
체코	1	2.4	2.7	2.7	2.4	2	2.6	2.7	2.7	-2.5	-2.3	-1.9
덴마크	2.4	2.5	1.8	1.3	1.9	1.7	5.8	5.8	5.8	2.3	1.5	0.9
헝가리	0.6	1.8	3.1	3.8	3.6	3.2	4.5	4.3	4.1	-5.4	-4.6	-4.1
폴란드	3	3.6	3.1	3.8	4.7	3	2.9	2.8	2.7	-5.8	-5.6	-5.3
루마니아	1.4	2.5	2.9	5.5	3.9	3.6	5.5	5.5	5.4	-8	-7.9	-7.9
스웨덴	0.3	1.8	2.6	1.9	1.5	1.8	8.5	8.4	7.8	-1.9	-1.4	-0.3
EU 27개국	0.9	1.5	1.8	2.6	2.4	2	6.1	5.9	5.9	-3.1	-3	-2.9

주: 1) 재정수지는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4," 2024. 11.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7173e7c9-3841-4660-8d6a-a80712932f81_en?filename=ip296_en.pdf, <Table. 1> 편집, p. 1, 검색일자: 2024. 11. 27.

※ EU 회원국의 경제·재정정책을 EU 차원의 합의된 목표와 규율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⁴²⁾는 연간 단위로 정책 조정 및 감독을 시행하는 European Semester를 따라 진행됨

European Semester의 일환이자 매해 첫 번째 단계인 이번 가을 패키지에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경제거버넌스 체계를 반영함. 경제거버넌스 체계 내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① 유로지역 예산초안 평가, ② 중기 재정구조계획 평가, ③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에 대해 통합 발표함

표 2-I-8 European Semester의 2025년 가을패키지

국가	예산초안 ¹⁾ 제출	중기 재정구조계획			초과적자시정절차	
		제출	조정기간 연장	이사회 승인요청	시행 국가	시행 여부 검토
벨기에					0	
불가리아	비유로지역					
체코	비유로지역	0		0		
덴마크	비유로지역	0		0		
독일	0					
에스토니아	0	0		0		
아일랜드	0	0		0		
그리스	0	0		0		
스페인		0	0	0		
프랑스	0	0	0	0	0	
크로아티아	0	0		0		
이탈리아	0	0	0	0	0	
사이프로스	0	0		0		
라트비아	0	0		0		
리투아니아	0					
룩셈부르크	0	0		0		
헝가리	비유로지역	0			0	
몰타	0	0		0	0	
네덜란드	0	0		0		
오스트리아						0
폴란드	비유로지역	0		0	0	
포르투갈	0	0		0		
루마니아	비유로지역	0	0	0	0	
슬로베니아	0	0		0		
슬로바키아	0	0		0	0	
핀란드	0	0	0	0		0
스웨덴	비유로지역	0		0		

주: 1) 유로지역 회원국들만 EU 집행위원회에 차년도 예산초안 제출 의무가 있음

자료: EU 집행위원회, "2025 European Semester: bringing the new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to life, 2024. 11. 26., [부록 1], p. 8,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0633b883-761d-4b68-91f9-6d8848c64f7c_en?filename=COM_2024_705_1_EN.pdf, 검색일자: 2024. 11. 27.

42)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 EU 집행위원회, 2025년 유로지역 국가 예산초안에 대한 평가 발표(2024. 11. 25.)⁴³⁾

※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Economic governance framework)에 따라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의 회원국은 재정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매년 10월 EU 집행위원회에 차년도 예산계획 초안을 제출하며, EU 집행위는 예산초안이 EU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혹은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함. 이번 평가는 새로운 재정체계의 중기 재정구조계획에 따른 첫 해 예산이므로,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예산초안이 2024~2025년 순지출 증가율을 기초로 중기 재정구조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평가

- (평가 내용) 2024년 국가별 질적 권고사항을 반영하면서 회원국별 순지출 경로가 각국 중기 재정구조계획의 상한 이내에 있는지 평가⁴⁴⁾
- (권고사항 반영 여부) 예산초안이 중기 계획의 순지출 증가율 상한을 준수하고, 국가별 권고안의 요구 조치를 반영한 경우 권고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
 - (일치) 8개 회원국(크로아티아, 사이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은 권고사항과 일치한다고 평가
 - (불일치) 중기 재정 계획 및 권고사항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 ‘완전 불일치’로 평가하고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일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불일치 위험’으로 판단
 - (완전 불일치) 네덜란드는 연간 및 누적 순지출이 모두 상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참조 궤적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불일치) 4개국(에스토니아,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은 연간 혹은 누적 순지출 증가율이 지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3개국(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은 2024~2025년 겨울까지 에너지 긴급 지원 조치 철회를 하지 않는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불일치 위험) 리투아니아는 중기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연간 및 누적 순지출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권고안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제출) 2025년 예산초안을 제출하지 않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의 경우 이들 국가의 2025년 재정정책이 권고사항과 일치하는지 평가를 보류

43) EU 집행위원회, “Draft budgetary plans 2025,”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preventive-arm/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5_en, 검색일자: 2024.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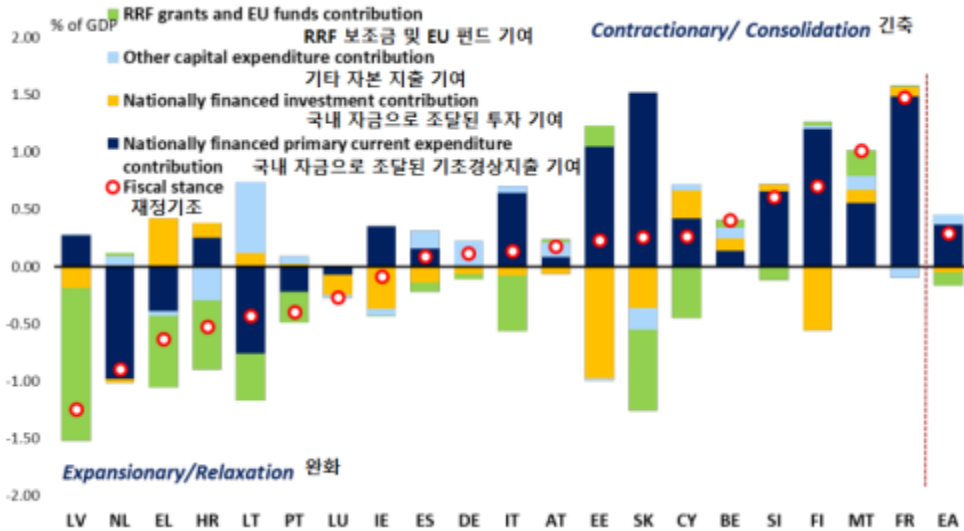
44) 회원국의 중기 재정구조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계획의 순지출 경로가 새로운 체계의 요구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024년 6월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제공한 사전 지침을 기초로 평가함.

- 예산초안이 국가별 권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이 요구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함
- (재정기조 평가) 2025년 회원국들의 예산초안은 다소 긴축 재정기조이고, 공공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 거버넌스 체계의 전제(건전화와 투자)를 충족함
 - (재정수지)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정책은 202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2024년에는 민간 투자 보조금 감소와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3.0%로 감소 전망
 - 2025년에는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원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2.9%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채무) 유로지역의 GDP 대비 공공 채무 비율은 2025년에 90%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 약 99%의 최고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채무 비율 증가는 기초 재정수지 적자와 이자 지출의 증가에 주로 기인
 - (재정기조) 2024년 유로지역 재정기조는 자본지출 감소로 인해 GDP 대비 0.5%의 긴축 기조로 전환 전망
 - 2025년에는 순경상지출 감소가 투자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되면서 GDP 대비 0.25%를 약간 초과하는 긴축 재정기조로 예상됨
 - (회원국별 재정기조) 2025년 유로지역 회원국 간 재정기조는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 [그림 2- I -4] 참고
 - (2024년) 유로지역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기조이나, 절반은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전망
 - (2025년) 유로지역의 1/3 국가들이 확장 재정기조이고, 6개국은 긴축 기조, 나머지 국가들은 중립 재정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 조정 필요성이 큰 국가들은 긴축 기조 유지
- (공공투자)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2025년 공공투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유로지역 공공투자 비율은 잠재 GDP 대비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2019년 3.0%)

- 이는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투자 삭감의 교훈을 기초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위기에 대응해 회원국들이 투자를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함

그림 2-I-4 2025년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기조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LV(라트비아), NL(네덜란드), EL(그리스), HR(크로아티아), LT(리투아니아), PT(포르투갈), LU(룩셈부르크), IE(아일랜드), ES(스페인), DE(독일), IT(이탈리아), AT(오스트리아), EE(에스토니아), SK(슬로바키아), CY(키프로스), BE(벨기에), SI(슬로베니아), FI(핀란드), MT(몰타), FR(프랑스), EA(유로지역 평균)

자료: EU 집행위원회, “2025 European Semester: bringing the new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to life,” 2024. 11. 26., [Graph 5, a 패널], p. 2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0633b883-761d-4b68-91f9-6d8848c64f7c_en?filename=COM_2024_705_1_EN.pdf, 검색일자: 2024. 11. 27.

■ EU 집행위원회, EU 회원국이 제출한 중기 재정구조계획(Medium-term fiscal structural plans)에 관한 평가 보고서 발표(2024. 11. 25.)⁴⁵⁾

※ EU 회원국이 2024년 10월 EU 집행위에 제출한 중기 재정구조계획은 2024년 4월부터 발효된 새로운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 요소로 회원국의 재정 목표와 EU 우선순위 및 개별 국가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혁과 투자를 담고 있음

45) EU 집행위원회,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s,”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national-medium-term-fiscal-structural-plans_en, 검색 일자: 2024. 11. 27.

- (사전 지침) 2024년 6월 EU 집행위는 재정적자 수준이 높은 회원국 등⁴⁶⁾에 중기 재정구조계획 설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참조 궤적(Reference trajectories)을 전달함(〈표 2-I-9〉 참고)
 - 참조 궤적은 재정 조정기간 종료 시점에 일반정부 채무가 하향 추세 또는 신중한 수준을 유지하며,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이하로 감소·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별 순지출 최대 증가율을 의미
- (국가별 평가) 22개 회원국에서 중기 재정구조계획을 제출했으며,⁴⁷⁾ 그중 20개 회원국에서 새로운 재정체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일부 5개국은 재정 조정기간 연장을 승인
 - (재정경로 평가) EU 집행위는 대부분 회원국에서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를 계획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함
 - *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은 EU 집행위원회의 참조 궤적을 준수하는지 평가
 - 20개 회원국⁴⁸⁾ 중기 계획의 재정경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⁴⁹⁾
 - (재정조정 기간 연장) EU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잘 반영한 5개 회원국(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은 재정조정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됨⁵⁰⁾
- (투자·개혁) 국가별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투자·개혁 실행 계획과 EU 우선순위인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사회 및 경제 회복력, 에너지 안보, 국방 역량 강화 등을 계획에 포함함
- (향후 이행 평가) 이번 중기 재정구조계획에 대한 이행은 2025년 봄에 European Semester의 봄 패키지 일환인 연례 진행 보고서로 처음 평가될 예정

46)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수준이 3% 이상이거나, 채무 수준이 60%를 초과하는 국가를 대상

47) EU 회원국 27개국 중 5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리투아니아)에서 중기 재정구조계획 제출이 지연되었고, 총선 및 신정부 구성으로 인해 지연되어 해당 국가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가을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음. 헝가리의 경우 중기 재정구조계획이 2024년 11월 4일에 제출되었으며, 규정에 따라 6주 기한을 두고 평가를 진행 중

48) 크로아티아, 사이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49) 중기 구조계획을 제출한 국가 중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를 제시한 회원국에서 제외된 국가는 네덜란드와 헝가리로 네덜란드는 중기적으로 조약 기준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기술적 정보를 기초로 한 순지출 경로를 이사회에 권고할 것을 제안하였고, 헝가리의 경우 중기 재정구조계획이 2024년 11월 4일에 제출되었으며 규정에 따라 6주 기한을 두고 평가를 진행 중

50)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은 중기 재정구조계획에 여러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였는데, 핀란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 개혁, 이탈리아는 세계 단순화, 스페인은 취업 및 구직 비자 제도 개혁을 계획에 포함함. 루마니아와 프랑스는 회복·복구기금 계획에 포함된 조치들을 계획에 포함시켜 재정 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음.

- 연례 진행 보고서를 통해 재정 경로의 준수 여부, 중기 재정구조계획에서 약속한 개혁
· 투자 이행의 진척 정도, 국가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
- 또한 초과적자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원국은 초과적자 시정 조치를 보고

표 2-I-9 EU 회원국 중기 재정구조계획의 순지출 변화율

(단위: %)

국가	중기 재정구조계획		EU 집행위의 사전 지침
	계획 기간 평균 순지출 변화율	재정 조정 기간 종료 시점	계획 기간 평균 순지출 변화율
체코	3.1	2028년	3.5
덴마크	4.4	2028년	5.8
에스토니아	4.7	2028년	3.1
아일랜드	5.3	2028년	-
그리스	3.3	2028년	3.1
스페인	3	2031년	2.8
프랑스	1.1	2031년	1.6
이탈리아	1.5	2031년	1.5
크로아티아	4.8	2028년	4
키프로스	5.2	2028년	4.9
라트비아	4.1	2028년	3.7
룩셈부르크	4.9	2028년	-
몰타	5.9	2028년	5.9
네덜란드	4.2	2028년	3.2
폴란드	4.5	2028년	4.5
포르투갈	3.6	2028년	3.6
루마니아	4.4	2031년	5.2
슬로베니아	4.5	2028년	4.4
슬로바키아	2	2028년	2
핀란드	2.4	2031년	1.5
스웨덴	4.4	2028년	4.5

주: 1. 순지출은 순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을 의미하고, 총지출에서 이차지출, 주기적 실업수당, 일회성지출, 팬데믹 관련 긴급조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2.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미만이고, GDP 대비 채무가 60% 미만인 국가들은 EU 집행위원회의 기술 궤적(reference trajectory)이 없으므로 해당 국가의 기술적 정보를 기반으로 수치

3. 평균은 2025년을 시작점으로 계산

자료: EU 집행위원회, "2025 European Semester: bringing the new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to life," 2024. 11. 26., <부록 Table 2>, p. 1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0633b883-761d-4b68-91f9-6d8848c64f7c_en?filename=COM_2024_705_1_EN.pdf, 검색일자: 2024. 11. 27.

- EU 집행위원회,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발표(2024. 11. 25.)⁵¹⁾
 - (권고) EU 가을 패키지에서는 초과적자 상황인 회원국의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경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권고안의 수정 경로는 회원국의 중기 재정구조계획이 EU 집행위가 권고한 순지출 경로와 일치하고, 연간 최소 GDP 대비 0.5%의 구조적 수지 개선이 요구됨
 - (대상국) 초과적자 시정 중인 국가는 2024년 7월에 새롭게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대상 국가가 된 7개국*과 2020년부터 시정 절차 중인 루마니아를 포함한 8개국이 해당
 - * (7개국)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 (평가) 벨기에와 헝가리를 제외한 6개국에서 '초과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 경로'는 '중기 재정구조계획의 순지출 경로'를 준수함
 - 벨기에와 헝가리의 경우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제공한 4년 기준 궤적을 수정 경로로 권고(벨기에는 중기 재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헝가리의 계획은 평가 중)
 - (후보국 평가)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를 평가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핀란드는 2025년 이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제외됨
 - 오스트리아는 2024년 GDP 대비 3% 재정적자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정책 불변 시 2025년이나 2026년에도 기준치 초과가 예상되므로 당국과 논의 중
 - 핀란드는 2024년에는 기준치를 초과하지만 2025년부터 추가적인 정책 조치 없이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초과적자시정절차 대상에서 제외됨
- EU 집행위원회,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회원국에 대한 경제 상황과 정책 이행을 감독하는 사후감독보고서⁵²⁾ 발표(2024. 11. 25.)⁵³⁾

51) EU 집행위원회, "2025 European Semester: bringing the new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to life,"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corrective-arm-excessive-deficit-procedure/excessive-deficit-procedures-overview_en#overview-of-ongoing-and-closed-excessive-deficit-procedures, 검색일자: 2024. 11. 27.

52) Post-programme Surveillance Reports

53) EU 집행위원회, "Post-Programme Surveillance Report - Portugal, Autumn 2024,"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post-programme-surveillance-report-portugal-autumn-2024_en, 검색일자: 2024. 11. 27.

_____, "Post-Programme Surveillance Report - Ireland, Autumn 2024,"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u-financial-assistance/euro-area-countries/financial-assistance-ireland_en,

재정 지원 및 경제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 국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 받은 재정 지원의 최소 75%를 상환할 때까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되며,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해당국의 경제 및 재정, 금융 상황을 분석하여 미상환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을 평가함

- (포르투갈) 공공 채무는 2023년 GDP 대비 97.9%에서 2026년 90.5%로 감소 전망되는 등 채무 지속가능성이 안정적이고 재정 및 경제, 금융 상황이 전반적으로 건전함

-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제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약 780억유로를 지원 받아 현재 IMF 대출은 전액 상환하여 약 60%의 잔액이 있음

- (아일랜드) 재정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낮고*, 높은 투자자 신뢰, 긴 상환 일정 등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할 필요

- * 2024~2026년 정부 '총재정조달 필요(Gross Financing Needs)'가 GDP 대비 2%로 낮음

- 2010년 12월 경제 조정 프로그램 시작으로 3년간 약 850억유로의 공동 자금 지원 받음

- (스페인) 2024년 경제성장률은 3.0%, 2025년 2.3%로 전망되고, 2024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0.5%p 감소한 GDP 대비 3.0%로 전망되는 등 경제 및 재정 상황은 긍정적이고 대출 상환 능력은 안정적으로 평가됨

- 유럽 금융위기의 여파로 은행 부문의 자본 확충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410억유로를 대출 받았으며, 2027년까지 매년 상환 예정이며 이 중 약 69%를 상환함

- (그리스) 주요 무역국 경제 약세,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과 2024년 정부 채무 전망은 GDP 대비 15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재정 흑자와 견고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단기 및 장기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평가되고 부채 상환 능력을 유지함

검색일자: 2024. 11. 27.

_____, "Post-Programme Surveillance Report - Spain, Autumn 2024,"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u-financial-assistance/euro-area-countries/financial-assistance-spain_en, 검색일자: 2024. 11. 27.

_____, "Post-Programme Surveillance Report - Greece, Autumn 2024,"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post-programme-surveillance-report-greece-autumn-2024_en, 검색일자: 2024. 11. 27.

_____, "Post-Programme Surveillance Report - Cyprus, Autumn 2024," 2024. 11. 2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post-programme-surveillance-report-cyprus-autumn-2024_en, 검색일자: 2024. 11. 27.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재정 악화 및 결제 불균형으로 인해 2010~2018년 동안 세 차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총 2,887억유로 규모로 대부분 장기 상환 조건으로 설계
- (사이프러스) 202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7%로 증가하였고, GDP 대비 3.5% 재정 흑자 및 2025년 공공 채무 비율은 GDP 대비 56.7%로 감소 전망되는 등 안정적 경제 성장 및 건전한 재정 상황으로 대출 상환능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사이프러스는 2012년 재정적자 및 채무 증가, 그리스는 국채 손실로 인한 금융 시스템 위기 등으로 2013년 3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1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여 경제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
 - 2020년 IMF 대출은 전액 상환하였으며, 유럽안정메커니즘 대출 잔액은 약 63억유로

03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통화 정책

- 유럽중앙은행(ECB), 현행 정책금리 인하 결정(2024. 9. 12.)⁵⁴⁾
 - (정책금리) 9월 18일부터 기준금리 0.6%p(4.25 → 3.65%), 한계대출금리 0.6%p(4.50 → 3.9%), 수신금리 0.25%p(3.75 → 3.5%) 인하⁵⁵⁾
 - (물가) 2024년 6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4년 2.5%, 2025년 2.2%, 2026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기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통화정책 운용
 -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서 2024년과 2025년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됨(2024년 2.9%, 2025년 2.3%, 2026년 2.0%)

54)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 9. 12.,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0912~67cb23badb.en.html>, 검색일자: 2024. 9. 25.

55)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는 은행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수신금리(Deposit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예치 시 적용받는 금리

- (경제) 향후 몇 분기 동안 내수 기여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6월 전망에 비해 소폭 하향된 2024년 0.8%, 2025년 1.3%, 2026년 1.5%로 경제성장 전망
 - 2024년 6월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4년 0.9%, 2025년 1.4%, 2026년 1.6%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인하 결정(2024. 10. 17.)⁵⁶⁾
 - (정책금리) 10월 23일부터 세 가지 주요금리를 각각 0.25%p 인하 결정
 - 기준금리 3.65 → 3.4%, 한계대출금리 3.9 → 3.65%, 수신금리 3.5 → 3.25%로 인하⁵⁷⁾
 - 2024년 6월에 이어 9월 경제 약세 및 물가상승률 하락 전망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
 - 2024년 9월 기준 2024년 경제성장률 0.8%, 2025년 1.3%, 2026년 1.5%,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2024년 2.5%, 2025년 2.2%, 2026년 1.9% 전망
 - (경제) 제조업과 수출 약세로 경제가 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분기 가계 저축률은 15.7%로 팬데믹 이전 평균인 12.9%를 상회하나, 가계 지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력적이고 8월 실업률은 6.4%로 최저치를 나타냈으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 성장이 둔화되고 노동수요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물가) 유로지역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1.7%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었고 연간 에너지가격 변화율은 -6.1%로 급격히 낮아짐
 - 에너지가격 하락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면서 향후 몇 달간은 물가상승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식품 물가상승률은 2.4%로 소폭 상승했으며, 상품은 0.4%로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3.9%로 소폭 하락함

56)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 10. 17.,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1017~aa366eaf20.en.html>, 검색일자: 2024. 10. 21.

_____, "Monetary policy statement (with Q&A)," 2024. 10. 17.,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monetary-policy-statement/2024/html/ecb.is241017~59ad385bab.en.html, 검색일자: 2024. 10. 21.

57)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는 은행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수신금리(Deposit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예치 시 적용받는 금리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하향 조정(2024. 12. 12.)⁵⁸⁾

- (정책금리) 12월 18일부터 세 가지 주요 금리를 각각 0.25%p 하향 조정 예정
 - 기준금리 3.4 → 3.15%, 한계대출금리 3.65 → 3.40%, 수신금리 3.25 → 3.00%로 인하⁵⁹⁾
- (물가) 물가상승률 하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물가상승률은 2.4%, 2025년 2.1%, 2026년 1.9%로 하락한 후 EU 배출권 거래제 확대⁶⁰⁾ 운영으로 2027년에는 2.1% 전망⁶¹⁾
 -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024년 2.9%, 2025년 2.3%,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1.9%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이지만 이전 물가 급등으로 인한 임금·가격 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과거 금리 인상이 금융 환경에 긴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제) 지난 9월 전망⁶²⁾에 비해 느린 경제 회복이 예상되고 2024년 0.7%, 2025년

58)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 12. 12.,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1212~2acab6e51e.en.html>, 검색일자: 2024. 12. 16.

59)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는 은행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수신금리(Deposit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예치 시 적용받는 금리

60)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ETS) 200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는 전기 및 열 생산, 산업 제조, 항공 세 부문을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대한 비용을 오염자에게 부과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녹색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EU 회원국 및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북아일랜드(전력)에 적용됨.

(ETS2) 기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건물, 도로 운송과 같은 소규모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규제. 2025년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의 단계적 실행을 시작으로 2027년에 완전히 실행될 예정이며 건물 개조와 운송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ETS2 배출량 상한은 2005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42% 줄여야 함. 2026년에 가스나 석유 가격이 예외적으로 높은 경우 ETS2의 시행이 2028년으로 연기될 수 있음. (EU 집행위, "What is the EU ETS?,"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what-eu-ets_en, 검색일자: 2024. 12. 19.; "ETS2: buildings, road transport and additional sectors,"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ets2-buildings-road-transport-and-additional-sectors_en, 검색일자: 2024. 12. 19.)

61) EU 배출권 거래제가 운송업으로 확대된 ETS2가 2027년 완전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해운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선박 운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배출권거래제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국가별·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일부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증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으며(Moessner, R.(2022), "Effects of Carbon Pricing on Inflation. CESifo Working Paper No. 9563. Munich: CESifo," https://www.cesifo.org/DocDL/cesifo1_wp9563.pdf, 검색일자: 2024. 12. 19.), 다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로 에너지가격은 상승하나 전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본 연구가 있음(Konradt, M., McGregor, T., Toscani, F. G. "Carbon Prices and Inflation in the Euro Area," IMF Working Papers, Vol. 2024, Issue 031, IMF, 2024, p. 41, DOI: <https://doi.org/10.5089/9798400267277.001>, 검색일자: 2024. 12. 19.)

1.1%, 2026년 1.4%, 2027년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실질 소득의 증가가 경제 회복을 이끌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긴축 통화정책의 효과가 점차 약화되면서 대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표 2-I-10 EU 정책금리 변화 경로

(단위: %)

구 분	2022				2023								2024			
	7월	9월	11월	12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1월	6월	9월	10월	12월
기준금리	0.50	1.25	2.00	2.50	3.00	3.50	3.75	4.00	4.25	4.50	4.50	4.50	4.25	3.65	3.4	3.15
한계대출금리	0.75	1.50	2.25	2.75	3.25	3.75	4.00	4.25	4.50	4.75	4.75	4.75	4.50	3.90	3.65	3.40
기준금리 및 한계대출금리 변동폭(%p)	+0.5	+0.75	+0.75	+0.5	+0.5	+0.5	+0.25	+0.25	+0.25	+0.25	-	-	-0.25	-0.6	-0.25	-0.25
수신금리	0.00	0.7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4.00	4.00	3.75	3.50	3.25	3.00
변동폭(%p)	+0.5	+0.75	+0.75	+0.5	+0.5	+0.5	+0.25	+0.25	+0.25	+0.25	-	-	-0.25	-0.25	-0.25	-0.25

자료: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4. 12. 16.

나. 기타

■ EU 이사회,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 개별 회원국 계획의 수정안 승인(2024. 12. 10.)⁶³⁾⁶⁴⁾

- (개요) 회복·복구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유럽 경제 활성화 및 녹색·디지털 전환

62) 2024년 경제성장률은 0.8%, 2025년 1.3%, 2026년 1.5%로 경제 성장 전망

63) EU 이사회, "Recovery and resilience fund: Council greenlights the amended plans of Sweden, Slovenia, Denmark and Belgium," 2024. 12. 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2/10/recovery-and-resilience-fund-council-greenlights-the-amended-plans-of-sweden-slovenia-denmark-and-belgium/>, 검색일자: 2024. 12. 12.; "Timeline - A recovery plan for Europ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ecovery-plan/timeline-a-recovery-plan-for-europe/>, 검색일자: 2024. 12. 12.; "A recovery plan for Europ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ecovery-plan/>, 검색일자: 2024. 12. 12.

6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KIPF 재정동향, 2021년 4월호, 2021. 5. 6., pp. 2~5,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443>, 검색일자: 2024. 12. 12.; 「KIPF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2024. 3. 6., pp. 9~11,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4>, 검색일자: 2024. 12. 12.; 「KIPF 재정동향」, 2024년 4월호, 2024. 5. 13., p. 4,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10>, 검색일자: 2024. 12. 12.

지원을 위한 패키지인 경제회복계획(Next Generation EU, NGEU)의 핵심 프로그램

- (규모) 보조금 3,380억유로, 차입금 3,858억유로로 총 7,238억유로 지원(현재 가치 기준)
- (절차) 회원국들은 2021년 녹색·디지털 전환 등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목표·투자 계획을 집행위에 제출하였고, 2022년 6월 집행위의 평가를 거쳐 자금 사용 승인
 - (우선순위 분야) 2021~2022년 동안 EU 회원국들은 여섯 가지 정책 분야 내의 개혁 및 투자 목표를 담은 프로젝트 패키지를 제출(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사회·지역 결속, 건강 및 회복력(Resilience), 교육 및 기술을 포함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 (집행위 평가 기준) 2022년 6월 집행위는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의 국가별 권고안과의 정합성 여부, 성장 잠재력·일자리 창출·사회경제 회복력 개선, 녹색·디지털 전환에 기여 여부(지원 금액의 최소 37%를 기후 및 생물다양성, 최소 20%를 디지털 전환에 할당)로 평가
- (수정 계획) 일부 EU 회원국들은 2021년 제출된 계획서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⁶⁵⁾로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조치, 행정부담 완화, REPowerEU(2022년 5월 신설)⁶⁶⁾ 등을 반영
 - 이사회는 아일랜드(6월), 독일(7월), 룩셈부르크(9월), 리투아니아·포르투갈(10월), 네덜란드·체코·이탈리아(11월), 스웨덴·슬로베니아·덴마크·벨기에(12월) 계획의 수정을 승인

■ EU 이사회, 우크라이나에 최대 350억유로 거시금융 지원 승인(2024. 10. 23.)⁶⁷⁾

- (목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긴급한 필요 자금을 예외적으로

65) 일부 예시로 스웨덴은 화석연료 및 바이오 연료의 비용 증가로 인해 목표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였고, 벨기에는 수소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 투자 등에 관한 목표를 수정했으며, 슬로베니아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목표를 수정하는 등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나 조치로 수정

66)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투자,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등을 목표로 하는 회복·복구기금 프로젝트

67) EU 이사회, "Immobilised assets: Council greenlights up to €35 billion in macro-financial assistance to Ukraine and new loan mechanism implementing G7 commitment," 2024. 10. 2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0/23/immobilised-assets-council-greenlights-up-to-35-billion-in-macro-financial-assistance-to-ukraine-and-new-loan-mechanism-implementing-g7-commitment/>, 검색일자: 2024. 10. 24.

- 지원하여 우크라이나의 거시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대외 금융 제약을 완화하고자 함
- (경과) 2024년 6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10월 23일 예외적 거시금융지원 대출 및 차관 협력 메커니즘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 패키지를 EU 이사회에서 채택
- (재원) 거시금융지원 대출은 EU 예탁기금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으로 350억유로를 지원하고, 차관 협력 메커니즘은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과 회원국 및 제3국 등의 기부를 재원으로 함
- (기간) 거시금융지원은 2024년 내 집행될 예정이고 최대 금융지원 대출 기간은 45년으로 설정

04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동향·전망

- EU 통계청, 유로지역 연간 물가상승률⁶⁸⁾ 발표(2024. 8. 20.)⁶⁹⁾
 - 2024년 7월 유로지역 연간 물가상승률은 2.6%로, 전월 2.5%보다 0.1%p 상승(전년 7월 5.3%)
 - 연간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서비스(+1.82%p), 식품·주류·담배(+0.45%p), 비에너지 산업재(+0.19%p), 에너지(+0.12%p) 순으로 높았음
 - EU 물가상승률은 2024년 7월 기준 2.8%로, 6월 2.6%에 비해 0.2%p 상승(전년 7월 6.1%)
 - 국가별 연간 물가상승률은 핀란드(0.5%), 라트비아(0.8%), 덴마크(1.0%) 순으로 낮고, 루마니아(5.8%), 벨기에(5.4%), 헝가리(4.1%)순으로 높았음⁷⁰⁾

68) 연간 물가상승률은 당월과 전년 동월 사이의 소비자 및 서비스 가격 수준의 변화

69) EU 통계청, "Annual inflation up to 2.6% in the euro area," 2024. 8. 20.,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0082024-ap>, 검색일자: 2024. 8. 22.

70) 루마니아의 2023년 7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8.9%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품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2023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 정책 대응으로 물가상승률이 2024년 3월 6.7%, 6월 5.3%로 하락세를 보임. 벨기에의 2022년 물가상승률은 10.3%에서 2023년 2.3%로 낮아졌으나, 2024년 봄부터 에너지가격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벨기에 중앙은행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물가상승률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전월 대비 9개 회원국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4개 회원국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14개 회원국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상승

그림 2-I-5 EU 및 유로지역 연간 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1. EU 통계청, "Annual inflation up to 2.6% in the euro area," 2024. 8. 20.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0082024-ap>, 검색일자: 2024. 8. 22..

■ EU 통계청,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및 고용 통계 발표(2024. 9. 6.)⁷¹⁾

- (경제성장률) 2024년 2분기 유로지역과 EU의 계절조정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모두 0.2% 증가(2024년 1분기는 두 지역 모두 전 분기 대비 0.3%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0.6%, EU 0.8% 증가(1분기 각각 0.5%, 0.7%)
 - 2024년 2분기 미국은 전 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1분기 각각 0.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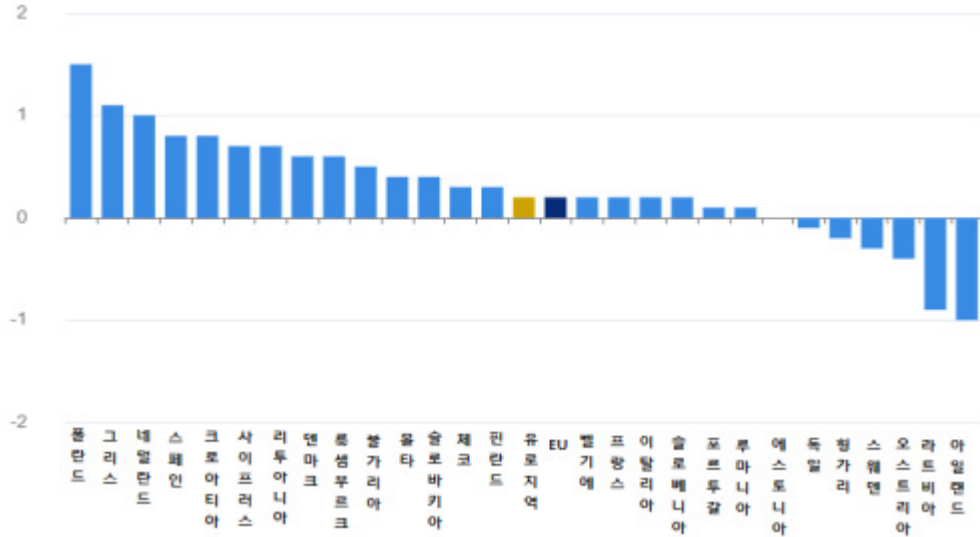
(EU 통계청, "Annual inflation up to 2.6% in the euro area," 2024. 8. 20.,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0082024-ap>, 검색일자: 2024. 8.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기준 금리 인하 기대」, 2024. 7. 5.,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No=367989&mid=a1020000000&systemcode=07>, 검색일자: 2024. 8. 28.; 벨기에 중앙은행, "Economic projections for Belgium," 2024. 5. 22., <https://www.nbb.be/en/publications-and-research/publications/economic-and-financial-publications/economic-projections>, 검색일자: 2024. 8. 28.)

71) EU 통계청, "GDP up by 0.2% and employment up by 0.2% in the euro area," 2024. 9. 6.,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06092024-ap>, 검색일자: 2024. 9. 9.

- (회원국별) 전 분기 대비 2분기 경제성장률은 폴란드 1.5%, 그리스 1.1%, 네덜란드 1.0% 순으로 높았고, 아일랜드-1.0%, 라트비아 -0.9%, 오스트리아 -0.4% 순으로 낮았음(그림 2- I -6) 참고)
- (성장 기여도) GDP 성장 기여도는 총고정자본형성이 유로지역 -0.5%p, EU -0.4%p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대외수지(수출-수입)는 유로지역 +0.5%p, EU +0.4%p를 기록
 - 정부 최종지출은 유로지역 및 EU 둘 다 +0.1%p 기여도를 기록하였고, 가계최종 소비지출과 재고 항목의 성장 기여도는 유로지역과 EU 모두 미미한 기여
- (취업자수) 2024년 2분기 취업자 수는 전 분기 대비 유로지역 0.2%, EU 0.1% 증가(1분기 각각 0.3%)
 -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유로지역과 EU 모두 0.8% 증가(1분기에는 유로지역 1.0%, EU 0.9%)
- (고용성장률) 전 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회원국별 고용성장률은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각각 1.1%, 에스토니아 0.8% 증가로 높은 고용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루마니아(-0.5%), 핀란드(-0.4%) 순으로 낮은 고용성장률을 보임(〈 표 2- I -11 〉 참고)

그림 2-I-6 전 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계절 조정)

(단위: % 변화율)



자료: EU 통계청, "GDP up by 0.2% and employment up by 0.2% in the euro area," 2024. 9. 6.,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06092024-ap>, 검색일자: 2024. 9. 9.

표 2-I-11 유로지역 및 EU 회원국 고용성장률

(단위: % 변화율)

구 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3 3분기	2023 4분기	2024 1분기	2024 2분기	2023 3분기	2023 4분기	2024 1분기	2024 2분기
유로지역(20개국)	0.2	0.2	0.3	0.2	1.4	1.2	1	0.8
EU	0.2	0.2	0.3	0.1	1.1	0.9	0.9	0.8
벨기에	0.1	0	0.1	0.1	0.6	0.5	0.4	0.3
불가리아	0	0.5	0.2	0.5	-0.6	1.2	0.7	1.7
체코	-0.2	0.1	-0.2	0.5	0.8	0.8	0.3	0.2
덴마크	0.2	0.1	0.5	0.2	1.2	1	0.9	1
독일	0	0.1	0.1	0.1	0.7	0.5	0.4	0.4
에스토니아	-0.9	0.7	0.6	0.8	2.2	2.2	-1.3	1.2
아일랜드	0.7	0.7	0.2	1.1	3.6	3.4	1.9	2.7
그리스	0.1	0.5	0.5	-0.2	0.7	1	1.5	0.9
스페인	0.9	0.4	0.4	0.4	3.6	3.6	2.9	2
프랑스	0.2	0.1	0.1	0.1	1	0.7	0.6	0.4
크로아티아	1.1	0.5	0.4	0.4	1.9	1.9	1.1	2.3
이탈리아	0.1	0.5	0.4	0.4	1.7	1.6	1.2	1.4
사이프러스	0.6	0.4	0.6	0.5	1.3	1.1	2.2	2.1
라트비아	-0.1	-1	0.3	0	-0.2	-0.8	-0.9	-0.9
리투아니아	1.4	0	0.2	1.1	1.9	2.1	2.6	1.9
룩셈부르크	0.2	0.4	0.2	0.3	1.9	1.7	1.2	1
헝가리	0.1	0	0.2	-0.1	0.2	0.1	0.6	0.2
몰타	1.4	1.4	1.4	:	6.4	6.3	5.8	:
네덜란드	0.2	0.4	0.4	0.2	1.3	1	1.2	1.2
오스트리아	0	-0.1	0.2	-0.2	0.8	0.4	0.4	-0.1
폴란드	-0.2	-0.1	-0.4	-0.2	0	-0.7	-1	-0.4
포르투갈	0.1	-0.1	1.1	0.2	1	1.2	1.8	1.3
루마니아	0.3	1.5	2.3	-0.5	-0.6	0.3	4	3.7
슬로베니아	0.1	0.1	0.1	0	1	0.7	0.5	0.3
슬로바키아	0	0.1	-0.2	0	0.2	0.3	-0.1	-0.3
핀란드	-0.6	-0.7	0.1	-0.4	0.3	-0.3	-0.1	-1.7
스웨덴	0.1	-0.1	-0.1	-0.2	0.9	0.3	0	-0.2

주: ':' 표시는 수치 없음

자료: EU 통계청, "GDP up by 0.2% and employment up by 0.2% in the euro area," 2024. 9. 6.,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06092024-ap>, 검색일자: 2024. 9. 9.

- EU 통계청, 2024년 9월 유로지역 및 EU 물가상승률(HICP)⁷²⁾ 발표(2024. 10. 17.)⁷³⁾
 - (유로지역) 2024년 9월 유로지역⁷⁴⁾의 현재 월과 전년 동월 사이의 가격 변화로 측정된 연간 물가상승률은 1.7%로, 에너지가격 하락⁷⁵⁾으로 전년 동월 4.3%에 비해 2.6%p 감소(전월 2.2% 대비 0.5%p 감소)
 - (EU) EU의 2024년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년 동월 4.9%에서 2.8%p 하락하였고, 전월 2.4%에서 0.3%p 감소
 - (국가별) 연간 물가상승률은 아일랜드(0.0%), 리투아니아(0.4%), 슬로베니아·이탈리아(각각 0.7%) 순으로 낮았고, 루마니아(4.8%), 벨기에(4.3%), 폴란드(4.2%) 순으로 높았음⁷⁶⁾
 - 전월과 비교하여 연간 물가상승률은 20개 회원국에서 감소하였고, 2개 회원국에서 유지, 5개 회원국에서 상승함
 - (부문별 기여) 유로지역에서 물가 상승 기여도는 서비스 +1.76%p, 식품·주류·담배 +0.47%p, 비에너지 산업재⁷⁷⁾ +0.12%p, 에너지 -0.6%p 순으로 기여

72)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EU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지표

73) EU 통계청, "Annual inflation down to 1.7% in the euro area," 2024. 10. 17.,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17102024-ap>, 검색일자: 2024. 10. 18.

74) 유로지역 국가는 20개국(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크로아티아)이고, EU는 27개국(유로지역 국가들에서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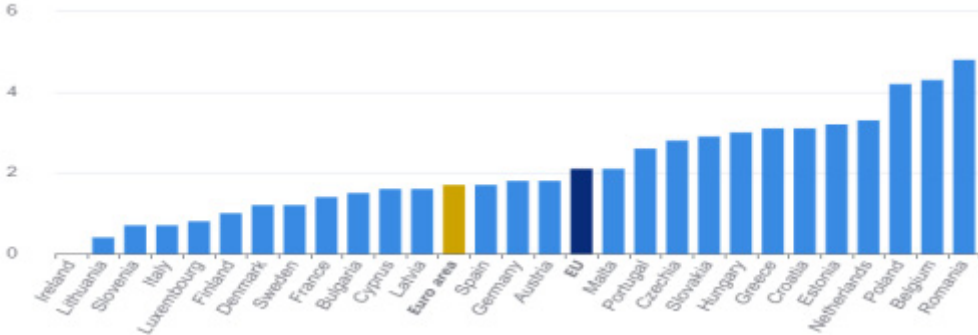
75) 2023년 2분기와 비교하여 2024년 2분기에 EU 가스 및 전기 시장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됨.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이 전기생산량의 52%를 달성하였고, 전기 도소매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공급 중단 위기에 대응한 조치로, 가스 공급이 점차 안정되고, 가스 수요 감소,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의 구조적 감소 등에 힘입어 2024년 2분기 가스 소매 가격은 2024년 1분기에 비해 4%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0% 낮아져 위기 발생 전인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감(EU 집행위원회, "Quarterly reports confirm EU energy markets stabilised in second quarter of 2024, with more than half of electricity generated from renewables," 2024. 10. 24., https://energy.ec.europa.eu/news/quarterly-reports-confirm-eu-energy-markets-stabilised-second-quarter-2024-more-half-electricity-2024-10-24_en#:~:text=Both%20wholesale%20and%20retail%20electricity,the%20second%20quarter%20of%202023, 검색일자: 2024. 10. 30.)

76) 루마니아는 식품 및 서비스, 벨기에에는 천연가스, 전기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았으며, 폴란드는 7월 에너지가격 동결 해제로 물가 상승 영향이 미치고 있음.

77) 비내구재(개인용 전자제품, 의약품, 신문), 준내구재(의류, 신발, 서적, 여가활동 장비), 내구재(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PC)로 구성

그림 2-I-7 2024년 9월 EU 및 유로지역 연간 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1. EU 통계청, "Annual inflation down to 1.7% in the euro area," 2024. 10. 17.,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17102024-ap>, 검색일자: 2024. 10. 18.

■ EU 통계청,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및 고용 통계 발표(2024. 12. 6.)⁷⁸⁾

- (경제성장률) 2024년 3분기 유로지역과 EU의 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 GDP 성장률은 각각 0.4%로 나타남(2024년 2분기에는 각각 0.2%) ([그림 2-I-8], [표 2-I-12] 참고)
 -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0.9%, EU는 1.0%로 나타남
 - (미국) 2024년 3분기 미국의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0.7%, 전년 동기 대비 2.7%
- (성장 기여도) 순수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양(+)의 기여([그림 2-I-9] 참고)
 -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유로지역 +0.4%p, EU +0.3%p, 정부 최종지출은 유로지역 및 EU 둘 다 +0.1%p 기여를 나타내고, 총고정자본형성은 유로지역 +0.4%p, EU +0.2%p, 재고증감은 유로지역 +0.4%p, EU +0.5%p
 - 순수출은 유로지역 -0.9%p, EU -0.7%p로 두 지역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 (회원국별) 전 분기 대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아일랜드 3.5%,⁷⁹⁾ 덴마크와 리투아니아가

78) EU 통계청, "GDP up by 0.4% and employment up by 0.2% in the euro area," 2024. 12. 6.,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06122024-ap>, 검색일자: 2024. 1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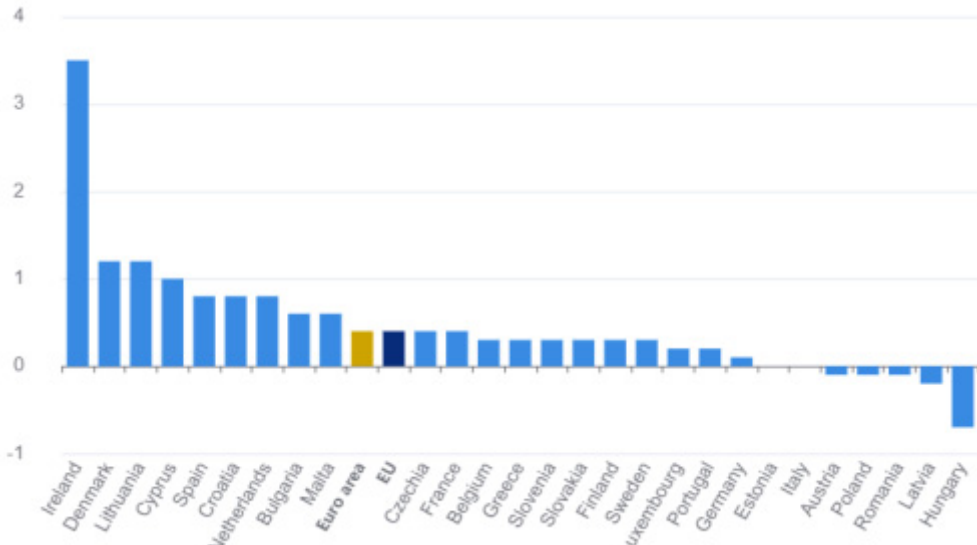
79) 아일랜드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의한 외부 충격이나 변동성을 배제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 정부 소비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보여주는 수정 국내 수요(Modified Domestic Demand)는 전 분기 대비 1.3%, 연간 기준으로는 4.1%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아일랜드의 2024년 상반기 낮은 경제성장률은 주로 다국적기업 부문의 변동이 반영된 반면, 아일랜드 국내 경제활동을 더 잘 반영하는 수정된 국내 수요는 노동시장 강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2024년 아일랜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0.5%)(아일랜드 정부, "Minister Chambers welcomes the strong third quarter results for the domestic economy," 2024. 12. 5., <https://www.gov.ie>)

각각 1.2% 순으로 높았고, 헝가리 -0.7%, 라트비아 -0.2% 순으로 낮음

- (취업자 수) 2024년 3분기 전 분기 대비 취업자 수는 유로지역 0.2% 증가, EU는 동일
 -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 취업자 수는 1.0%, EU는 0.7% 증가(2분기 각각 0.9%)
 - (회원국별) 2024년 3분기 전 분기 대비 회원국별 고용성장률은 크로아티아 1.5%, 아일랜드 1.2%, 몰타 1.0% 순으로 높았고, 루마니아 -3.1%, 에스토니아 -1.2%, 라트비아 -0.6% 순으로 낮았음

그림 2-I-8 2024년 3분기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계절 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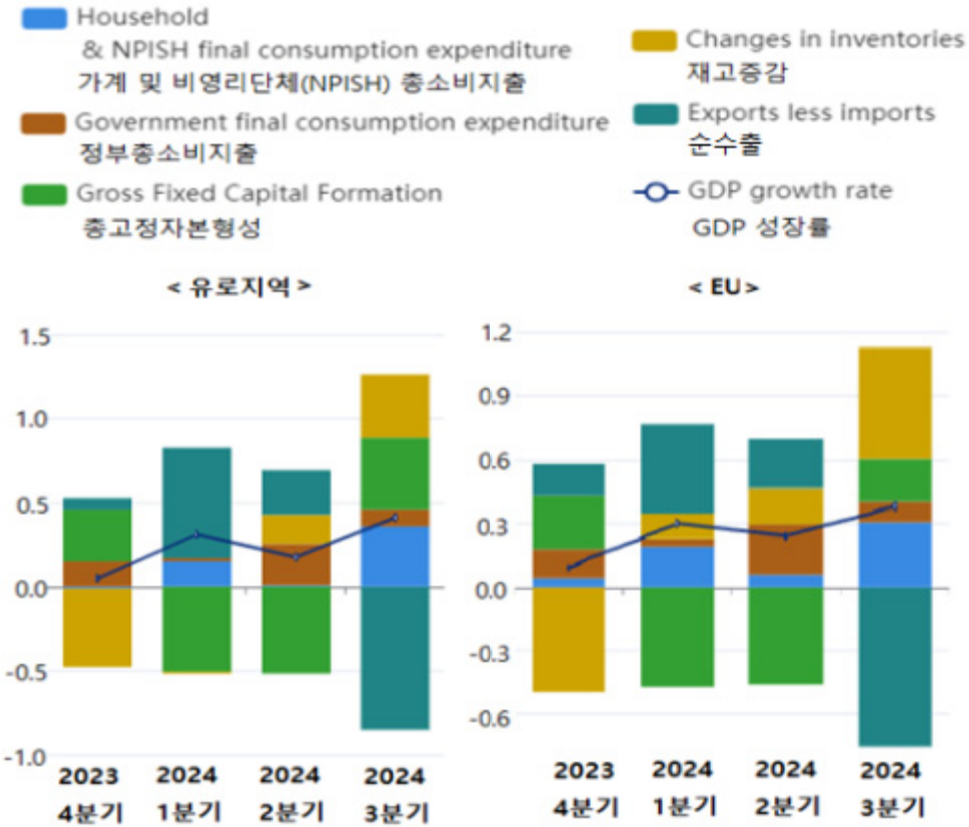


자료: EU 통계청, “GDP up by 0.4% and employment up by 0.2% in the euro area,” 2024. 12. 6.,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06122024-ap>, 검색일자: 2024. 12. 10.

e/en/press-release/83c4a-minister-chambers-welcomes-the-strong-third-quarter-results-for-the-domestic-economy/, 검색일자: 2024. 12. 11.; EU 집행위, “Economic forecast for Ireland,” 2024. 11. 15., http://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surveillance-eu-economies/ireland/economic-forecast-ireland_en, 검색일자: 2024. 12. 11.)

그림 2-I-9 부문별 GDP성장률 기여도(전 분기 대비)

(단위: %p)



자료: EU 통계청, "GDP up by 0.4% and employment up by 0.2% in the euro area," 2024. 12. 6.,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06122024-ap>, 검색일자: 2024. 12. 10.

표 2-I-12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계절 조정)

(단위: %)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3 Q4	2024			2023 Q4	2024		
		Q1	Q2	Q3		Q1	Q2	Q3
벨기에	0.3	0.3	0.3	0.3	0.6	0.8	0.9	1.2
독일	-0.4	0.2	-0.3	0.1	-0.2	-0.1	-0.2	-0.3
에스토니아	-0.5	-0.2	0.1	0.0	-2.3	-1.4	-1.1	-0.6
아일랜드	-1.4	0.6	-0.3	3.5	-9.9	-4.2	-3.2	2.5
그리스	0.8	0.1	1.2	0.3	2.1	2.2	2.3	2.4
스페인	0.7	0.9	0.8	0.8	2.3	2.6	3.2	3.4
프랑스	0.4	0.2	0.2	0.4	1.2	1.4	0.9	1.2
크로아티아	1.8	0.5	1.0	0.8	5.2	4.2	3.2	4.1
이탈리아	0.0	0.3	0.2	0.0	0.3	0.3	0.7	0.4
사이프러스	1.0	1.7	0.1	1.0	2.7	3.8	3.5	3.8
라트비아	-0.4	-0.1	-0.3	-0.2	1.1	0.2	0.0	-1.0
리투아니아	-0.3	1.1	0.3	1.2	0.7	2.7	1.5	2.4
룩셈부르크	0.1	0.3	0.6	0.2	-0.5	-0.7	-0.1	1.2
몰타	0.9	3.0	0.8	0.6	6.4	7.0	5.8	5.4
네덜란드	0.2	-0.3	1.1	0.8	-0.5	-0.6	0.8	1.7
오스트리아	-0.6	0.2	-0.2	-0.1	-2.4	-1.5	-1.4	-0.8
포르투갈	0.8	0.6	0.2	0.2	2.1	1.4	1.6	1.9
슬로베니아	0.8	-0.2	0.1	0.3	2.8	1.9	0.7	1.0
슬로바키아	0.5	0.7	0.2	0.3	2.2	2.7	2.1	1.7
핀란드	-0.4	0.4	0.1	0.3	-1.5	-1.2	-1.5	0.5
유로지역 20개국	0.0	0.3	0.2	0.4	0.1	0.4	0.5	0.9
불가리아	0.6	0.6	0.6	0.6	1.7	2	2.2	2.4
체코	0.3	0.4	0.2	0.4	0	0.4	0.5	1.3
덴마크	2.0	-0.7	1.3	1.2	4.8	2.2	3.5	3.9
헝가리	-0.3	0.4	-0.2	-0.7	0.6	1.6	1.3	-0.7
폴란드	0.0	0.6	1.2	-0.1	2.0	1.7	3.7	1.7
루마니아	0.1	-0.4	0.1	-0.1	2.1	2.0	0.8	-0.3
스웨덴	-0.2	0.6	0	0.3	-0.3	0.2	0.4	0.7
EU 27개국	0.1	0.3	0.2	0.4	0.3	0.6	0.8	1.0
아이슬란드	1.0	-1	1.7	:	1.4	-1.0	-0.7	:
노르웨이	1.7	0.3	1.4	:	1.0	1.0	2.6	:
스위스	0.3	0.3	0.6	0.4	0.5	0.6	1.4	1.7
미국	0.8	0.4	0.7	0.7	3.2	2.9	3.0	2.7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3. 아이슬란드는 달력효과가 조정되지 않음

자료: EU 통계청, "GDP up by 0.4% and employment up by 0.2% in the euro area," 2024. 12. 6.,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06122024-ap>, 검색일자: 2024. 12. 10.

나. 재정 동향·전망

- EU 통계청, 2024년 1분기 재정통계 발표(2024. 7. 22.)⁸⁰⁾
 - 2024년 1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적자는 유로지역⁸¹⁾에서 GDP 대비 3.2%로 전 분기 대비 0.8%p 감소하였고, EU 27개국은 3.0%로 전 분기 대비 0.9%p 감소
 - (유로지역) 2024년 1분기 정부 총수입은 전 분기 대비 20억유로 감소하고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정부 총수입 비율은 전 분기 46.5%에서 46.7%로 0.2%p 감소
 - 유로지역 정부 총지출은 2023년 4분기에 비해 2024년 1분기에 약 310억유로 감소하고 명목 GDP가 증가로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비율은 전 분기 50.0%에서 50.7%로 0.7%p 증가
 - (EU) 전 분기 대비 총수입이 약 90억유로 증가하고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정부 총수입 비율은 전 분기 46.0%에서 46.2%로 0.2%p 증가
 - 전 분기 대비 정부 총지출이 약 290억유로 감소하고, 명목 GDP가 증가하여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비율은 전 분기 49.5%에서 50.1%로 0.6%p 증가
 - 2024년 1분기 말 유로지역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88.7%로 전 분기 88.2%에 비해 0.5%p 증가하였고, EU는 GDP 대비 82.0%로 전 분기 81.5%에 비해 0.5%p 증가
 - 전년 동기와 비교 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유로지역에서 1.4%p 감소하였고, EU에서는 1.0%p 감소
 - 2024년 1분기말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159.8%), 이탈리아(137.7%), 프랑스(110.8%), 스페인(108.9%), 벨기에(108.2%), 포르투갈(100.4%) 순으로 높음
 - 불가리아(22.6%), 에스토니아(23.6%), 룩셈부르크(27.2%) 순으로 부채 비율이 낮음

80)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0% in the EU,"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bp#:~:ext=quarter%20of%202023-,Overview,the%20fourth%20quarter%20of%202023>, 검색일자: 2024. 7. 24.; "Government debt up to 88.7% of GDP in euro area,"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ap>, 검색일자: 2024. 7. 24.

81)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2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표 2-I-13 유로지역 20개국 및 EU 27개국의 2024년 1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Q1	2023Q4	2024Q1
유로지역 20개국			
재정수지	-3.3	-4.0	-3.2
정부수입	46.3	46.7	46.2
정부지출	49.6	50.7	49.4
정부부채	90.1	88.2	88.7
EU 27개국			
재정수지	-3.1	-3.9	-3.0
정부수입	45.6	46.2	45.9
정부지출	48.7	50.1	48.9
정부부채	83.0	81.5	82.0

주: 1.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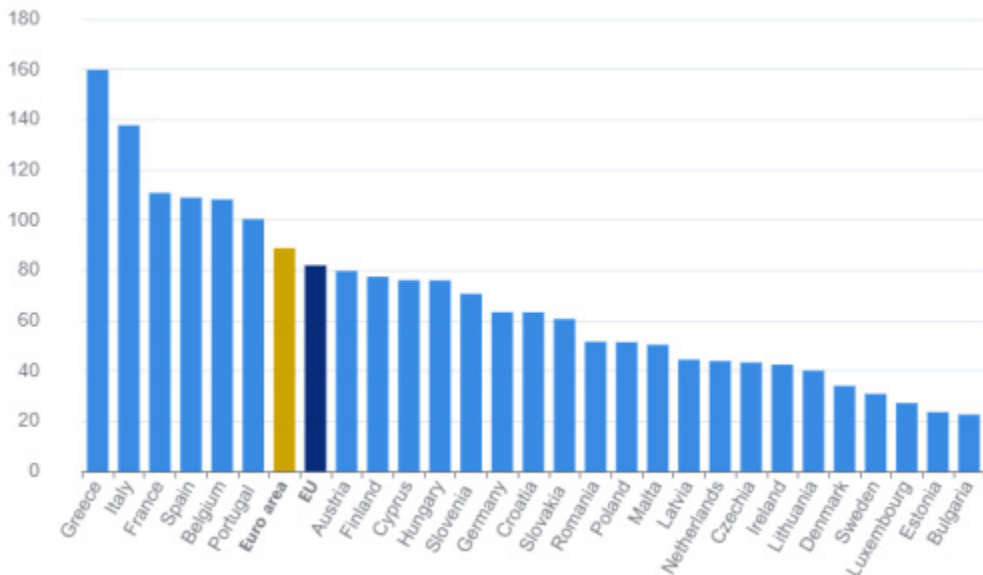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

자료: 1.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0% in the EU,"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bp#:~:text=quarter%20of%202023-,Overview,the%20fourth%20quarter%20of%202023>, 검색일자: 2024. 7. 24.

2. _____, "Government debt up to 88.7% of GDP in euro area,"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ap>, 검색일자: 2024. 7. 24.

그림 2-I-10 2024년 1분기 말 EU 회원국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



자료: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up to 88.7% of GDP in euro area," 2024. 7.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72024-ap>, 검색일자: 2024. 7. 24.

■ EU 통계청, 2024년 2분기 재정통계 발표(2024. 10. 22.)⁸²⁾

- 2024년 2분기 유로지역⁸³⁾의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적자는 1분기와 동일한 GDP 대비 3.0%, EU 27개국은 1분기에 비해 0.2%p 증가한 3.1%
 - (유로지역) 2024년 2분기 정부 총수입은 GDP 대비 46.2%로 정부 수입 증가와 명목 GDP 상승으로 1분기 대비 0.4%p 증가
 - 유로지역 2024년 2분기 정부 총지출은 전 분기에 비해 약 250억유로 증가하여 1분기보다 0.4%p 증가한 GDP 대비 49.2%로 나타남
 - (EU) 2분기 정부 총수입은 220억유로 증가하여 GDP 대비 45.7%(1분기 45.6%)
 - 정부 총지출은 1분기에 비해 340억유로 증가하여 1분기 GDP 대비 48.5%에서 2분기 48.9%로 0.4%p 상승
- 2024년 2분기 말 유로지역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88.1%로 전 분기 87.8%에 비해 0.3%p 증가하였고, EU도 81.3%에서 81.5%로 0.2%p 상승
 - 전년 동기와 비교 시 유로지역은 88.8%에서 88.1%로 0.7%p 감소하였고, EU에서는 81.9%에서 81.5%로 0.4%p 감소
 - 2024년 2분기 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그리스(163.6%),⁸⁴⁾ 이탈리아(137.0%), 프랑스(112.2%), 벨기에(108.0%), 스페인(105.3%), 포르투갈(100.6%) 순으로 높음
 - 불가리아(22.1%), 에스토니아(23.8%), 룩셈부르크(26.8%) 순으로 부채 비율이 낮음

82)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0%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1% in the EU," 2024. 10. 22.,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0%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1% in the EU,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102024-cp>, 검색일자: 2024. 10. 24.; "Government debt at 88.1% of GDP in euro area," 2024. 10.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102024-bp>, 검색일자: 2024. 10. 24.

83)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2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84) 2024년 10월 그리스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5~2028년 중기재정구조계획의 순지출 경로 변화율은 2024년 2.4%, 2025년 3.7%, 2026년 3.6%, 2027년 3.0%, 2028년 3.0%로 부채 지속가능성 요건을 준수하면서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고, 중기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기준값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EU 규정을 충족함. 이러한 순지출 경로 약속을 준수하는 경우 GDP 대비 구조적 적자는 2024년 1.48%,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는 1.1~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 비율은 2024년 GDP 대비 153.1%에서 2025년 149.1%, 2026년 143.1%, 2027년 138.0%, 2028년 133.4%로 매년 상당 비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2-I-14 유로지역 20개국 및 EU 27개국의 2024년 2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23Q2	2024Q1 ¹⁾	2024Q2 ¹⁾
유로지역 20개국²⁾			
재정수지	-3.3	-3.0	-3.0
정부수입	45.7	45.8	46.2
정부지출	49.1	48.8	49.2
정부부채 ³⁾	88.8	87.8	88.1
EU 27개국²⁾			
재정수지	-3.3	-2.9	-3.1
정부수입	45.3	45.6	45.7
정부지출	48.6	48.5	48.9
정부부채 ³⁾	81.9	81.3	81.5

주: 1) 잠정치

2)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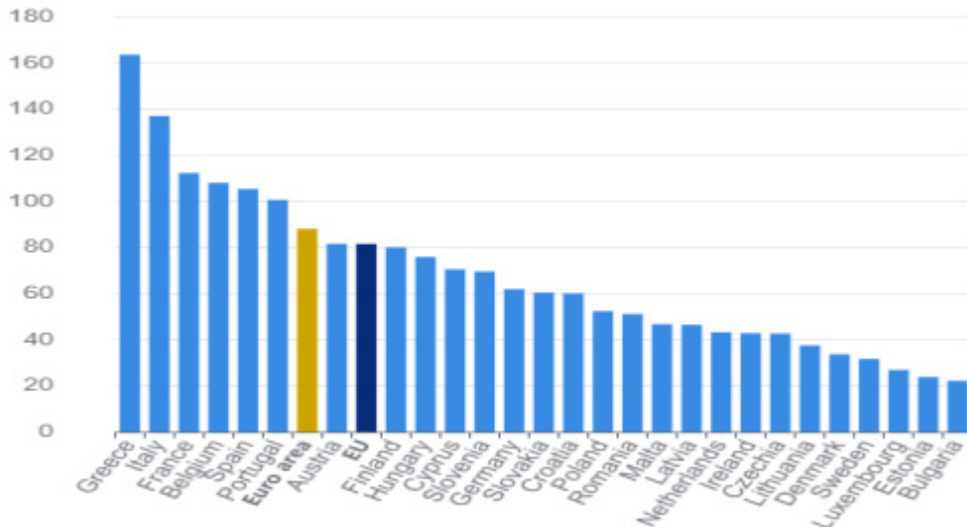
3) 정부부채를 제외한 재정통계 수치들은 계절조정 수치임

자료: 1.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0%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1% in the EU," 2024. 10. 22.,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0%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1% in the EU, 검색일자: 2024. 10. 24.

2. _____, "Government debt at 88.1% of GDP in euro area," 2024. 10.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102024-bp>, 검색일자: 2024. 10. 24.

그림 2-I-11 2024년 2분기 말 EU 회원국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



자료: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at 88.1% of GDP in euro area," 2024. 10.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102024-bp>, 검색일자: 2024. 10. 24.

다. 주요 보고서

■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⁸⁵⁾ 2023 발표(2024. 9. 9.)⁸⁶⁾

※ 동 보고서는 EU 공공 재정의 동향과 전망, 재정정책 및 연구 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음. 이하 내용은 제1장 EU의 경제·재정동향과 전망을 정리함⁸⁷⁾

○ (경제) 유로지역⁸⁸⁾은 2022년 3분기부터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민간소비 성장으로 2024년과 2025년 경제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상승률은 2%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원회의 2024년 봄 경제 전망(2024. 5.)에 따르면 유로지역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4%에서 2024년 0.8%, 2025년 1.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민간소비는 높은 물가와 저축 동기로 인해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실질 임금의 회복으로 증가 전망(2024년 1.1%, 2025년 1.5%)

- 유로지역 물가상승률(HICP)⁸⁹⁾은 2022년 8.4%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5.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에는 2.5%, 2025년에는 2.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재정) 에너지 관련 지원조치 철회 등으로 유로지역 재정적자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림 2- I-12], [그림 2- I-13], [그림 2- I-14] 참고)

- 재정적자는 2023년 GDP 대비 3.6%에서 에너지 관련 지원 조치 감소 등의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2024년 3%로 하락하고, 정책 불변 가정 시 2025년 2.7%로 감소 전망

- 유로지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90%로 2020년 정점에 비해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이전(2019년 85%)보다는 여전히 높고 2024년 90.0%, 2025년 90.4%로

85)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86)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3*, 2024. 9. 9.,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report-public-finances-emu-2023_en, 검색일자: 2024. 9. 19.

87)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3 보고서는 제1~3장으로 구성(제1장 유럽경제통화동맹(EMU) 공공 재정, 제2장 재정 감독의 발전, 제3장 공공 부채가 많은 시기 투자 촉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혹은 향후 게시될 한국조사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을 참고(<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International/kiPublish/CA4/Center/list.do?serialNo=0>)

88) 유로지역은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로, 2024년 기준 2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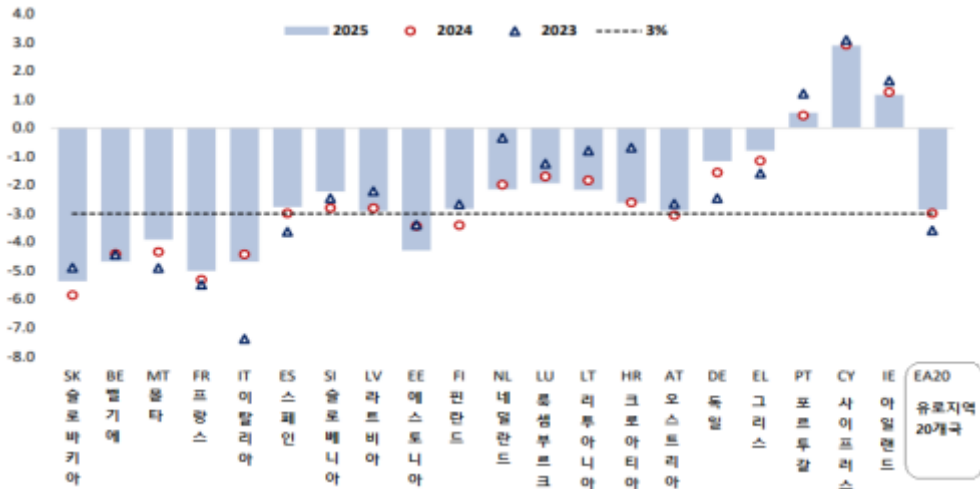
89) 유럽연합 내에서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로, EU 회원국 간에 비교 가능한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됨(비교 개념인 CPI(Consumer Price Index)는 특정 국가/지역의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지수로 일반적 소비 패턴에 기초하여 계산)

전망

- 유로지역 전반적 재정기조는 2020~2022년 GDP 대비 4%대 확장 기조에서 2023년 중립 기조, 2024년에는 GDP 대비 0.75% 긴축이 예상되고, 2025년 중립 기조 전망
 - 새로운 재정 프레임워크 시행을 감안하면 2025년 완만한 긴축 기조가 될 것으로 예상
- (권고) 경제 활동은 가속화되고 물가상승률은 하락하여 EU 전반적인 재정적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여건을 이용하여 재정여력의 재구축 필요성을 강조
 - 기후·디지털 전환 등의 우선순위 지원 및 장기적 과제 대응, 공공투자 유지 필요
 - 인구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따라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세 징수 효율성 제고, 과세 기반 확대, 투자를 장려하는 세금 인센티브 등이 필요

그림 2-I-12 2023~2025년 유로지역 일반정부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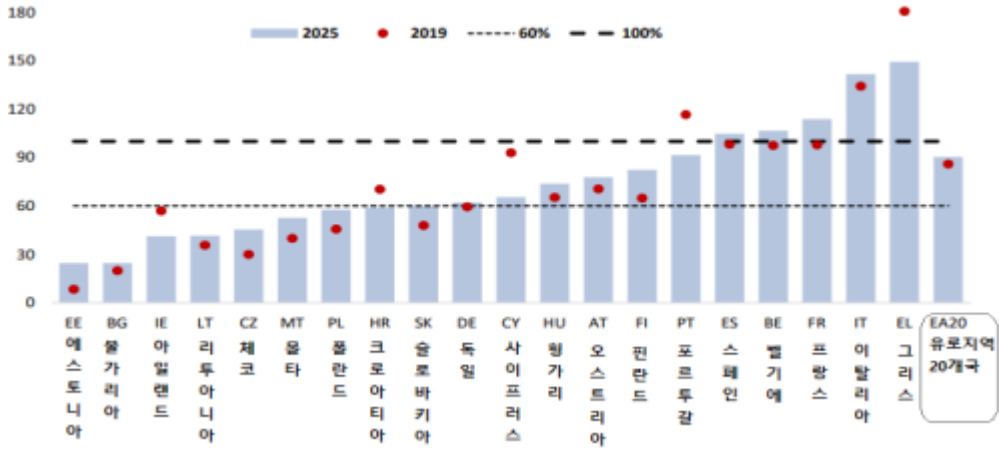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3*, 2024. 9. 9.,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report-public-finances-emu-2023_en, [Graph I.1.4.], 검색일자: 2024. 9. 19.

그림 2-I-13 2019년과 2025년 EU 회원국 일부 일반정부 부채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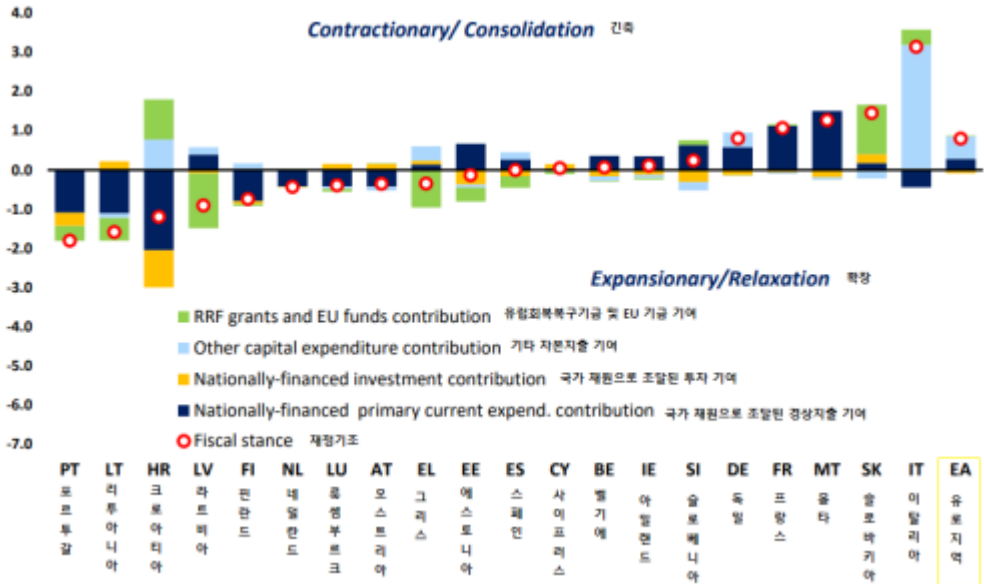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1.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3*, 2024. 9. 9.,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report-public-finances-emu-2023_en, [Graph I.1.7.], 검색일자: 2024. 9. 19.

그림 2-I-14 2024년 유로지역 재정기조

(단위: GDP 대비 %)



자료: 1.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3*, 2024. 9. 9.,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report-public-finances-emu-2023_en, [Graph I.1.9.], 검색일자: 2024. 9. 19.

II 국제통화기금(IMF)⁹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4. 7. 8.	IMF, 영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4. 7. 12.	IMF, 프랑스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4. 7. 16.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The Global Economy In a Sticky Spot' 발표
2024. 7. 17.	IMF, 미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4. 7. 18.	IMF, 독일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4. 8. 23.	IMF, 한국 노동시장 개혁의 진전(Advancing Labor Market Reforms in Korea)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2024. 9. 10.	IMF 집행이사회, 우크라이나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에 대한 5차 검토 완료
2024. 10. 15.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2024. 10. 21.	IMF 집행위원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소득국가(LIC)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혁 및 자금조달 패키지를 승인
2024. 10. 22.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Policy Pivot, Rising Threats' 발표
2024. 11. 19.	IMF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확대신용제도(EFF) 6차 검토 완료
2024. 11. 20.	IMF 협의단, 한국과의 2024년 연례협의 완료

자료: 저자 작성

9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보경 선임연구원(hwangbo@kipf.re.kr)

0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The Global Economy In a Sticky Spot’ 발표(2024. 7. 16.)⁹¹⁾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3.2%, 2025년에 3.3%로, 지난 4월 WEO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4월 WEO 전망 대비 2024년 1분기에 일본과 미국의 경제성장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면, 많은 국가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가 간 생산량 격차가 다소 줄어들
 - 미국은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 둔화로 인한 소비 둔화와 순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되어 2024년 2.6%, 2025년 1.9%의 경제성장을 전망
 - 일본은 1분기에 주요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면서 일시적 공급 중단과 민간 투자 부진이 반영되어 2024년에 0.7%, 2025년에는 1.0%로 하향 조정됨
 - 반면 유럽에서는 서비스 부문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2024년에 0.9%, 2025년에 1.5%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한편, 독일은 제조업의 지속적인 약세로 경제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1분기에 민간소비 반등과 수출 호조로 인해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2024년 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4.5%로 둔화되었다가 중기적으로 노령화와 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인해 2029년까지 3.3%로 감소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2024~2025년에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이 수정되었으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며 선진국보다 천천히 감소할 전망
 - 일부 신흥국의 중앙은행은 이자율 격차(interest rate differentials)와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하락으로 촉발된 외부 위험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연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금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9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The Global Economy In a Sticky Spot*, 2024. 7. 1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4/07/16/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24?cid=ca-com-homepage>, 검색일자: 2024. 7. 17.

- (위험) 세계 전망에 대한 상하방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과 무역 또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등 일부 단기 위험이 두드러짐
 - 지속적으로 높은 이자율은 차입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고, 낮은 잠재성장률과 함께 재정 개선이 실질 이자율을 상쇄하지 못할 경우 금융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올해 선거 결과로 경제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준선(baseline)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
 - 반면 다자주의를 장려하고 거시구조 개혁을 빠르게 이행하는 정책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및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정책 권고) 정책입안자들은 ① 물가 안정 달성과 ② 완충 장치(buffer)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제고하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으로 정책조합의 순서를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있는 국가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너무 일찍 완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긴축의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함
 - 완화적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데이터가 뒷받침될 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시에 재정건전화도 이행될 여지가 제공될 것임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근 정책 차이로 인해 통화 및 자본흐름 변동성 위험 관리 필요성이 강조됨
 - 선진국은 여성과 이민자 통합을 통해 노동 공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구 압력을 완화하고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국내 지향적 정책의 오용은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 능력을 저해하므로, 무역 왜곡 조치 사용을 줄이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2-II-2 2024년 7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단위: %)

	추정		전망		2024년 4월 전망 대비 ¹⁾	
	2022	2023	2024	2025	2024	2025
세계 경제	3.5	3.3	3.2	3.3	0.0	0.1
선진국	2.6	1.7	1.7	1.8	0.0	0.0
미국	1.9	2.5	2.6	1.9	-0.1	0.0
유로지역	3.4	0.5	0.9	1.5	0.1	0.0
독일	1.8	-0.2	0.2	1.3	0.0	0.0
프랑스	2.6	1.1	0.9	1.3	0.2	-0.1
이탈리아	4.0	0.9	0.7	0.9	0.0	0.2
스페인	5.8	2.5	2.4	2.1	0.5	0.0
일본	1.0	1.9	0.7	1.0	-0.2	0.0
영국	4.3	0.1	0.7	1.5	0.2	0.0
캐나다	3.8	1.2	1.3	2.4	0.1	0.1
그 외 선진국 ²⁾	2.7	1.8	2.0	2.2	0.0	-0.2
한국	2.6	1.4	2.5	2.2	0.2	-0.1
신흥개도국	4.1	4.4	4.3	4.3	0.1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4.4	5.7	5.4	5.1	0.2	0.2
중국	3.0	5.2	5.0	4.5	0.4	0.4
인도 ³⁾	7.0	8.2	7.0	6.5	0.2	0.0
유럽 신흥개도국	1.2	3.2	3.2	2.6	0.1	-0.2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4.2	2.3	1.9	2.7	-0.1	0.2
중동 및 중앙 아시아	5.4	2.0	2.4	4.0	-0.4	-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0	3.4	3.7	4.1	-0.1	0.1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 ⁴⁾	5.6	0.8	3.1	3.4	0.1	0.1
선진국	6.2	0.1	2.5	2.8	0.3	-0.1
신흥개도국	4.5	2.0	4.2	4.5	-0.1	0.5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⁵⁾	39.2	-16.4	0.8	-6.0	3.3	0.3
비연료	7.9	-5.7	5.0	1.6	4.9	2.0
세계소비자물가 ⁶⁾	8.7	6.7	5.9	4.4	0.0	-0.1
선진국 ⁷⁾	7.3	4.6	2.7	2.1	0.1	0.1
신흥개도국 ⁶⁾	9.9	8.3	8.2	6.0	-0.1	-0.2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4. 4. 22.~2024. 5. 20.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국가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

- 1) 현재 및 2024년 4월 WEO 전망에 대한 반응률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4년 4월 WEO 전망 관련 업데이트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중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 2)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존 국가 제외
- 3)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2-23회계연도(2022년 4월-)는 2022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을 기준으로 2024년 7.3%, 2025년 6.5%
- 4)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단순 평균
- 5) UK Brent, Dubai Fateh 및 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 선물시장(2024. 5. 20. 기준) 기준 배럴당 미국달러 평균 유가는 2024년 \$81.26, 2025년 \$76.38
- 6) 베네수엘라 제외
- 7) 물가상승률: 유로존 2024년 2.4%, 2025년 2.1%, 일본 2024년 2.4%, 2025년 2.0%, 미국 2024년 3.1%, 2025년 2.0%

자료: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4, July, <Table 1>, p. 5(한국 수치는 Annex 참고)

■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2024. 10. 15.)⁹²⁾

- (전망) 세계 공공채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24년에 100조달러(GDP 대비 93%)를 초과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100%에 가깝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미국이 채무 증가를 주도할 것임
- (위험) 지난 30년간 정치적 담론이 재정지출 증가 방향으로 기울었으며, 재정정책의 불확실성 증가와 녹색 전환, 인구 고령화, 안보 문제 등의 지출 압력이 높아져 채무 전망에 대한 상방 위험이 큼
 - ‘Debt-at-Risk’ 접근법⁹³⁾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불리한 시나리오에서의 세계 채무 수준은 2026년에 GDP 대비 1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준 시나리오 전망보다 약 20%p 높은 수치임
 - 이자율-성장률 차이, 재정 적자, 환율 변동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확인 채무(Unidentified debt)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채무가 예상보다 높아지는 주요 요인임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미확인 채무는 연평균 GDP 대비 1.0~1.5%에 달하며, 금융 시스템 위기 발생 이후에는 미확인 채무가 최대 GDP 대비 7%p까지 증가할 수 있음
- (정책권고) 채무를 안정시키거나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현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재정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통화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지금이 재정 완충장치를 재건할 적기임
- (조정 규모 식별) 2029년까지 중위국가(median country) 기준으로 GDP 대비 1%의 누적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면 채무가 안정화되거나 감소할 확률이 60%이며, GDP 대비 3~3.5%의 조정은 채무 안정화 가능성을 80%까지 높일 수 있어 조정 규모가 커질수록 채무 안정화 확률이 더욱 높아짐
 - 채무 위험이 높은 일부 국가들⁹⁴⁾은 채무 안정화를 위해 과거 조정 규모의 약 두 배에

92)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4/10/23/fiscal-monitor-october-2024?cid=ca-com-homepage-AM2024>, 검색일자: 2024. 10. 16.

93) Debt-at-Risk는 경제적, 금융적, 정치적 충격에 따른 GDP 대비 채무 비율의 극단적 상승 위험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채무 수준이 95th 백분위에 속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측정함.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Value-at-Risk(VAR) 접근법과도 일관성을 유지함.

94)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 등

- 가까운 GDP 대비 4.5%의 재정조정이 필요하며, 재정조정을 지연하면 연간 약 0.2%p의 추가 조정이 필요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
- (조정 구성 설계) 재정조정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신중한 재정조정 설계를 통해 국가가 장기적인 저성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선진국은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복지지출 개혁을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선진국은 간접세를 통해 세입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함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조세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공식 부문을 줄여 세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 부문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공공투자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채무 감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조정 속도 조절) 점진적(gradual)이나 지속 가능한 재정조정을 통해 채무 취약성을 억제하면서도 민간수요의 활력을 유지하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음
 - (신뢰 구축)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현대적 공공재정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중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강력하고 독립적인 재정 감독이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 (재정 거버넌스 강화) 각국은 잠재적 채무를 평가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미확인 채무를 방지해야 하며, 지출통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금자산 관리를 통해 과도한 지출을 억제해야 함
 - (채무 위기 대응) 채무 위기에 직면하거나 채무가 지속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적시에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최근 IMF의 채무 및 대출 프레임워크 개혁과 글로벌 국가채무 원탁회의(GSDR)가 국가채무 재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함

표 2-II-3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재 정 수 지							
세계 경제	-4.7	-5.0	-4.5	-4.2	-3.9	-3.9	-3.8
G20 선진국	-5.6	-5.8	-5.3	-4.8	-4.5	-4.5	-4.4
캐나다	-0.6	-2.0	-1.0	-1.0	-0.9	-0.7	-0.6
유로지역	-3.6	-3.1	-3.1	-2.9	-2.8	-2.7	-2.7
프랑스	-5.5	-6.0	-5.9	-5.8	-5.9	-5.9	-5.9
독일	-2.6	-2.0	-1.7	-1.0	-0.8	-0.7	-0.5
이탈리아	-7.2	-4.0	-3.8	-3.5	-3.2	-3.1	-3.1
스페인 ¹⁾	-3.5	-3.0	-2.8	-2.9	-3.0	-2.8	-2.8
일본	-4.2	-6.1	-3.0	-2.8	-2.9	-3.5	-4.0
영국	-6.0	-4.3	-3.7	-3.5	-3.4	-3.4	-3.3
미국 ²⁾	-7.1	-7.6	-7.3	-6.7	-6.2	-6.2	-6.0
한국	-0.7	-0.5	-0.1	0.0	0.0	0.0	0.0
신흥시장국 및 중진국	-5.4	-5.7	-5.6	-5.4	-5.3	-5.3	-5.3
채 무							
세계경제 ³⁾	108.7	109.4	111.0	112.0	112.8	113.6	114.2
G20 선진국	118.2	119.2	121.4	122.7	123.7	124.8	125.6
캐나다 ⁴⁾	107.5	106.1	103.2	101.2	99.5	97.9	96.3
유로지역	87.8	88.1	88.4	88.5	88.8	88.9	89.0
프랑스	109.9	112.3	115.3	117.6	119.8	121.9	124.1
독일	62.7	62.7	62.1	60.9	59.9	59.0	57.8
이탈리아	134.6	136.9	138.7	140.2	141.4	142.0	142.0
스페인	105.0	102.3	100.7	99.6	99.1	98.0	97.1
일본	249.7	251.2	248.7	246.9	245.7	244.8	245.0
영국	100.0	101.8	103.8	104.9	106.1	107.3	108.3
미국 ⁴⁾	118.7	121.0	124.1	126.6	128.4	130.2	131.7
한국	51.5	52.9	54.3	55.4	56.3	57.2	58.2
신흥시장국 및 중진국	69.4	70.8	73.0	75.0	76.9	78.8	80.6

주: 1) 금융지원 포함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국의 자출 및 재정수지는 미적립 연금 채무에 대한 귀속 이자 및 피고용자보수를 제외하도록 조정되며, 2008년 채택된 국민 계정 시스템(SNA)의 지출을 따르므로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3) 채무 평균에는 EU에서 발생한 NGEU 패키지 보조금의 채무 불포함되며, EU에서 발행하여 회원국에 제공되는 용자는 회원국의 채무 데이터 및 지역별 집계 포함

4)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국민 계정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호주, 캐나다, 홍콩 SAR,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보고한 총 채무 수준에서 공무원의 미적립 연금 채무를 제외하도록 조정

자료: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4, 2024. <Table A1, A7, A9, A15> 참고하여 재구성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Policy Pivot, Rising Threats' 발표(2024. 10. 22.)⁹⁵⁾

- (경제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3.2%로 지난 4월과 7월에 발표된 전망치와 거의 동일하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경제전망이 상향 조정된 반면, 주요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은 하향 조정됨
 - 중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이 3.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 200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3.8%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자재 생산과 운송의 차질, 특히 석유, 분쟁, 사회적 불안,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망이 하향 조정
 - 반면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신흥 아시아의 경제전망은 상향 조정
- (물가) 올해 초부터 경기적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의 경제 활동이 잠재 산출량(potential output)에 근접함
 - 이 조정은 국가 간 물가상승률 격차를 줄이고 세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6.7%에서 2024년 5.8%, 2025년 4.3%로 하락할 전망
 - 선진국이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보다 먼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상품가격은 안정화되거나 일부 하락했으나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 가격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통화정책을 부문별로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여전히 우세이며 정책 불확실성이 높음
 - 금융시장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특히 단기적인 외부 금융 수요가 큰 개발도상국의 투자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원자재 가격 급등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저해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를 방해할 수 있음
 - 중국 부동산 부문 수축이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장기화되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경우

95)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2024. 10. 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L/Issues/2024/10/22/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4>, 검색일자: 2024. 10. 23.

-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전 세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우려가 있음
 -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강화는 무역 긴장을 악화시키고 시장효율성을 저하시켜 공급망에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
- (정책권고) 세 가지 주요정책인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의 전환(Triple Pivot)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되고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통화정책)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2024년 6월 이후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실업률 상승을 막는데 도움이 됨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가까워지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이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
 -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중기적으로 공공채무의 지속가능한 경로를 보장하고 재정여력을 재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가 시급하며, 조정 속도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함
 - (구조개혁) 중기 경제전망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은 유지할 것을 권고
 - (다자간 협력)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채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수적임

표 2-II-4 2024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p)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4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4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3	2024	2025	2023	2024	2023	2024
세계 경제	3.3	3.2	3.2	0.0	-0.1	0.0	0.0
선진국	1.7	1.8	1.8	0.1	0.0	0.1	0.0
미국	2.9	2.8	2.2	0.2	0.3	0.1	0.3
유로지역	0.4	0.8	1.2	-0.1	-0.3	0.0	-0.3
독일	-0.3	0.0	0.8	-0.2	-0.5	-0.2	-0.5
프랑스	1.1	1.1	1.1	0.2	-0.2	0.4	-0.3
이탈리아	0.7	0.7	0.8	0.0	-0.1	0.0	0.1
스페인	2.7	2.9	2.1	0.5	0.0	1.0	0.0
일본	1.7	0.3	1.1	-0.4	0.1	-0.6	0.1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4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4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3	2024	2025	2023	2024	2023	2024
영국	0.3	1.1	1.5	0.4	0.0	0.6	0.0
캐나다	1.2	1.3	2.4	0.0	0.0	0.1	0.1
기타선진국 ²⁾	1.8	2.1	2.2	0.1	0.0	0.1	-0.2
한국	1.4	2.5	2.2	0.0	0.0	0.0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4	4.2	4.2	0.0	-0.1	0.1	0.0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5.7	5.3	5.0	-0.1	-0.1	0.1	0.1
중국	5.2	4.8	4.5	-0.2	0.0	0.2	0.4
인도 ³⁾	8.2	7.0	6.5	0.0	0.0	0.2	0.0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3.3	3.2	2.2	0.0	-0.3	0.1	-0.6
러시아	3.6	3.6	1.3	0.4	-0.2	0.4	-0.5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2.2	2.1	2.5	0.3	-0.2	0.2	0.0
유럽연합	0.6	1.1	1.6	-0.1	-0.2	0.0	-0.2
아세안-5 ⁴⁾	4.0	4.5	4.5	0.1	-0.1	0.1	0.0
저소득 개도국	4.1	4.0	4.7	-0.2	-0.4	-0.5	-0.4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0.8	3.1	3.4	0.0	0.0	0.1	0.1
수입							
선진국	-0.7	2.1	2.4	-0.3	-0.3	0.1	-0.4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3.0	4.6	4.9	0.4	0.1	-0.3	0.8
수출							
선진국	1.0	2.5	2.7	-0.1	-0.2	0.0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0.6	4.6	4.6	0.4	0.5	0.9	0.7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⁵⁾	-16.4	0.9	-10.4	0.1	-4.4	3.4	-4.1
비연료(세계 원자재 수입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5.7	2.9	-0.2	-2.1	-1.8	2.8	0.2
소비자 물가 ⁶⁾	6.7	5.8	4.3	-0.1	-0.1	-0.1	-0.2
선진국 ⁷⁾	4.6	2.6	2.0	-0.1	-0.1	0.0	-0.1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8.1	7.9	5.9	-0.1	0.0	-0.3	-0.2

주: 1) 2024년 4월 WEO 업데이트 및 2024년 7월 WEO 예측에 대해 반올림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
 2) G7과 유로존 지역 제외
 3)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며, 2011년 이후의 GDP는 2011-12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함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 영국 브렌트유(Brent), 두바이 파테유(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 평균가격. 2023년 배럴당 평균 가격은 80.59달러. 선물시장 기준으로 가정한 가격은 2024년 81.29달러, 2025년 72.84달러
 6) 베네수엘라 제외
 7) 2024년과 2025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유로존 2.4%, 2.0%, 일본 2.2%, 2.0%, 미국 3.0%, 1.9%
 1. 실질실효환율은 2024. 7. 30.-2024. 8. 27.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순서는 경제 규모 순으로 나열.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조정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2024, p. 10 (Table 1.1); 한국의 수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2024, (Table A2). 참고하여 재계산

02 연례협의

■ IMF, 영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4. 7. 8.)⁹⁶⁾

- 영국의 경제는 2023년에 가벼운 기술적 경기 침체 이후 성장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연착륙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에너지 및 상품 가격 완화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임금상승률과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음
 - 경제성장률이 2024년에 0.7%, 2025년에 1.5%로 강화될 전망이며, 물가상승률은 2024년 상반기에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중기 전망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상당한 공공지출 압박과 노동 생산성 둔화에 영향을 받으며, 전망에 대한 위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됨
- 재정정책의 주요 중기적 과제는 공공채무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공공지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며, 영국의 재정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 탄소세, 도로사용세 강화, 부가가치세 및 상속세 확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개혁 등이 세입 확충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비용 절감의 여지가 있음
 - 반기별 예산에서 연간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며, 채무준칙을 보다 강화하고, 현재 3년 단위로 작성하는 지출 검토 대신 2년마다 연동되는 4~5년의 중기 지출계획(rolling 4-5-year expenditure framework)을 작성하여 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권고

96)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Kingdom," 2024. 7. 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7/03/pr-24259-uk-imf-concludes-2024-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4. 7. 10.

표 2-II-5 영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 증가율(연평균)	0.1	0.7	1.5	1.7
실업률	4.0	4.2	4.1	4.0
물가상승률(Inflation, 연평균)	7.3	2.7	2.1	2.0
총합재정수지(Public sector overall balance, GDP 대비 %)	-4.2	-3.4	-3.2	-2.9
공공부문 순채무(Public sector net debt, GDP 대비 %)	89.2	91.6	93.1	94.5
경상수지(GDP 대비 %)	-3.3	-3.2	-3.5	-3.3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20,155			

주: 1. 2023년은 추정치(Estimation), 2024~2026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4년 5월 31일 기준

자료: IMF, *United Kingdom: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4. 7. 8.

■ IMF, 프랑스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4. 7. 12.)⁹⁷⁾

- 프랑스는 2023년에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금융 긴축 및 유로존 외부 수요 약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물가상승률은 2023년 초 정점 이후 에너지 지원 조치의 해소와 임금 조정으로 인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지속함
-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및 예상보다 느린 성장으로 인해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재정여력이 줄어들었으며, 2023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5%로 예상보다 저조한 수입으로 인해 당국의 예산 계획을 초과함
 - 2024년에는 구매력 조치 철회 등을 통해 상당한 재정건전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2023년의 재정 실적과 지출 압박이 반영되어 2024년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4.4%에서 5.1%로 조정됨
- 정치적 분열과 정책 불확실성이 재정통합과 개혁 노력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주요 교역 상대국의 갑작스러운 경기 둔화 등의 외부적 하방 위험이 큰 영향을 미칠수 있어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97)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France," 2024. 7. 1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7/13/pr-24271-France-IMF-Executive-Board-Concludes-2024-Article-IV-Consultation-with-France>, 검색일자: 2024. 7. 19.

-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PSTAB)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며, 기후전환 리스크를 은행의 거버넌스,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일자리 지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
 - 2027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줄이고 국가채무를 하향세로 전환하기 위해 2024~2027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GDP 대비 약 1%의 추가적 재정 조치가 필요

표 2-II-6 프랑스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 증가율(연평균)	6.8	2.6	1.1	0.9	1.3	1.5
실업률	7.9	7.3	7.4	7.4	7.0	6.9
물가상승률(CPI, 연평균)	2.1	5.9	5.7	2.3	1.8	1.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alance, GDP 대비 %)	-6.6	-4.7	-5.5	-5.2	-5.0	-4.6
일반정부 총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112.6	111.1	109.9	111.3	112.8	113.5
경상수지(GDP 대비 %)	0.4	-2.0	-0.7	-0.3	-0.5	-0.4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20,155					

주: 1. 2023년은 추정치(Estimation), 2024~2026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4년 5월 31일 기준

자료: IMF, *France: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4. 7. 12.

■ IMF, 미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4. 7. 17.)⁹⁸⁾

- 미국은 지난 몇 년간 경제활동과 고용 모두 팬데믹 이전의 기대를 넘어 강력한 경제 성과를 보였으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
 - 전망 기간 동안 약 2%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률은 2022년에 정점인 7.1%에서 2024년 중반(4월 기준) 2.7%로 감소했으며, 2025년 중반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98)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2024. 7. 17.,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7/18/pr24281-usa-imf-exec-board-concludes-2024-art-iv-consult>, 검색일자: 2024. 7. 19.

- 한편 2020년 말 이후로 1,6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소득과 자산 증가는 소득 분포에 따라 고르지 않았으며, 팬데믹 기간의 지원 종료 이후 빈곤률은 여전히 높게 유지
- 현 정책에 비해 국가채무는 중기적으로(2032년까지) GDP 대비 140%를 초과하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예측한 수준을 크게 상회함
-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물가상승률에 대한 상방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재정 불균형, 금융 취약성, 증가한 불평등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책금리 인하는 적어도 2024년 말까지 유보할 것을 권고

표 2-II-7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단위: %)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 증가율(연평균)	2.5	2.6	1.9	2.0
실업률	3.6	4.0	4.3	4.3
물가상승률(CPI Inflation, Q4/Q4)	2.8	2.4	1.8	1.9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scal balance, GDP 대비 %)	-7.6	-7.8	-7.6	-7.2
일반정부 총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120.7	123.2	126.7	129.6
경상수지(GDP 대비 %)	-3.0	-2.9	-2.8	-2.5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82,994			

주: 1. 2023년은 추정치(Estimation), 2024~2026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4년 4월 30일 기준

자료: IMF, *United States: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4. 7. 12.

■ IMF, 독일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4. 7. 18.)⁹⁹⁾

- 독일 경제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강력한 정책 대응 덕분에 에너지 가격 충격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임금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면서 민간소비가 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은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면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빠른 디스인플레이션을 촉진함

99)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Germany," 2024. 7. 1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7/18/pr-24280-Germany-IMF-Executive-Board-Concludes-2024-Article-IV-Consultation-with-Germany>, 검색일자: 2024. 7. 26.

- 다만 생산성 증가나 높은 수준의 이민이 없을 경우, 현재의 정책하에 중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고령화가 연금 및 의료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 전망에 대한 위험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하방 위험으로 지정학적 단절의 가속화, 글로벌 갈등 악화,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의 스트레스 강화 등이 있음
- 단기적으로 과도한 긴축 재정 기조를 피하고 재정준칙 내에서 유연성을 활용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국방 지출 증가, 녹색 전환 및 디지털화, 중요 인프라 투자 등의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 재정 여력을 창출할 필요
 - 부채제동장치(debt brake)¹⁰⁰의 적절한 완화와 연금개혁, 환경에 해로운 보조금 축소, 기타 수입 및 지출 조치 등을 통해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금융안전망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구조적 정책으로는 보육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부부 중 두 번째 소득자의 실질한계세율 인하, 미니잡(mini-jobs)을 벗어날 때의 절벽효과(cliff effect)¹⁰¹ 제거 등을 통한 노동 공급 안정화를 권고

표 2-II-8 독일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실질GDP 증가율(연평균)	-0.2	0.2	1.3
실업률	3.0	3.3	3.1
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 연평균)	6.0	2.5	2.2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scal balance, GDP 대비 %)	-2.4	-1.7	-1.3
일반정부 공공채무(General government Public debt, GDP 대비 %)	63.6	63.8	62.4
경상수지(GDP 대비 %)	6.3	6.3	6.3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26,634		

주: 1. 2023년은 추정치(Estimation), 2024, 2025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4년 5월 31일 기준

자료: IMF, *Germany: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4. 7. 18.

100) 2009년 헌법에 부채제동장치를 규정하여 적용 중이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경우 구조적 균형예산이 요구됨.

101) 월 최대 538유로의 급여를 받는 미니잡(Mini-job)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연금 기여금을 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제되나, 월수입이 538유로를 초과하여 '미디잡(Midi job)' 소득 범위에 해당할 경우 사회보장기여금과 추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여 실질소득 증가가 적어지는 한계세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미니잡에 머무르거나 추가 노동시간을 줄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IMF 협의단, 한국과의 2024년 연례협의 완료(2024. 11. 20.)¹⁰²⁾

* 이사회 상정 전 협의단 입장문

- IMF 협의단이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4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향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¹⁰³⁾
- (개요) 한국 경제는 글로벌 충격에 대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되며, 성장을 재활성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
- (경제) 2024년 경제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됨에 따라 2025년 실질 GDP는 2.0% 증가할 전망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5년에 목표치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위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리스크가 더 높은 편
- (단기 정책)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 정상화, 환율의 유연성 확보,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및 선별적인 금융 정책의 조합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임
 - 당국의 2025년 예산안의 건전재정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해 보이나,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
- (중장기 정책)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개혁 추진이 지경학적 분절화, 기술 변화,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회복력을 제고할 것

102) IMF, "IMF Staff Completes 2024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 2024. 11. 2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11/19/pr-24427-republic-of-korea-imf-staff-completes-2024-article-iv-mission?cid=em-COM-123-49316>, 검색일자: 2024. 11. 20.

103)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 및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간 점검 활동

03 금융지원

- IMF 집행이사회, 우크라이나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¹⁰⁴에 대한 5차 검토 완료(2024. 9. 10.)¹⁰⁵
 - (배경) 2023년 3월, IMF와 우크라이나 당국은 4년간 총 156억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제도(EFF)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EFF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가격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차 검토(2023년 3월)~4차 검토(2024년 6월) 동안 IMF가 지원한 총 금액은 약 76억달러
 - (주요 내용) EFF 협정에 대한 5차 검토에 직원 차원의 합의(staff level agreement)에 도달했으며, 향후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우크라이나는 약 11억달러(8억 3,480만 SDR)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우크라이나 당국은 6월 말 정량적 성과 기준(QPC)과 구조적 벤치마크를 모두 충족했으며,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설정과 개혁에 대해 합의함
 - 우크라이나 경제는 2024년 상반기에 회복력을 유지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전망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1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6.5%에 달했으나, 하반기에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과 전쟁이 노동시장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3%대로 성장 둔화 예상

104) 확대신용제도(EFF)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대출프로그램으로 최대 4년 동안 승인될 수 있으며, 4년 반~10년 동안 12회 반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음. EFF는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반하며 일반적으로 출자 금액의 연간 한도는 쿼터의 200%, 약정기간 동안 누적 한도는 쿼터의 600%

105) IMF, "IMF and Ukrainian Authorities Reach Staff Level Agreement on the Fifth Review of the Extended Fund Facility(EFF) Arrangement-Ukraine," 2024. 9. 1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9/11/pr24326-IMF-and-Ukrainian-Authorities-Reach-Staff-Level-Agreement-Fifth-Review-EFF>, 검색일자: 2024. 9. 19.

■ IMF 집행위원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소득국가(LIC)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혁 및 자금조달 패키지를 승인(2024. 10. 21.)¹⁰⁶⁾

◦ IMF 집행위원회는 저소득국가가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금의 자급자족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 개혁 및 자금조달 패키지를 제안함

- 최근 글로벌 충격으로 인해 빈곤감축성장기금(PRGT)¹⁰⁷⁾ 대출 약정이 2020~2023년 동안 연평균 55억 SDR*로 증가했으며,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기준 183억 SDR로 팬데믹 이전의 약 3배로 늘어나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자금 부족에 직면

* 팬데믹 이전(2010~2019년) 수준 대비 약 5배 높은 수준

- 빈곤감축성장기금(PRGT)의 장기 자립적 대출 한도¹⁰⁸⁾를 연간 27억 SDR(약 36억달러)로 상향하여 대출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일반재원(General Resources) 배분을 통해 59억 SDR(약 80억달러)의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합의함

• 현 추세에 따르면 개혁이 없을 경우 기금의 자립적 대출 역량(self-sustained lending capacity)은 2027년 이후 연간 약 10억 SDR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저소득국가 간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최빈국에 더 많은 양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금리 메커니즘을 도입

• 전체 69개 저소득국가 중 31개국에는 빈곤감축성장기금(PRGT)의 무이자 대출 혜택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저소득국가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

• PRGT의 접근 기준(Access norm)은 2025년 1월부터 회원국 지분 쿼터의 200→145%로 복귀시키는 한편, 연간 및 누적한도는 각각 쿼터의 200%와 600%로 유지하여 유연성을 확보

106) IMF, "The IMF Approves Policy Reforms and Funding Package to Support Low Income Countries in a Sustainable Manner," 2024. 10. 2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10/21/pr-24389-imf-approves-policy-reforms-and-funding-package-to-low-income-countries>, 검색일자: 2024. 10. 28.

107) 빈곤감축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은 저소득 국가에 양허성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이며, 팬데믹 이후 57개의 저소득국가에게 약 350억달러(258억 SDR) 규모를 무이자 대출로 지원함

108) 장기 자립적 대출한도(long-term self-sustained annual lending envelope)는 저소득국가에 매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양허성 대출의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이 한도는 가용자원과 예상수요에 기반하여 설정됨.

- IMF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확대신용제도(EFF)¹⁰⁹⁾ 6차 검토 완료(2024. 11. 19.)¹¹⁰⁾¹¹¹⁾
 - (주요 내용) EFF 협정에 대한 6차 검토에서 직원 차원의 합의(staff level agreement)에 도달했으며 향후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약 11억달러(8억 3,480만 SDR)를 지원할 예정
 - 이에 따라 2023년 3월 이후 현재까지(3차~6차) IMF의 총 지원금은 약 98억달러 규모임
 - 우크라이나 당국은 9월 말 정량적 성과 기준(QPC)¹¹²⁾과 구조적 벤치마크¹¹³⁾를 모두 충족했으며,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전쟁으로 인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G7 국가들이 추진하는 ERA 이니셔티브(Economic Recovery and Assistance Initiative)*를 포함한 외부 지원 덕분에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 우크라이나의 경제회복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약 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

04 기타

- IMF, 한국 노동시장 개혁의 진전(Advancing Labor Market Reforms in Korea)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2024. 8. 23.)¹¹⁴⁾

109) 확대신용제도(EFF)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대출프로그램으로 최대 4년 동안 승인될 수 있으며, 4년 반~10년 동안 12회 반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음. EFF는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반하며 일반적으로 출자 금액의 연간 한도는 쿼터의 200%, 약정 기간 동안 누적 한도는 쿼터의 600%

110) IMF, "IMF and Ukrainian Authorities Reach Staff Level Agreement on the Sixth Review of the Extended Fund Facility (EFF) Arrangement," 2024. 11. 19.,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11/19/pr24425-ukraine-6th-review-sla>, 검색일자: 2024. 11. 20.

111) 지난 5차 검토에 대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9월호 재정동향, 2024. 9.」 참고

112) EFF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 국방, 보조금 제외한 현금 잔고(cash primary balance)의 하한, 세입(사회보장 기여금 제외) 하한, 국가보증(government guarantees) 상한, 순 국제준비금(net international reserves) 등의 정량적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함.

113) 우크라이나는 EFF 프로그램하에 9월까지 전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주요 공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및 존재정적 비용을 검토하고, 10월까지 세관 서비스 개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을 이행했으며,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청(NABU)의 외부 감사인 지정은 임명 지연으로 충족되지 않음

114) Stella Tam and Xin Cindy Xu, "Advancing Labor Market Reforms in Korea," IMF Working Paper No. 20

- (개요)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이 경제성장,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본 연구는 Duval and Furceri(2018)의 접근법을 따르며, 구체적으로 Jordà(2005)가 개발한 local projection method를 적용하여 개혁 충격에 대한 비선형적 동적 반응을 포착하고, 개혁이 시행된 후 최대 5년까지의 추정치를 도출함
- (주요 결과) 고용보호법제(EPL)¹¹⁵ 개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개혁, 노동세 부담 완화가 중기적으로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 상태와 통화·재정 정책 조건에 따라 개혁의 효과가 변화함
 - 1)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법제(EPL) 개혁: 경기 호황기에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하는 개혁은 중기적으로 GDP와 고용을 약 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 침체기에는 개혁의 효과가 수축될 수 있음
 -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개혁: ALMP 개혁은 중기적으로 노동생산성과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기 침체기에 개혁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짐
 - 경기 침체기 동안 ALMP 지출이 10% 증가할 때 중기적으로 GDP 수준이 약 1% 증가하고 고용 수준이 약 0.2% 증가
 - 반면 경기 호황기에는 ALMP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정책 반응을 촉발할 수 있음
 - 3)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격차(Tax wedge)¹¹⁶ 완화: 조세격차 완화는 중기적으로 GDP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기 침체기에 더 큰 효과를 보임
 - 경기 침체기 동안 노동세 부담이 약 1%p 감소할 때 GDP와 고용이 평균적으로 약 0.6% 증가한 반면 생산성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음
 - 4) 보완적 재정 및 통화정책: EPL 개혁이 보완적(complementary) 재정 및 통화정책과 함께 시행될 때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책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보완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24/183, 2024. 8. 2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4/08/23/Advancing-Labor-Market-Reforms-in-Korea-553978>, 검색일자: 2024. 8. 26.

115)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적 규제와 절차

116) 고용주가 지불하는 총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순 급여의 차이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보통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됨.

EPL개혁의 단기적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통화정책은 총수요 측면에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할 수 있음

- (시사점) 노동시장 개혁 설계 시 경제 상황과 통화 및 재정정책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의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기조하에서는 강력한 수축 또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수반하지 않는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근로 시간 개혁은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됨
 - 한국경제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이중성이 높고 OECD 평균에 비해 사회보장지출은 낮은 수준이며, 당국은 더 유연한 근로시간,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의 전환, 노동시장 이중성 해결을 목표로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근로시간 개혁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근로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의 전환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업종 간 차이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EPL개혁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 궁극적으로 경제적·정책적 조건에 따라 단기 및 중기 개혁 조치를 명확히 제시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¹¹⁷⁾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I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4. 7. 9.	OECD, 2024년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24) 발표
2024. 7. 11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24. 8. 12.	OECD, 2024년 1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4. 8. 22.	OECD,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4. 9. 25	OECD, 중간경제전망보고서 'Turning the Corner' 발표
2024. 10. 15.	OECD, 2024년 2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
2024. 11. 13.	OECD, 2024년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4. 11. 21.	OECD, 2024년 3분기 GDP성장률 발표
2024. 12. 2.	OECD, 2024년 연금전망보고서(Pensions Outlook 2024) 발표
2024. 12. 4.	OECD,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Resilience in uncertain times' 발표

자료: 저자 작성

0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 OECD, 2024년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24: The Net-Zero Transition and the Labour Market) 발표(2024. 7. 9.)¹¹⁸⁾
 - 2024년 OECD 고용전망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최신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기후변화 완화

1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보경 선임연구원(hwangbo@kipf.re.kr)

118)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4*, 2024. 7. 9.,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mployment-outlook-2024_ac8b3538-en/full-report.html, 검색일자: 2024. 7. 11.

패키지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평가함

-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역사적으로 높은 고용 수준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여 노동시장의 회복력(resilient)이 입증됨
 - OECD 전체 고용(2024년 5월 기준)은 2000년 이후 약 25% 증가한 6억 6,200만명이며 2024~2025년에 연간 약 0.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OECD 전체 실업률(2024년 5월 기준)은 4.9%를 기록했으며, 2024~2025년에는 고용 증가가 둔화되면서 2025년 4분기에 약 5%로 소폭 상승 전망
 - 팬데믹 이전에 비해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더 많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노년층의 노동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들의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임금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감소로 인해 증가함
- 넷제로 전환은 노동시장을 재편할 것이며, 일자리의 1/4 이상이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온실가스 집약 산업이 줄어들면서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배출 활동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현재 OECD 노동력의 약 20%가 넷제로 전환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녹색일자리(green-driven occupations)에 고용되어 있는 한편, 약 7%는 온실가스 집약적(GHG) 부문에 고용되어 있음
 - 업무와 업무방식이 친환경화되고, 기후변화가 주로 기온 상승과 빈번한 기상이변을 통해 노동 수요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정책권고) 정부는 넷제로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실직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집약적 산업 근로자를 재교육해야 하며, 넷제로 전환 기간 동안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고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ies)을 개발할 필요
 - 향후 넷제로 전환으로 인해 온실가스 집약 산업의 근로자들은 실직 후 소득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소득을 지원하고 일자리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손실을 완화하고 넷제로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온실가스 집약적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 부재하면 넷제로 전환이 지역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음

■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2024. 7. 11.)¹¹⁹⁾¹²⁰⁾

- (경제 전망) 한국 경제는 일시적 성장 약화(soft patch)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의 호황이 반영되어 2024년에 2.6%, 2025년에 2.2%의 경제성장을 전망
 - 높은 금리와 낮은 실질임금 증가율로 인해 부진한 민간소비를 강한 고용시장 및 팬데믹 기간의 초과저축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안정 등으로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기대(expectations)는 안착(anchor)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최고치(6.3%)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목표 수준(2%)에 근접하고 있음
 - 정책금리는 2023년 초부터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동안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 한국 정부는 팬데믹 동안 수요를 지원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재정정책 이후 재정건전화에 착수했으며, 제안된 재정준칙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낮추고 재정 및 채무 관리체계의 개선으로 2023년의 세수 부족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위험요인)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감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적 타격은 제한적이며, 긴축된 금융 여건과 취약한 부동산 시장이 맞물리면서 건설 프로젝트 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남
- (정책권고) 고령화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 기후 목표 달성,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권고함
 - 중소기업 국가 지원을 통합 관리하고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혁을 통해 공정한

119)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2024. 7. 11.,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surveys-korea-2024_c243e16a-en.html, 검색일자: 2024. 7. 12.

12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24. 7. 11.,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_F_000000000069701&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4. 7. 12.

경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을 권고

- 한국은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조정, 추가적인 청정전력과 에너지 절약 등이 필요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 높은 주거비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출산율 개선이 필요하며, 이민·고용·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결합하여 노인부양비율의 급격한 증가를 낮출 수 있음

표 2-III-2 한국 경제 주요 거시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GDP 성장률	2.7	1.4	2.6	2.2
민간소비	4.2	1.8	1.4	2.4
총고정자본형성	-0.2	1.4	1.0	2.1
수출	3.9	3.6	6.9	2.4
수입	4.2	3.5	1.2	2.4
실업률	2.9	2.7	2.9	3.0
소비자물가지수	5.1	3.6	2.5	2.0
경상수지(GDP 대비)	1.3	1.9	4.5	4.7
재정수지(GDP 대비)	-1.7	-0.8	-0.9	-0.3
일반정부 채무(GDP 대비)	50.5	50.9	52.4	53.3

자료: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Table 2.1>, 2024. 7. 11.

■ OECD, 중간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¹²¹⁾ ‘Turning the Corner’ 발표(2024. 9. 25.)¹²²⁾

- (현황) 세계 경제는 2024년 상반기에 3.2%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 회복력을 유지(remained resilient)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미국은 '24년 2분기에 성장세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 소비 개선에 기인함

121)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발표하며, 대상국은 세계 경제와 G20 국가

122)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4*, 2024. 9. 25.,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4/09/oecd-economic-outlook-interim-report-september-2024_fdd9394f.html, 검색일자: 2024. 9. 26.

- 캐나다, 스페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견조한(robust) 성장을 보였으며, 일본의 경우 일시적 공급 차질로 인해 1분기에 성장이 위축되었으나 2분기에 회복됨
 - 한편 독일은 소비심리 약화(weak sentiment)와 산업 활동 부진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중국은 수출이 강화되면서 산업 생산이 증가했으나 소비자 수요 약세와 부동산 부문의 장기적인 조정이 계속되고 있음
 - 최근 경제 지표들은 제조업 부문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강세를 시사하며, 실질소득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가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구매력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글로벌 무역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송비용이 높으며* 최근 수출 주문이 감소된 모습을 보임
 - * 2023년 대비 160%
 -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이 계속 완화¹²³⁾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 공급 증가(이민자 유입)에 기인함
 - 상품가격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으나 서비스 부문의 비용 및 가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대다수 국가에서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이 되려면 1%p 이상 하락할 필요
- (경제전망) 세계 GDP성장률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3.2%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실질소득의 개선, 통화정책 완화가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연간 GDP성장률은 통화정책 완화가 성장속도 둔화 흐름을 보완하면서 2024년에 2.6%, 2025년에 1.6%로 전망
 - (유로지역) 실질소득 회복과 정책금리 인하에 힘입어 2024년에 0.7%, 2025년에 1.3%로 전망
 - (중국) 2024년에 4.9%, 2025년 4.5%로 둔화될 전망이며, 추가적인 부양책의 영향이 소비자 수요 둔화와 부동산 부문의 조정으로 상쇄될 것임
- (물가) 2025년 말까지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목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123) 노동시장의 긴장도(tightness)를 보여주는 지표인 구인배율, 즉 노동시장의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 비율(Job vacancies per unemployed)이 꾸준히 감소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구인배율(구인/구직)이 높을수록 노동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노동시장 수급상황이 양적으로 긴장됐음을 의미함.

-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에 5.4%에서 2025년 3.3%로 완화되고,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4년에 2.7%에서 2025년 2.1%로 완화될 전망
- (위험) 지속적인 지정학적 및 무역 긴장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수입가격이 상승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 냉각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디스인플레이션 경로 이탈로 인한 금융 시장 혼란 초래 등의 리스크가 존재함
 - 다만 실질소득 회복이 소비자 신뢰도 및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가 하락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 (정책권고)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하며, 채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조치 필요
 - (통화정책) 물가상승률 완화와 노동시장 완화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인하해야 하나, 금리 인하 시기와 정도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 (재정정책) 채무 지속가능성과 미래 충격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지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재정조치가 필요
 - 이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조정 속도를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별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대부분 수당(benefits) 및 보조금의 타겟팅을 개선하고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기대 수명의 증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세입 측면에서는 왜곡적인 조세 지출을 제거하고 간접세, 환경세, 재산세 등에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하며, 경쟁 제한적 규제 철폐를 통해 건전한 경쟁역학(healthy competitive dynamics)을 갖춘 개방된 시장을 조성해야 함
 - 대다수 G20 국가의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여전히 많이 있으며, 특히 튀르키예와 한국은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높은 국가에 해당

표 2-III-3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2023	2024		2025	
		중간경제전망	5월 전망과 차	중간경제전망	5월 전망과 차
세계	3.1	3.2	0.1	3.2	0.0
G20 ¹⁾	3.4	3.2	0.1	3.1	0.0
호주	2.0	1.1	-0.4	1.8	-0.4
캐나다	1.2	1.1	0.1	1.8	0.0
유로 존	0.5	0.7	0.0	1.3	-0.2
독일	-0.1	0.1	-0.1	1.0	-0.1
프랑스	1.1	1.1	0.4	1.2	-0.1
이탈리아	1.0	0.8	0.1	1.1	-0.1
스페인 ²⁾	2.5	2.8	1.0	2.2	0.2
일본	1.7	-0.1	-0.6	1.4	0.3
한국	1.4	2.5	-0.1	2.2	0.0
멕시코	3.2	1.4	-0.8	1.2	-0.8
튀르키예	5.1	3.2	-0.2	3.1	-0.1
영국	0.1	1.1	0.7	1.2	0.2
미국	2.5	2.6	0.0	1.6	-0.2
아르헨티나	-1.6	-4.0	-0.7	3.9	1.2
브라질	2.9	2.9	1.0	2.6	0.5
중국	5.2	4.9	0.0	4.5	0.0
인도 ³⁾	8.2	6.7	0.1	6.8	0.2
인도네시아	5.0	5.1	0.0	5.2	0.0
러시아	3.6	3.7	1.1	1.1	0.1
사우디아라비아	-0.7	1.0	1.2	3.7	-0.4
남아프리카공화국	0.7	1.0	0.0	1.4	0.0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 집계에는 자체적으로도 회원국인 국가만 포함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대국(permanent invitee)

3)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4*, p. 5, <Table 1>.

- OECD, 2024년 연금전망 보고서(Pensions Outlook 2024) 발표(2024. 12. 2.)¹²⁴⁾¹²⁵⁾
 - (개요) 2024년 OECD 연금전망 보고서는 자산기반 연금(asset-backed pension)¹²⁶⁾ 시스템이 공적 연금 제도를 보완하고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및 권고사항을 제안
 - OECD 회원국의 연금 자산은 56조달러(2023년 기준)¹²⁷⁾ 규모로 지난 20년간 선진국 경제의 평균 연금 자산이 GDP 대비 55%로 약 두 배 증가했고, 8개 국가*에서는 GDP 대비 100%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룸
 - *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호주, 스웨덴 등
 -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산기반 연금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어 자산기반 연금이 퇴직 후 재정 안정성(financial security)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음
 - (정책권고) 연금 포괄성을 강화하고, 투자전략을 다변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발 등을 활용해 은퇴 계획을 개선할 것을 권고
 - (포괄성 확대) 다중 고용주 연금 제도(Multi-employer pension scheme)는 중소기업의 고용주와 자영업자와 같이 기존 연금 제도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포괄성을 높일 수 있음
 - 노사단체가 특정 산업 또는 부문에서 집단협약을 맺어 대표 모델(Representative Model)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모델은 모든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포함할 수 있어 두 가지 모델을 혼합하여 도입하는 것을 권장
 - * (대표모델 예시) 호주의 산업연금기금(Industry superannuation funds), 벨기에의 섹터연금(Sectoral Pensions), 덴마크 및 스웨덴의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s) 등
 - ** (금융기관 모델 예시) 영국의 마스터신탁(Master Trust), 호주의 소매형 펀드(Retail superannuation funds), 뉴질랜드의 Kiwisaver 등
 - (투자전략 다변화) 은퇴 시점에 따라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생애주기 투자전략이 권장되며, 확정기여(DC) 연금의 지급 단계 설계는 평생 소득 제공을 보장하는 한편,

124) OECD, *OECD Pensions Outlook 2024*, 2024. 12. 2.,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pensions-outlook-2024_51510909-en.html, 검색일자: 2024. 12. 5.

125) OECD 연금전망 보고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OECD 회원국의 공적 및 사적 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등을 분석함.
126)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연금제도로, 공적 연금 시스템과 함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127) 2001년에 약 15.3조 규모에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 말 기준 세계 상장주식 시가총액(global public equity market capitalisation)의 1/5 비중을 차지함.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 확정기여(DC)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8개국 중 13개국에서는 전체 투자금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7개국에서만 20% 미만으로 나타남
- (재정 인센티브) 대다수 국가에서 세금 규정이 복잡하고 중·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어, 세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비세제 인센티브(예: 매칭 기부금, 보조금 등)도 활용하여 모든 소득 계층에게 은퇴를 위한 저축을 장려해야 함
- (커뮤니케이션 도구) 퇴직자들이 은퇴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도구와 교육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연금 대시보드를 통해 연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은퇴 소득 예측을 지원할 수 있음

■ OECD,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Resilience in uncertain times' 발표(2024. 12. 4.)¹²⁸⁾¹²⁹⁾

- (동향) 세계 경제는 국가와 부문에 따른 활동 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점차 완화되고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 감소된 물가상승률이 실질 가계소득 성장 및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한편, 소비자 신뢰지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압력(pressure)*은 계속 완화되고 있음
 - * 노동 부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인 '구직 공고 대비 실업자 수 비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
 - 실질금리는 여전히 제한적(restrictive)인 수준이지만, 낮아진 명목금리로 인해 주택 및 신용시장에서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 국가(선진국의 절반과 신흥국 경제의 약 60%)에서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완화되어 중앙은행 목표치로 복귀함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3.2%, 2025년 및 2026년은 3.3%로 전망되며, 2026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브라질의 견고한 성장세가 둔화되고 유럽이 회복 속도를 내면서 국가별 격차가

128)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2024. 12. 4.,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outlook-volume-2024-issue-2_d8814e8b-en.html 검색일자: 2024. 12. 5.

129) 제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점차 줄어들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내수 수요와 중국 및 일본에서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책이 아시아의 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OECD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 5.4%에서 2025년 3.8%, 2026년 3.0%로 더욱 완화될 것이며,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함
- (위험) 높아진 지정학적 긴장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인한 하방 위험요인이 존재
 - 중동 갈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유가상승은 전 세계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최근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주요 경제국이 시행하는 수입제한 조치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킴
 - 예상치 못한 성장 둔화나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서의 이탈은 금융시장 혼란과 신흥시장경제의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높은 채무 수준, 자산의 과대평가, 일부 차입자(상업용 부동산 시장 등)의 신용 악화 등으로 인한 금융 취약성도 여전히 존재
 - 비은행 금융기관의 규모와 상호연결성이 커지면서, 시장 부문 간 충격이 빠르게 전이될 위험이 증가함
- (정책권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경로를 확립하여 채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야심한 개혁 노력이 필요
 -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를 지속하되, 금리 인하의 시기와 정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근본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억제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정해야 함
 - (재정정책) 채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며, 대규모 지출 압력을 충족할 자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재정조치가 필수적임
 - (구조개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잠재생산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노동 및 상품시장에서 투자와 노동이동의 제약을 줄이는 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신기술 확산, 노동력 참여를 촉진

표 2-III-4 실질 GDP 성장률 및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23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Q4	Q4	Q4
실질GDP성장률								
세계	3.4	3.2	3.2	3.3	3.3	3.3	3.3	3.2
G20	3.5	3.6	3.3	3.3	3.2	3.3	3.2	3.1
OECD	2.3	1.8	1.7	1.9	1.9	1.8	2.0	1.8
미국	2.5	2.9	2.8	2.4	2.1	2.5	2.2	2.0
유로존	1.9	0.5	0.8	1.3	1.5	1.1	1.4	1.5
일본	0.8	1.7	-0.3	1.5	0.6	0.6	1.3	0.3
한국 ¹⁾	0.9	1.4	2.3	2.1	2.1	3.6	2.2	2.1
비 OECD	4.4	4.4	4.4	4.4	4.3	4.5	4.3	4.3
중국	6.8	5.2	4.9	4.7	4.4	4.7	4.6	4.3
인도 ²⁾	6.8	8.2	6.8	6.9	6.8			
브라질	-0.4	2.9	3.2	2.3	1.9			
OECD 실업률	6.5	4.8	4.9	4.9	4.8	4.9	4.9	4.8
물가상승률								
G20	3.0	6.1	5.4	3.5	2.9	4.4	3.1	2.8
OECD	1.7	7.1	5.4	3.8	3.0	4.7	3.3	2.7
미국	1.3	3.8	2.5	2.1	2.0	2.5	2.1	2.0
유로존 ³⁾	0.9	5.4	2.4	2.1	2.0	2.3	2.0	2.0
일본 ⁴⁾	0.9	3.3	2.6	1.9	2.1	2.3	1.7	2.1
한국 ¹⁾	1.2	3.6	2.3	1.8	2.0	1.5	2.0	2.0
OECD 재정수지 ⁵⁾	-3.1	-4.8	-4.8	-4.6	-4.4			
세계무역성장률	3.4	1.0	3.5	3.6	3.5	4.1	3.4	3.5

주: 1) OECD Data Explorer, Economic Outlook 116 data 사용하여 계산

2) 회계 연도 4월 1일~이듬해 3월 31일

3) 조화 소비자 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4)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5) GDP 대비 비중

자료: 1.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Table 1.1>. p. 14

2. OECD Economic Outlook No 116, 검색일자: 2024. 12. 6.

02 주요 경제지표 동향

- OECD, 2024년 1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2024. 8. 12.)¹³⁰⁾
 - OECD 회원국의 2024년 1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전 분기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G7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1분기 동안 실질가계소득 증가세를 보임
 - G7 국가 중 이탈리아가 근로소득 및 현물 사회 이전 증가로 인해 가장 큰 증가율(3.4%)을 기록함
 - 독일도 전 분기 대비 실질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0.1→1.4%), 이는 부분적으로 근로소득 증가에 기인함
 - 캐나다의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에서 0.6%로 반등
 - 프랑스는 기본 연금 혜택이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증가함에 따라 실질가계소득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과 미국의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각각 0.3% 0.2%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기타 OECD 회원국 중 폴란드는 근로소득, 사회적 급여, 자산소득*의 증가로 인해 가장 큰 증가율(10.2%)을 기록했으며, 그리스는 가장 큰 감소(-1.9%)를 보임
 - * 폴란드의 자산소득은 2021년 말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수익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130)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irst quarter 2024," 2024. 8. 12.,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08/growth-and-economic-well-being-first-quarter-2024-oecd1.html>, 검색일자: 2024. 8. 14.

표 2-III-5 1인당 분기 실질가계소득

(단위: %, 전 분기 대비)

구분	2022				2023				2024
	Q1	Q2	Q3	Q4	Q1	Q2	Q3	Q4	Q1
OECD	-1.3	-0.7	0.7	0.2	1.3	0.2	-0.2	0.3	0.9
G7	-1.4	-0.8	0.5	0.0	1.2	0.1	-0.1	0.1	0.5
캐나다	1.7	-1.2	-0.4	0.8	-1.2	-0.1	0.6	-0.5	0.6
프랑스	-1.7	-0.8	1.3	1.3	-1.2	0.0	0.2	0.9	0.6
독일	-0.3	-0.6	0.7	-0.9	-0.6	0.5	-0.5	0.1	1.4
이탈리아	-0.8	0.3	0.1	-3.5	2.2	-0.5	0.9	-0.5	3.4
일본	1.6	-2.7	0.3	-0.1	-0.8
영국	-0.4	-1.4	-0.6	1.5	-0.5	1.7	-0.3	0.5	0.3
미국	-2.3	-0.4	0.6	0.1	2.3	0.4	-0.2	0.1	0.2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일본은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별 가구 소득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1st quarter 2024," (Table 1), p. 3, 2024. 8. 12.

■ OECD,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8. 22.)¹³¹⁾

- OECD의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잠정)은 1분기와 동일한 0.5%를 기록하였고, G7 국가의 GDP 성장률은 1분기 0.2%에서 2분기 0.5%로 빠르게 증가함
 - 일본은 1분기에 -0.6%로 위축된 후 2분기에 0.8%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주로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로 성장이 주도됨
 - 미국은 민간소비 증가에 기인해 1분기 0.4%에서 2분기 0.7%로 성장이 가속화됨
 -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0.4%에서 2분기에 0.5%로 소폭 상승했으며, 프랑스는 1분기와 동일한 0.3%의 성장률을 유지
 - 반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0.2%에서 2분기에 -0.1%로 소폭 위축되었으며, 이는 특히 기계 및 장비와 건설 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 감소에 기인함
 - 이탈리아와 영국의 경제성장률도 각각 0.2%, 0.6%로 전 분기 대비 소폭(-0.1%p) 둔화됨

131) OECD, "OECD GDP growth continues at a steady pace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2024. 8. 22.,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08/gdp-growth-second-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4. 8. 23.

- 2024년 2분기 기준 OECD 연간 GDP 성장률은 1.8%로, G7 국가들 중 미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3.1%)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가장 큰 감소(-0.8%)를 보임

표 2-III-6 분기 실질GDP성장률

(단위: %, 전 분기 대비)

구분	2022			2023				2024	
	Q2	Q3	Q4	Q1	Q2	Q3	Q4	Q1	Q2
OECD	0.5	0.5	0.3	0.4	0.4	0.5	0.3	0.5	0.5
G20	-0.1	1.5	0.5	1.0	0.7	0.8	0.7	0.8	..
유럽연합 27개국	0.8	0.4	-0.1	0.1	0.1	0.1	0.0	0.3	0.3
유로지역 20개국	0.9	0.4	-0.1	0.0	0.1	0.0	0.0	0.3	0.3
G7	0.2	0.4	0.3	0.5	0.5	0.5	0.4	0.2	0.5
캐나다	0.9	0.5	-0.2	0.8	0.2	-0.1	0.0	0.4	0.5
프랑스	0.4	0.5	0.1	0.1	0.6	0.1	0.4	0.3	0.3
독일	0.0	0.6	-0.5	0.1	-0.1	0.2	-0.4	0.2	-0.1
이탈리아	1.4	0.4	-0.1	0.4	-0.2	0.3	0.1	0.3	0.2
일본	1.1	-0.3	0.4	1.3	0.6	-1.0	0.1	-0.6	0.8
영국	0.1	-0.1	0.1	0.2	0.0	-0.1	-0.3	0.7	0.6
미국	-0.1	0.7	0.6	0.6	0.5	1.2	0.8	0.4	0.7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자료: OECD, "OECD GDP continues at a steady pace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Table 1>, p. 2, 2024. 8. 22.

■ OECD, 2024년 2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4. 10. 15.)¹³²⁾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년 2분기에 각각 70.2%, 74%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각각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38개 OECD 회원국 중 13개국¹³³⁾에서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 두 지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OECD 회원국의 2/3에서 고용률이 OECD 평균(70.2%)보다 높게 나타남
 - 전 분기 대비 고용률이 증가한 국가 18개국 중 에스토니아(75.3→76.5%),

132)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stable at record highs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2024. 10. 15.,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10/labour-market-situation-updated-october-2024.html>, 검색일자: 2024. 10. 22.

133) 프랑스, 독일, 칠레, 그리스, 헝가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한국,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그리스(62.7→63.9%), 아이슬란드(83.8→85.3%)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코스타리카(60.2→59.6%), 핀란드(73.4→72.9%), 슬로베니아(74.1→73.1%)에서 가장 큰 감소를 기록

-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67.1%)과 남성(81%) 모두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2024년 8월 기준 4.9%이며, 2022년 4월 이후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5.9%, 6.4%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

표 2-III-7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	2021	2022	2023				2024	
	Q4			Q1	Q2	Q3	Q4	Q1	Q2
OECD 전체	68.9	67.7	69.3	69.8	70.0	70.1	70.1	70.2	70.2
G7	72.3	71.1	72.4	72.8	73.0	73.0	73.1	73.0	73.0
유럽연합	68.0	68.3	69.8	70.2	70.4	70.4	70.6	70.7	70.9
유로지역	68.5	67.8	69.4	69.8	70.1	70.0	70.2	70.3	70.6
호주	74.1	74.6	76.9	77.2	77.2	77.2	77.1	76.9	76.8
캐나다	74.6	73.5	75.6	76.2	76.0	75.7	75.4	75.0	74.8
프랑스	66.7	67.3	68.1	68.4	68.5	68.4	68.4	68.7	69.0
독일	75.8	75.6	76.7	77.1	77.2	77.2	77.3	77.4	77.4
이탈리아	59.0	58.3	60.2	61.0	61.4	61.5	62.1	62.1	62.0
일본	78.1	77.9	78.5	78.6	78.9	79.0	79.2	79.1	79.3
한국	67.0	66.5	68.5	68.8	69.3	69.4	69.5	69.5	69.5
스페인	63.4	62.6	64.3	64.6	65.4	65.7	65.7	65.7	66.1
영국	76.1	75.1	75.3	75.3	75.2	74.8	75.0	74.5	74.5
미국	71.7	69.4	71.3	71.8	72.0	72.0	72.0	72.0	71.9

자료: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5 October 2024," p. 4, <Table 1> 일부 발췌.

표 2-III-8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	2021	2022	2023				2024	
	Q4			Q1	Q2	Q3	Q4	Q1	Q2
OECD 전체	72.9	72.2	73.1	73.5	73.7	73.7	73.8	73.9	74.0
G7	75.5	75.1	75.6	76.0	76.2	76.2	76.3	76.3	76.4
유럽연합	73.0	73.6	74.5	74.8	75.0	75.0	75.2	75.4	75.4
유로지역	74.1	73.6	74.5	74.9	75.0	75.0	75.2	75.4	75.5
호주	78.3	78.7	80.0	80.1	80.2	80.2	80.3	80.0	80.1
캐나다	79.1	79.5	79.8	80.3	80.3	80.2	80.0	79.8	79.9
프랑스	72.7	73.0	73.6	73.7	74.0	73.9	74.0	74.3	74.6
독일	78.2	78.5	79.3	79.6	79.7	79.7	79.9	80.1	80.1
이탈리아	65.4	64.5	65.6	66.2	66.6	66.7	67.1	67.0	66.7
일본	80.0	80.3	80.7	80.8	81.1	81.2	81.4	81.3	81.5
한국	69.6	69.0	70.5	70.8	71.1	71.3	71.4	71.5	71.5
스페인	73.8	73.7	74.0	74.1	74.4	74.7	74.6	74.6	74.8
영국	79.2	78.7	78.3	78.5	78.6	78.1	78.1	77.9	77.8
미국	74.4	73.4	74.0	74.5	74.6	74.8	74.8	74.9	74.9

자료: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5 October 2024," p. 5, <Table 2> 일부 발췌

표 2-III-9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2	2023	2023	2024		2024			
			Q4	Q1	Q2	5월	6월	7월	8월
OECD 전체	5.0	4.8	4.9	4.9	4.9	4.9	5.0	5.0	4.9
G7	4.1	4.1	4.1	4.2	4.3	4.3	4.3	4.4	4.3
유럽연합	6.2	6.0	6.1	6.1	6.0	6.0	6.0	6.0	5.9
유로지역	6.8	6.6	6.5	6.5	6.5	6.5	6.5	6.4	6.4
호주	3.7	3.7	3.9	3.9	4.1	4.0	4.1	4.2	4.2
캐나다	5.3	5.4	5.8	5.9	6.2	6.2	6.4	6.4	6.6
프랑스	7.3	7.3	7.5	7.5	7.5	7.5	7.5	7.5	7.5
독일	3.1	3.0	3.1	3.3	3.5	3.5	3.5	3.5	3.5
이탈리아	8.1	7.7	7.4	7.2	6.8	6.8	6.8	6.4	6.2
일본	2.6	2.6	2.5	2.5	2.6	2.6	2.5	2.7	2.5
한국	2.9	2.7	2.8	2.8	2.8	2.8	2.8	2.5	2.4
스페인	13.0	12.2	11.9	11.8	11.6	11.6	11.5	11.4	11.3
영국	3.8	4.0	3.8	4.3	4.2	4.2	4.1	N/A	N/A
미국	3.7	3.6	3.7	3.8	4.0	4.0	4.1	4.3	4.2

자료: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5 October 2024," p. 6, <Table 3> 일부 발췌

■ OECD, 2024년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2024. 11. 13.)¹³⁴⁾

- OECD 회원국의 2024년 2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으며, 이는 1분기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인 1.3%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 실질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국가별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남
 - G7 국가 중 영국(1.1%), 이탈리아(1.0%)의 실질가계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캐나다(-0.2%)와 독일(-0.2%)에서는 감소를 기록함
 - 캐나다는 1인당 실질GDP가 5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실질가계소득도 0.2% 감소
 - 독일의 실질가계소득은 0.2% 감소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근로소득, 자산소득의 증가세 둔화와 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에 기인함
 - 미국은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이 전 분기 1.2%에서 0.4%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주로 근로소득과 사회복지 급여의 감소에 기인함
 - 기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포르투갈은 근로소득 증가*에 기인하여 가장 큰 증가율(2.1%)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는 자산소득 감소와 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실질가계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2.3%)
 - * 포르투갈의 근로소득은 2021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약 23% 증가하여 G7 국가들을 초과함

표 2-III-10 1인당 분기 실질가계소득

(단위: %, 전 분기 대비)

구분	2022			2023				2024	
	Q2	Q3	Q4	Q1	Q2	Q3	Q4	Q1	Q2
OECD	-0.6	1.0	0.5	1.1	0.5	0.0	0.5	1.3	0.4
G7	-0.8	1.0	0.3	1.1	0.3	0.1	0.4	1.2	0.6
캐나다	-1.2	-0.4	0.8	-1.2	-0.1	0.6	-0.5	0.6	-0.2
프랑스	-0.7	1.5	1.2	-1.0	-0.2	0.1	0.9	0.5	0.3
독일	-0.3	1.0	-0.8	-1.1	1.2	0.0	-0.2	1.0	-0.2
이탈리아	0.0	0.5	-3.1	1.6	0.1	0.8	-0.1	1.0	1.0
일본	-2.8	0.3	-0.1	-0.8

134)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Second quarter 2024," 2024. 11. 13.,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11/growth-and-economic-well-being-second-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4. 11. 21.

구분	2022			2023				2024	
	Q2	Q3	Q4	Q1	Q2	Q3	Q4	Q1	Q2
영국	-1.1	0.2	1.8	-0.6	0.9	-0.1	0.3	1.1	1.1
미국	-0.5	1.3	0.5	2.3	0.5	0.0	0.6	1.2	0.4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일본은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별 가구 소득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2nd quarter 2024," (Table 1), p. 3, 2024. 11. 13.

■ OECD,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11. 21.)¹³⁵⁾

-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GDP 성장률(잠정)은 전 분기(0.4%) 대비 소폭 상승한 0.5%를 기록했으며, G7 국가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 분기와 동일하게 0.5%를 유지
 - 미국의 성장률은 3분기에 0.7%로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캐나다와 일본(양국 모두 2분기 0.5%→3분기 0.2%), 영국(0.5%→0.1%), 이탈리아(0.2%→0.0%)의 성장률은 둔화됨
 - 일본의 경기침체는 주로 투자와 서비스 수출(주로 관광)의 위축이 반영됨
 - 이탈리아의 경우 주로 순수출 하락과 농업, 임업, 어업, 및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감소가 반영되었고, 영국은 재고 감소가 반영되어 성장이 둔화됨
 - 프랑스는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으로 인해 촉진된 개인소비 증가에 따라 3분기 성장이 가속화됨(0.2→0.4%)
 - 독일은 정부와 민간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성장 회복세(-0.3→0.2%)를 보임
 - OECD 회원국의 연간 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1.7%이며, G7 국가 중 미국이 지난 4개 분기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2.7%)을 기록한 반면, 독일이 가장 큰 하락(-0.2%)을 기록함

135) OECD, "OECD GDP growth," 2024. 11. 21.,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11/gdp-growth-third-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4. 11. 25.

제3부

주요국 재정동향

- I. 미국
- II. 일본
- III. 독일
- IV. 프랑스
- V. 영국
- VI. 호주
- VII. 네덜란드
- VIII. 스웨덴

I 미국 136)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회계연도: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¹³⁷⁾

표 3-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4. 7. 15. ~ 2024. 7. 18.	미국 공화당, 2024년 전당대회(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에서 정강정책(Party Platform) ¹⁾ 확정
2024. 7. 19.	미국 관리예산처(OMB) 2025회계연도 대통령 예산 수정 전망(MSR) 발표
2024. 7. 22.	미국 의회 하원, 초당적 재정포럼(Bipartisan Fiscal Forum), 하원 의장에게 미국 국가채무 우려 서신 전송
2024. 7. 23.	미국 의회예산처(CBO), 이민 급증의 예산 및 경제 영향 보고서 발표
2024. 7. 3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
2024. 7. 31.	미국 재무부, 2024년 3분기 분기자금조달계획(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 발표
2024. 8. 19. ~ 2024. 8. 22.	미국 민주당, 2024년 전당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에서 정강정책(Party Platform) 확정
2024. 8. 20. 2024. 11. 15.	미국 의회조사처(CRS), 2025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진행 상황 업데이트
2024. 8. 30.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 연방 신용 프로그램(Federal Credit Programs) 비용 추정 보고서 발표
2024. 9. 10.	미국 감사원(GAO), 부적절 지급 및 부정행위(Improper Payments and Fraud) 개선에 대한 의회 하원에서의 증언 보고서 발표
2024. 9. 18.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50%p 인하
2024. 9. 11.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1 가구소득 분배 보고서 발표
2024. 9. 18.	미국 의회 하원, 2025회계연도 1차 임시예산안 1차 시도 부결
2024. 9. 19.	미국 의회, 재향군인 혜택 지속 및 투명성을 위한 추경 세출예산 통과 의결
2024. 9. 23.	미국 의회, 2025회계연도 1차 임시예산안 최종 확정

1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ymgoo@kipf.re.kr)·오윤서 연구원(ysoh112@kipf.re.kr) 작성

137) 2024회계연도: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표 3-I-1 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24. 9. 24.	미국 의회 하원 초당적 재정 포럼(BFF), 연방 채무의 급증 문제 해결 촉구 연설
2024. 10. 8.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4회계연도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
2024. 11.~12.	트럼프 당선인, 2024 미국 대선 승리 후 주요 정책 언급
2024. 11. 7.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
2024. 11. 14.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및 한국 관찰대상국 재지정
2024. 11. 18.	바이든 행정부, 의회에 재난 구호를 위한 추가 긴급 자금 지원 요청
2024. 12. 10.	미국 의회,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상·하원 합의안(H.R. 5009) 발표
2024. 12. 11.	감사원(GAO), 채무 한도 유예 만료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국가채무 불이행 위험 관련 보고서 발표
2024. 12. 12.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2034 기간 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 대안 보고서 발표
2024. 12. 17.	트럼프 당선인, 2024 미국 대선 공식 당선인으로 확정
2024. 12. 18.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
2024. 12. 21.	미국 의회, 2025회계연도 2차 임시 세출예산 및 재난재해 대응 추경 세출예산 등이 포함된 American Relief Act, 2025(H.R. 10545) 법안 최종 확정

주: 1)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2024 GOP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https://prod-static.gop.com/media/RNC2024-Platform.pdf?_gl=1*ckymtp*_gcl_au*NDgyNDY1MTg3LjE3MjE5NzE2NTY.&_ga=2.21798267.1738513435.1721971657-795883922.1721971657, 검색일자: 2024. 7. 26.

자료: 저자 작성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2025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 관리예산처(OMB), 2025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수정 전망(Mid-Session Review, MSR) 발표(2024. 7. 19.)¹³⁸⁾

- ※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법전(US Code, section 1106 of Title 31)에 근거하여 본 예산안 제출 이후 변화된 경제·입법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 수정 전망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 (경제 전망) 올해('24년) 4분기(전년도 4분기 대비) 실질성장률은 본 예산안

138) OMB, "Mid-Session Review," 2024. 7. 19.,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7/msr_fy2025.pdf, 검색일자: 2024. 7. 24.

- 전망(1.3%) 대비 0.6%p 상승한 1.9% → 내년('25년)에는 2.1%로 소폭 상승 전망
- (물가) 올해('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은 본 예산안 전망(2.5%) 대비 0.6%p 상승한 3.1%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2.3% 전망
- (실업률) 올해('24년) 실업률은 본 예산안 전망(4.0%) 대비 0.2%p 하락한 3.8%로 전망되며, 이후 장기적으로는 3.8%를 유지할 전망
- (금리) 2023년에 5.1%를 기록한 금리(단기 채권¹³⁹⁾ 기준)는 이후 올해('24년) 본 예산안 전망(5.1%)과 유사한 5.2%로 소폭 상승 후, 내년('25년)에 4.3%까지 하락하며, 장기적으로는 2.8% 전망

표 3-I-2 미국 FY2023 & FY2024 재정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

재정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4
	실적	전망					
실질성장률 ¹⁾	3.1	1.9	2.1	2.0	2.0	...	2.2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 ²⁾	3.2	3.1	2.3	2.3	2.3	...	2.3
실업률 ³⁾	3.6	3.8	3.8	3.8	3.8	...	3.8

주: 1. 경제 지표 수치는 2024년 5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전망치

1) 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 증가율, Chained(2012) Dollars

2) 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 증가율, 계절조정

3) 연평균

자료: OMB, "Mid-Session Review," 2024. 7. 19., <Table 2>, p. 6.

- (재정수지) 2025회계연도 재정적자 수정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전망(1조 7,810억달러) 대비 5.4% 증가한 1조 8,780억달러 전망
 - 2025회계연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월 본 예산안 대비 0.2%p 상승한 6.3% 전망
- (수입) 2025회계연도 총수입 수정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전망(5조 4,850억달러) 대비 1.4% 증가한 5조 5,620억달러 전망
 - 2025회계연도 GDP 대비 수입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대비 0.7%p 상승한 18.7% 전망
 - 2025회계연도 수입 변화는 경제적 가정 조정¹⁴⁰⁾으로 인한 조정(+390억달러) 및 기술적 수치 수정(technical revisions)으로 인한 조정(+290억달러), 기타¹⁴¹⁾(+90억달러)

139) 91-Day Treasury Bills

140) revised economic assumptions

등으로 상향 조정

- (지출) 2025회계연도 총지출 전망 수정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전망(7조 2,660억달러) 대비 2.4% 증가한 7조 4,390억달러 전망
 - 2025회계연도 GDP 대비 지출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대비 0.4%p 상승한 25.0% 전망
 - 2025회계연도 지출 변화는 신규 입법 및 지출 재추정(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재향군인 소득보전 등)에 따른 수치 변화에 주로 기인하여 상향 조정
- (채무) 2025회계연도 연방채무(내부거래 제외) 수정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전망(29조 9,840억달러) 대비 0.4% 증가한 30조 1,020억달러 전망
 - 2025회계연도 GDP 대비 채무 규모는 3월 본 예산안 대비 1.0%p 하락한 101.2% 전망

표 3-I-3 예산안 전망(대통령 예산안(3월) VS MSR(7월) 수정 전망)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3	2034
예산총량 (십억달러)												
수입	3월	3,421	4,047	4,897	4,441	5,082	5,485	5,873	6,186	...	8,258	8,639
	7월					5,001	5,562	6,011	6,332	...	8,321	8,733
지출	3월	6,550	6,822	6,273	6,135	6,941	7,266	7,419	7,697	...	10,060	10,316
	7월					6,875	7,439	7,613	7,867	...	10,322	10,638
재정 적자	3월	3,129	2,775	1,376	1,694	1,859	1,781	1,547	1,510	...	1,801	1,677
	7월					1,874	1,878	1,601	1,535	...	2,001	1,905
연방 채무 ¹⁾	3월	21,017	22,284	24,252	26,236	28,156	29,984	31,639	33,250	...	43,339	45,056
	7월					28,201	30,102	31,798	33,446	...	44,327	46,272
예산총량 (GDP대비 %)												
수입	3월	16.3	18.1	19.6	16.5	18.0	18.7	19.2	19.4	...	20.2	20.3
	7월					17.6	18.7	19.4	19.6	...	20.1	20.2
지출	3월	31.2	30.5	25.1	22.7	24.6	24.8	24.3	24.2	...	24.6	24.2
	7월					24.2	25.0	24.5	24.4	...	24.9	24.6
재정 적자	3월	14.9	12.4	5.5	6.3	6.6	6.1	5.1	4.7	...	4.4	3.9
	7월					6.6	6.3	5.2	4.8	...	4.8	4.4
연방 채무 ¹⁾	3월	100.1	99.6	96.9	97.3	99.6	102.2	103.6	104.5	...	106.0	105.6
	7월					99.1	101.2	102.5	103.6	...	106.9	106.9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자료: OMB, "Mid-Session Review," 2024. 7. 19., <Table S-1>; "Fiscal Year 202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4. 3., <Table S-1>, p. 137.

141) 신규 입법 등으로 인한 변화

표 3-I-4 미국 2025회계연도 예산안 재정 전망

재정 전망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3	2034	2025~2034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4,047	4,897	4,441	5,082	5,485	5,873	6,186	...	8,258	8,639	70,328
지출	6,822	6,273	6,135	6,941	7,266	7,419	7,697	...	10,060	10,316	86,625
재정 적자	2,775	1,376	1,694	1,859	1,781	1,547	1,510	...	1,801	1,677	16,297
연방 채무 ¹⁾	22,284	24,252	23,236	28,156	29,984	31,639	33,250	...	43,339	45,056	-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8.1	19.6	16.5	18.0	18.7	19.2	19.4	...	20.2	20.3	19.7
지출	30.5	25.1	22.7	24.6	24.8	24.3	24.2	...	24.6	24.2	24.4
재정 적자	12.4	5.5	6.3	6.6	6.1	5.1	4.7	...	4.4	3.9	4.6
연방 채무 ¹⁾	99.6	97.0	97.3	99.6	102.2	103.6	104.5	...	106.0	105.6	-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자료: 관리예산처, "Fiscal Year 202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4. 3. 11., <Table S-1>

2) 2025회계연도 임시 예산

- ◇ 2025회계연도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총 2개의 임시 세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
 - (1차 임시 세출예산) 의회에서 2024. 9. 25.에 가결 - 유효시한: 2024. 12. 20.
 - (2차 임시 세출예산) 의회에서 2024. 12. 21.에 가결 - 유효시한: 2025. 3. 14.

- 의회 하원, 2025회계연도 임시 세출예산법안(Continuing Resolution; H.R. 9494)¹⁴² 1차 시도 부결(2024. 9. 18.)¹⁴³
 - (배경) 2025회계연도의 개시일(2024. 10. 1.)이 도래 예정이나, 총 12개 분야의 정규 세출예산이 모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¹⁴⁴
 - 이에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동 법안이 발의(9. 9.)되어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9.18.)에 붙였으나, 202:220으로 통과되지 못함

142)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Other Matters Act, 2025.

143) CRFB, "Appropriations Watch: FY2025," 2024. 9. 19., <https://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25>, 검색일자: 2024. 9. 23.

144)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8월호 재정동향」, 2024. 8. 참고

- (규모 및 만료 시한) 동 임시 세출예산법안은 전년도(FY2024)에 준하는 규모¹⁴⁵⁾¹⁴⁶⁾로, 만료 시한은 2025년 3월 28일(약 6개월)까지로 규정
- (정부 입장) 정부는 정책성명서(SAP)¹⁴⁷⁾를 통해 동 법안은 6개월 동안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예산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비판^{*}하면서, 임시 세출예산법안은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하면서 정규 예산안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개진

* (주요 비판 내용) 미군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 제공 한계 직면 예상, 재난 구호 예산의 경우 주정부에 재난으로 인해 필요한 장기적인 필수 자금 제외, 사회보장지출 서비스 위축(약화) 등
- 추가적으로 정부는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관련 조항(연방 선거 유권자들의 등록 서류 및 절차 등)은 ‘선거 보호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¹⁴⁸⁾

■ 의회 하원, 2025회계연도 임시 세출예산법안(Continuing Resolution; H.R. 9747¹⁴⁹⁾) 발의 2차 시도(2024. 9. 23.)¹⁵⁰⁾

- (배경) 2025회계연도 임시예산에 대한 법안 표결이 부결된 후, 하원 공화당 세출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2차 시도(2024. 9. 25. 기준)
- (규모 및 만료 시한) 동 임시 세출예산법안은 전년도(FY2024)에 준하는 규모로, 만료 시한은 1차 시도 기간 대비 3개월 감축된 2024년 12월 20일까지(약 3개월)로 규정

145) 2024회계연도(2023. 10.~2024. 9.) 정규 세출예산법의 규모는 약 1조 7,149억달러(예산권한) 규모이며, 동 법은 4차례의 임시예산을 거친 후 정규예산안 총 12개의 분야를 6개씩 두 부문으로 편성하여 정규예산안 최종 입법을 두 차례(H.R. 4366: 2024. 3. 9. / H.R. 2882: 2024. 3. 22.)로 나누어 진행하여 확정

146) CBO 법안비용 추계 참고 링크: ① H.R. 4366 Cost Estimate Report: CBO, “H.R. 4366,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4,” 2024. 3. 5.,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03/Consolidated%20Appropriations%20Act%202024.pdf>, 검색일자: 2024. 9. 23. / ② H.R. 2882 Cost Estimate Report: CBO, “Further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4,” 2024. 3. 21.,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03/Consolidated%20Appropriations%20Act%202024.pdf>, 검색일자: 2024. 9. 23.

147) 백악관,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H.R. 9494—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Other Matters Act, 2025 (Rep. Higgins, R-LA),” 2024. 9. 9.,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9/H.R.-9494%E2%80%94Continuing-Appropriations-and-Other-Matters-Act-2025-Final.pdf>, 검색일자: 2024. 9. 20.

148) 미국 대선 경합주 중의 한 곳인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미국 시민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만 8,000명에 대해 주 및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음(자료: Fox News, “Arizona Supreme Court rules 98,000 people whose citizenship is unconfirmed can vote in pivotal election,” 2024. 9. 20., <https://www.foxnews.com/politics/arizona-supreme-court-rules-98000-people-citizenship-unconfirmed-vote-pivotal-election>, 검색일자: 2024. 9. 23.)

149)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150)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le on CR: Congress is Responsible to Act,” 2024. 9. 23.,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cole-cr-congress-responsible-act>, 검색일자: 2024. 9. 25.

◦ (향후 전망) 정부도 정책성명서¹⁵¹⁾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조속한 처리를 희망한다는 의견 개진

- 다만 불가피한 이슈가 발생하여 의회가 9월 30일 자정까지 임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섯다운*(government shutdown)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음

* 섯다운¹⁵²⁾이 발생할 경우, 필수(essential)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furlough) 상태에 놓이게 되어, 복지 관련 수급 지연 및 국립공원 등이 일시 폐쇄하는 등 전반적인 정부 운영이 지연(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의회, 2025회계연도 임시 세출예산법안(Continuing Resolution; H.R. 9747¹⁵³⁾¹⁵⁴⁾ 발의 2차 시도¹⁵⁵⁾(2024. 9. 23.)에서 최종 확정(2024. 9. 25.)¹⁵⁶⁾

◦ (배경) 2025회계연도 임시예산에 대한 법안 표결(1차 시도¹⁵⁷⁾: 2024. 9. 18.)이 부결된 후, 하원 공화당 세출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2차 시도에서 가결된 것임

◦ (규모 및 만료 시한) 동 임시 세출예산법안은 전년도(FY2024)에 준하는 규모로, 만료 시한은 1차 시도 기간 대비 3개월 감축된 2024년 12월 20일까지(약 3개월)로 규정¹⁵⁸⁾

◦ (향후 전망) 대선 직후(2024. 11. 5.) 개편될 의회 구성과 다수당 확보 여부에 따라 정규 세출예산 또는 임시 세출예산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 불가피한 이슈로 인해 의회가 12월 20일 자정까지 임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섯다운(government shutdown)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존재

151) 백악관,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H.R. 9747 —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Rep. Cole, R-OK), 2024. 9. 2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9/H.R.-9747-Continuing-Appropriations-and-Extensions-Act-2025-Final-Updated.pdf>, 검색일자: 2024. 9. 25.

152) 섯다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박한준·구윤모,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의 제도현황과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3. 참고

153)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154) P.L. 118-83

155)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le on CR: Congress is Responsible to Act," 2024. 9. 23.,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cole-cr-congress-responsible-act>, 검색일자: 2024. 9. 25.

156)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9747," 2024. 9. 2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09/26/press-release-bill-signed-h-r-9747/>, 검색일자: 2024. 10. 29.

157) CRFB, "Appropriations Watch: FY2025," 2024. 9. 19., <https://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25>, 검색일자: 2024. 9. 23.

158) 해당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9월호 재정동향」, 2024. 10.을 참고하여 작성

- 미 의회, 2025회계연도 2차 임시 세출예산 및 재난재해 대응 추경 세출예산 등이 포함된 American Relief Act, 2025(H.R. 10545) 법안 최종 확정(2024. 12. 21.)¹⁵⁹⁾
 - (배경) 2024회계연도의 만료일(2023. 9. 30.)까지 12개 분야의 정규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년 12월 20일까지 유효한 임시 세출예산¹⁶⁰⁾으로 정부 운영
 - (입법 과정)¹⁶¹⁾ 2025회계연도 1차 임시 세출예산의 만료 시한(2024. 12. 20.)이 다가오자, 의회는 세 차례 시도 끝에 2차 임시 세출예산(유효시한: 2025. 3. 14.) 통과 의결
 - (1차 시도: H.R. 10445) 임시 세출예산 및 농업인* 100억달러 지원 및 플로리다·조지아주 등 남동부 지역의 폭풍 재난 대응을 위한 1,100억달러 포함 등 다수의 신규 재정 수반 항목 등이 포함되었으나, 표결 단계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중지¹⁶²⁾
 - * 농업인 지원 예산의 경우, Farm bill(농업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이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된 후, 정식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세출예산¹⁶³⁾으로 연장되었으나, 2024년 9월 30일 다음날 만료¹⁶⁴⁾
 - (2차 시도: H.R. 10515) 임시 세출예산, 재난재해 대응 추경 세출예산 및 채무한도* 증액 등 포함
 - * 채무한도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현 채무한도 유예 기간을 2027년 1월 20일까지로 재설정
 - 동 법안(H.R. 10515)의 긴급 처리를 위해 규칙 정지 및 통과 절차¹⁶⁵⁾(on motion to

159)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10545," 2024. 12. 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12/21/press-release-bill-signed-h-r-10545/>, 검색일자: 2024. 12. 23.

160) H.R. 9747; P.L. 118-83

161) The Hill, "Republicans regroup to find a funding bill 'plan C,'" 2024. 12. 19., <https://thehill.com/homenews/house/5047944-live-updates-government-shutdown-johnson-trump-musk/>, 검색일자: 2024. 12. 20.

162) 공화당의 에릭 벌리슨(Eric Burlison) 연방 하원은 1차 임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정부를 위해 기한만 연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 항목 등이 포함했음을 지적하는 의견 개진(자료: Fox News, "Congress unveils bill to avert Friday government shutdown with over \$100B in disaster aid," 2024. 12. 17., <https://www.foxnews.com/politics/congress-unveils-bill-avert-friday-government-shutdown-over-100b-disaster-aid>, 검색일자: 2024. 12. 18.)

163) H.R. 6363; P.L. 118-22

164) 미국의 farm bill(정식 명칭: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P.L. 115-334)은 보통 5년마다 갱신되는 농업 관련 주요 법안으로,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식량 보조금, 농업 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법은 2018년 12월 20일에 입법 발효되었으며, 2023년 9월 30일까지를 유효 기간을 설정 → 이후 Further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Other Extensions Act, 2024(P.L. 118-22, 2023. 11. 16.)를 통해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 추가 연장이 이루어짐(Farm Bill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 농부부 자료 참고: <https://www.usda.gov/farming-and-ranching/farm-bill>)

- suspend the rule and pass)가 표결에 붙여졌으나, 부결(174: 235)되어 일반 표결 절차로 돌아가거나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H.R. 10545) 시도¹⁶⁶⁾
- (3차 시도: H.R. 10545) 임시 세출예산 및 재난재해 대응 추경 세출예산 포함, 채무한도 증액 조항은 제외된 최종안(2차 시도 법안과 유사)¹⁶⁷⁾ 확정
 - Farm Bill(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의 경우,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2024년 9월 30일까지 발효된 상태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 및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¹⁶⁸⁾

[참고] 감사원(GAO)에서 발표한 채무한도 보고서 주요 내용

- 감사원(GAO), 채무한도 유예 만료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국가채무 불이행(Government Default) 위험을 우려하는 보고서 발표(2024. 12. 11.)¹⁶⁹⁾
 - (배경) 미 의회는 2023년 6월 23일에 2023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23)을 가결한바, 동 법에는 채무한도를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¹⁷⁰⁾
 - 당해 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현재의 채무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 1월 2일에 유예기간 중 발생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채무한도를 인상하도록 규정
 - (감사원 의견) 연방 채무가 한도에 도달한 후에 사용 가능한 현금을 소진하게 되면 결국 채무 상황에 실패를 의미하는 채무 불이행 위험(risk)이 발생하고, 이는 금융 시장, 경제,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US stature abroad)에 충격적인(devastating) 영향을

165) 입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의회 하원의 내부 규칙(rule)이며, 논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과반 찬성보다 높은 2/3의 찬성이 필요하며, 통과될 경우 바로 수정이나 논의 없이 상원으로 송부 가능

166) 미 의회 하원 공식 기록 웹사이트(clerk.house.gov), "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516," 2024. 12. 19., <https://clerk.house.gov/evs/2024/roll516.xml>, 검색일자: 2024. 12. 20.

167) Barrons, "House Passes Funding Bill With Just Hours Left to Avert a Government Shutdown," 2024. 12. 20., <https://www.barrons.com/articles/shutdown-congress-deal-debt-ceiling-68df3a93>, 검색일자: 2024. 12. 23.

168) 해당 법이 2024년 9월 30일 이후 연장이 중단되었으나, 만료된 시점 이후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거나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임

169) GAO, "Debt Limit: Statutory Changes Could Avert the Risk of a Government Default and Its Potentially Severe Consequences," 2024. 12. 11., <https://www.gao.gov/products/gao-25-107089>, 검색일자: 2024. 12. 13

170) 미국 의회, "H.R.3746 -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Public Law No. 118-5), 118th Congress(2023-2024)," 2023. 6. 3.,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3746/text>, 검색일자: 2024. 12. 13.

미칠 수 있음

- (주요 권고) 연방 지출과 수입 결정과 별개로 채무 상한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차입 수요가 채무 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에, 채무 관련 결정 시 지출 및 수입 결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권고
- (주요 평가) 초당적 비영리 재정기구인 CBPP는 현 채무 한도 상황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¹⁷¹⁾
 - (유예 만료일 불확실성) 현재 기준(2024. 12. 12.)으로 약 7,000억달러의 가용 현금이 있기에 채무 불이행 시기(X-date)는 내년(2025년) 봄이나 여름 사이에 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확한 날짜에 대한 추산은 한계가 있음
 - (지출 우선순위 설정 한계) 특정지출 우선(prioritizing payments) 활용 방법만으로는 현금 고갈 시 차입 확대를 할 수 없기에 정답이 될 수 없음
 - (재정적자 관리 한계) 채무 한도 증액 조정이란 방법은 연방 적자와 차입 제한을 위한 효과적(effective)이거나 적정한(appropriate) 수단이 아님
 - 채무 한도 제도는 정치적 악용(political mischief)¹⁷²⁾에 의해 국가 채무 리스크를 발생시키기에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채무 한도를 적시에, 그리고 장기간 유예하거나 인상해야 할 것을 제안

3) 정규 예산

- CRS(의회조사처), 2025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진행상황 업데이트(2024. 8. 20., 2024. 11. 15.)¹⁷³⁾¹⁷⁴⁾
 - (최근 현황) 2025회계연도 개시일(2024. 10. 1.)까지 12개 분야의 정규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분야 없음

171) CBPP(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Hitting the Debt Limit: 3 Things to Know," 2024. 12. 17., <https://www.cbpp.org/research/federal-budget/hitting-the-debt-limit-3-things-to-know>, 검색일자: 2024. 12. 19.

172) 채무 한도 증액을 명분으로 다른 지출 분야에 대한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채무 한도 증액 합의 시기가 늦어지는 결과 발생 가능

173) CRS, "Appropriations Status Table: FY2025," 2024. 8. 20., <https://crsreports.congress.gov/AppropriationsStatusTable/Index/AppropriationsStatusTable?id=2025>, 검색일자: 2024. 8. 21.

174) CRFB, "Appropriations Watch: FY 2025," 2024. 8. 2., <https://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25>, 검색일자: 2024. 8. 21.

- (하원 현황) 총 5개 분야(국방, 국토안보, 내무·환경, 군사시설·재향군인, 국무·외교) 세출 예산 통과 완료
- (상원 현황) 세출 심의 완료된 분야 없음
- (정부 입장) 바이든 정부는 현재 하원에서 통과되거나 진행 중인 모든 분야의 세출 예산 법안에 대해 대통령 예산안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음을 비판하며 부정적 입장을 개진
- (예산결의안* 진행 여부) 하원의 경우, 예산위원회(House Budget Committee) 주관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결의안(H.Con.Res. 117) 승인(2024. 3. 7.)¹⁷⁵⁾¹⁷⁶⁾
 - * (예산결의안)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에 근거하여 대통령 예산안이 발표되면 미 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각각 예산결의안(의회 예산 심의 청사진) 심의에 착수
 - (결의안 주요 내용)¹⁷⁷⁾ 10년 안에 재정 수지 흑자(440억달러) 달성, 향후 10년 동안 이자 지출 2.7조달러 감축, 부적절지출(improper payments) 50% 감축을 통해 1조달러 재정 절감, 향후 10년간 매해 3% 성장 견인 등

표 3-I-5 미국 FY2025 12개 세출예산 분야 의회 진행 상황

분야	하원		상원	
	법안 번호	통과 여부	법안 번호	통과 여부
농업(Agriculture)	H.R. 9027	×	S. 4690	×
통상·법무·과학(Commerce, Justice and Science)	H.R. 9026	×	S. 4795	×
국방(Defense)	H.R. 8774	○	S. 4921	×
에너지·수자원(Energy and Water)	H.R. 8997	×	S. 4927	×
금융(Financial Services)	H.R. 8773	×	S. 4928	×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H.R. 8752	○	-	×
내무·환경(Interior and Environment)	H.R. 8998	○	S. 4802	×

175) 하원 예산위원회, "Chairman Arrington, Speaker Johnson Release Statements After Fiscal Year 2025 Budget Resolution Passes out of Committee," 2024. 3. 7., <https://budget.house.gov/press-release/chairman-arrington-speaker-johnson-release-statements-after-fiscal-year-2025-budget-resolution-passes-out-of-committee>, 검색일자: 2024. 8. 21.

176) 하원 예산위원회, "Markup of The Concurrent Resolution on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25," 2024. 3. 7., <https://docs.house.gov/Committee/Calendar/ByEvent.aspx?EventID=116938>, 검색일자: 2024. 8. 23.

177) 하원 예산위원회, "House Budget Committee versus President Biden," 2024. 3., https://budget.house.gov/imo/media/doc/hbcr_vs_biden.pdf, 검색일자: 2024. 8. 27.

분야	하원		상원	
	법안 번호	통과 여부	법안 번호	통과 여부
노동·복지·교육(Labor, Health and Education)	H.R. 9029	×	S. 4942	×
입법부(Legislative Branch)	H.R. 8772	부결	S. 4678	×
군사시설·재향군인(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H.R. 8580	○	S. 4677	×
국무·외교(State and Foreign Operations)	H.R. 8771	○	S. 4797	×
교통·주택/도시개발(Transportation, HUD)	H.R. 9028	×	S. 4796	×

자료: CRS, "Appropriations Status Table: FY2024," 2024. 11. 15.를 재구성하여 작성

표 3-I-6 미국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예산결의안과 FY2025 대통령 예산안 비교

분야	바이든 정부의 FY2025 대통령 예산안	하원 예산위원회의 FY2025 예산결의안
세금	신규 조세 4.9조달러 부과	신규로 부과되는 세금 없음
채무	경제성장률보다 25% 더 빠른 속도로 증가	경제 성장 속도가 채무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증가
재정적자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수치인 연 평균 1.6조 달러 ¹⁾ (GDP 대비 4.6%)	10년 안에 재정흑자 달성(바이든 정부 예산안 대비 10.4조달러 낮은 규모의 재정적자)
지출	향후 10년 동안 86.6조달러 지출 발생	향후 10년 동안 정부 예산안 대비 15.1조달러 절감
이자비용	향후 10년 동안 12.2조달러 발생	정부 예산안 대비 2.7조달러 절감

주: 1) 참고로, OMB의 "Mid-Session Review, 2024. 7. 19."에서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 실적치는 1.6조달러로 집계되고 있음

자료: 하원 예산위원회, "House Budget Committee versus President Biden," 관련 링크: https://budget.house.gov/im/0/media/doc/hbcr_vs_biden.pdf, 검색일자: 2024. 12. 23.

- (향후 전망) 2025년부터 임기 시작인 119대(2025~2026) 의회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표 II-1-1〉)이 되면서, 차기 정부 의중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고자 의회의 새로운 회기 시작 전까지 재차 임시 세출예산으로 꾸려질 가능성 존재
 - 바이든 대통령도 평화로운 정권 이양(smooth transition)을 선언한 상황에서 임기의 마지막 회계연도에 정부 섯다운 발생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음(섯다운 확률 낮음)
 - 다만 의회의 합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섯다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새로 구성되는 의회 회기가 2025년 1월 3일에 개시되기에 정부 섯다운 사태 장기화는 희박해 보임

표 3-I-7 119대 미 의회 확보 의석 구성(2024. 12. 5. 기준)

(단위: 석)

구분	공화당	민주당
하원	220	215
상원	53	47

자료: CNBC News, "Decision 2024," 2024. 12.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presidential-election>, 검색일자: 2024. 12. 5.

표 3-I-8 FY2024 12개 세출예산 분야 의회 진행 상황

(단위: 십억달러, %)

분야	하원		상원	
	법안 번호	통과 여부	법안 번호	통과 여부
농업(Agriculture)	H.R. 4368	×	S. 2131	×
통상·법무·과학(Commerce, Justice and Science)	H.R. 5893	×	S. 2321	×
국방(Defense)	H.R. 4365	○	S. 2587	×
에너지·수자원(Energy and Water)	H.R. 4394	×	S. 2443	×
금융(Financial Services)	H.R. 4664	×	S. 2309	×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H.R. 4367	○	S. 2625	×
내무·환경(Interior and Environment)	H.R. 4821	○	S. 2605	×
노동·복지·교육(Labor, Health and Education)	H.R. 5894	×	S. 2624	×
입법부(Legislative Branch)	H.R. 4364	×	S. 2302	×
군사시설·재향군인(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H.R. 4366	○	S. 2127	×
국무·외교(State and Foreign Operations)	H.R. 4665	○	S. 2438	×
교통·주택/도시개발(Transportation, HUD)	H.R. 4820	×	S. 2437	×

자료: CRS, "Appropriations Status Table: FY2024," 2024. 11. 15.를 재구성하여 작성

■ 미국 의회,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상·하원 합의안(H.R. 5009) 발표(2024. 12. 10.)¹⁷⁸⁾

- (개요) 1961년 이래로 미국 국방 지출은 법률¹⁷⁹⁾에 의거하여 수권(Authorization) 입법 절차를 밟아 지출승인(Appropriation)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78)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TEXT OF THE HOUSE AMENDMENT TO THE SENATE AMENDMENT TO H.R. 5009," 2024. 12. 7., https://docs.house.gov/billsthisweek/20241209/RCP_HR5009_xml%5b89%5d.pdf, 검색일자: 2024. 12. 18.

179) 10 U.S.C. §114

- 상·하원 군사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s)가 합동 의결하여 합의안을 구성하고, 양원의 최종 입법을 거쳐 국방수권법 제정
- 국방수권법은 지출승인을 통한 최종 자금 조달 이전에 국방 지출 수준 및 구성을 규정하는 절차에 해당
- (주요 내용)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8,837억달러를 2025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국방 예산으로 배정
 - 군사위원회 소관 국방 예산은 8,837억달러이나, 비소관 국방 예산 및 수권 절차를 생략 가능한 예산 등 기타 항목을 합산 시 총 예상 국방 예산의 규모는 약 8,952억달러에 이를 예정
 - 2025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직전 연도 예산 대비 약 1% 증가한 수준으로, 채무한도 증액 협상(재정책임법 제정)¹⁸⁰⁾ 당시 2025회계연도의 국방예산 상한을 규정한 바에 따름
 - 국방수권법 양원 합의안은 주한미군 숫자를 현행(약 2만 8,500명) 유지하는 내용도 포괄
- (입법 현황) 국방수권법은 양원을 통과하여 2024년 12월 23일 최종 대통령 서명을 거쳐 입법¹⁸¹⁾

나. 추경

- 의회, 재향군인 혜택 지속 및 투명성을 위한 추경 세출예산(Veterans Benefits Continuity and Accountabilit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4; H.R. 9468) 통과 (2024. 9. 19.)¹⁸²⁾
 - (배경)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 Affairs)의 예산 과소 추계로 인해 올해 (FY2024)와 내년도(FY2025) 예산 부족분에 대한 긴급 추경 예산 필요성 대두
 - (규모) 하원 세출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훈부의 부족분은 총 150억달러로 집계¹⁸³⁾

180) 미국 의회조사국, "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FRA) in FY2025: Current Status," 2024. 10. 1.,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2433/2>, 검색일자: 2024. 12. 18.

181)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12/23/press-release-bill-signed-h-r-5009/>, 검색일자: 2024. 12. 26.

182) 백악관, "Bills Signed: H.R. 7377, H.R. 9468," 2024. 9. 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09/20/press-release-bills-signed-h-r-7377-h-r-9468/>, 검색일자: 2024. 9. 24.

- (2024회계연도 부족분*) 30억달러, (2025회계연도 부족분) 120억달러

* CBO는 비용 추계 보고서¹⁸⁴)에서 해당 부족분에 대한 예산 수요는 신규 수요가 아니므로, 2024년 6월에 발표한 기준선 전망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주요 항목) 동 예산은 재향군인 복지국(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에 편성되어 수당, 연금 및 재적응(readjustment) 관련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

- 동 법은 보훈부 감사국¹⁸⁵)에 자금 부족의 원인과 예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

• 또한 해당 분야 예산의 2024~2026회계연도 자금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 의무도 포함

다. 결산

■ 의회예산처(CBO), 2024회계연도(2023. 10. 1.~2024. 9. 30.)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 (2024. 10. 8.)¹⁸⁶

표 3-I-9 미국 FY2023 & FY2024 재정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Y2023 실적 (A)	FY2024 예비결산 (B)	증감(B-A)	증감율 (B-A)/A
재정수입	4,439	4,918	479	10.8
재정지출 ¹⁾	6,135 (6,1261))	6,752 (6,8242))	617 (699)	10.1 (11.4)
재정수지	-1,695 (-1,686)	-1,834 (-1,906)	-139 (-220)	-8.2 (-13.0)

주: () 안의 수치는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s) 조정(exclude)을 반영한 결과값

1) 6,126bn = 6,135bn - 63bn(2023회계연도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 2022회계연도에 지급된 규모)

2) 6,824bn = 6,752bn + 72bn(2024회계연도 지급분이 2023회계연도에 지급된 규모)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4, 2024. 10. 8." <Table 1>, p. 1을 재구성하여 작성

183)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ouse Passes Supplemental Bill to Address VA Shortfall," 2024. 9. 17.,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upplemental-bill-address-va-shortfall>, 검색일자: 2024. 9. 24.

184) CBO, "Legislation Considered Under Suspension of the Rules," 2024. 9. 16.,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09/suspensions_week_of_9_16_2024_3.pdf, 검색일자: 2024. 9. 24.

185) VA Office of Inspector General

186)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4," 2024. 10. 8., <https://www.cbo.gov/publication/59544>, 검색일자: 2024. 10. 24.

- (세입) 202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4조 9,180억달러 추정
 - 세입 증가분의 일부는 연방 재난 지역에 속한 납세자들의 2023년 세금 납부 기한을 2024회계연도로 연기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세입 최종 규모¹⁸⁷⁾는 CBO가 6월에 예상한 수치 대비 300억달러 더 걸린 것으로 집계
 - 증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세¹⁸⁸⁾는 전년 대비 11.4%(2,490억 달러) 증가한 약 2조 4,250억달러로, 사회보험 급여세*와 합할 경우 전년 대비 약 9.1% 증가
 - * 사회보험급여세는 전년 대비 5.9%(950억달러) 증가한 1조 7,090억달러
 - 환급액(refunds)을 제외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급여세를 합한 수입 규모¹⁸⁹⁾는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wages)과 정규직 근로자의 소득(salaries) 모두 증가한 것에 기인
 - 실업보험(사회보험급여세의 한 종류)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 감소
 - 법인세는 전년 대비 26.0%(1,090억달러) 증가한 5,290억달러
 - 법인세 증가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재난 재해에 영향 받은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 2023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 기한을 IRS가 2023년 11월¹⁹⁰⁾까지 연기한 것에 일부 기인
 - 기타 주요 수입 중 관세수입은 전년 대비 30억달러(3%) 감소, 연준으로부터 전출된 잉여금¹⁹¹⁾ 수입은 30억달러 증가

187) 환급금 제외

188) 참고로 개인 소득세의 경우, 환급(tax refunds) 규모가 전년 대비 21%(770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용유지 세액공제에 대한 신규 청구를 일시적 중단(2023년 9월~)했기 때문이며, IRS는 강화된 조치(enhanced compliance measures)를 통해 청구를 처리(2024년 1월까지 접수된 청구를 대상으로 함) 할 것이라고 8월에 발표함. 이로 인해 2024회계연도의 개인소득세 환급 규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침.

189) 환급액(refunds)을 제외한 원천징수(withheld)된 수입 규모: 4조 1,340억달러(개인소득세+사회보장급여)- 환급액(7,960억달러)=3조 3,380억달러

190) 2024회계연도: 2023. 10. 1.~2024. 9. 30.

191) FAS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P.L. 114-94)법은 연방준비은행(FRB)의 잉여금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재무부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I-10 미국 FY2023 & FY2024 수입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Y2023 실적(A)	FY2024 예비결산(B)	증감(B-A)	증감율(B-A)/A
개인소득세	2,176	2,425	249	11.4
사회보험금여세	1,614	1,709	95	5.9
법인세	420	529	109	26.0
기타 소득	229	255	26	11.4
총계	4,896	4,918	479	10.8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4," 2024. 10. 8., <Table 2>, p. 3을 재구성하여 작성

◦ (세출) 2024회계연도 세출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6조 7,520억달러 예비 추정

* timing shifts¹⁹²⁾ 조정(exclude)을 반영할 경우, 전년 대비 약 11.4% 증가한 6조 8,240억 달러

- (주요 감소 분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코로나바이러스 환급형 세액공제, 연금급여보장공사(PBGC)¹⁹³⁾ 예산 등이 전년 대비 큰 감소율을 보임

• 연방예금보험공사 예산은 전년 대비 56.5% 감소한 370억달러 집계

* 연방예금보험공사 예산¹⁹⁴⁾은 2023년 봄에 발생한 은행 파산¹⁹⁵⁾ 사태 해결을 위해 전년 대비 1,010억달러 증가한 920억달러를 지출하였는데, 2024회계연도에는 추가로 4개의 은행 파산 건을 해결하면서 370억달러 지출 기록

• 일시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환급형 세액공제(U.S. Coronavirus refundable credits)^{*196)}는 전년 대비 98.1% 감소한 10억달러 집계

* 예) 근로자의 병가 및 가족 휴가 비용, 직원 유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보험 지속 지원 등)

• 연금급여보장공사 지출은 전년 대비 70.0% 하락한 120억달러 집계

* PBGC 지출 하락은 특정 다고용주연금계획(multi-employer pension plans)¹⁹⁷⁾에

192) 지급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수입 지출의 이동이 직전 회계연도로 잡히는 경우

193) PBGC: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 고용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P.L. 93-406)에 근거하여 1974년에 설립된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 민간 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 Plans)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을 수행함(단,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s)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94) FDIC 예산 연도별 실적 추이: (FY2022) -90억달러 → (FY2023) 920억달러

195)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3월호 재정동향」, 2023. 3. 참고

196) recovery rebates,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s 등과는 다른 세액공제임.

대한 특별 재정 지원 프로그램(Speci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¹⁹⁸)에 따른 일회성 지급 지원의 감소에 기인

- (주요 증가분야) 채무 순이자 지출을 포함한 주요 의무지출(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 모두 증가

- 교육부 예산은 전년(-410억달러)* 대비 3,080억달러 증가한 2,670억달러¹⁹⁹)
 - * 2022년에 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영향으로 2022회계연도에 3,790억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했으나,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²⁰⁰)로 동 정책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 3,330억달러의 지출 감축(outlay savings)²⁰¹) 발생으로 인해 전년도 수치가 마이너스(-)로 집계됨
- 사회보장지출은 수혜자 및 생계비(cost of living) 조정에 따른 평균지급금액(average benefit payment)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8.0%(1,070억달러) 증가
- 메디케어는 가입자 수 증가와 수혜 금액 상승으로 순액 기준 약 9%²⁰²) 증가, 메디케이드*는 인당 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6% 증가
 - * 메디케이드의 경우 코로나 대유행 대응 입법²⁰³)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대상 자격을 확대한 규정에 기인하여 2023회계연도에도 4% 증가율을 보였으나, 확대가 2024회계연도에 종료(2024. 3. 31.)²⁰⁴)되면서 1% 미만 증가율을 보임
- 채무 순이자지출은 9,500억달러로 2023회계연도에 특히(significantly) 높았던 고금리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

-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 8,340억달러 추정

- * timing shifts 조정할 경우,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조 8,340억 달러
-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수정예산안(MSR, 2024년 7월 발표) 전망 수치(1조

197) PBGC는 단일 고용주(single-employer) 연금 계획 및 다고용주(multi-employer) 연금 계획 등을 보장

198) 2021년에 입법된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의해 도입된 기존 연금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제도로, 해당 재정지원은 단일고용주 연금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일고용주 연금 계획은 다른 보호 장치(예: 자금 유연성을 위한 분할 상환 등)로 적용

199) 2023회계연도의 지출 감축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24회계연도 교육부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가 아닌 220억달러 감소로 전환됨.

200)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7월호 재정동향」, 2023. 8. 참고

201)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2023년 지출 감축분(3,330억달러)이 2022회계연도에 적자로 기록된 3,790억달러와 같지 않고 작은 이유는 2023년 6월에 최종 변경된 학자금 상환 정책(new Income-Driven Repayment plan)에 기인

202) timing shift 제외(exclude)한 경우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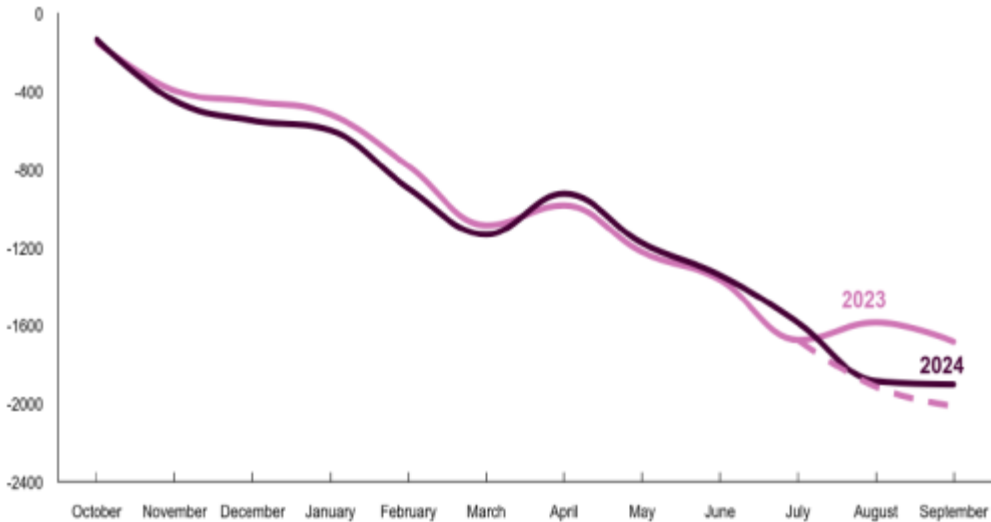
203)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

204) 2023회계연도 정규 세출예산법(P.L. 117-328; 2022년 12월 29일 입법 발효)에서 규정

8,740억달러) 대비 2.1% 감소

그림 3-I-1 미국 월별 재정적자 누적 추이

(단위: 십억달러)



주: 1. 월별 수치는 기간(주말 등) 일정으로 인한 수입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s) 조정(exclude)

2. 점선: 2023년 점선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의한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지출 감축 영향을 배제할 경우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4, 2024," 10. 8., p. 2.

라. 기타

■ 바이든 행정부, 의회에 재난 구호를 위한 추가 긴급 자금 지원 요청(2024. 11. 18.)²⁰⁵⁾

-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헬린(Helene) 및 밀턴(Milton)²⁰⁶⁾ 등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 관련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하원 의장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신

- 행정부의 주요 부처들은²⁰⁷⁾ 의회가 재난 구호를 위한 자금 지원 입법²⁰⁸⁾을 2022년

205) 백악관, "Letter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questing for Additional Funding for Disaster Reliefs." 2024. 11. 1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4/11/18/letter-to-the-speaker-of-the-house-of-representatives-requesting-for-additional-funding-for-disaster-relief/>, 검색일자: 2024. 11. 25.

206) 허리케인 헬린의 피해는 재산상 80억달러에서 140억달러 사이(Moody's RMS 기준) 및 인명상 232명 사망('24. 11. 9. 기준)으로 추정되며, 허리케인 밀턴의 경우 재산상 220억달러에서 360억달러 및 인명상 23명 사망('24. 10. 9. 기준)으로 추정

207) OMB, "Interested Parties Memo: Congress Must Move Swiftly to Pass Critical Disaster Relief," 2024. 11. 18.,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4/11/18/interested-parties-memo-con>

- 2월²⁰⁹⁾을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바가 없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자금 지원을 촉구
- (주요 내용 및 규모)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구호 기금 자금 보충에 40억달러, 중소기업청의 재난 대출 프로그램²¹⁰⁾ 자금 보충에 20억달러 지원 등을 포함한 총 986억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자금 편성
 - 2024년 연초 연방재난관리청은 자금이 고갈되었으나 2025회계연도²¹¹⁾ 예산으로서 2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할당받았고, 이에 더해 이번 서한에서 긴급 지원으로 4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을 요청한 상태
 - 중소기업청(SBA) 재난 대출 프로그램은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재해 대출 프로그램 신청 건의 처리가 1만건 이상 일시 중단되어 추가 자금으로 20억달러 조달 요청

표 3-I-11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한 자금 지원 주요 항목

(단위: 십억달러)

구분	규모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 구호 기금 자금 보충	40
농무부의 농작물 및 가축 손실 지원 등	24
주택도시개발부의 재해 복구 관련 커뮤니티 개발 일괄 보조금 지원	12
교통부의 피해 도로 및 교량 복구 지원	8
환경보호청의 재해 예방을 위한 수도 시스템 개선 등	4
보건복지부의 허리케인 관련 의료 지원 등	3
상무부의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 보조금 지원 등	2
중소기업청 재해 대출 프로그램 자금 보충	2
기타	4
총계	99

자료: 백악관, "Letter regarding critical disaster funding needs," 2024. 11. 18.을 바탕으로 작성

gress-must-move-swiftly-to-pass-critical-disaster-relief/. 검색일자: 2024. 11. 25.
 208) 재난 지원 자금 관련한 서신 발신 이전의 최신 입법 추진 시도로서, 2024년 11월 둘째주 톰 킬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의 중소기업청 재난 대출 프로그램 자금 보충 추진안이 존재
 209) 2023년 세출예산의 일부로 편성
 210) 연방재난관리청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과 재해 발생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사업 운용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가게와 사업체를 위해 운용되는 미국 중소기업청의 저리(low-interest) 대출 프로그램
 211) 회계연도 개시(2024년 10월 1일) 10일 여 만에 허리케인 복구로 90억달러 소진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2024 미국 대선

- ◇ 미국 공화민주 양당은 2024 전당대회를 통해 정강정책 확정
 - (공화당) 2024년 7월 확정
 - (민주당) 2024년 8월 확정
- ◇ 2024년 11월 5일에 진행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 승리를 거둠
 - 트럼프 후보는 대선 승리 후, 불법 이민자 추방, 정부 효율, 관세 등 재정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정책에 대해 거론
- ◇ 2024년 12월 17에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총 538표 중 312표를 얻어 공식 당선인으로 확정
 -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BRICS-관세, 투자, 예산안 및 채무 한도 등에 대한 정책 의견을 개진

■ 미국 공화당, 2024년 전당대회(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에서 정강정책 (Party Platform)²¹²⁾ 확정(2024. 7. 15.~18.)

- (개요) 미국 공화당은 2024년 7월 15~18일에 개최된 전당대회*를 통해 신규 정강정책을 확정하였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상식으로의 회귀’²¹³⁾라는 큰 주제 하에 총 10개(chapters)의 핵심 정책 발표

- * 본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으며, 민주당 전당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는 8월 19~22일 개최 예정
- ① (인플레이션 대응)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정부 지출 감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물가 안정성 확보/낭비적인 정부 지출을 줄이고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 ② (국경안보·이민자 단속 강화) 현대화 기술을 통한 국경 안보 모니터링 진행 및 불법

212)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2024 GOP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https://prod-static.gop.com/media/RNC2024-Platform.pdf?_gl=1*ckymtp*_gcl_au*NDgyNDY1MTg3LjE3MjE5NzE2NTY.&_ga=2.21798267.1738513435.1721971657-795883922.1721971657, 검색일자: 2024. 7. 26.

213) America First: A return to Common Sense

이민자 추방 등

- ③(경제재건) 트럼프 정부 때 발효되었던 일시적 세금 감면 정책 영구화, 상호 호혜적인 무역 정책 추진/오일·천연가스·석탄 산업 왜곡 종식 등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등
- ④(아메리칸 드림 재현) 모기지 금리 인하, 연방 토지의 일부를 개방하여 새로운 주택 건설 촉진,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지원 제공 등을 통한 적정 가격 주택 지원/일상 비용 절감, 저렴한 의료 및 처방약 제도 추진 등
- ⑤(미국노동자·무역보호) 연간 1조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무역 적자에 대응하여 외국산 제품에 기본 관세 부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응/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 필수 상품의 수입 단계적 축소/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관련 의무 정책을 철회하고, 중국산 차량 수입 방지 등
- ⑥(고령자(senior) 보호)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보장/불법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어 재정 보호 및 강화/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지원, 장기 요양 및 노인들에 대한 가정 요양(are at home) 지원 등
- ⑦(양질의 직업을 목표로 한 초·중·고 교육 육성) 홈스쿨링 지원, 교사 종신제 폐지 및 성과급 도입/학교 폭력 방지 강화 및 폭력적인 학생의 즉각적인 정학 지지/학교에서의 인종차별 방지 등
- ⑧(미국 문명 재건) 경찰서 보충 및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경찰관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회복/퇴역군인 보호 및 치료 지원/테러와 지하디즘(Jihadism)²¹⁴을 지지하는 외국인의 비자 취소 등 반유대주의 대처 등
- ⑨(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국민의 정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불법 검열 방지 및 종교의 자유 보호/늦은 시기의 낙태(late term abortion) 금지, 산모 및 산전(advance parental) 지원, 시험관아기 시술(IVF)²¹⁵ 지원/성전환 수술 예산 지원 금지/공정하고 무결한(integrity) 선거 보장 등
- ⑩(국력 증대를 통한 평화로의 복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 추진/군 현대화 및 동맹(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 등) 강화, 동맹국들의 공동 방위 투자 의무 강화/국경 장벽 마무리/미국 안보에 중요한 장비 및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 등

214) Jihadism: 이슬람원리주의 무장 투쟁 운동

215) IVF: In Vitro Fertilization

■ 미국 민주당, 2024년 전당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에서 정강정책(Party Platform) 확정(2024. 8. 19.~22.)²¹⁶⁾

○ (개요) 미국 민주당은 2024년 8월 19~22일에 개최된 전당대회*를 통해 신규 정강정책을 확정하였으며, ‘경제 성장’ 등을 중심으로 총 9개(chapters)의 핵심 정책 목표²¹⁷⁾ 발표

* 본 전당대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47대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으며, 이에 앞서 공화당 전당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는 지난 7월 15~18일에 개최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47대 대선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

- ①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 경제 성장) 미국에 대한 투자, 양질의 일자리 등
 - ㉠ 미국에 대한 투자(인프라 격차 해소, 제조업 지원)/㉡양질의 일자리(임금 및 기타 노동 및 고용 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벌 강화)/㉢농업 보호(식량 공급 및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미국 농지의 해외 소유 제한 강화, 농기계 수리 체계 개선)/㉣빈곤 퇴치(자녀 세액 공제(CTC)·근로장려세액공제(EITC) 확대, 연방 최저 임금 인상 등)/㉤특수 이익(제약회사 처방약 단속, 보험 회사 과도한 이윤 단속) 종식 등
- ② (노동에 대한 보상) 근로자 가정에 대한 세금 인하, 부유층과 대기업의 공정한 세금 부담 등
 - ㉠ 근로자 가정에 대한 세금 인하(연소득 40만달러 미만자는 추가 세금 계획 없음)/㉡ 부유층과 대기업의 공정한 세금 부담(고소득층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25% 신설 →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5,000억달러 수입 창출,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 폐지,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 폐지, 주식 환매 세율 1 → 4% 인상)
- ③ (비용절감) 의료 및 처방약 분야 개선, 주택 자금 지원 등
 - ㉠ 의료 및 처방약(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메디케이드 서류 제출 유효 기한 3년으로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확대,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의료 인력 양성 강화)/㉡ 보육(child care)·가정 돌봄(home care)·유급 휴가(양질의 저렴한 보육 보장 및 Head Start 프로그램 강화, 노령자·장애인 등 지원 프로그램(HCBS)²¹⁸⁾

216)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2024 Democratic Party Platform,” 2024. 8. 19.,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2024-democratic-party-platform>, 검색일자: 2024. 8. 26. (참고 링크: <https://democrats.org/where-we-stand/party-platform/>)

217) 아래에 제시된 핵심 정책 목표의 세부 사항은 일부 정책을 발췌한 내용임.

개선, 12주간의 유급 가족 돌봄휴가 보장)㉑ 주택(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주택 구입 계약금 지원, 대형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2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 5%로 제한, 저소득 임대주택 개발자들에게 세액 공제 확대)㉒ 사회보장, 연금, 메디케어 등(사회보장제도 민영화²¹⁹) 반대, 고소득층의 메디케어 정당한 지불 등)

- ㉔ (기후 위기 해결 등) 에너지 비용 절감,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등
 - ㉔ 에너지 비용 절감(대형 오일 회사 가격 폭리 대응, 깨끗하고 저렴·재생가능한 연료의 경쟁 촉진)㉕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소의 지역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및 제조업 일자리 개방 및 접근 가능성 개선)㉖ 오염 감축(연방 차량 및 대중교통 버스 전기화 작업 지속, 2030년까지 모든 신규 연방 건물에 저탄소 자재와 청정 전력 사용, 중공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투자 지원) 등
- ㉕ (지역사회 보호 등) 총기 안전, 치안 및 공공 안전 등
 - ㉕ 총기 안전(전국적인 위험신호법(red flag law)²²⁰) 통과 노력, 총기 신원 조회를 위한 FBI의 예산 증가)㉖ 치안 및 공공 안전 등(법 집행 및 범죄 예방 지원을 위해 370억달러 투자 등을 위해 안전한 미국 계획 법안²²¹) 계획)
- ㉖ (민주주의 강화·자유 보호 등) 특수 이익 영향 차단,²²² 장애인 지원 등
 - ㉖ 특수 이익 차단(선거에 영향을 주는 광고를 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1만달러 이상의 기부자 등을 공개해야 하는 Disclose 법안 통과 계획, 로비 관련 공개법 강화)㉗ 장애(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 추진, ACA²²³)를 기반으로 의료 차별 예방)㉘ 부족 국가(인디언 건강 서비스(IHS)²²⁴) 자금 지원 의무화)
- ㉗ (국경 보호 및 이민 시스템 개혁) 국경 보호 관련 인력 증대, 합법 이민 확대 등
 - ㉗ 국경 보호(국경 확보를 위한 추가 자원 및 불법 국경 횡단자에게 신속한 심사 결과 제공을 위한 인력 증대)㉘ 합법 이민 확대 및 불법 이민 억제(합법적 비자 경로 이용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 확대, 이민자, 장기 불법 체류자, 합법적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 식별 기회 점검)

218) HCBS: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219) 사회보장세의 일정 비율을 정부 관리 계좌 대신 개인 계좌로 전환

220) 위험이 예상되는 특정 개인으로부터 주(state)의 법원이 임시로 총기를 사전에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221) Safer America Plan

222) Stopping the Influence of Special Interests

223) ACA = Affordable Care Act

224) IHS: Indian Health Service

- ㉔ (대통령 통합 의제 추진) 마약성 진통제 극복, 정신 건강 투자 등
 - ㉔ 마약성 진통제(opioid) 극복(과다 복용 예방 투자 지속)/㉕ 정신 건강 투자(국가 자살 및 위기 핫라인 용량 확대 및 지원, 건강관리 전문가 모집 확대)/㉖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더 엄격한 제한을 두는 초당적 법안 통과 계획 등)
- ㉕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유럽 및 인도·태평양 등 지원, 글로벌 경제 강화 등
 - ㉔ 유럽(러시아의 위협 억제·우크라이나 협력 및 경제 회복 지원, 유럽 및 대서양 기관들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발전)/㉕ 인도·태평양(북한의 불법 미사일 등을 통한 도발 대응 및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연대 강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㉖ 글로벌 경제 강화(청정 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투자, 혁신과 글로벌 기술에 대한 공유 규칙 촉진, 글로벌 최저한세 확산) 등

■ 트럼프 당선인, 2024 미국 대선 승리 후 주요 정책 언급(2024. 11.)

- (개요) 지난 11월 5일에 진행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270명) 이상인 312명을 확보하면서 47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출
 - (경합주 승리) 트럼프 후보는 접전지역(battleground states)으로 불렸던 경합주 (swing states)* 7곳에서 모두 승리²²⁵⁾
 - * 노스캐롤라이나(NC)·네바다(NV)·미시간(MI)·애리조나(AZ)·위스콘신(WI)·조지아(GA)·펜실베이니아(PA)
 - (공식 당선 확정 일정) 선거 결과 발표 이후, 2024년 12월 17일에 선거인단이 모여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²²⁶⁾
 - (임기 개시) 최종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수정헌법에 의거하여 2025년 1월 20일 정오부터 공식 임기 시작
- (주요 언급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정부 효율, 관세 등 재정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정책에 대해 거론²²⁷⁾

225) *CNBC News*, "Decision 2024," 2024. 11.,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elections/president-results>, 검색일자: 2024. 11. 22.

22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4 미국 대선 후보 공약비용 분석(트럼프 해리스)」, 2024. 10.,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Paper/kiPublish/CA1/Center/view.do?serialNo=527326>, 검색일자: 2024. 11. 22.

- (불법 이민자 추방) 집권 2기 최우선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검토 언급
 -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연설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이민자 추방(largest mass deportation)을 지속 언급하였으며, 공화당의 정강정책에서도 불법 이민자 추방을 언급
 -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국경 강화 및 미승인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조달러(중위값 기준은 3,500억달러) 비용 소요가 전망된 바 있음
- (정부 효율)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government efficiency)* 구상의 일환으로 ‘낭비성 지출 감축, 과도한(excessive) 규제 축소, 관료주의 해체(dismantle) 및 정부 기관 구조조정’ 등을 거론
 - *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 업무(228)를 관장하는 공동 수장으로 다수(229)의 기술 기업 CEO인 일론 머스크와 기업인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230) 내정(231)
 -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 업무는 부처 신설이 아닌 자문 역할(advisory capacity)이 될 것으로 언급(232)하였으며,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는 연방예산에서 2조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발언(233)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재
 -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낭비(waste), 사기(fraud), 남용(Abuse) 감축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최대 2,500억달러(중위값 기준은 1천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
- (관세)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 중국을 대상으로는

227) 본문에 언급되는 공약 비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4 미국 대선 후보 공약비용 분석(트럼프_해리스)」, 2024. 10.,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Paper/kiPublish/CA1/Center/view.do?serialNo=527326>, 검색일자: 2024. 11. 22.을 참고

228)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어인 DOGE라는 명칭으로 불림

229) Tesla, X(구 Twitter), Space X 등

230) 비벡 라마스와미(Vivek Ganapathy Ramaswamy)는 2024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후 트럼프를 지지

231) *USA Today*, "Trump taps Elon Musk, Vivek Ramaswamy to lead new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2024. 11. 12.,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elections/2024/11/12/trump-hires-elon-musk/76199958007/>, 검색일자: 2024. 11. 15.

232)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캠프는 낭비를 식별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

233) 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머스크의 이 발언에 대해 초당적 재정기구의 수장인 맥기니아는 현 정부에서 요청한 2025회계연도 예산안 규모가 7조달러 수준이기에 10년 동안 절감되는 수치가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피력함(*National Public Radio*, "President-elect Trump promises a massive overhaul of the federal government," 2024. 11. 19., <https://www.npr.org/2024/11/19/nx-s1-5195379/president-elect-trump-promises-a-massive-overhaul-of-the-federal-government>, 검색일자: 2024. 11. 22.)

추과 관세*에 더해 10%의 과세를 더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언급²³⁴⁾

- *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적용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²³⁵⁾
- 해당 관세 부과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Fentanyl)의 유입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하면서, 해당 물질이 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과 관련됨

■ 트럼프 당선인, 2024 미국 대선 공식 당선인으로 확정(2024. 12. 17)²³⁶⁾

- (배경)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7일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312표(총 538표)를 얻어 승리하면서 공식 당선인으로 확정
- *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보다 86표 낮은 226표로 집계
- (최근 주요 언급 정책) BRICS-관세, 투자, 예산안 및 채무 한도 등에 대해 거론
 - (BRICS 비판) 트럼프 당선인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의 경제 연합체인 브릭스(BRICS)가 국제교역에서 달러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²³⁷⁾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란 수출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²³⁸⁾²³⁹⁾
 - (투자 유치)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는 모든 환경 규제에

234)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 및 중국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원문 표현: "I will sign all necessary documents to charge Mexico and Canada a 25% Tariff on ALL product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and its ridiculous Open Borders."/"we will be charging China an additional 10% Tariff, above any additional Tariffs, on all of their many product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료: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546215051155542>;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546215408213585>)

23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4 미국 대선 후보 공약비용 분석(트럼프_해리스)」, 2024. 10.,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Paper/kiPublish/CA1/Center/view.do?serialNo=527326>, 검색일자: 2024. 11. 26.

236) CBS News, "The Electoral College votes to confirm results for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today. Here's what to know," 2024. 12. 17., <https://www.cbsnews.com/news/electoral-college-vote-results-2024/>, 검색일자: 2024. 12. 19.

237) 현재 브릭스는 역내 통화(BRICS Currency) 활용을 늘리는 식으로 달러화 사용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브릭스 국가 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38) Reuters, "Trump warns BRICS nations against replacing US dollar," 2024. 12. 1., <https://www.reuters.com/world/trump-warns-brics-nations-against-replacing-us-dollar-2024-11-30/>, 검색일자: 2024. 12. 13.

239) BBC, "Trump threatens 100% tariff on Brics nations if they try to replace dollar," 2024. 12. 2., <https://www.bbc.com/news/articles/cgrwj0p2dd9o>, 검색일자: 2024. 12. 16.

- 한해 신속 인허가(full expedited approvals and permits) 조치 계획 (2024. 12. 11.)²⁴⁰⁾ - 구체적 설명은 부재
- (채무 한도 증액) 2025년에 만료 예정인 채무 한도 유예 시점을 고려하여 신정부 출범 전에 채무 한도 증액 필요성 언급²⁴¹⁾
 - (FY2025 임시 세출예산) 민주당에서 원하는 예산 항목을 제외한 순수한(clean) 임시 세출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며, 채무 한도와 결합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을 언급²⁴²⁾

나. 재정 정책

1) 국가 채무

- 의회 하원 초당적 재정포럼(Bipartisan Fiscal Forum, BFF)*, 하원 의장에게 미국 국가 채무 우려 서신 전송(2024. 7. 22.)²⁴³⁾

- * BFF는 2023년 7월 13일에 출범한 하원 소속의 조직으로 구성은 하원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 1명씩 공동 의장²⁴⁴⁾을 맡고, 나머지 8명(공화당 4명, 민주당 4명)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개요) 현재 포럼을 이끌고 있는 공동의장인 스콧 피터스·빌 후이젠가를 중심으로 양당의 협력하에 현 재정상태(fiscal trajectory) 개선 필요성을 서한²⁴⁵⁾에서 언급
- (서한 주요 내용) 채무 증가로 인한 이자 지급, 주요 정책 지급 불능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채무 감축을 목표로 회복력과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
 - (채무 증가와 이자 지급) 재정책임법(FRA)²⁴⁶⁾으로 인해 채무 증가의 속도가 줄어들긴 하였으나, 재정상태는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며, 채무 속도가 경제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24년)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초과할 것임을 언급
 - (주요 정책 지급 불능)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기금이 지급 불능 상황으로 향하고 있음

240) Truthsocial,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630131209113398>, 2024. 12. 11.

241) Truthsocial,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676124870048584>, 2024. 12. 19.

242) Truthsocial,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676468224007678>, 2024. 12. 19.

243) CRFB, "Bipartisan Fiscal Forum Leaders Letter Calls to Address Debt," 2024. 7. 22., <https://www.crfb.org/blogs/bipartisan-fiscal-forum-leaders-letter-calls-address-debt>, 검색일자: 2024. 7. 24.

244) Scott Peters(민주당 의원), Bill Huizenga(공화당 의원)

245) 총 20명의 의원이 서한에 서명함.

246) FRA: Fiscal Responsibility Act

■ 미국 의회 하원 초당적 재정포럼(BFF),²⁴⁷⁾ 급증하는 연방 채무 문제의 해결 촉구 연설 (2024. 9. 24.)²⁴⁸⁾

- (개요) 2024년 9월 24일에 개최된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초당적 재정포럼 소속 의원들이 연방 채무 및 재정적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당적(Bipartisan) 대응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 명령 연설(Special Order Speeches)²⁴⁹⁾에 참가
- (현황) 2023년 재정적자는 약 1조 7천억달러이며, 2024년 국가 채무(Gross Federal Debt)는 약 35조달러, 2024년 이자 비용은 약 8,700억달러에 상응할 것으로 추정됨
 - (연방 채무 및 재정적자) 2024년의 GDP 대비 채무 비율 추정치(7.0%)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3년의 재정적자 규모(6.2%)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²⁵⁰⁾로 높은 수준에 이름
 - (이자 비용) 2024회계연도 간 이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메디케어 및 국방 지출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방 정부는 매년 1조 달러를 초과하여 이자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
- (주요 내용)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 재정 절차의 개혁도 권고
 - (긴급 지출) 재량 지출 한도(caps on discretionary spending)²⁵¹⁾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 재량 지출을 긴급 지출로 분류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밝히고 의회예산처(CBO)의 예산 전망 시 긴급 지출의 비용 반영 방법을 지적
 - 긴급 지출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소재 골프장 관개수로 재배치 비용 660만달러, 뉴욕주 마이너리그 야구경기장 재건축 비용 1,200만달러, 푸에르토리고 관광 마케팅 활성화 자금 7,000만달러를 언급
 - 긴급 지출을 의회예산처(CBO)의 예산 분석에서 제외하여 예산 중립성을 확보해야

247) Bipartisan Fiscal Forum, 2023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 기초하에 결성되었으며, 연설 당시 87명의 하원 위원이 소속되어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됨.

248) 미국 의회 하원, "Unsustainable Crippling Federal Deficit And Debt," *Congressional Record*, Vol. 170. No. 149, 2024, 2024. 9. 24. <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cord/volume-170/issue-149/house-section/article/H5736-2>, 검색일자: 2024. 10. 17.

249) 특별 명령 연설은 의정활동이 종료된 후 회의의 마지막에 진행되는 자유 연설로, 하원에서 비입법적 토론이 허락되는 드문 기회 중 하나임.

250) 미국 역사상 적자 최대 규모 상위 1~2위는 2020년과 2021년으로 코로나 시기에 발생한 적자에 해당

251) 2023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23)에 의거하여 재량지출에 설정된 지출 한도로, 규정된 상한을 초과하는 지출만큼 강제삭감(Sequestration)이 이루어짐.

함을 강조

- * 의회예산처의 예산 전망은 관련 법²⁵²⁾에 의거 일회성 지출인 긴급 지출을 최초 지출 이후 10년 동안 발생 가정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활용하므로, 예산 전망 기준선(Base-line)의 과다 추계 우려가 연설에서 제기됨
- (절차 개선) 지출과 수입을 포괄하는 예산 법안의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예산 결의안 및 예산안 통과 절차의 효율화 제안
 - 현재 의회의 의결(투표)하에 통과되는 예산(재량 지출)은 전체 재정 지출의 23%에 불과함을 강조하며, 모든 지출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확대 제안
 - 2003년 이후 의회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한 바 없음을 강조하며 예산 절차의 효율화 제안
- * 예산 결의안과 예산안을 모두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킨 최근 해는 1977년임
 - (예산 중립성 확보) 세입 감소나 지출 확대를 유발하는 정책 추진 시 세입 증대 혹은 지출 감소에 기여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적 악영향을 상쇄하는 페이고(PAY-GO) 절차의 중요성을 회부

2) 부적절 지급

- 감사원(GAO), 부적절 지급 및 부정행위(Improper Payments and Fraud) 개선에 대한 의회 하원에서의 증언(testimony) 보고서 발표(2024. 9. 10.)²⁵³⁾
 - (배경) 본 보고서²⁵⁴⁾는 2002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부적절 지급에 관한 정보법(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²⁵⁵⁾에 근거하여 매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회에서 감사원장 또는 관련 대표자가 관련 내용을 증언해야 함
 -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감사원이 의회 하원 상임위원회(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에서의 증언을 위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로, 주요 부적절 지급 규모 · 유형 · 분야 및 의회에 대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252)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253) GAO, "Payment Integrity: Significant Improvements Are Needed to Address Improper Payments and Fraud," 2024. 9. 10., <https://www.gao.gov/products/gao-24-107660>, 검색일자: 2024. 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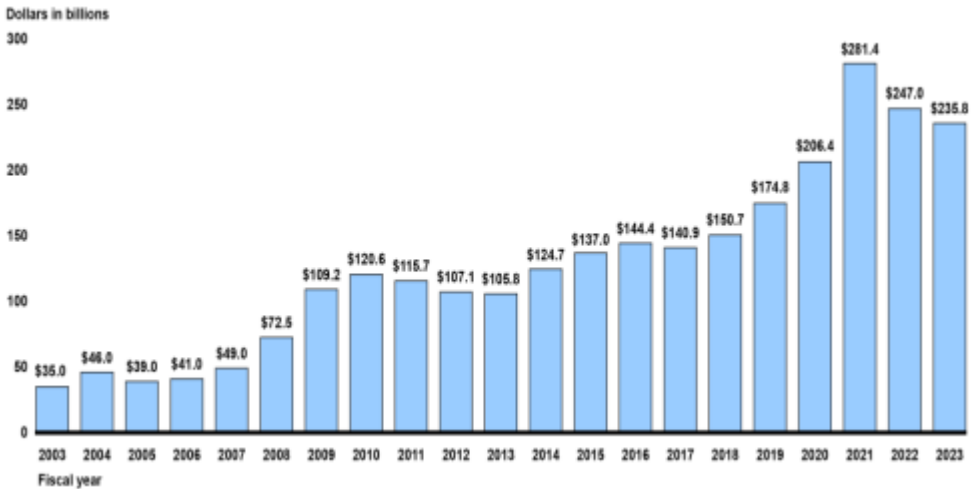
254) FY2023 보고서는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에서 정한 기한(매년 3. 31.) 전인 2024년 3월 26일에 발표(<https://www.gao.gov/products/gao-24-106927>)됨.

255) P.L. 107-300

- (부적절 지급 총 규모) 2003회계연도 이래 2023회계연도까지 행정부로부터 보고된 부적절 지급 누적 규모는 약 2.7조달러에 달함
 - 2023회계연도에만 발생한 부적절 지급 규모가 2,360억달러로 추정되며, 2003 회계연도 대비 약 7배 이상 증가

그림 3-I-2 FY2003~FY2023 행정부 부적절 지급 추정 규모

(단위: 십억달러)



자료: GAO, “Payment Integrity: Significant Improvements Are Needed to Address Improper Payments and Fraud,” 2024. 9. 23.

- (부적절 지급 주요 분야 및 유형) 전체 부적절 지급 규모 중 6개 프로그램이 85%(약 2,000억달러)를 차지하며, 유형으로는 초과 지급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부적절 지급 주요 분야별 규모) ①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어(510억달러) ②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이드(500억달러) ③ 노동부의 실업보험(480억달러) ④ 중소기업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²⁵⁶⁾ (230억달러) ⑤ 재무부의 근로장려세제(EITC)(220억달러) ⑥ 사회보장국의 보충적 보장 소득(SSI)²⁵⁷⁾(50억달러)
 - (부적절 지급 유형) 초과 지급(74%), 불명확(unknown)²⁵⁸⁾(19%), 과소 지급(5%), 기술적 결함 지급²⁵⁹⁾(2%) 등으로 구성

256)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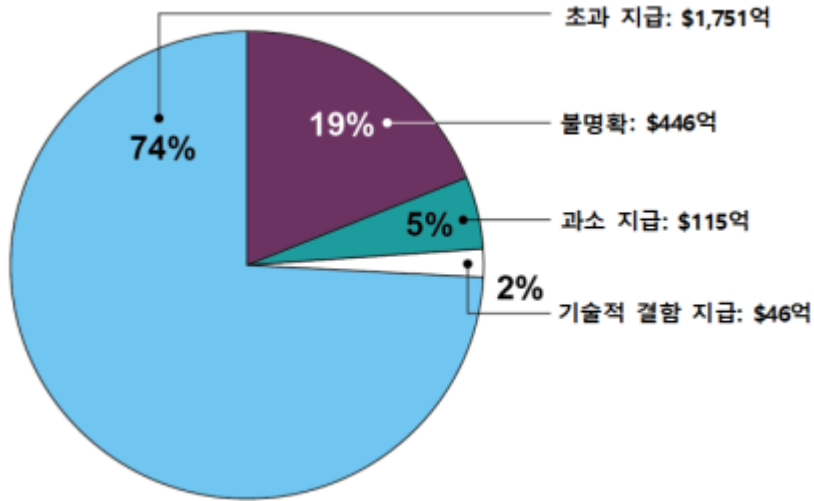
257)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258) “unknown” 개념 원문 표현: “Unknown payments” are those that a program cannot determine were either proper or improper

259) technically improper payments: 자격 대상이 아닌 자가 수혜를 얻었거나, 법적 절차 및 규칙 등을 어긴 지급 등을

그림 3-I-3 FY2023 연방기관의 부적절 지급의 유형별 구분 및 규모

(단위: 달러, %)



자료: GAO, "Payment Integrity: Significant Improvements Are Needed to Address Improper Payments and Fraud," 2024. 9. 10.

- (GAO 권고 사항) 감사원은 정부의 지급 완결성(integrity)을 위해 의회에 세 가지 권고 제안
 - ① 영구적인 분석 기관을 설립하여 부적절 지급과 부정행위를 식별할 감독기관 지원(2025년에 만료 예정인 팬데믹 데이터 분석 센터(Pandemic Analytics Center of Excellence, PACE)를 기반으로 확장하는 방안 강구)
 - ② 부적절 지급 감소법(PIIA)²⁶⁰을 개정하여 각 연방 기관이 연례재무 보고서에 사기 방지 및 부정행위 위험 관리 노력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 복원
 - ③ OMB는 각 연방기관이 미래의 비상 상황 또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계획을 사전에 개발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및 해당 계획을 OMB와 의회에 보고

의미

260) PIIA: 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Act

3) 기타

■ 의회예산처(CBO), 이민 급증의 예산 및 경제 영향 보고서 발표(2024. 7. 23.)²⁶¹⁾

- (개요) 2021~2026년간²⁶²⁾ 이민자 수의 급증이 분석 기간(2024~2034년) 내 연방 예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해당 기간 이민자²⁶³⁾ 및 이민자의 미국 출생 자녀²⁶⁴⁾가 유발하는 세입, 의무 지출, 순이자 지출 변동에 대한 단계적 누적(incremental) 효과 추정
 - 최근 이민자 수의 급증은 기타 외국인 출신 집단²⁶⁵⁾의 유입 증가에 기인하며, 2021~2026년 해당 집단의 순 이민자 수는 약 870만명 이상으로 추정
 - 기존 가정(2020년 이전 추세)을 따른 추정 시 기타 외국인 출신 그룹의 순 이민자 수 전망치는 연평균 약 20만명에 불과하나, 본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집단의 순 이민자 수는 2021~2026년간 연평균 약 170만명으로 추산됨
- (주요 내용)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이민자 수의 급증은 2024~2034년 동안 약 0.9조 달러의 연방 예산 적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수입) 2021~2026년 이민자의 급증은 분석 기간 내 약 1조 2천억달러의 연방 세수 증대 유발
 - 세수 증가 추정분은 대부분 급여²⁶⁶⁾에 직접 부여되는 세금(개인 소득세(income tax) 및 사회보험 급여세(payroll tax))의 형태로 약 7,880억달러 창출되며, 그 외 경제활동 촉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약 3,870억달러의 세수 증가가 유발됨
 - (지출) 급증 이민자 인구에 의해 유발된 분석 기간 내 의무 지출 및 이자 순지출 증가분은 약 0.3조 달러로 추산

261) 의회예산처, "Effects of the Immigration Surge on the Federal Budget and the Economy," 2024. 7. 23., <https://www.cbo.gov/publication/60569>, 검색일자:2024. 7. 29.

262) 이민자 수의 급증은 실현된 수치로 확인 가능한 2021~2023년 기간과 더불어 순 이민자 수 추정치가 장기 전망치(연간 20만명)를 상회하는 2024~2026년 기간 또한 발생할 것으로 추정

263) 사회보장 영역 인구 추계(해외 거주 미국 국적자 등도 포괄)상 적법 영주권 보유 집단 및 기타 외국인 출신 집단에 해당할 시 본 보고서에서 이민자로 분류, 이민 및 국적법(INA)상 비이민으로 분류되는 임시 근로자, 교환 학생 등과 그의 가족은 미포괄

264) 2021년부터 2034년까지 급증 이민자 인구의 자녀로서 약 200만명이 태어날 것으로 추정

265) 기타 외국인 출신(other-foreign-national) 집단은 미국 국민, 적법 영주권 보유 집단, 이민 및 국적법상 비이민 분류 집단 외에 모든 대상을 포괄하며, 불법체류자, 망명자 및 적법 영주권 대상이 아니나 체류가 허가된 자 등이 존재

266) 의회예산처 자체 추정 결과, 급증 이민자 인구의 약 절반이 취업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주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번호 도용 등을 통한 구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 (의무 지출) 이민자와 이민자의 미국 출생 자녀가 받는 복지²⁶⁷⁾에 수반되는 의무 지출 증가분은 분석 기간 약 1,770억달러로 추정
 - (순이자 지출) 이민자의 급증으로 유발된 경제 변화에 따른 순이자 지출 증가분은 동 기간 약 1,010억달러로 추정되며, 상당수가 연방 부채의 이자 지출에 기인
 -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의회에 의해 매년 제정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구증가에 비례한 재량지출 예산 증가를 가정 시 동 기간 약 0.2조 달러 증가 전망
- (경제 효과) 이민자 급증은 2034년 명목 GDP의 약 3.2% 증가를 유발하며, 2024~2034년 동안 명목 GDP의 약 8조 9,000달러 증가 유발

표 3-I-12 이민 인구 급증의 예산 효과 추정 결과

(단위: 십억달러)

항목	2024~2034년 기간 내 증감분
수입 증가분	1,175
이민 인구의 납부 세금	788
이민 인구가 유발한 경제 변화에 기인한 세수 증가	387
지출 증가분(의무 지출 및 순이자 지출)	278
이민 인구 및 가족의 사회보장 혜택 관련 의무 지출	177
이민 인구가 유발한 경제 변화에 기인한 세출 증가	101
재정적자 감소분	897

주: 재량지출 예산효과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 추정의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누락
 자료: 의회예산처, "Effects of the Immigration Surge on the Federal Budget and the Economy," 2024. 7. 23. <Table 1>, p. 2.

■ 의회예산처(CBO), 2025 연방 신용 프로그램(Federal Credit Programs) 비용 추정 보고서 발표(2024. 8. 30.)²⁶⁹⁾

- (프로그램 구분) 2025회계연도의 연방 신용(대출 및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총

267) 사회보장 혜택의 적격성을 예측한 결과, 2021~2026년 급증 이민자 인구의 약 35%는 이민 시작부터 복지혜택 자격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석방 등을 통하여 2034년까지 급증 이민자 인구의 약 60%가 사회보장 혜택 수혜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됨.

268) 건강보험 세액공제, 환급형 세액공제, 메디케이드, 아동 대상 영양프로그램 등이 해당

269) CBO, "Estimates of the Cost of Federal Credit Programs in 2025," 2024. 8. 30., <https://www.cbo.gov/publication/60517>, 검색일자: 2024. 9. 10.

129개*로 세분화될 전망이며, 이 중 CBO에서 분석 편의를 위해 크게 4개 (① 주택·부동산 대출 ② 상업 대출 ③ 학자금 대출 ④ 소비자 대출) 프로그램으로 구분

* 129개 프로그램 중 107개 프로그램은 세출예산을 통해 재원이 배정되는 재량지출 프로그램이며, 나머지 22개 프로그램은 의무지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총 신용 규모) 2025 회계연도에 신규 이행될 대출 및 대출보증 총 규모는 약 1.9조달러로 추정

- 2025회계연도의 신규 대출 관련 총 규모(약 1.9조달러)에서 직접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2,280억달러), 대출보증은 87.8%(1.6조달러)

- 분야별 기준으로는 주택·부동산* 신용 분야의 신용 규모가 약 1.5조달러로 가장 큰 비중(82.5%)을 차지

* 공공부문인 Fannie Mae and Freddie Mac의 수치를 제외할 경우 조정된 총 신용 규모(8,820억달러)²⁷⁰에서 주택·부동산 신용 규모(5,550억달러)²⁷¹가 차지하는 비중은 62.9%로 감소²⁷²

○ (생애 비용) 2024 회계연도의 신규 대출 및 대출보증을 생애비용(lifetime costs)은 연방여신개혁법(FCRA)²⁷³ 기준으로는 24억달러,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652억달러 발생

* 공정가치의 경우 시장위험(market risk: 생산성 및 고용 등 거시경제 상황 반영 등)이 반영된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FCRA에 따른 비용보다 높은 비용으로 나타남

- 공정가치로 측정한 신용 예산 보조율(subsidy rate)²⁷⁴은 연방여신(FCRA) 기준 수치 대비 평균 3.4%p(628억달러) 높게 나타남²⁷⁵

270) 조정 후 총 신용 규모(8,820억달러) = 조정 전 총 신용 규모(Fannie Mae and Freddie Mac 포함)(1조 8,690억달러) - 9,870억달러(GSEs: Fannie Mae and Freddie Mac)

271) 조정 후 총 주택·부동산 대출 규모(5,550억달러) = 1조 5,420억달러(조정 전 주택·부동산 대출) - 9,870억달러(Fannie Mae and Freddie Mac)

272) 미 행정부는 총 신용 추정 규모 중 Fannie Mae and Freddie Mac 소관의 신용 프로그램(9,870달러)은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정부 소관(governmental commitments)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조정(제외)할 경우 조종 후 총 연방 신용 규모는 8,820억달러로 집계되며, 이에 따른 연방 신용 규모에서 주택·부동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8.25% → 62.9%로 하향 조정됨. 다만 CBO는 이 분야를 정부행위로 간주

273) Federal Credit Reform Act of 1990(FCRA)는 1990년에 도입된 연방여신개혁법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연방예산상의 신용 측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274) $subsidy\ rate = \frac{cost}{amount\ disbursed}$ ⇒ subsidy rate이 양수(+)일 경우는 적자(비용), 음수(-)일 경우는 흑

자(savings)를 뜻하며, 투입 예산 대비 실제 투입 비중(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의미

275) 가중 평균으로 계산 → FCRA 평균 보조율은 0.1%, 공정가치 평균 보조율은 3.5%로 집계

표 3-I-13 FY2025 연방 신용 프로그램 비용 추정

(단위: 십억달러)

구분	프로그램 수		규모		생애 비용			
	2024	2025	2024	2025	FCRA 방법		공정가치 방법	
회계연도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종류별 구분								
주택·부동산 대출	41	40	1,233	1,542	-13.7	-21.4	26.2	10.6
상업 대출	83	82	231	237	5.3	7.5	25.1	32.5
학자금 대출	5	5	89	90	19.3	16.3	25.4	22.1
소비자 대출 ¹⁾	2	2	*	*	*	*	*	*
총계	131	129	1,553	1,869	10.9	2.4	76.7	65.2
부처 및 기관별 구분								
Fannie Mae and Freddie Mac	1	1	804	987	-13.4	-15.7	8.3	0.1
주택도시개발	22	21	247	331	-2.2	-8.1	11.4	3.1
재향군인	5	5	146	190	1.7	2.3	4.3	5.6
교육부	6	6	90	90	19.4	16.3	25.5	22.2
농무부	48	45	74	68	2.4	1.4	5.5	4.4
중소기업청	7	8	59	60	0.2	0.3	6.1	6.4
에너지	6	7	44	57	*	5.3	3.2	13.5
국제지원	14	15	46	56	2.8	0.7	7.7	7.0
수출입은행	5	5	12	11	-0.6	-0.4	-0.2	0.2
교통	3	3	5	6	0.1	0.1	0.7	0.9
기타	14	13	26	13	0.6	0.3	4.1	1.9
모든 부처/기관 총계	131	129	1,553	1,869	10.9	2.4	76.7	65.2

주: 1. *는 0~5천만달러

1) 재향군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대출(VA's vocational rehabilitation loans) 및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시민이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국 송환이 가능하도록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본국 송환 대출(repatriation loans)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 CBO, "Estimates of the Cost of Federal Credit Programs in 2024," 2023. 9. 12., <Table 1>, p. 5; "Estimates of the Cost of Federal Credit Programs in 2025," 2024. 8. 30., <Table 1>, p. 5.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2034 기간 적자감축을 위한 정책 대안(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5 to 2034) 보고서 발표(2024. 12. 12.)²⁷⁶⁾

- * 정책 대안 분석은 적자감축을 목적으로 조세 및 재정지출 관련 정책 대안²⁷⁷⁾을 논하는 보고서로, 의회 예산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입안 지원의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발간됨
- 전망 기간(2025~2034) 적자감축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종합하여, 총 76개의 정책 대안에 대해 정책별 주요 특이사항을 제시하고 기여 가능한 감축 수준을 추정
 - 정책 대안으로 ① 의무지출 대안 27개, ② 재량지출 대안 17개, ③ 조세수입 대안 32개로 구분하여 제시
 - 유형별로 적자감축 규모가 큰 상위 3개의 대안을 <표 II-I-1>로 정리

표 3-I-14 항목별 재정수지 개선 효과 상위 3개 대안

(단위: 십억달러)

유형	구분	최대 감축 규모
의무 지출	메디케어 어드벤처 플랜의 건강 수준(health risk) 비례 수가 관련 개정	1,049
	메디케이드 관련 연방 지출 상한 설정	893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주(states) 세금 면책(hold-harmless) 제한	612
재량 지출	국방부 연간 예산 감축 추진	959
	비국방 예산 중 선별하여 일부 감축(교통 및 교육 분야)	339
	외교부 예산 25% 삭감	187
조세 수입	세금 공제 관련 공제 범위를 제한 혹은 폐지	3,424
	연방 단위의 소비 부가세 5% 부과	3,380
	일반 재정수입 귀속 급여세 신규 부과	2,540

주: 예상 감축 효과의 최댓값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큰 3개의 정책 대안을 선별하여 정리
 자료: 의회예산처,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5 to 2034," 2024. 12. 12., <Table1-1>을 바탕으로 작성

276) CBO,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5 to 2034," 2024. 12. 12.,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12/60557-budget-options.pdf>, 검색일자: 2024. 12. 16.

277) 제시된 대안은 의회 실무진, 정부부처 및 기관, 민간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제시된 사안이며 의회 예산처의 자체적인 정책 권고가 아님.

나. 경제동향

1) 통화정책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2024. 7. 31.)²⁷⁸⁾
 -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의 기존 수준(5.25~5.50%)을 유지를 결정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다음과 같이 현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주안점을 언급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계속하여 확장됨
 - 지구 변화 없음
 - (물가) 물가상승세는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
 - (6월 표현) “물가 상승률은 높은 상태를 유지” → (7월 표현) “다소(somewhat) 높은 상태를 유지”
 - (6월 표현) “물가 2% 목표를 향한 약간(some)의 추가 진전이 있었음” → (7월 표현) “완만한(modest)정도로 추가 진전이 있었음”
 - (노동시장) 고용증가세는 완화되었으며, 실업률은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를 유지
 - (6월 표현) “고용증가세는 여전히 강세를 보임” → (7월 표현) “완화됨(moderated)”
 - (6월 표현)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 → (7월 표현)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를 유지”
 - (리스크 관리)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및 물가안정의 양대 책무에 대하여 양측 리스크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6월 표현) “인플레이션 위험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7월 표현) “양대 책무의 양측 리스크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278)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4. 7. 3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40731a1.pdf>, 검색일자: 2024. 8. 8.

표 3-I-15 미국 2024년 2분기 주요 경제 지표 I - 물가, 노동시장

(단위: %, 천명)

구분		2024년 4월	2024년 5월	2024년 6월
물가 ¹⁾	PCE 물가상승률 ³⁾	2.7	2.6	2.5
	재화	0.1	-0.1	-0.2
	서비스	4.0	4.0	3.9
	PCE 물가 상승률, 식품 및 에너지 제외	2.5	2.3	2.4
노동 시장 ²⁾	생산가능인구	268,066	268,248	268,438
	경제활동인구	167,982	167,732	168,009
	경제활동참가율	62.7	62.5	62.6
	취업자 수	161,491	161,083	161,199
	인구 대비 취업률	60.2	60.1	60.1
	실업자 수	6,492	6,649	6,811
	실업률	3.9	4.0	4.1

주: 1) 해당 지표의 6월 수치는 잠정치(preliminary)임

2) 해당 지표는 계절 조정된 수치임

3)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1.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June 2024," <Table 7>, 2024. 7. 26.,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07/pi0624.pdf>, 검색일자: 2024. 8. 8.2.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1>, 2024. 8. 2., 링크: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08022024.htm, 검색일자: 2024. 8. 8.

표 3-I-16 미국 2024년 2분기 주요 경제 지표 II -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¹⁾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Q1	Q2	Q3	Q4	Q1	Q2 ²⁾
실질 GDP 성장률	1.9	2.5	2.2	2.1	4.9	3.4	1.4	2.8
명목 GDP 성장률	9.1	6.3	6.3	3.8	8.3	5.1	4.5	5.2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의미

2) 해당 수치는 속보치를 사용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and Year 2024 (Advance Estimate)," <Table 1>, 2024. 7. 25.,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07/gdp2q24-adv.pdf>, 검색일자: 2024. 8. 8.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²⁷⁹⁾ 물가 및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평가
 - (금리 인하) 물가 상승폭이 빠른 하락세로 전환 혹은 예상과 부합하여 움직이고, 강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동시장이 현상 유지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물가) 근원 PCE 지표에서 진전을 얻는 등 최근 수치들로 물가 안정 확신 증가
 - (노동시장) 과열되었던 노동시장이 지난 2년에 걸쳐 정상화되었다고 평가하며 현 노동시장의 여건이 물가 상승의 압력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음
- 회의 이후 시차를 두고 공개된 7월 FOMC 회의 의사록(Minutes)²⁸⁰⁾에서는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하방 위험 및 과대평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대두됨
 - (하방위험) 회의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노동시장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언급함과 더불어, 일부 참가자들은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과열 완화가 심각한 악화로 번질 위험에 대해 경고
 - (과대평가) 많은 회의 참가자들은 비농업 취업자 수가 과대평가되었을 것이라고 지적

■ 미국 재무부, 2024년 3분기 분기자금조달계획(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 발표(2024. 7. 31.)²⁸¹⁾²⁸²⁾

- * 미국 재무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분기자금조달계획(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 QRA)은 연방정부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할 향후 두 분기의 국제 물량을 확정치(다음 분기)와 예상치(다음 이후 분기)로 나누어 발표
- (배경) 재무부의 재정증권 발행량의 적절성에 대한 미국 내부 논의가 지속

279)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4. 7. 31.,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0731.pdf>, 검색일자: 2024. 8. 8.

280) 미국 연방준비제도,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4. 8. 2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minutes20240731.pdf>, 검색일자: 2024. 8. 23.

281) 미국 재무부, "Treasury Announces Marketable Borrowing Estimates," 2024. 7. 29.,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506>, 검색일자: 2024. 8. 27.

282) 미국 재무부, "Treasury Presentation to TBAC (Final): 2024 - 3rd Quarter," 2024. 7. 31.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21/TreasuryPresentationToTBACQ32024.pdf>, 검색일자: 2024. 8. 27.

-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소위원회²⁸³ 주재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위원들²⁸⁴이 대선 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재무부의 재정증권(T-bills, 단기 국채) 발행량 증대를 주장²⁸⁵)
- 재무부는 2024년 3분기 분기자금조달계획 검토와 함께 국채 차입 자문 위원회 (TBAC)²⁸⁶에 재정증권 발행량 최적 수준에 대한 위원회의 과거 권고를 재검토 요청²⁸⁷)
- (개요) 미국 재무부는 2024년 3분기²⁸⁸ 분기자금조달계획을 통해 3분기 동안 시장성 국채 발행으로 7,400억달러를 조달하며, 해당 금액 중 중장기 국채로 5,590억달러, 재정증권으로 1,810억달러를 발행할 것임을 발표
- (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 축소 둔화(SOMA²⁸⁹) 상환 감소) 및 재무부 현금 잔고 증가에 기인하여 3분기 시장성 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하향 조정하였으며, 해당 조정은 재정증권의 발행량 감소를 통해 시행될 계획
 - 시장성 국채 순발행량(Net Marketable Borrowing)은 기존 자금조달계획 대비 1,070억달러 감소(8,470억→7,400억달러)
 - 2024년 3분기의 재정증권 순발행량(Implied Change in Bills)은 기존 자금조달 계획상 2,900억달러였으나, 이 번 확정안에서 1,810억달러로 하향 조정하여 총 1,090억달러 감소

283)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금융서비스 및 일반정부(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소위원회

284) John Kennedy and Bill Hagerty

285)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금융서비스 및 일반정부 소위원회,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hearing/s/a-review-of-the-presidents-fiscal-year-2025-budget-request-for-the-us-department-of-treasury>, 검색일자: 2024. 8. 28.

286) TBAC(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는 연방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and the Government Securities Act)에 따라 재무부의 차입(국채 발행) 관련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자문 위원회로, 민간 은행 및 증권사 종사 전문가 및 국채 매수 및 매도 관련 기관 간부 등이 참여

287) 미국 재무부, "Report to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from the 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 2024. 7. 3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513>, 검색일자:2024. 8. 29.

288) 미국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역년(calender year) 기준

289) System Open Market Account,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보유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국채와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등의 증권을 매입 및 매각 시 활용됨.

표 3-I-17 재무부 자금조달계획 3분기 관련 변동사항

(단위: 십억달러)

2024년 3분기 국채발행 물량 ¹⁾	계획치 (2분기 발표)	확정치 (3분기 발표)	변동량(비율)
시장성 국채 순발행량 (Net Marketable Borrowing)	847	740	△107 (△12.6%)
중장기 국채 순발행량 (Net Coupon Issuance)	557	559	2 (0.4%)
재정증권 순발행량 (Implied Change in Bills)	290	181	△109 (△37.6%)

주: 1) 국채 발행 물량은 연방준비제도 대차대조표 축소에 따른 재발행(roll over) 물량까지 포함한 금액임
 자료: 미국 재무부, "Treasury Presentation to TBAC: 2024" 각 분기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50%p 인하(2024. 9. 18.)²⁹⁰⁾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5.25~5.50%에서 4.75~5.00%로 인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을 보고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계속하여 확장됨
 - 자구 변화 없음
- (물가)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향한 추가 진전이 있었지만,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
 - (7월 표현) "물가 상승세는 지난 1년간 완화되고, 최근 몇 달간 추가 진전을 보임" → (9월 표현) "추가 진전이 있었음"
 - (9월 신규 표현) "연준은 물가 상승폭이 2%를 향하여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다 강한 확신을 가짐"
- (노동시장)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실업률은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를 유지
 - (7월 표현) "고용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며" → (9월 표현) "둔화되었으며"
- (리스크 관리) 연준은 노동시장 및 물가 안정의 목표 달성 리스크가 거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

290)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4. 9. 2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40918a1.pdf>, 검색일자: 2024. 9. 23.

- (7월 표현) “계속해서 보다 나은 균형을 향한” → (9월 표현) “거의 균형을 이룸”
- (정책 결정) 연준은 완전고용을 지원하고 물가상승세를 2% 목표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충력을 다하고 있음
 - (9월 신규 표현) “완전고용을 지원”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²⁹¹⁾ 이번 금리 인하 조치를 실업률 상승의 고통 없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임을 강조하며,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 방향의 유지 의사를 밝힘
 - (물가) 물가 상승세가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며, 정책이 계속 제약적(restrictive)이라면 2%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함
 -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둔화한다면 빠른 금리인하로 대응할 계획
 - (대차대조표 축소) 지급준비금(reserves) 규모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축소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2.0%, PCE 물가상승률은 2.3%,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4.4%로 전망²⁹²⁾
 - 직전 경제 전망(2024년 6월)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장률(2.1→2.0%)과 PCE 물가상승률(2.6→2.3%)은 하향, 실업률(4.0→4.4%)은 상향 조정됨
 - 정책 금리의 경우 직전 전망 대비 이번 전망에서 2024년 말(5.1%→4.4%) 및 2025년 말(4.1→3.4%) 모두 하향 조정되어 6월 전망 당시 상향 조정이 반복되었으나, 장기 금리 전망은 2.9%로 상향

291)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문, 2024. 9.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0918.pdf>, 검색일자: 2024. 9. 23.

292)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4. 9.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jtabl20240918.pdf>, 검색일자: 2024. 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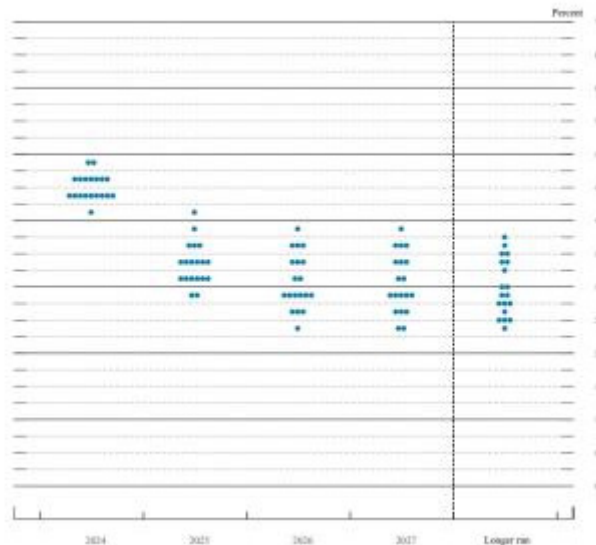
표 3-I-18 미국 2024년 9월 FOMC 경제 전망 요약(SEP)

(단위: %)

전망치(중간값)	2024년	2025년	2026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2.0	2.0	2.0	1.8
- 3월 전망치	2.1	2.0	2.0	1.8
실업률	4.4	4.4	4.3	4.2
- 3월 전망치	4.0	4.2	4.1	4.2
PCE 물가상승률	2.3	2.1	2.0	2.0
- 3월 전망치	2.6	2.3	2.0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2.6	2.2	2.0	-
- 3월 전망치	2.8	2.3	2.0	-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변화율, 실업률은 해당 연도 4분기의 실업률 의미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적정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p. 2, <Table 1>, 2024. 9. 18.

그림 3-I-4 미국 2024년 9월 FOMC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주: 각 점은 각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목표 기준금리의 중간점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p. 4, [Figure 2], 2024. 9. 18.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2024. 11. 7.)²⁹³⁾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4.75~5.00%에서 4.50~4.75%로 인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을 보고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계속하여 확장됨
 - 지구 변화 없음
 - (물가)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향한 진전이 있었지만,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
 - (9월 표현) “물가 상승세는 지난 1년간 완화되고, 최근 몇 달간 추가 진전이 있었음”
→ (11월 표현) “진전이 있었음”
 - (표현 삭제) “연준은 물가 상승폭이 2%를 향하여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다 강한 확신을 가짐”
 - * 해당 표현은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요건이자 안내 지침(Forward guidance)이었으며, 매회 새로운 지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이지 물가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올해 초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실업률은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를 유지
 - (9월 표현)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 (11월 표현) “노동시장은 올해 초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며”
 - (정책 결정) 연준의 양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
 - (9월 표현) “물가 안정 진전 상황과 위험²⁹⁴⁾의 균형을 고려하여” → (11월 표현) “연준의 양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293)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4. 11. 7.,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41107a1.pdf>, 검색일자: 2024. 11. 11.

294) 연준의 양대 책무(노동시장 및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있어 위험(risk)을 의미

표 3-I-19 미국 2024년 3분기 주요 경제 지표 I - 물가, 노동시장

(단위: %, 천명)

구분		2024년 7월	2024년 8월	2024년 9월
물가 ¹⁾	PCE 물가 상승률 ³⁾	2.5	2.3	2.1
	재화	-0.2	-0.9	-1.2
	서비스	3.7	3.8	3.7
	PCE 물가 상승률, 식품 및 에너지 제외	2.7	2.7	2.7
노동 시장 ²⁾	생산가능인구	268,644	268,856	269,080
	경제활동인구	168,429	168,549	168,699
	경제활동참가율	62.7	62.7	62.7
	취업자 수	161,266	161,434	161,864
	인구 대비 취업률	60.0	60.0	60.2
	실업자 수	7,163	7,115	6,834
	실업률	4.3	4.2	4.1

주: 1) 해당 지표의 9월 수치는 잠정치(preliminary)임

2) 해당 지표는 계절 조정된 수치임

3)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1.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September 2024," <Table 7>, 2024. 10. 31.,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10/pi0924.pdf>, 검색일자: 2024. 11. 11.

2.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1>, 2024. 11. 1., 링크: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11012024.htm, 검색일자: 2024. 11. 11.

표 3-I-20 미국 2024년 3분기 주요 경제 지표 II -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¹⁾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Q1	Q2	Q3	Q4	Q1	Q2	Q3 ²⁾
실질 GDP 성장률	2.5	2.9	2.8	2.4	4.4	3.2	1.6	3.0	2.8
명목 GDP 성장률	9.8	6.6	6.6	4.3	7.7	4.8	4.7	5.6	4.7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의미

2) 해당 수치는 속보치를 사용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and Year 2024 (Advance Estimate)," <Table 1>, 2024. 10. 30.,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10/gdp3q24-adv.pdf>, 검색일자: 2024. 11. 11.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²⁹⁵⁾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재정정책 수준에 대해 평가
 - (재정정책 영향) 대선 결과 등 재정정책의 변화를 미리 추측하여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나, 연준 목표 수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정책이 제정된다면 연준의 경제 모형에 반영될 것임
 - (재정정책 평가) 연방정부의 재정 운용이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음을 경고하며 완전고용 상태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는 상당함을 지적, 또한 궁극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채무 및 재정적자는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므로 시정이 필요함을 강조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2024. 12. 18.)²⁹⁶⁾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4.50~4.75%에서 4.25~4.50%로 인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을 보고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계속하여 확장됨
 - 자구 변화 없음
 - (물가)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향한 진전이 있었지만,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
 - 자구 변화 없음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올해 초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실업률은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를 유지
 - 자구 변화 없음
 - (정책 결정)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시 신규 입수 자료와 전망 변화 및 위협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
 - (11월 표현) “추가 조정을 고려 시” → (12월 표현)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시”

295)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4. 11. 7.,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1107.pdf>, 검색일자: 2024. 11. 11.

296)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4. 12. 18.,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41218a.htm>, 검색일자: 2024. 12. 19.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²⁹⁷⁾ 추가 금리 인하는 물가 안정에 대한 추가 진전과 노동시장 강세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반된 정책 변화가 이번 연준의 경제 전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일부 언급
 - (추가 금리 인하) 정책결정문에 금리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언급한 것은 연준이 금리의 추가 조정 속도를 완화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해 있다는 의미라고 밝힘
 - (정책 변화 반영)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변화의 반영에 다른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으나,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 관련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²⁹⁸⁾에 따르면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5%, PCE 물가상승률은 2.4%,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4.4%로 전망
 - 직전 경제전망(2024년 9월)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장률(2.0→2.5%)과 PCE 물가상승률(2.3→2.4%)은 상향, 실업률(4.4→4.2%)은 하향 조정됨
 - 정책 금리의 경우 직전 전망과 동일하게 4.4%로 전망

297)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4. 12.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1218.pdf>, 검색일자: 2024. 12. 19.

298)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4. 12.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jetabl20241218.pdf>, 검색일자: 2024.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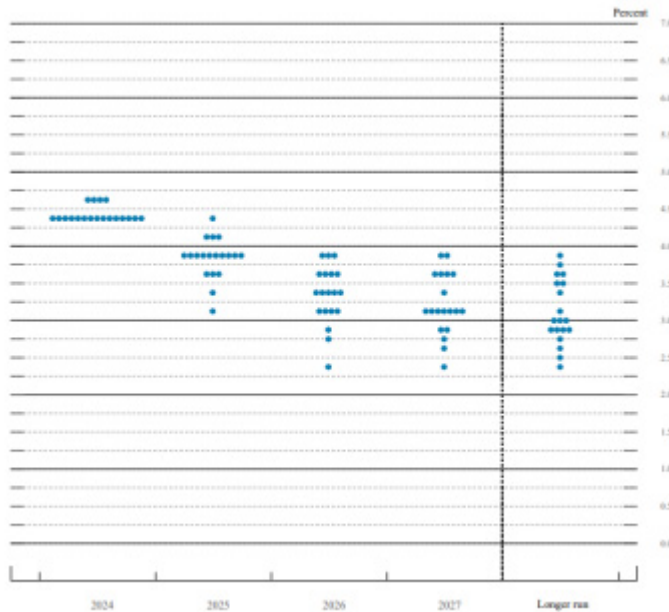
표 3-I-21 미국 2024년 12월 FOMC 경제 전망 요약(SEP)

(단위: %)

전망치(중간값)	2024년	2025년	2026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2.5	2.1	1.9	1.8
- 3월 전망치	2.0	2.0	2.0	1.8
실업률	4.2	4.3	4.3	4.2
- 3월 전망치	4.4	4.4	4.2	4.2
PCE 물가상승률	2.4	2.5	2.0	2.0
- 3월 전망치	2.3	2.1	2.0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2.8	2.5	2.0	-
- 3월 전망치	2.6	2.2	2.0	-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변화율, 실업률은 해당 연도 4분기의 실업률 의미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적정 통화정책 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p. 2, <Table 1>, 2024. 12. 18.

그림 3-I-5 미국 2024년 12월 FOMC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주: 각 점은 각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목표 기준금리의 중간점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p. 4, [Figure 2], 2024. 12. 18.

2) 기타

-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및 한국 관찰대상국 재지정(2024. 11. 14.)²⁹⁹⁾
 - (개요) 미국 재무부는 반기별로 미국의 주요 무역 교역국의 국제 경제 및 환율 정책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
 -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대미 교역규모의 78%)을 주요 무역국으로 간주, 해당 국가들의 2024년 6월까지 최근 4개 분기간 동향 평가
 - (주요 내용)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약 7년간 지정되었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2023년 11월에 제외되었으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GDP 대비 3% 이상을 기록하여 재지정
 -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세 개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두 개를 충족 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상당한(significant) 대미무역 흑자 규모: 대미무역 흑자 규모 150억달러 이상
 - 주목할 만한(material) 경상수지 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 GDP 대비 3% 이상
 - 지속적이며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최소 GDP의 2% 이상
 -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사유는 “상당한 대미무역 흑자 규모 및 주목할 만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해당
 - (흑자 규모)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에너지 물가의 완화세와 주요 기술 관련 수출 반등 등 무역 조건의 회복에 기인하여 약 500억달러에 상응
 - (경상수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주요 기술 관련 대외 수요 증가로 GDP 대비 3.7%에 상응

299) 미국 재무부, “Treasury Releases 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2024. 11. 14.,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14>, 검색일자: 2024. 11. 21.

II 일본³⁰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회계연도: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

표 3-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24. 7. 19.	일본 내각부, 연중 전망 발표
2024. 7. 29.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 발표
2024. 7. 29.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발표
2024. 7. 31.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발표
2024. 7. 31.	일본은행, 금융정책운영방침 변경 발표
2024. 8. 1.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4. 9. 3.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1분기 예산사용 현황 발표
2024. 9. 4.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예산요구액 발표
2024. 9. 9.	일본 내각부, 2024년 2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4. 10. 11.	일본 재무성, 노토반도 지진 복구 및 부흥 관련 예비비 사용 예정 내역 발표
2024. 10. 31.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4. 11. 22.	일본 내각부, 「국민의 안심·안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
2024. 11. 29.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2024. 12. 6.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2분기 예산사용 현황 발표
2024. 12. 6.	일본 내각부, 2025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
2024. 12. 9.	일본 내각부, 2024년 3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4. 12. 27.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자료: 저자 작성

3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은 선임연구원(jeunlee@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³⁰¹⁾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³⁰²⁾ 발표(2024. 7. 29.)³⁰³⁾
 - 2025회계연도 예산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³⁰⁴⁾를 바탕으로 경제·재정의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지속
 - 세출 전반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
 - 각 부처는 이하 기준에 따라 개산 요구를 시행하며, 제출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함
 - (연금·의료 등 관련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에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4,100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하며, 증가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 (어린이·육아 정책) 「어린이 미래 전략」³⁰⁵⁾에서 제시한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관련 정책은 동 전략을 바탕으로 요구
 - 관련 예산은 연금·의료 등 관련 경비, 의무적 경비, 기타 경비에 포함됨

301) 일본의 2025회계연도는 2025년 4월~2026년 3월.

302) 일본은 예산 편성 시 전년 8월 말까지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데, 이를 ‘개산 요구’라고 하며,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의에서 사전에 개산 요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개산 요구를 하도록 함. (자료: 藤井 亮二,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実効性が弱まるシーリング効果~, 『経済のプリズム』, 第179号, 일본 상의원, 2019. 8, p. 2,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3. 8. 14.)

303)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4. 7.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sy240729a.pdf, 검색일자: 2024. 7. 30.

304)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4」는 단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 6월 21일 각의 결정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6월 재정동향」, p. 25을 참조(<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 검색일자: 2024. 12. 13.)

305) 「어린이 미래 전략」은 2023년 12월 각의 결정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없던 규모로 모든 어린이·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공동육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동 전략에서는 향후 3년간(2024~2026년도)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설정하여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함. (자료: 일본 내각관방, 「こども未来戦略」, 2023. 12. 22.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검색일자: 2024. 7. 30.)

-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항³⁰⁶⁾에서 규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는 「방위력 정비계획」³⁰⁷⁾을 바탕으로 소요 비용을 요구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지방특례교부금 합계는 ‘경제·재정 신생 계획’³⁰⁸⁾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요구
- (의무적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하며, 의무적 경비를 삭감한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재량적 경비로 요구 가능, 2025년도 일본 참의원 선거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가감산
-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관련 경비) 기존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면서 재해 지역 부흥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 (기타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의 90%(요구 기초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
- (주요 정책 추진 범위) 지속적·구조적 임금인상 실현, 민관(官民) 제휴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강화 등의 실현,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같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주요 정책 추진 범위’를 설정
- 각 성장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요구 기초 금액의

306)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란 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 이에 관한 사무와 조약에 따른 외국군대 주둔 및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기초한 미국 정부 책무 수행에 따른 사무에 관한 것으로, 각 연도의 일반회계 예산(방위성 소관에 한정)에 계상되는 경비(방위성이 실시하는 정보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디지털청 설치법 경비를 포함)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오키나와현에 소재한 주둔군(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 군대)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행동위원회가 정리하고 협의위원회가 승인한 오키나와현 주둔군의 시설 및 구역 정리, 통합 및 축소, 오키나와현 주둔군 운용방법 조정 방안과 관련된 계획 및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2.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협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주둔군 또는 자위대 부대나 기관의 편성, 배치 또는 운용 형태 변경에 관하여 정부가 강구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3. ‘자위대법’ 제 100조의 5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주로 국민 등 수송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 취득에 필요한 경비 (자료: 일본 법령검색 홈페이지, 「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令和五年法律第六十九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069_20230623_0000000000000000, 검색일자: 2023. 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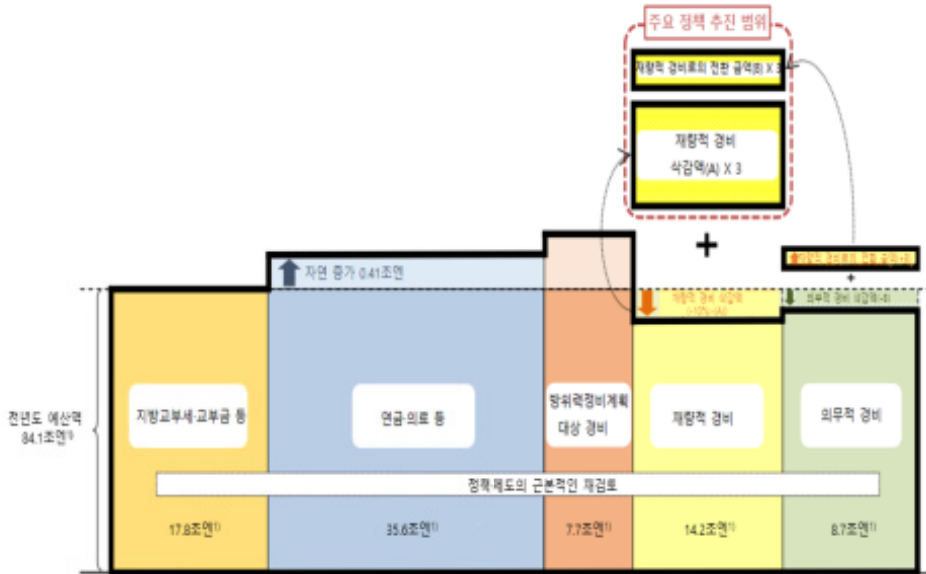
307)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및 각의 결정)에 따라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시. (자료: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 2022. 12. 16.)

308)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에서 책정된 ‘경제·재정 신생 계획’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2030년도까지 6년간 경제·재정 일체 개혁을 추진을 통해,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도모하여 잠재성장률 인상과 사회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GDP 대비 채무 잔고를 안정적으로 감축하여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을 재정건전화 목표로 설정. (자료: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4について」, 2024. 6. 21.;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4/2024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4. 7. 30.)

차액(〈그림II-2-1〉의 (A))의 3배’, ‘의무적 경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의 해당 차액(〈그림II-2-1〉의 (B))의 3배’의 합계 금액 범위 내에서 주요 정책 추진 관련 예산을 요구

- 정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각 경비 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필요 사항에 대처하도록 하며 임금 및 조달가격 상승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 고물가 대책, 임금 상승 환경 정비 촉진 중요한 정책은 필요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 범위’ 등에 포함하여 적절한 요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시행
- 전년도 개산요구기준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고령화에 의한 자연증가분이 전년도 5,200억엔에서 4,100억엔으로 감소하였으며, 임금 및 조달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는 내용과 어린이·육아 정책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됨

그림 3-II-1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



주: 1) 전년도 예산액은 원유가격·물가 급등 대책 및 임금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대응을 위해 증액한 일반예비비 5000억엔을 제외한 금액. 해당 경비를 포함한 전년도 예산액은 85.6조엔, 의무적 경비는 10.2조엔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イメージ)」, 2024. 7. 29., https://w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sy240729c.pdf, 검색일자: 2024. 7. 30.

■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³⁰⁹⁾ 예산요구액 발표(2024. 9. 4.)³¹⁰⁾

- (개요) 예산요구액은 예산 편성 시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 ‘개산요구액’과 주요 정책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인 ‘주요 정책 추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요망액’의 합계를 의미
- (2025회계연도 예산요구액)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6조 5,343억엔(5.9%) 증가한 117조 6,059억엔 규모로, 4년 연속 110조엔을 초과
 - 일반회계 세출총액 중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인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4조 3,016억엔(6.5%) 증가한 70조 5,779억엔 규모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전년 대비 3,301억엔(1.9%) 증가한 18조 1,164억엔 규모
 - 국채 상환 및 이자 지불에 소요되는 비용인 국채비는 전년 대비 1조 9,026억엔(7.0%) 증가한 28조 9,116억엔 규모

표 3-II-2 일본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단위: 억엔, %)

구분	전년도 예산액 ¹⁾	2025회계연도			전년 대비 증감	
		개산요구액 ²⁾	요망액 ³⁾	합계	증감액	증감률(%) ⁵⁾
일반세출 ⁴⁾	662,764	664,194	41,585	705,779	43,016	6.5(7.0)
지방교부세·교부금	177,863	181,164	-	181,164	3,301	1.9(6.0)
국채비	270,090	289,116	-	289,116	19,026	7.0(11.5)
합계	1,110,717	1,134,474	41,585	1,176,059	65,343	5.9(7.9)

주: 1) 전년도 예산액은 원유 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 1조엔, 노토(能登)반도 지진 대응을 위해 증액한 일반 예비비 5,000억엔을 제외한 금액. 2025회계연도 예산요구액에서 원유 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는 「202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4. 7.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sy240729a.pdf, 검색일자: 2024. 7. 30.)을 바탕으로 요구함.

2) 일본은 예산 편성 시 전년 8월 말까지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데 이를 ‘개산 요구’라고 함(자료: 藤井 亮二,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実効性が弱まるシーリング効果~」, 『経済のプリズム』, 第179号, 일본 상의원, 2019. 8, p. 2,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3. 8. 14.

3) 요망액은 예산요구액 중 주요 정책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인 ‘주요 정책 추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

4)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5) () 안의 수치는 2023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의 증감률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2024. 9. 5., p. 1. 을 바탕으로 재구성

309) 일본의 2025회계연도는 2025년 4월~2026년 3월.

310)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2024. 9. 4.,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5/sy240904.pdf, 검색일자: 2024. 9. 9.

■ 일본 내각부, 2025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2024. 12. 6.)³¹¹⁾

- 2025회계연도 예산은 2024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³¹²⁾에 따라 편성하며, 고물가 및 임금·조달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 탈피하여 ‘임금 인상과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의 보급·정착, 지방창생 2.0³¹³⁾ 시행, 민관 제휴에 의한 투자 확대,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³¹⁴⁾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포함한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저출산·아동 정책 시행 등 주요정책과제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
- 2025회계연도 예산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를 바탕으로 경제·물가 동향을 고려하면서 ‘중기적인 경제·재정의 틀에 따라 예산편성을 실시, 단 중요한 정책의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편성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를 바탕으로 경제·재정 일체 개혁의 공정을 구체화하면서,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311) 일본 내각부, 「令和7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24. 12. 6.,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4/r7_yosanhensei.pdf, 검색일자: 2024. 12. 10.

312)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4」는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 6월 21일 각의 결정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6월 재정동향」, p. 25을 참조,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 검색일자: 2024. 12. 13.

313) ‘지방이아말로 성장의 주역’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지방이 각각의 특성에 따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일본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 대규모 지방창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내각에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 본부」를 설치함. 이를 통해 도시 및 지방이 모두 안심·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모든 관계자가 희망·열량·일체감을 되찾는 형태로 새로운 지방창생 정책인 ‘지방창생 2.0’을 시행할 예정. (자료: 일본 내각관방 「新しい地方経済・生活環境創生本部の設置について」, 2024. 10. 11.,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chihouseusei/pdf/konkyo.pdf”, 검색일자: 2024. 12. 16.

314)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관련 정책은 대규모 재해를 비롯한 자연 재해 대응, 인프라 노후화 대책 등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의미.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재해 극심화 및 빈발화,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사회 경제 시스템 기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 주요 기능 유지를 위해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정책」(2020. 12. 11.)을 발표하여 시행 중. (자료: 일본 내각관방, 「防災・減災、国土強靱化のための5か年加速化対策」, https://www.cas.go.jp/jp/seisaku/kokudo_kyujinka/5kanenkasokuka/pdf/taisaku.pdf, 검색일자: 2023. 12. 20.)

■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예산안 발표(2024. 12. 27.)³¹⁵⁾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 9,698억엔 증가(2.6%)한 115조 5,415억엔 규모
 - (세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 증가한 115조 5,415억엔으로,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68조 2,452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9조 784억엔, 국채비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28조 2,179억엔
 - (세입)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6% 증가한 115조 5,415억엔으로, 세수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78조 4,400억엔, 기타 수입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8조 4,525엔, 공채금은 전년 대비 19.2% 감소한 28조 6,490억엔
 - (국채) 2025회계연도 국채 의존도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7%p 감소한 24.8%
- 2025회계연도 예산은 2024회계연도 11월에 발표한 경제대책³¹⁶⁾과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³¹⁷⁾과 더불어 ‘임금인상과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
 - (개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를 바탕으로 경제·물가 동향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의 세출개혁을 지속하고 주요 정책에 중점적으로 대응
 - (주요 정책 과제 대응) 다년도 주요 정책 과제 추진, 지방창생교부금 등 증액,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 등
 - (다년도 주요 정책 과제 추진) 재원을 확보하면서,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어린이 미래 전략」³¹⁸⁾을 바탕으로 한 아동·육아지원, GX투자 추진,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등 다년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
 - (지방창생교부금 등 증액) 지방창생교부금 증액, 내각부 방재담당 예산 및 정원 증가

315)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4. 12. 27.,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seifuan2024/01.pdf, 검색일자: 2024. 12. 30.

316)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所得を増やす」, 2024. 11. 22.

317)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補正予算」, 2024. 11. 29.

318) 「어린이 미래 전략」은 2023년 12월 각의 결정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없던 규모로 모든 어린이·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공동육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자료: 일본 내각관방, 「こども未来戦略」, 2023. 12. 22.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검색일자: 2024. 2. 5.)

등 주요 정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

-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 등) 약가 개정³¹⁹⁾ 고액 요양비 제도 재검토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 교직원 근로 방식 개혁 등 주요 과제에 대응
-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 경제·물가 동향을 고려하면서 주요 정책과제에 대응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를 착실하게 추진, 지방의 일반재원 총액 확보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도 함께 추진
- 2025회계연도 예산의 국채발행액은 28조 6,490억엔으로, 17년 만에 30조엔을 하회(당초 예산 기준)
- (경제·물가 동향을 고려한 예산 편성) 공무원·교직원·보육종사자 급여 개선, 공공 공사의 설계 및 노무 단가 인상, 공립학교 시설 보조 단가 인상, 지방공공단체 공공조달 가격 전가³²⁰⁾ 원활화(노무비 등), 하청, 트럭·물류, 건설 분야에 거래조사원을 투입하는 등 거래적정화 추진 등
- (경제·물가 동향을 고려한 세출 기준 설정)³²¹⁾ 인사원³²²⁾ 권고 등을 반영하여 정책적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
- (사회보장관계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증가분에 연금 슬라이드³²³⁾에 따른 변동분,

319)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약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약가 개정을 실시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에는 신약개발 혁신 추진, 의약품 안정 공급 확보, 국민 부담 경감 등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근거로 약가 개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令和7年度薬価改定について」, 2024. 12. 20., <https://www.mhlw.go.jp/content/12401000/001360046.pdf>, 검색일자: 2024. 12. 30.)

320) 일본 정부는 에너지 비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이 임금 인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무비,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적절히 전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자료: 일본 내각관방, 「パートナーシップによる価値創造のための転嫁円滑化施策パッケージ」, 2021. 12. 27., https://www.cas.go.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partnership_package_set.pdf, 검색일자: 2024. 2. 13.)

321) 일본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예산 편성과 연계하기 위해 사회보장관계비, 일반세출, 지방 세출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관계비) 고령화에 따른 증가의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관계비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제·물가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목표를 지속 (일반세출) 일반세출 중 비사회보장관계비에 대해 경제·물가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세출개혁 노력을 지속 (지방세출 수준) 국가의 일반세출 기조에 맞추면서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 총액에 대해 전년도 지방재정계획의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실질적으로 동일수준) 확보(자료: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4. 10., https://www.mof.go.jp/policy/budget/fiscal_condition/related_data/202410_00.pdf, 검색일자: 2024. 12. 30.)

322) 일본의 인사원은 국가 공무원의 채용, 근로 방법, 급여 등 인사제도에 종사하는 행정기관. (자료: 일본 인사원 홈페이지, <https://www.jinji.go.jp/>, 검색일자: 2024. 12. 30.)

323) 일본은 미래세대 연금의 급여 수준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 피보험자 및 평균 여명의 변동에 근거하여 거시 슬라이드 조정율을 설정, 임금 및 물가변동률에 이를 반영하여 연금액 개정율을 확정함.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令和6年度の年金額改定についてお知らせします」, 2024. 1. 19., <https://www.mhlw.go.jp/content/12502000/001040881.pdf>, 검색일자: 2024. 12. 30.)

보육급여 상승분을 추가(약 +2,500억엔)

- (비사회보장관계비) 최근 물가상승률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4회계연도 당초 기준(+1,600억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인한 상당분을 증액(약 +1,400억엔)

표 3-II-3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 개요

(단위: 억엔, %)

구분		2024회계연도 당초(A) ¹⁾	2025회계연도 정부안(B)	증감액 (B-A)	증감율
세출	일반세출 ¹⁾	677,764	682,452	4,689	0.7
	사회보장관계비	377,193	382,778	5,585	1.5
	사회보장관계비 외	290,571	299,674	9,103	3.1
	방위력정비계획 ²⁾ 대상 경비	77,249	84,748	7,498	9.7
	일반 예비비	10,000	10,000	0	0.0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 ³⁾	10,000	-	-10,000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77,863	190,784	12,921	7.3
	국채비	270,090	282,179	12,089	4.5
	합계	1,125,717	1,155,415	29,698	2.6
	세입	세수	696,080	784,400	88,320
기타 수입		75,147	84,525	9,378	12.5
방위력강화분		21,261	26,659	5,398	25.4
공채금		354,490	286,490	-68,000	-19.2
건설공채		65,790	67,910	2,120	3.2
특례공채		288,700	218,580	-70,120	-24.3
합계		1,125,717	1,155,415	29,698	2.6

주: 1)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2)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및 각의결정)에 따라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시. (자료: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 2022. 12. 16.)

3)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는 '원유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의 약칭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4. 12. 27., p. 2 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추경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2024. 11. 29.)³²⁴⁾

- 2024년 11월 22일 발표된 「국민의 안심·안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³²⁵⁾ 시행 관련 경비 추가 등을 위해 13조 9,433억엔 규모의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세출)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한 추가 세출은 경제대책 관계 경비 13조 9,310억엔, 기타 경비 1,768억엔,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³²⁶⁾ 전출 4,259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 1조 398억엔이며, 1조 6,303억엔 규모의 기존 경비를 감액
 - 경제대책 관계 경비는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 관련 정책에 5조 7,505억엔, 고물가 대책에 3조 3,897억엔, 국민 안심·안전 확보 관련 정책에 4조 7,909억엔이 사용될 예정
 - (세입) 공채금 6조 6,900억엔(건설국채 3조 800억엔, 특례국채 3조 6,100억엔)³²⁷⁾을 증액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세 및 인지수입 3조 8,270억엔, 세외수입 1조 8,668억엔 전년도 잉여금 수입 1조 5,595억엔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6조 5,150억엔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국채 의존도³²⁸⁾는 당초 예산 대비 1.8%p 증가한 33.3%
- 2024년 12월 17일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통과되었으며, 이시바 총리는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³²⁹⁾

324)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補正予算」, 2024. 11.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20241129.html, 검색일자: 2024. 12. 2.

325)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所得を増やす~」, 2024. 11. 22.

326)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채, 차입금 등의 상환 및 이자 등 지불을 시행하는 회계 처리를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about_mof/mof_budget/special_account/kokusaiseiri/kokusaiseiri.htm, 검색일자: 2023. 11. 15.)

327) 건설국채: 「재정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사업, 출자금 및 대출금 자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 특례국채: 건설국채를 발행해도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공공사업비 등 이외의 세출에 충당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하여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국채로, 세수 등 다른 세입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액을 최소로 억제해야 함. (자료: 재무성 국채 관련 홈페이지(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jgbs/index.html>, 검색일자: 2024. 12. 19.)

328)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329) 일본 총리실 「令和6年度補正予算成立等についての会見」, 2024. 12. 17.; <https://www.kantei.go.jp/jp/103/statement/2024/1217kaiken.html>, 검색일자: 2024. 12. 18.

표 3-II-4 일본의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개요

(단위: 억엔)

세출		세입	
1.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	57,505	1. 세수	38,270
2. 고물가 대책	33,897	2. 세외수입 ²⁾	18,668
3. 국민 안심·안전 확보	47,909		
소계(경제대책 관계 경비)	139,310		
4. 기타 경비	1,768	3. 전년도잉여금 수입	15,595
5.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 전출	4,259	4. 공채금	66,900
6.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¹⁾	10,398	1) 건설국채	30,800
7. 기존 경비 감액	-16,303	2) 특례국채	36,100
합계	139,433	합계	139,433

주: 1)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에 계상된 7,926억엔을 포함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추가 세출액은 1만 8,324억엔

2) 'AI·반도체 산업기반 강화 프레임' 관련 지원금 13,054억엔을 포함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 フレーム」, 2024. 11.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hosei241129a.pdf, 검색일자: 2024. 12. 2.

표 3-II-5 일본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후 2024회계연도 예산 개요

(단위: 억엔, %)

구분		2024회계연도 예산 (당초)	2024회계연도 예산 (추경 후)	증감액	증감율
세출	일반세출	677,764	809,868	132,105	19.5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77,863	196,200	18,337	10.3
	국채비	270,090	259,081	-11,009	-4.1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69,417	173,676	4,259	2.5
	이자지급비용	96,910	81,642	-15,268	-15.8
	합계	1,125,717	1,265,150	139,433	12.4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	696,080	734,350	38,270	5.5
	기타 수입	75,147	109,410	34,263	45.6
	공채금(세출과 세수 등과의 차이) ¹⁾	354,490	421,390	66,900	18.9
	채무상환비 상당분(교부 국채 제외)	169,417	173,676	4,259	2.5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96,910	81,642	-15,268	-15.8
	정책적지출에 의한 적자 상당분(기초 재정수지 적자)	88,163	166,072	77,909	88.4
	합계	1,125,717	1,265,150	139,433	12.4

주: 1) 공채금 분류는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충당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분'으로 표현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補正後予算フレーム」, 2024. 11.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hosei241129d.pdf, 검색일자: 2024. 12. 2.를 참고하여 작성

표 3-II-6 일본의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개요(상세)

(단위: 억엔)	
I.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 - 전 세대의 현재·미래 임금·소득 증가 -	57,505
1. 임금인상 환경 정비	9,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생산성 향상 지원(297억엔) ◦ 중소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설비투자, IT 도입 등 지원(3,400억엔) ◦ 중견·중소기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장 등 거점 신설 및 대규모 설비 투자 지원(1,400억엔) ◦ 의료·개호·장애복지 현장의 생산성 향상·직장환경 개선 등 지원(2,304억엔) ◦ 최근 경영상황이 급변한 의료기관 지원(483억엔) 	등
2. 새로운 지방창생정책 전개	18,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 교부금(1,000억엔) ◦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성장 및 식량안보 강화(3,037억엔) ◦ 지방 저출산대책 지원(95억엔) ◦ 지역 방문객 유치 촉진을 통한 인바운드 확대, 관광지·관광 산업 재생·고부가가치화(538억엔) ◦ 문화·기술 분야 크리에이터 지원(190억엔) ◦ 국립극장 재정비(200억엔) ◦ 지방교부세·교부금 증액(7,926억엔) 	등
3. 국내투자 촉진	29,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컴퓨터·전자암호기술 등(543억엔) ◦ 후발의약품 안정공급 지원(90억엔), 신약개발 지원(462억엔) ◦ 우주전략기금(3,000억엔) ◦ Beyond 5G 연구개발(357억엔)¹⁾ ◦ 대형 연구 시설 개발·고도화(248억엔) ◦ 지역 탈탄소 추진 교부금(365억엔) ◦ 희소금속 및 동 공급원 다각화 지원(922억엔) ◦ 'AI·반도체 산업기반 강화 프레임'²⁾ 관련 지원(13,054억엔) (특별회계분 및 기존 기금을 포함하면 1.6조엔 규모) 	등
II. 고물가 대책 - 모든 국민이 성장형 경제로 이행 -	33,897
1. 최근 고물가에 대한 상세한 대응	31,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지원지방교부금(저소득층 지원금: 4,908억엔, 기타 가구 및 사업자 지원 등: 6,000억엔) ◦ 동절기 전기·가스 요금 부담 경감(3,194억엔) ◦ 연료유 가격 급변 완화 대책(10,324억엔) ◦ '지원금·정책감세 조치(2023회계연도 경제대책)³⁾ 관련 지원금(6,443억엔) 	등
2.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처하는 경제사회 실현	2,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주택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추진(1,809억엔)(특별회계분을 포함하면 4,239억엔) ◦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도입 지원 (360억엔)(특별회계분을 포함하면 1,860억엔) 	등
III. 국민 안심·안전 확보 - 성장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 마련 -	47,909
1.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6,6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토반도 지역 복구·부흥(생업 지원, 재해폐기물 처리 가속화 등)(2,684억엔) ◦ 공공토지시설 등 복구(4,628억엔)(노토반도 지역 복구·부흥분 포함) 	등
2.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 추진	19,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체제 강화(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교부금 활용) ◦ 선상강수대·태풍 예측 정확도 향상(기상청 기능 강화)(451억엔) ◦ 국립학교 시설 정비(체육관 공조 정비(779억엔) 포함)(2,076억엔) ◦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대책(공공사업관계비)(14,063억엔) 	등
3. 외교·안전보장환경 변화 대응	14,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제휴 강화(2,650억엔) ◦ 우크라이나·주변국 지원 대응(269억엔) ◦ 민관(官民)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395억엔) ◦ 해상보안능력 강화(912억엔)⁴⁾ 	

◦ 자위대 등 안전보장환경 변화에 대한 확실한 대응 등(8,268억엔)	등
4.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실현	7,558
◦ 방범체제 강화(19억엔)	
◦ 아동·육아 지원(보육사 등 처우개선, 아동 빈곤대책 등)(2,206억엔)(특별회계분을 포함하면 3,185억엔)	
◦ 구우생보호법 관련 보상금 등 지급(878억엔) ⁵⁾	등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추가세출	139,310
	(기타 특별회계분 8,861)

- 주: 1) Beyond 5G는 2030년대에 도입될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로 모든 산업과 사회활동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무선을 비롯하여 육·해·공·우주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Beyond 5G 연구 개발 촉진 사업에서는 Beyond 5G 실현에 필요한 요소 기술의 조기 확립 등을 위해 민간 기업, 대학 등에 의한 연구 개발을 지원.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B5G_sokushin/index.html#Beyond%205G%E7%A0%94%E7%A9%B6%E9%96%8B%E7%99%BA%E4%BF%83%E9%80%B2%E4%BA%8B%E6%A5%AD, 검색일자: 2024. 12. 9.)
- 2)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안전보장 및 에너지 정책상의 관점에서 AI·반도체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향후 10년간 50조엔을 상회하는 국내 투자를 민간 협조로 실현하기 위해, 2030년도까지 1)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및 파워 반도체 양산 투자 등에 대한 보조 및 위탁에 약 6조엔, 2) 차세대 반도체 양산 투자 및 AI 활용을 위한 계산 기반 정비 등에 대한 출자나 채무 보증 등 금융 지원에 약 4조엔 이상, 총 10조엔 이상의 공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所得を増やす~」, 2024. 11. 22.,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4/1122_taisaku.pdf, 검색일자: 2024. 12. 9.)
- 3) 2023년 11월 발표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 경제대책」에 따라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에 따라 각종 지원금 및 정액 감세를 실시.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https://www.cas.go.jp/jp/seisaku/benefit2023/index.html>, 검색일자: 2024. 12. 9.)
- 4) 다른 항목에 정리되어 있는 사업도 포함한 금액
- 5) 1948년 제정된 '구우생보호법'에 따라 법률이 존재하는 동안(1948년 9월 11일~1996년 9월 25일) 우생 수술 등을 받은 사람에게 일시금을 지급. (일본 법령정보 홈페이지, 「旧優生保護法に基づく優生手術等を受けた者に対する一時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平成三十一年法律第十四号)」, <https://laws.e-gov.go.jp/law/431AC1000000014>, 검색일자: 2024. 12. 9.)
-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補正予算 (第1号) の概要」, 2024. 11.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hosei241129c.pdf, 검색일자: 2024. 12. 2.

다. 결산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발표(2024. 7. 31.)³³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총액은 140조 2,016억엔, 세출 결산총액은 127조 5,788억엔이며, 2024년도 이월 세출예산재원,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재원을 공제한 순 잉여금은 8,517억엔 규모
 - 세입 순증가액은 -5조 3,316억엔, 세출 불용액은 6조 8,910억엔이며, 세입 순증가액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에서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재원을 공제한 결산 순잉여금 8,517억엔은 「재정법」 제 6조331)에 따라 최소 1/2의 금액이 국채 상환에 충당될 예정

330)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決算概要」,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3/ke060731.pdf, 검색일자: 2024. 8. 5.

표 3-II-7 일본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단위: 억엔)

구분	금액	비고
1. 세입 결산총액	1,402,016	
2. 세출 결산총액	1,275,788	
3. 「재정법」 제41조 ¹⁾ 잉여금	126,227	(1-2)
4. 2022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0	
5. 2023년도 신규발생 잉여금	126,227	(3-4)
6. 2024년도 이월 세출예산재원으로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110,632	
7.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신규발생 잉여금	15,594	(5-6)
(1) 세입 순증가액	-53,316	
① 세수	24,651	
② 세외수입	17,032	
③ 공채금	-95,000	
(2) 세출 불용액	68,910	
예비비 ²⁾	15,612	
기초연금 기여금 등 연금특별회계에 편입	14,518	
코로나19 대응 지방창생 ³⁾ 추진비	5,707	
기타	33,072	
8.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재원으로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7,077	
(1)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지방교부세 정산액분)	6,678	
(2) 공항정비 사업비 등 재원(항공기연료세 정산액분)	-	
(3) 부흥 비용 및 부흥채 ⁴⁾ 상환 비용 재원(부흥분(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이월분 및 2023년도분)에 대한 잉여금	68	
(4)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⁵⁾ 이행 비용 재원(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비용 분(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잉여금)	330	
9. 「재정법」 제6조 ³⁾ 에 의한 순잉여금	8,517	(7-8)

주: 1. 세외수입에는 부흥분(2011년도 제1·2차 추경예산 이월분) 35억엔 포함
 2. 단위 미만 절사
 1) 「재정법」 제41조: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시킨다.
 2) 예비비 불용액의 내역은 원가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 8,689억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 5,000억엔, 일반 예비비 1,922억엔.
 3) 지방창생(地方創生)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인구 감소 문제와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일본 내각관방·내각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https://www.chisou.go.jp/sousei/index.html>, 검색일자: 2024. 2. 5.)
 4) 부흥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정책 실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시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됨.(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faq/budget/01aa.htm>, 검색일자: 2023. 8. 14.)
 5)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란 산업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 및 원재료에 관련된 이산화탄소를 원칙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를 의미함.(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32_20240218_00000000000000, 검색일자: 2023. 8. 14.)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決算概要」, 2024. 7. 31., p. 2.

331) 「재정법」 제6조: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금 중 1/2을 하회하지 않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다음 연도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1분기³³²⁾ 예산사용 현황³³³⁾ 발표(2024. 9. 3.)³³⁴⁾

- 2024회계연도 1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13조 6,673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35조 750억엔으로, 세출액이 세입액을 21조 4,077억엔 초과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1분기 수입 비율은 12.1%로 전년 동기 대비 10.8%p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채금 등의 증가에 기인
 -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8.3%로 전년 동기 대비 2.5%p 증가하였으며, 이는 물가 급등 대책비 등의 증가에 기인
- 2024회계연도 1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31.3%로 전년 동기 대비 1.6%p 감소하였으며,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30.7%로 전년 동기 대비 0.8%p 감소

표 3-II-8 일본의 2024회계연도 1분기 예산사용 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125,716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¹⁾ (D)	1,236,349	세입예산액(A)	4,406,099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¹⁾ (D)	4,406,478
1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36,673	1분기 국가 지출 금액(E)	350,750	1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379,556	1분기 국가 지출 금액(E)	1,353,587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2.1% (1.3%)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8.3% (25.8%)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31.3% (32.9%)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30.7% (31.5%)
1분기 누계(C)	136,673	1분기 누계(F)	350,750	1분기 누계(C)	1,379,556	1분기 누계(F)	1,353,587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12.1% (1.3%)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28.3% (25.8%)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31.3% (32.9%)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30.7% (31.5%)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 연도 사용 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4.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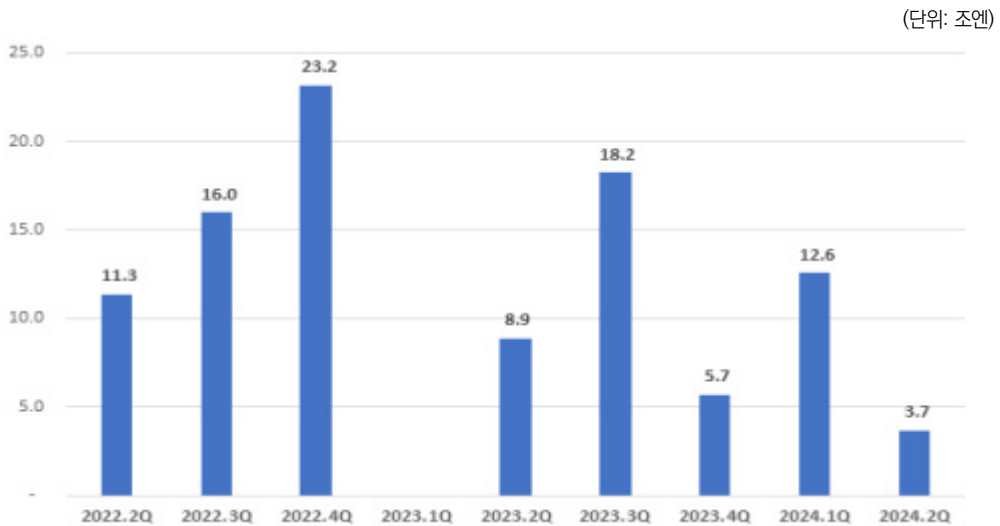
332) 일본의 2024회계연도는 2024. 4. 1.~2025. 3. 31.로, 2024회계연도 1분기는 2024. 4. 1.~2024. 6. 30.을 의미

333) 예산사용 현황(予算使用の状況)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서, 각 부처 등이 매월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의 수납 상황과 소관·조직·항별 지출 상황 및 특별회계 등의 수치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

334)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4. 9. 3.,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4/06_1gai.html, 검색일자: 2024. 9. 9.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2분기³³⁵⁾ 예산사용 현황 발표(2024. 12. 6.)³³⁶⁾
 - 2024회계연도 2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14조 7,210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6조 2,192억엔으로 세출액이 세입액을 11조 4,982억엔 초과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2분기 수입 비율은 13.0%로 전년 동기 대비 6.1%p 감소하였으며, 이는 특례공채금 등의 감소에 기인
 - 분기별 공채금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2분기 공채금 수입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

그림 3-II-2 일본의 분기별 공채금 수입 추이



주: 1. 출납정리 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일본 재무성, 각 분기별 「예산사용현황」을 바탕으로 작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index.htm, 검색일자: 2024. 12. 24.

335) 일본의 2024회계연도는 2024. 4. 1.~2025. 3. 31.로, 2024회계연도 2분기는 2024. 7. 1.~2024. 9. 30.을 의미
 336)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第2・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4. 12. 6.,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4/06_2gai.html, 검색일자: 2024. 12. 10.

-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1.2%로 전년 동기와 동일하게 나타남
- 2024회계연도 2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4.5%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증가하였으며,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3.5%로 전년 동기 대비 1.3%p 감소

표 3-II-9 일본의 2024회계연도 2분기 예산사용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 (A)	1,125,716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¹⁾ (D)	1,236,349	세입예산액 (A)	4,406,099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¹⁾ (D)	4,406,478
2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47,210	2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62,192	2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081,164	2분기 국가 지출 금액(E)	1,037,382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3.0% (19.1%)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1.2% (21.2%)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4.5% (22.6%)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3.5% (24.8%)
2분기 누계(C)	283,883	2분기 누계(F)	612,942	2분기 누계(C)	2,460,721	2분기 누계(F)	2,390,970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25.2% (20.4%)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49.5% (47.1%)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55.8% (55.6%)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54.2% (56.3%)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第2・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4. 12. 6.

표 3-II-10 일본의 분기별 예산사용 현황 추이

(단위: 억엔)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가 수납 금액	국가 지출 금액	국가 수납 금액	국가 지출 금액
2022.1Q	8,287 (0.7)	349,535 (27.6)	1,452,286 (32.8)	1,491,739 (34.6)
2022.2Q	216,856 (17.3)	256,928 (20.3)	1,078,091 (24.3)	1,099,399 (25.5)
2022.3Q	571,754 (45.7)	269,329 (21.2)	1,031,770 (23.3)	981,109 (22.8)
2022.4Q	453,476 (36.3)	392,730 (31.0)	868,430 (19.6)	735,582 (17.1)
2022 소계	1,250,375	1,268,524	4,430,578	4,307,831
2023.1Q	15,186 (1.4)	342,533 (28.1)	1,465,260 (34.9)	1,409,405 (24.3)
2023.2Q	219,276 (20.7)	280,972 (23.0)	1,007,408 (24.0)	1,110,872 (27.0)
2023.3Q	543,594 (51.4)	256,261 (21.0)	891,761 (21.2)	839,083 (20.4)
2023.4Q	280,123 (26.5)	340,815 (27.9)	834,776 (19.9)	753,635 (18.3)
2023 소계	1,058,180	1,220,583	4,199,207	4,112,997
2024.1Q	136,673	350,750	1,379,556	1,353,587
2024.2Q	147,210	262,192	1,081,164	1,037,382

주: 1. 출납정리 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2. 단위 미만 절사
 3. 2022, 2023년 () 안 금액은 각 연도별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일본 재무성, 각 분기별 「예산사용현황」을 바탕으로 작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index.htm, 검색일자: 2024. 12. 30.

라. 예비비

- 일본 재무성, 노토반도 지진 복구 및 부흥 관련 예비비 사용 예정 내역 발표(2024. 10. 11.)³³⁷⁾
 - 이번 발표된 예비비 사용 예정 내역에서는 노토반도 지진 복구 및 부흥과 관련하여 509억엔 규모의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
 - 긴급 임시주택 복원 및 피난소 환경 개선 26억엔, 재해폐기물 처리 155억엔, 공공 토목 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등 328억엔 등을 사용할 예정

337) 일본 재무성, 「能登地域の復旧・復興に向けた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10. 11.,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nt241011.pdf, 검색일자: 2024. 10. 21.

- 2024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일반 예비비 1조엔 중 노토반도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예비비의 총액은 4,382억엔 규모(이번에 발표된 예비비 사용 예정 금액 509억엔 포함)이며, 노토반도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사용한 예비비의 누적금액(2023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포함)은 6,640억엔 규모

표 3-II-11 일본 노토반도 지진 재해자의 생활과 생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

(단위: 억엔)

구분	금액			
	'24. 4. 23.	'24. 6. 28.	'24. 9. 10.	'24. 10. 11.
긴급 임시주택 제공	683	282	-	-
긴급 임시주택 복원, 피난소 환경 개선	-	-	-	26
복식·개호(간병) 서비스 제공 체제 긴급 정비 사업	16	-	-	-
재해폐기물 처리	-	226	-	155
지역복지추진지원 임시특례교부금 ¹⁾	-	-	53	-
농림수산업 종사자 지원	44	21	75	-
공공 토목 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등	647	867	960	328
합계	1,389	1,396	1,088	509

주: 1) 이시카와(石川)현 노토반도(能登半島) 6개 지역에서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반파 이상 피해가 발생한 고령자 또는 장애인 거주 세대 등에 대해 주택 재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이시카와 임시특례 교부금 홈페이지, <https://ishikawa-rinjitokurei-kyufukin.com>, 검색일자: 2024. 10. 21.)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能登半島地震に係る被災者の生活と生業支援のためのパッケージに基づく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4. 23.; 「令和6年能登半島地震に係る被災者の生活と生業支援のためのパッケージに基づく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6. 28.; 「令和6年能登半島地震に係る予備費使用(第6弾)について」, 2024. 9. 10.; 「能登地域の復旧・復興に向けた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10. 11. 를 참고하여 작성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경제 및 재정 전망

- 일본 내각부, 연중 전망 발표(2024. 7. 19.)³³⁸⁾
 - (개요) 연중 전망이란 연중 시점에서의 최신 경제 동향을 근거로 내각부에서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경제를 전망하여 발표하는 것이며, 예산안 발표 전에 「경제 전망과

338) 일본 내각부, 「令和6(2024)年度内閣府年央試算」,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2024/r060719shisan.pdf>, 검색일자: 2024. 7. 22.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라는 문서를 통해 정부 공식 전망을 발표함

- (2024년도 전망) 2024년도에는 일부 자동차의 생산·출하 정지 등에 따른 영향은 있으나,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기업 수익 호조, 정액 감세 등 정책효과에 기인하여 소비가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증가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완만한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0.9%, 명목 GDP 성장률은 3.0%를 나타낼 전망
 - 2024년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8%로 전망
- (2025년도 전망) 2025년도에는 물가 상승이 진정되고 소비회복, 설비투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1.2%, 명목 GDP 성장률 2.8%를 나타낼 전망
 - 2025년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2%로 전망

표 3-II-12 일본의 연중 전망 주요 경제지표

(단위: %, %p)

구분	2023	2024		2025
	실적	12월 정부경제 전망 ¹⁾	연중 전망	연중 전망
실질 GDP	1.0	1.3	0.9	1.2
민간최종소비지출	-0.6	1.2	0.5	1.0
민간주택	0.3	-0.3	-2.7	-0.4
민간기업설비	0.4	3.3	3.3	3.4
내수기여도	-0.5	1.4	0.9	1.1
외수기여도	1.4	-0.1	-0.0	0.1
실질 국민총소득	2.1	1.4	0.9	1.2
명목 GDP	5.0	3.0	3.0	2.8
완전실업률	2.6	2.5	2.5	2.4
고용자 수	0.7	0.2	0.2	0.2
생산자물가지수	2.3	1.6	2.1	2.0
소비자물가지수	3.0	2.5	2.8	2.2
GDP 디플레이터	4.0	1.7	2.2	1.6

주: 1. 기여도와 완전실업률 이외 수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

1) 12월 정부경제 전망은 2023년 12월 내각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경제 전망 및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2024. 1. 26. 각의 결정)에 나타난 수치.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주요국 예산안-일본」 p. 2, <표 1>을 참조.(<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Finance/kiPublish/CA2/Center/view.do?serialNo=527182>, 검색일자: 2024. 7. 22.)

자료: 일본 내각부, 「令和6 (2024) 年度 内閣府年央試算」, pp. 2~3 재구성.

■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발표(2024. 7. 29.)³³⁹⁾

- ※ (목적) 본 전망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여하고자 함
- (시나리오별 가정) 본 전망은 2025년도까지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의 실적치와 내각부 연중 전망³⁴⁰⁾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2026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성장이행 케이스’를 새롭게 추가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의 전망을 제시
 - (기준선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최근 경기 순환³⁴¹⁾의 평균 수준인 약 0.5%(2023년도 0.7%)로 유지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상승(2023년도 62.9% → 2033년도 64.8%)한다고 가정
 - (성장이행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과거 40년³⁴²⁾의 평균인 1.1%까지 상승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기준선 시나리오보다 상승(2033년도 65.8%)한다고 가정
 - (고성장실현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가기 전 기간의 평균인 1.4%³⁴³⁾까지 상승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기준선 시나리오보다 상승(2033년도 65.8%)한다고 가정
 - (경제 전망) 2026년도 GDP 성장률은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실질 0.7%, 명목 1.5%,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 실질 1.3%, 명목 2.8%, 고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실질 1.4% 명목 2.8%를 나타낼 전망
 - 2033년도 GDP 성장률은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실질 0.4%, 명목 0.7%를 나타낼 것이며,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1.4%, 명목 2.8%, 고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1.7%, 명목 3.2%를 나타낼 전망
 - (재정 전망)³⁴⁴⁾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6년도에 0.5%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33년도에는 0.1%를 나타낼 전망이며,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2029년도부터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339)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4. 7. 29.,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r7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4. 8. 1.

340) 일본 내각부, 「令和6(2024)年度 内閣府年央試算」,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2024/r060719shisan.pdf> 검색일자: 2024. 7. 22.

341) 제16순환(2012년 10~12월부터 2020년 4~6월까지)

342) 과거부터 제16순환까지(1980년 4~6월부터 2020년 4~6월까지)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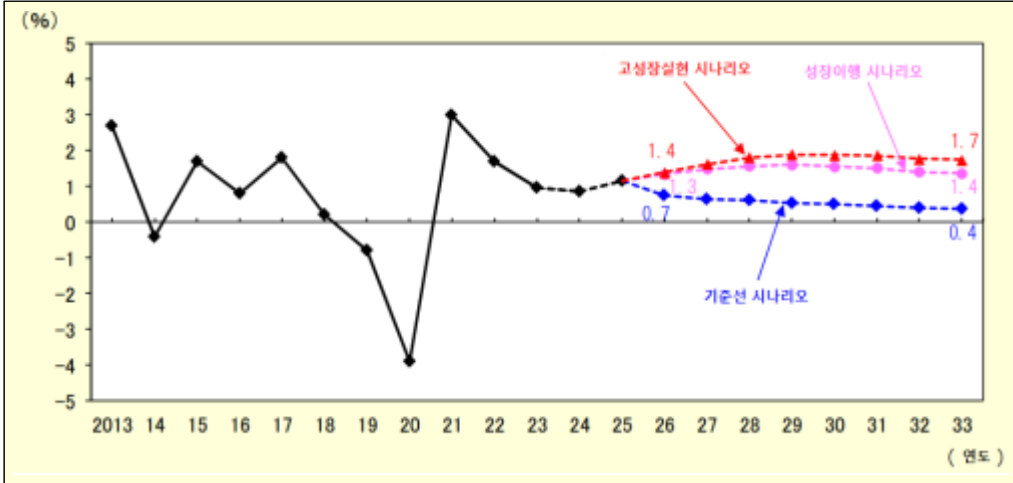
343) 과거부터 제12순환까지(1980년 4~6월부터 1999년 1~3월까지)의 평균

344) 재정 전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관점에서 기준선 시나리오와 성장이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기술함.

-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6년도에 0.7%를 나타낸 후 점차 흑자폭이 확대되어 2033년도에는 1.8%를 나타낼 전망이며,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전망 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그림 3-II-3 일본의 중장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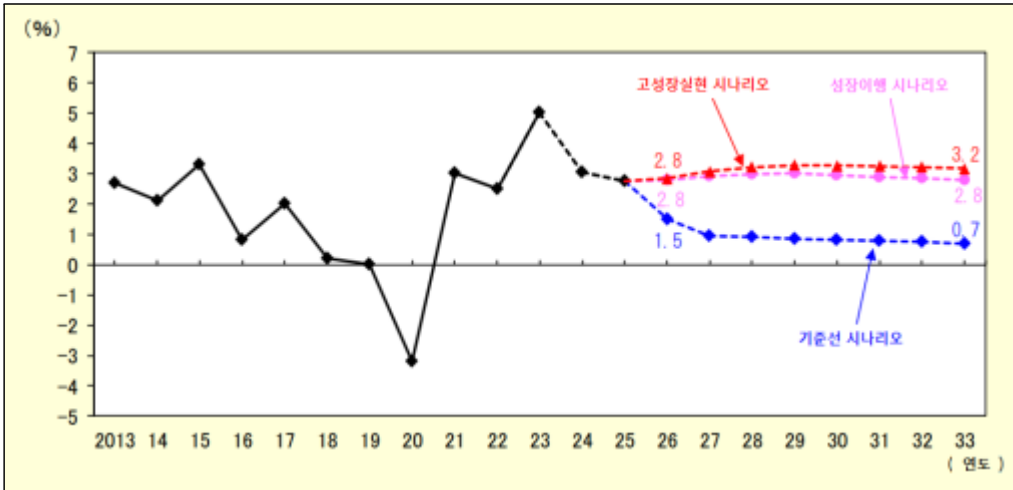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7. 29., p. 4, [그림 3].

그림 3-II-4 일본의 중장기 명목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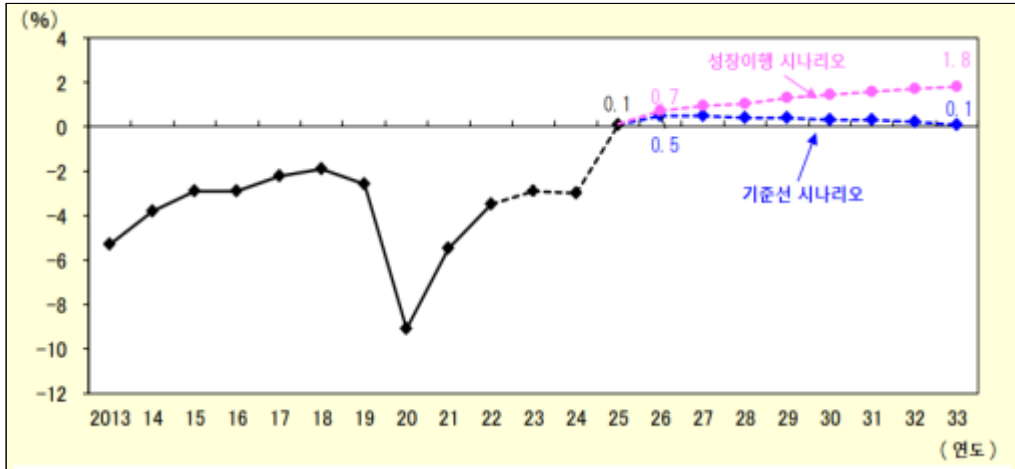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7. 29., p. 4, [그림 4].

그림 3-II-5 일본의 중장기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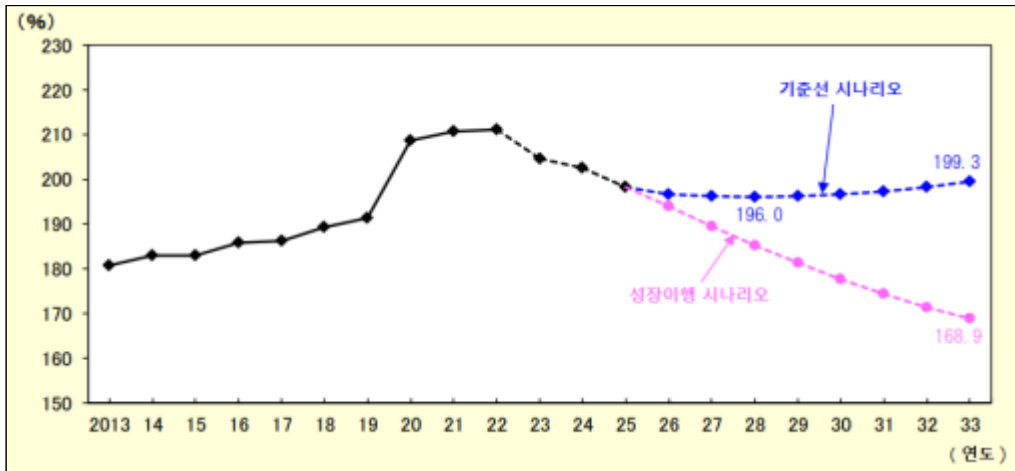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7. 29., p. 11, [그림 8].

그림 3-II-6 일본의 중장기 국가 및 지방의 채무잔고 전망(GDP 대비)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7. 29., p. 12, [그림 9].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4. 8. 1.)³⁴⁵⁾

- (경제) 해외 경제의 완만한 성장, 완화적인 금융환경 등에 기인하여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³⁴⁶⁾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345) 일본은행, 「經濟·物價情勢の展望(2024年 7月)」, 2024. 8. 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407b.pdf>, 검색일자: 2024. 8. 5.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정부 경제 대책 효과의 반작용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4회계연도에는 2.5%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6회계연도에는 ‘물가안정 목표’인 2%에 근접한 2.1%, 1.9%를 나타낼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4년 4월 전망과 비교) 2024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통계 개정 등에 기인하여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2025회계연도에는 이의 반작용으로 소폭 상향 조정

표 3-II-13 2024-2026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4회계연도	2024년 7월 전망	0.5~0.7 (0.6)	2.5~2.6 (2.5)
	2024년 4월 전망	0.7~1.0 (0.8)	2.6~3.0 (2.8)
2025회계연도	2024년 7월 전망	0.9~1.1 (1.0)	2.0~2.3 (2.1)
	2024년 4월 전망	0.8~1.1 (1.0)	1.7~2.1 (1.9)
2026회계연도	2024년 7월 전망	0.8~1.0 (1.0)	1.8~2.0 (1.9)
	2024년 4월 전망	0.8~1.0 (1.0)	1.6~2.0 (1.9)

-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4.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자료: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4年 7月)」, 2024. 8. 1., p. 9, 일부 발췌

346) 일본은행에서 추계한 2024년 1분기 전년 대비 잠재성장률은 0.64%.(일본은행, 「需給ギャップと潜在成長率」, 2024. 7. 3., 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 검색일자: 2024. 8. 26.)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4. 10. 31.)³⁴⁷⁾

- (경제) 해외 경제의 완만한 성장, 완화적인 금융환경 등에 기인하여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³⁴⁸⁾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0.6%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6 회계연도에는 1.1%, 1.0%를 나타낼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2.5%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6회계연도에는 ‘물가안정 목표’인 2%에 근접한 1.9%를 나타낼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4년 7월 전망과 비교)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지난 전망과 큰 차이가 없으며, 2025회계연도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원유 등 자원 가격 하락에 기인하여 소폭 하향 조정

표 3-II-14 2024-2026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구분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4회계연도	2024년 10월 전망	0.5~0.7 (0.6)	2.4~2.5 (2.5)
	2024년 7월 전망	0.5~0.7 (0.6)	2.5~2.6 (2.5)
2025회계연도	2024년 10월 전망	1.0~1.2 (1.1)	1.7~2.1 (1.9)
	2024년 7월 전망	0.9~1.1 (1.0)	2.0~2.3 (2.1)
2026회계연도	2024년 10월 전망	0.8~1.1 (1.0)	1.8~2.0 (1.9)
	2024년 7월 전망	0.8~1.0 (1.0)	1.8~2.0 (1.9)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4.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자료: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4年 10月), 2024. 10. 31., p. 9, 일부발췌

347)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4年 10月), 2024. 10. 3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410a.pdf>, 검색일자: 2024. 11. 4.

348) 일본은행에서 추계한 2024년 2분기 전년 대비 잠재성장률은 0.64%.(일본은행, 「需給ギャップと潜在成長率」, 2024. 7. 3., 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 검색일자: 2024. 11. 4.)

나. 경제 및 재정정책

- 일본 내각부, 「국민의 안심·안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2024. 11. 22.)³⁴⁹⁾
 - (배경) 일본은 현재 명목 GDP 600조엔,³⁵⁰⁾ 33년 만의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³⁵¹⁾ 등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이를 임금·소득 증가라는 형태로 실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임금인상이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경제의 실현, ‘임금인상과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형 경제’로의 확실한 이행을 통해, 나라와 국민, 지방, 청년·여성의 기회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안심·안전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임금·소득 증가를 위한 경제 성장, 고물가 대응, 안심·안전 확보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
 -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 임금인상 환경 정비, 지방창생,³⁵²⁾ 성장력 강화 등 모든 세대의 현재·미래의 임금 및 소득을 늘리는 정책
 - (임금인상 환경 정비) 최저임금 인상, 지속적·구조적 임금인상을 위한 가격 전가³⁵³⁾ 등 거래 적정화 추진, 노동력 절감·디지털화 투자 촉진, 인적투자 촉진 및 근무환경 개선, 중견·중소기업 경영기반 강화 및 성장 지원 등
 - (지방창생)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 본부」³⁵⁴⁾에 따른 새로운 지방창생 정책

349)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所得を増やす~, 2024. 11. 22.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4/1122_taisaku.pdf, 검색일자: 2024. 11. 25.

350) 일본의 2024년 3분기 명목 GDP(계절조정, 연율 환산)는 610.88조엔.(일본 내각부, 「四半期別GDP速報 時系列表 2024年 7~9月期1次速報値」, 2024. 11.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4/qe243/pdf/jikei_1.pdf, 검색일자: 2024. 11. 18.)

351) 2024년 8월 2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민간 주요 기업 총계 임금인상 요구·타결 상황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이 5.33%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상회함.(후생노동성, 「令和6年 民間主要企業春季賃上げ要求・妥結状況を公表します」, 2024. 8. 22., https://www.mhlw.go.jp/stf/newpage_41871.html, 검색일자: 2024. 11. 26.)

352) 지방창생(地方創生)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인구 감소 문제와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 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일본 내각관방·내각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https://www.chisou.go.jp/sousei/index.html>, 검색일자: 2024. 11. 26.)

353) 일본 정부는 에너지 비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이 임금 인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무비,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적절히 전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일본 내각관방, 「パートナーシップによる価値創造のための転嫁円滑化施策パッケージ」, 2021. 12. 27.,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hyugi/pdf/partnership_package_set.pdf, 검색일자: 2024. 11. 26.)

354) 「지방이야말로 성장의 주역」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지방이 각각의 특성에 따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일본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 대규모 지방창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내각에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 본부」를 설치함.(내각관방 「新しい地方経済・生活環境創生本部の設置について」, 2024. 10. 11., <https://www.cas.go.jp/jp>)

추진, 농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안보 강화, 지역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기간산업 등 활성화, 문화 예술·스포츠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오사카·간사이 박람회 추진 등

- (성장력 강화) 과학기술 진흥 및 혁신 촉진, 프린티어 개척, DX(Digital Transformation)·GX(Green Transformation) 추진, 경제안전보장 확립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국내 투자 확대,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지원 등
- (고물가 대책) 고물가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지원, 지역 실정에 따른 고물가 대책 추진, 고물가의 영향을 받는 업종 지원,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 등 모든 국민이 성장형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
 - (고물가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지원) 주민세 비과세 세대³⁵⁵)에 1세대당 3만엔을 지급하며, 이 중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 자녀 1인당 2만엔을 가산하여 지급
 - (지역 실정에 따른 고물가 대책 추진) 고물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자(특별고압 또는 LP 가스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농림수산업자, 지역관광업, 의료·개호·보육·학교 시설, 상가·자치회 등) 등에 대한 중점 지원, 전기·가스 요금 부담 경감 지원 사업, 연료 유 가격 급변 완화 대책 사업 등
 - (고물가의 영향을 받는 업종 지원) 어업자·양식업자, 원예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 시행,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을 고려한 공공사업 실시 등
 -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 GX 실현을 위한 대처 가속
- (국민 안심·안전 확보)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도시지역 등 방법 대책, 어린이·육아 지원, 여성·고령자 활약 및 참여 추진 등 성장형 경제로의 기초를 쌓는 정책

/seisaku/atarashii_chihousei/pdf/konkyo.pdf, 검색일자: 2024. 11. 26.)

355) 주민세 비과세 세대란 세대원 전원의 각각 연수입 예상액이 시정촌민세(지방세) 균등할 비교세 수준 이하인 세대를 의미. (적용되는 한도액은 지역별로 상이함). (일본 내각부, 「住民税非課税世帯等に対する臨時特別給付金 (10万円/1世帯) のご案内」, 2022. 11., <https://www5.cao.go.jp/keizai1/hikazei/pdf/leaflet.pdf>, 검색일자: 2024. 11. 26.)

- (규모) 이번 경제대책으로 인한 총 재정지출은 21.9조엔으로, 이 중 13.9조엔을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달할 예정
 - 이번 경제대책으로 인한 총 재정지출은 21.9조엔, 총 사업 규모는 39.0조엔으로 예상되며, 재정지출 21.9조엔은 일반회계 13.9조엔, 특별회계 0.9조엔, 재정투융자 1.1조엔으로 조달할 예정
- (경제효과) 이번 경제대책을 통해 실질 GDP 약 21조엔(연성장률 환산 약 1.2%, 향후 3년간 효과가 발현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순 평균) 규모의 경기부양 효과가 전망되며, 직접적인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고물가 대책(3.8조엔 규모)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약 0.3%p 완화될 전망*
 - * 연료유, 전기·가스 요금 급변 완화 대책에 의한 전년 동월 대비 2025년 2~4월 소비자물가(종합)의 완화 효과

표 3-II-15 일본의 「국민의 안심·안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재정지출 및 사업 규모 내역

(단위: 조엔)		
구분	재정지출	사업 규모
일본 경제·지방 경제 성장	10.4	19.1
고물가 대책	4.6	12.7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	6.9	7.2
합계	21.9	39.0

자료: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所得を増やす~」, 2024. 11. 22. p. 61.

다. 금융정책

- 일본은행, 금융정책운영방침 변경 발표(2024. 7. 31.)³⁵⁶⁾
 - 일본은행은 7월 30~31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금융시장 조절방침의 변경과 장기 국채 매입

356) 일본은행,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および長期国債買入れの減額計画の決定について」, 2024. 7. 31., 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4/k240731a.pdf, 검색일자: 2024. 8. 5.

감액 계획을 결정

- (금융시장 조절방침)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³⁵⁷⁾가 약 0.25%로 유지되도록 운용
 - 이번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는 3월 19일에 변경된 방침에 따라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0~0.1%로 유지되도록 운용해 왔으며, 현재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는 평균 0.227% (8. 22. 기준)³⁵⁸⁾
- (장기국채 매입) 매월 장기 국채 매입예정액을 분기마다 약 4,000억엔씩 감액하여, 2026년 1~3월에는 매입예정액이 약 3조엔에 도달하도록 감액 계획을 결정
 - * 2024년 7월 장기 국채 매입액은 약 5.7조엔 수준
- (기타 제도 적용 이율 변경) 상기 금융정책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보완 당좌예금제도, 기준 대출 이율, 대출 증가 지원 자금 등의 제도 적용 이율을 변경
 - (보완 당좌예금제도³⁵⁹⁾ 적용 이율) 보완 당좌예금제도의 적용 이율을 0.25%로 결정
 - (기준 대출 이율³⁶⁰⁾ 보완 대출제도³⁶¹⁾의 적용 금리인 기준 대출 이율을 0.5%로 결정
 - (대출 증가 지원 자금 공급 등(신규 실행 분)에 대한 적용 금리) 재해지 금융기관 지원 운영,³⁶²⁾ 기후 변화 대응 운영³⁶³⁾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0.25%로 결정, 대출 증가 지원 자금 공급³⁶⁴⁾에 대해서는 변동 금리 대출로 변경한 후 실시

357)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無担保コールレート, オーバーナイト物)는 콜시장에서 계약일에 자금을 수령 및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담보자금 대출 및 차입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seisaku/b32.htm>, 검색일자: 2024. 3. 26.)

358) 일본은행, コール市場関連統計 (毎営業日), https://www3.boj.or.jp/market/jp/menu_m.htm, 검색일자: 2024. 3. 28.

359) 일본은행이 받아들이는 당좌 예금 중 소요준비를 초과하는 '초과준비' 금액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제도.(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oth_a/index.htm, 검색일자: 2024. 8. 23.)

360) 「일본은행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관한 기준이 되는 대출 이율'.(일본 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laws.e-gov.go.jp/law/409AC000000089#Mp-Ch_2, 검색일자: 2024. 8. 26.)

361) 일본은행이 금융기관 등의 차입 신청을 받아 이미 차입된 담보 범위 내에서 기준 대출 이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행하는 대출.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한으로 함.(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len_a/index.htm, 검색일자: 2024. 8. 26.)

362) 대규모 재해를 입은 재해 지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금융조절 실시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복구·부흥을 위한 자금 수요에 대한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적격담보를 담보로 일본은행이 정하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고정 금리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자금공급 운영.(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ope_w/index.htm, 검색일자: 2024. 3. 26.)

363)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담보를 담보로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투융자 잔고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자금공급 운영.(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ope_x/index.htm, 검색일자: 2024. 3. 26.)

364)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행동과 기업 및 가계의 긍정적인 자금수요 증가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대출 잔액을 늘린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가액의 2배 상당액까지 장기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2012년 12월에 도입이 결정.(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seisaku/b30.htm>, 검색일자: 2024. 3. 26.)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일본 2024년 2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4. 9. 9.)³⁶⁵⁾

◦ 전 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연율 2.9%), 명목 GDP 성장률은 1.8%(연율 7.2%)로, 실질 GDP 성장률은 1차 속보치³⁶⁶⁾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1차 속보치와 동일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 0.7%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8%p로 민간최종소비지출, 공적자본형성, 민간기업설비 등의 하향 조정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0.9%p)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1%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민간수요) 전 분기 대비 민간수요 증가율은 0.7%로 1차 속보치(0.8%)에서 하향 조정
- 각종 통계 및 조사 반영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1차 속보치(1.0%)에서 하향 조정된 0.9%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 증가율은 1차 속보치(1.6%)에서 상향 조정된 1.7%,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1차 속보치(0.9%)에서 하향 조정된 0.8%를 기록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1%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공적수요) 전 분기 대비 공적수요 증가율은 0.8%로 1차 속보치(0.9%)에서 하향 조정
- 전 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은 0.1%로 1차 속보치와 동일하며, 공적자본형성 증가율은 4.1%로 각종 통계의 반영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4.5%)에서 하향 조정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³⁶⁷⁾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수출입) 전 분기 대비 재화·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1차 속보치(1.4%)에서 상향 조정된 1.5%이며, 재화·서비스 수입 증가율은 1.7%로 1차 속보치와 동일

365) 일본 내각부, 「2024년4~6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4. 9. 9.,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4. 9. 19.

366) 1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전 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8%(연율 3.1%), 명목 GDP 성장률은 1.8%(연율 7.4%).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8월 재정동향」 p. 25를 참고(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8월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28>, 검색일자: 2024. 9. 19.)

367) 공적재고 변동의 GDP 기여도의 정확한 수치는 -0.0000000001%p.(일본 정부통계 종합창구,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113542>, 검색일자: 2024. 9. 19.)

표 3-II-16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3			2024			2024 ¹⁾
	Q2	Q3	Q4	Q1	Q2 (1차 속보치)	Q2 (2차 속보치)	
실질 GDP	0.7	-1.1	0.1	-0.6	0.8	0.7	2.9
국내수요	-1.0	-0.8	-0.1	-0.1	0.9	0.8	3.1
민간수요	-1.0	-1.1	0.0	-0.2	0.8	0.7	3.0
민간최종소비지출	-0.8	-0.3	-0.3	-0.6	1.0	0.9	3.7
민간주택	1.4	-1.2	-1.1	-2.6	1.6	1.7	7.1
민간기업설비	-2.0	-0.2	2.1	-0.5	0.9	0.8	3.1
민간재고변동	(-0.0)	(-0.6)	(-0.1)	(0.3)	(-0.1)	(-0.1)	-
공적수요	-0.9	0.1	-0.4	0.1	0.9	0.8	3.3
정부최종소비지출	-1.2	0.6	-0.1	0.3	0.1	0.1	0.4
공적고정자본형성	1.0	-1.9	-1.7	-1.1	4.5	4.1	17.2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1.7)	(-0.3)	(0.2)	(-0.5)	(-0.1)	(-0.1)	-
재화·서비스 수출	3.2	0.1	3.0	-4.6	1.4	1.5	6.1
재화·서비스 수입	-4.1	1.3	2.0	-2.5	1.7	1.7	6.9
명목GDP	2.0	-0.0	0.7	-0.3	1.8	1.8	7.2
GDP 디플레이터	1.3	1.1	0.6	0.3	1.0	1.0	-

주: 1.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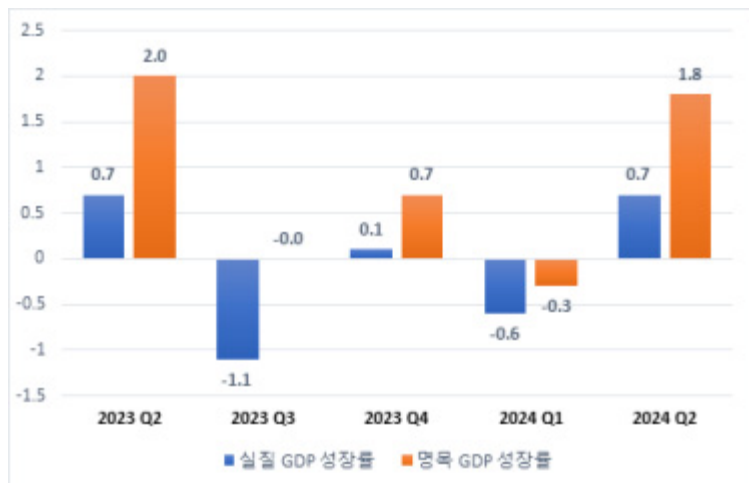
1) 2024년 2분기 GDP 2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자료: 일본 내각부, 「2024년4~6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p. 7, (표 3-3) 재구성

그림 3-II-7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2024년4~6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p. 7, (표 3-3)을 참고하여 작성

■ 일본 내각부, 2024년 3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4. 12. 9.)³⁶⁸⁾

- 전 분기 대비 2024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연율 1.2%), 명목 GDP 성장률은 0.5%(연율 1.8%)로, 실질 GDP 성장률은 1차 속보치³⁶⁹⁾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1차 속보치와 동일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 0.3%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5%p로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등의 하향 조정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0.6%p)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2%p로 1차 속보치(-0.4%)에서 상향 조정
 - (민간수요) 전 분기 대비 민간수요 증가율은 0.7%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전 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계절조정 방법 변경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0.9%)에서 하향 조정된 0.7%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 증가율은 1차 속보치(-0.1%)에서 상향 조정된 0.4%,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1차 속보치(-0.2%)에서 상향 조정된 -0.1%를 기록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2%p로 1차 속보치(0.1%p)에서 상향 조정
 - (공적수요) 전 분기 대비 공적수요 증가율은 -0.1%로 1차 속보치(0.3%)에서 하향 조정
 - 각종 통계의 반영 등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은 1차 속보치(0.5%)에서 하향 조정된 0.1%, 공적자본형성 증가율은 1차 속보치(-0.9%)에서 하향 조정된 -1.1%를 나타냄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수출입) 계절조정 방법 변경 등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재화·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1.1%로 1차 속보치(0.4%)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수입 증가율은 1.8%로 1차 속보치(2.1%)에서 하향 조정

368) 일본 내각부, 「2024년 7~9월 4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4. 12. 9.)」,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4. 12. 11.

369) 1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전 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연율 0.9%), 명목 GDP 성장률은 0.5%(연율 2.1%).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11월 재정동향」 pp. 36~38를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11월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47>, 검색일자: 2024. 12. 16.)

표 3-II-17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3		2024				2024 ¹⁾
	Q3	Q4	Q1	Q2	Q3 (1차 속보치)	Q3 (2차 속보치)	
실질 GDP	-1.0	0.2	-0.6	0.5	0.2	0.3	1.2
국내수요	0.9	0.0	-0.2	1.0	0.6	0.5	2.0
민간수요	-1.3	0.2	-0.2	0.7	0.7	0.7	2.7
민간최종소비지출	-0.6	-0.1	-0.6	0.6	0.9	0.7	2.7
민간주택	-0.9	-0.9	-2.7	1.2	-0.1	0.4	1.4
민간기업설비	-0.3	2.0	-0.4	1.1	-0.2	-0.1	-0.5
민간재고변동	(-0.6)	(-0.1)	(0.4)	(-0.1)	(0.1)	(0.2)	-
공적수요	-0.1	-0.3	-0.2	1.7	0.3	-0.1	-0.2
정부최종소비지출	0.5	-0.0	0.2	1.0	0.5	0.1	0.6
공적고정자본형성	-2.1	-1.7	-2.1	5.2	-0.9	-1.1	-4.3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1)	(0.1)	(-0.4)	(-0.4)	(-0.4)	(-0.2)	-
재화·서비스 수출	0.6	3.0	-4.1	1.5	0.4	1.1	4.5
재화·서비스 수입	0.7	2.1	-2.4	3.3	2.1	1.8	7.4
명목 GDP	-0.2	0.6	-0.1	1.9	0.5	0.5	1.8
GDP 디플레이터	0.9	0.5	0.4	1.4	0.3	0.1	-

주: 1.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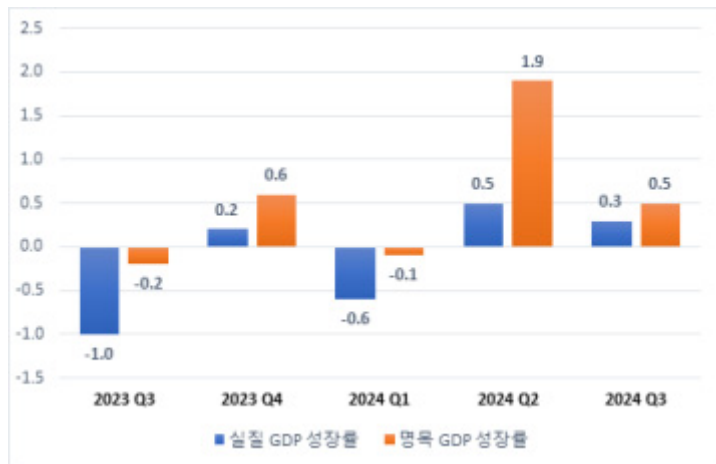
1) 2024년 3분기 GDP 2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자료: 일본 내각부, 「2024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p. 7 <표 3-3> 재구성

그림 3-II-8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2024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p. 7, <표 3-3>을 참고하여 작성

III 독일 370)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회계연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표 3-I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4. 7. 17.	연방내각, 2025 예산안 및 2024~2028 중기재정계획안 승인
2024. 7. 24.	독일 연방내각, 구조조정기금 이체법(Restrukturierungsfonds-Übertragungsgesetz) 초안 통과
2024. 7. 29.	독일 연방 통계청, 2023년 공공채무 통계 발표
2024. 8. 16.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2분기 독일 고용률 발표
2024. 8. 22.	독일 연방 재무부, 2024년 상반기 연방예산 분석 발표
2024. 8. 27.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2분기 독일 GDP 성장률 발표
2024. 8. 27.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 발표
2024. 9. 17.	독일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및 경제기후보호부와 함께 독일의 성장 및 혁신 자금 조달 강화를 위한 WIN-이니셔티브(Wachstums- und Innovationskapital für Deutschland) 합의
2024. 9. 20.	독일 연방 재무부, 2023년 예산의 국가채무제한제도(Schuldenbremse) 초과 발표
2024. 9. 24.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2분기 공공채무 통계 발표
2024. 9. 26.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4년 가을 공동 경제 전망(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4)' 발표
2024. 10. 4	연방 통계청, 2024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 잠정실적 발표
2024. 10. 9.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4년 가을 경제 전망' 발표
2024. 10. 24.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7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 결과 발표
2024. 11. 15.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3분기 독일 고용률 발표
2024. 11. 22.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3분기 독일 GDP 성장률 발표
2024. 12. 4.	독일 연방 재무부 장관, 2025년 임시예산에 대한 가능성 발표
2024. 12. 5.	독일 재정 안정화위원회, 제30차 회의 개최

자료: 저자 작성

3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염보라 연구원(ybr119@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2023~2024회계연도 예산

■ 독일 연방재무부, 2024년 상반기 연방예산 분석 발표(2024. 8. 22.)³⁷¹⁾

- 독일 연방 재무부는 2024년 8월 월간보고서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연방예산 분석을 발표
 - 2024년 상반기 연방예산 수입은 2,299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6.6%(142억유로)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3.1%(62억유로) 증가
 - 동 기간 기타수입은 241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0.3%(81억유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매각 및 기타 연방 자본 자산 활용으로 인한 수입이 35억유로 증가
 - 2024년 상반기 연방예산 지출은 2,626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0.2%(5억유로) 감소하였으며, 소모성 지출³⁷²⁾은 0.6%(15억유로) 증가하였으나 투자지출은 8.3%(20억유로) 감소
 - 소모성 지출의 증가는 보조금(2.3%)과 인건비(8.1%) 증가에 기인
 - 투자지출 감소는 전년도의 일회성 특수효과에 기인하며, 이 효과를 조정한 투자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3%(43억유로) 증가
 -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1.5%(32억유로) 감소
 -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연방예산은 327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

371) 독일 연방 재무부, "Entwicklung des Bundeshaushalts bis einschließlich Juli 2024," 2024. 8. 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Ausgabe/2024/08/Inhalte/Kapitel-4-Wirtschafts-und-Finanzlage/4-3-entwicklung-des-bundeshaushalts-juli-2024.html>, 검색일자: 2024. 8. 23.

372) 소모성 지출은 임대료, 전기세, 사무용품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

■ 독일 연방 재무부, 2023년 예산의 국가채무제한제도(Schuldenbremse)³⁷³⁾ 초과 발표 (2024. 9. 20.)³⁷⁴⁾

- 독일 연방 재무부는 2024년 9월 월간보고서를 통해 2023년 연방예산의 순차입은 456억유로(GDP의 1.40%)로 국가채무제한제도의 상한선(GDP의 0.35%)을 초과했다고 발표
 - 연방 재무부는 2023년 연방예산의 국가채무제한제도 초과는 에너지 위기 대응 및 홍수 복구에 따른 긴급 재정조치에 기인했다고 분석
 - 에너지 비용 상승에 약 200억유로, 홍수 피해 복구와 같은 재난 대응에 약 150억 유로가 할당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국방 및 인프라 개선, 사회복지 지원 등에 사용
 - 연방헌법재판소는 특별 재정 기금 사용에 대한 규정 강화를 통해 정부가 기존 기금의 지출을 재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부채 상환을 시작할 예정
 - 2028년부터 '2021 재건지원특별기금'을 위한 차입금에서 매년 약 440만유로가 상환되며, 2031년부터는 '경제 안정화 기금(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의 차입금에서 매년 약 13억유로를 상환
 - 2023년은 비상상황에 따라 채무제한 초과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경제 회복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병행할 예정

373) 국가채무제한제도는 부채제동장치(Debt brake)로 개정된 EU 안정성장협약과 신재정협약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에 기본법(헌법) 개정을 거쳐 도입하고 2011년부터 연방예산에 적용하였으며, GDP 대비 0.35%까지의 구조적 순차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국가채무제한제도는 자동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방의회의 규범통제 심판 등 사법적 통제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음.

374) 독일 연방 재무부, "Abrechnung der Schuldenbremse 2023," 2024. 9. 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Ausgabe/2024/09/Inhalte/Kapitel-3-Analysen/3-2-abrechnung-der-schuldenbremse-2023.html>, 검색일자: 2024. 9. 23.

2) 2025회계연도 예산

■ 연방내각, 2025 예산안 및 2024~2028 중기재정계획안 승인(2024. 7. 17.)³⁷⁵⁾³⁷⁶⁾

- 독일 연방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중기재정 계획안을 승인
 - (재정 전망) 2025년 연방예산 재정지출은 약 4,806억유로, 조세수입은 3,882억유로, 신규 차입은 438억유로이며, 전년 대비 지출과 신규 차입은 감소
 - 2025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83억유로(-1.7%), 신규 차입은 6억 5천만유로 (-12.9%) 감소
 - 반면 2025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38억유로(3.7%) 증가
 - 연방정부는 수년간의 위기 관련 특별 지출 이후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5년 부채 규정의 상한선을 계속 준수할 예정
 - (재정기조 및 주요 정책)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통한 안정성 유지와 미래를 대비한 기록적인 투자와 성장 이니셔티브 (Wachstumsinitiative)로 중장기 잠재 성장 증대라는 목표를 추구
 - (투자) 2025년 투자 예산은 780억유로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금융자산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독일 철도(Deutsche Bahn AG)에 59억유로 배정
 - (국방 및 안보) NATO 협약에 따라 국방비에는 GDP의 2% 이상을 할당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
 - (성장 이니셔티브) 경쟁력 강화, 기업가적 역동성 강화, 더 나은 인센티브와 숙련된 근로자, 효율적인 금융정책 및 에너지 시장 이상 5개 분야 49개 조치를 통해 독일 경제에 더 많은 역동성을 제공
 - (가족지원) 기본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사회적 취약층 학생들을

375) 독일 연방 재무부,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25 und Finanzplan bis 2028," 보도자료, 2024. 7.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7/2024-07-17-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5.html>, 검색일자: 2024. 7. 18.

376) 독일 연방 정부, "Kabinett beschließt Haushaltsentwurf 2025 und Wachstumsinitiative," 2024. 7. 17.,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haushalt-2025-wachstumsinitiative-2299130>, 검색일자: 2024. 7. 18.

위한 Start Chances 프로그램에 매년 10억유로를 할당하는 등 교육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

- (조세부담 경감)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과 세금 공제 및 혜택을 조정함으로써 2025년과 2026년동안 총 230억유로의 세금을 감면할 예정이며, 전기차 지원, 전기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주택지원) 사회주택 장려를 위해 2028년까지 200억유로 이상을 지원하고, 기후 중립적인 주택 신규 건설을 위한 추가지원 등 도시개발자금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
 - (기후 및 에너지) 기후보호 및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도구로 기후변화기금(KTF)을 유지하고, 기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 및 해안보호 등에 추가자금을 제공
 - (연구와 혁신) 연방정부는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강화를 위해 약 30억유로를 지원하고, 2025년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협약(Pact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통해 주요 과학 기관에 약 80억유로를 제공
-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과 함께 2025년 예산동반법(Haushaltsbegleitgesetz 2025)³⁷⁷⁾이 제출되었으며, 정부예산안에서 고려된 법적 변경사항으로 구성
- 성장 이니셔티브 조치에 따른 법적 변경사항은 기술적 구현 작업으로 인해 2025년 예산동반법과 별도로 제출될 예정

377) 세법 개정,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률 개정 등 연간예산법과 별개로 그 해의 재정 정책상 중요한 법률적 개정 사항들은 예산동반법이라는 법률 형태로 제정되며, 회계연도별 예산법과는 달리 예산동반법을 통해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변경할 때까지 유효

표 II-3-2 독일의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24 예산	2025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6	2027	2028
재정지출	4,889	4,806	4,746	4,862	4,978
전년 대비 변화율	6.9	-1.7	-1.2	2.4	2.4
재정수입	4,889	4,806	4,746	4,862	4,978
조세수입	3,744	3,882	3,999	4,139	4,277
신규차입	503	438	386	344	299
정보: 투자지출	708	780	775	755	714

주: 2024년 예산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에 대한 변화율이며, 2025년 예산안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2024 예산 대비 2025 예산안의 변화율임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25 und Finanzplan bis 2028," 보도자료, 2024. 7.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7/2024-07-17-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5.html>, 검색일자: 2024. 7. 18.

- (향후 일정) 2025년 예산안은 독일 연방의회에 제출되고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연방의회의 최종 승인 후 11월경 2025년 연방예산법으로 제정 및 공포

■ 독일 연방 재무부, '2025년 독일 재정계획안(Deutsche Haushaltsplanung 2025)' 발표 (2024. 10. 16.)³⁷⁸⁾

- (개요) 독일 연방 재무부는 10월 15일에 '독일 재정계획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EU 규정에 따라 유로화 도입 국가들은 매년 EU 집행위원회에 차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
 - '독일 재정계획안'은 연방정부의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안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주요 변화와 계획을 반영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예산의 재정 전망을 포함
- (전망) 독일의 명목 GDP 성장률³⁷⁹⁾은 2024년 3.0%, 2025년 2.8%로 전망되며, 2028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378)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5*, 2024. 10.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5.html, 검색일자: 2024. 10. 17.

379)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0.3%, 2025년 1.0%

- (재정수지) 2024년에는 GDP 대비 2.5%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1.75%로 줄어들고, 이후 2026~2028년까지도 재정적자는 감소세를 보일 것
 - 에너지 가격 안정화 조치의 만료로 2024년부터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경제회복에 따라 구조적 재정수지가 2023년 -2%에서 2025년 -1%로 개선
 - 또한 2024년까지 빠르게 증가했던 순지출 증가율은 2025년 약 2.25%로, 이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2024년과 2025년 63.25%를 기록하고, 2026~2028년 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할 전망
- (안정성장협약 준수) 보고서는 독일이 EU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규정을 준수하며, 재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 SGP의 개정에 따라 구조적 재정수지 대신 총지출 증가율이 주된 재정 지표로 전환
 - 독일은 순지출 증가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기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면서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음
 - (지출 증가율 기준) 순기초지출 증가율은 2024년 3.75%에서 2025년 2.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 요건³⁸⁰⁾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2024년 GDP 대비 1.75%였던 구조적 적자가 2025년에는 1.0%까지 줄어들어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투자) 2025년 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GDP의 약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2023년 GDP의 2.8%)
 - 민간 투자는 총 투자의 약 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과 2025년 정부 투자 보조금은 2023년 GDP의 1.5%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380)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 목표치를 기반으로 계산된 순기초지출 증가율 상한 목표로 순기초지출은 이자지출, 재량적 수입 조치 등을 조정한 지출임.

표 II-3-3 2025 독일 재정계획안의 주요 지표

(단위: GDP 대비 %, %)

구분	2023	2024	2025
일반정부 재정수지	-2.6	-2.5	-1.75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2.0	-1.75	-1
일반정부 국가채무	62.9	63.25	63.25
순기초지출 증가율	5.0	3.75	2.25

주: 0.25%p를 기준으로 반올림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5," 2024. 10. 16., <table 1>; <table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5.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4. 10. 17.

3) 연립정부 붕괴 및 2025년 임시예산

■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 조기 총선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2024. 11. 13.)³⁸¹⁾

- 독일의 총리 올라프 솔츠는 정부성명을 통해 12월 16일 총리에 대한 연방의회 신임 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며, 2025년 2월 조기 총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힘
 - 지난 6일 독일 총리는 재무부 장관인 크리스티안 린트너를 해임하면서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신호등 연립정부를 종료
 - 린트너 전 재무장관이 소속된 자유민주당은 보다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주장해 왔으나, 솔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추진하려는 사회적 투자와 에너지 전환 정책과 충돌
 -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에 따라 내부 결속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린트너 장관의 해임을 결정
 - 솔츠 총리는 신임 투표를 앞두고 네 가지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발표
 - (물가연동제(Die kalte Progression)³⁸²⁾ 조정) 2025년부터 근로자들이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에도 더 많은 순소득(Netto)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세금 체계를

381) 독일 연방 정부, "Einig handeln, wo wir einig sind," 2024. 11.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regierungserklaerung-november-2024-2319784>, 검색일자: 2024. 11. 27.; "Kanzler Scholz zur Entlassung des Finanzministers Christian Lindner," 2024. 11. 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bk-statement-zur-entlassung-des-finanzministers-2319062>, 검색일자: 2024. 11. 27.

382)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명목상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현상

조정

- (독일 경제성장 촉진) 성장 이니셔티브(Wachstumsinitiative)³⁸³와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
- (아동수당 및 아동 지원금 인상) 2025년 1월부터 자녀를 둔 가정이 받는 아동수당과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 추가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
- (헌법재판소 강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여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도전으로부터 보호하고 강화

■ 독일 연방 재무부 장관, 2025년 임시예산³⁸⁴에 대한 가능성 발표(2024. 12. 4.)³⁸⁵

- 독일 연방 재무부 장관 외르크 쿠키스는 2024년 연말까지 2025년 예산안이 연방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면서 임시예산 발효 시사
 - 독일의 2025년 연방예산은 연방의회에서 아직 최종 승인되지 않았으며, 2025년 1월부터 임시예산(해당 연도의 수입 예상액에 기반한 최소한의 집행 기준)이 발효될 가능성이 있음
 - 임시 예산 체제에서도 정부는 연금 및 아동수당 지급, 연방 교육지원법에 따른 학생 지원 등 기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기본법 제111조 제1항³⁸⁶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 주요 투자 계획 등에는 제한이 따름

383) 독일의 새로운 경제적 역동성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49개 조치로 세금조정, 근로 인센티브, 전기요금 인하 등이 포함

384) 임시예산은 회계연도 초에 연방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기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시 예산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규정은 연방예산법 제5조에 따라 연방 재무부에서 결정. 2000년 이후 운영된 임시예산은 총 아홉 차례이며,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지속

385) 독일 연방 재무부, "Minister Kukies zur vorläufigen Haushaltsführung," 2024. 12. 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Video-Textfassungen/2024/textfassung-2024-12-04-haushaltsfuehrung.html>, 검색일자: 2024. 12. 5.; "Fragen und Antworten zur vorläufigen Haushaltsführung," 2024. 12.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FAQ/vorlaeufige-haushaltsfuehrung.html>, 검색일자: 2024. 12. 18.; 독일 연방 정부, "Weg frei für Neuwahlen," 2024. 12.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abstimmung-vertrauensfrage-2325612>, 검색일자: 2024. 12. 18.

386) 회계연도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해의 예산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당해 예산안이 법률로써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일체의 지출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유지 및 법률이 정한 조치 실행, 2. 법규상 연방의 의무 이행, 3. 전년도의 예산에서 이미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긴급, 조달 및 그 밖의 급부를 계속하거나 이러한 목적에 대한 보조의 지속

- 12월 17일 올라프 솔츠 총리가 최종적으로 재신임을 얻지 못함에 따라 의회는 해산될 예정이며, 2025년 2월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연방정부 및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예정³⁸⁷⁾
 - 국회의원 733명 중 717명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신임 207표, 불신임 394표, 기권 116표로 최종 불신임 결정
 - 올라프 솔츠 총리는 대통령에게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안 수락 시 선거일은 2025년 2월 23일로 예상
- 임시예산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정식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영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연방내각은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
 - 임시예산 기한은 당해 예산안이 법률로써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이므로, 연방 재무부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각 부처의 요청을 토대로 협의하여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 및 승인하는 기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따름

나. 결산

1) 결산 및 세수추계

-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7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³⁸⁸⁾ 결과 발표(2024. 10. 24.)³⁸⁹⁾
 - 제167차 세수추계는 연방 정부의 2024년 가을 전망 거시경제적 주요 수치를 기반으로 하며, 전체 세입은 5월 세수추계의 추정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
 - 실질 GDP성장률은 2024년 -0.2%, 2025년 1.1%, 2026년 1.6%로 예상되며, 향후 외부경제력 강화와 민간 소비 증가가 경제모멘텀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음
 - 세수추계 결과, 2024년 총 세입은 9,416억유로로 직전 추계(2024년 5월) 대비

387)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신호등 연립정부의 종료에 따른 조기 총선의 배경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2024년 11월호」 참고.

388) 독일은 연 2회 세수추계 결과를 발표함. 재무부를 비롯해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5개 경제연구소, 연방 통계청, 연방 연방은행, 거시경제자문위원회, 주정부 재무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세수추계를 담당

389)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7. Steuerschätzung," 보도자료, 2024. 10.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10/2024-10-24-ergebnisse-der-167-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4. 10. 29.; 독일 연방 정부, "Langfristig geringere Einnahmen" 2024. 10. 2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euerschaetzung-oktober-2024-2317500>, 검색일자: 2024. 10. 29.

87억유로, 2025년은 127억유로 하향 조정

- 연방정부의 세입은 올해 34억유로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직전 추계보다 7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8년까지 전체 주(州)에서의 국세 수입은 약 58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총임금의 증가율은 봄 전망과 유사하나, 기업 및 투자 소득은 봄 전망보다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주택투자나 매매에 대한 세금 역시 봄 추정치 대비 부정적
-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연방 재무장관은 장기적인 소득감소를 고려하여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국가의 미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표 II-3-4 독일의 제167차 세수추계 결과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방정부	금액	356.0	372.2	389.7	397.3	410.3	425.8
	전년 대비 증감률	5.6	4.5	4.7	2.0	3.3	3.8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3.4	0.7	-3.0	-4.3	-2.6
주정부	금액	382.6	392.1	406.3	422.3	438.2	453.4
	전년 대비 증감률	-0.5	2.5	3.6	4.0	3.8	3.5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2.3	-4.7	-4.4	-5.3	-6.2
지방자치단체	금액	141.6	145.2	151.6	159.3	165.4	171.1
	전년 대비 증감률	4.6	2.5	4.4	5.1	3.9	3.4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0.6	-1.0	-0.1	-0.4	-0.6
EU	금액	35.4	32.0	34.9	46.0	49.2	46.8
	전년 대비 증감률	-8.2	-9.6	9.0	31.7	6.9	-4.8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2.4	-7.7	-4.1	-1.7	-4.0
총세수	금액	915.8	941.6	982.4	1,024.9	1,063.2	1,097.1
	전년 대비 증감률	2.2	2.8	4.3	4.3	3.7	3.2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8.7	-12.7	-11.6	-11.7	-13.4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7.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1," 2024. 10.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7-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6, 검색일자: 2024. 10. 29.; Ergebnis der 167.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2," 2024. 10.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7-steuerschaetz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6, 검색일자: 2024. 10. 29.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주요 경제·재정 전망

- 독일 연방은행, 7월 월간보고서에서 독일의 2분기 경제분석 발표(2024. 7. 22.)³⁹⁰⁾
 - 독일 연방은행은 7월 월간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산업 부문 약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2분기 GDP가 약간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부문에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 촉진에 의해 서비스 부문의 회복은 계속될 전망
 - 2분기 서비스 부문의 감정지표가 낙관적으로 나타남
 - (고용) 현재 독일의 경제는 취약하나 강력한 이민으로 실업과 고용이 함께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몇 달간 지속될 전망
 - 의료 및 장기 요양, 교육, 에너지 및 물 공급 등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률이 증가
 - (물가) 2분기 물가상승률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더 이상의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5월 2.8%, 6월 2.5%였으며,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 하락
 - 독일의 3분기 경제활동은 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다소 강화될 것이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 노동 시장 강세, 임금 상승 및 소비심리 상승,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는 모멘텀을 얻을 것

390) 독일 연방은행, "German economy recovering only slowly," 2024. 7. 22., <https://www.bundesbank.de/en/tasks/topics/german-economy-recovering-only-slowly-936490>, 검색일자: 2024. 7. 29.; "Monthly Report - July 2024," <https://publikationen.bundesbank.de/publikationen-en/reports-studies/monthly-reports/monthly-report-july-2024-935476?article=commentary-economic-conditions-935490>, 검색일자: 2024. 7. 29.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4년 가을 공동 경제 전망(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4)' 발표(2024. 9. 26.)³⁹¹⁾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ifo Institut, 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IfW Kie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IWH), RWI Essen)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 2회 공동 경제 전망을 발표해 연방정부의 경제 전망에 지침을 제공

◦ (경제성장률)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0.1%, 2025년에 0.8%, 2026년 1.3%로 전망

-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4년 봄 경제 전망 전망치와 동일하며, 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6%p 하향 조정됨

• 더딘 경제회복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

- 독일 경제는 탈탄소화, 인구 고령화,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회복이 더딘 상태이며, 앞으로 여러 분기에 걸쳐 천천히 회복될 전망

- 특히 제조업은 에너지 비용 증가 및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변화와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높은 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가 감소

- 2024년과 2025년의 재정정책은 다소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성장 이니셔티브³⁹²⁾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임

- (물가) 2024년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2.2%로 예상되며, 2025년과 2026년에는 2.0%로 감소할 전망

-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4년 2.7%, 2025년 2.4%로 전망

◦ (노동시장) 2024년과 2025년의 실업률은 6%로 유지될 전망이며, 2026년에 5.7%로 감소

-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 및 서비스

391)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4: Deutsche Wirtschaft im Umbruch - Konjunktur und Wachstum schwach," 2024. 9. 26.,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4/09/26/gemeinschaftsdiagnose-herbst-2024-deutsche-wirtschaft-im-umbruch-konjunktur-und-wachstum-schwach/>, 검색일자: 2024. 10. 14.; "PRESSEMITTEILUNG DER GEMEINSCHAFTSDIAGNOSE 2/2024," 보도자료, 2024. 9. 26.,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4/09/iwh-press-release_2024-26_Gemeinschaftsdiagnose_2-24_de.pdf, 검색일자: 2024. 10. 14.

392) 양질의 일자리 제공, 탈탄소화 구현 등을 통해 독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9개 조치로 구성된 독일의 경제성장 패키지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7월호 재정동향」, 「2024년 9월호 재정동향」 참고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는 유지될 전망

- (재정수지)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1%로 감소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1.9%로 더욱 감소할 전망
- (위험요인) 경제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 구조적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그리고 세계 경제와의 연관성에서 발생하는 외부 리스크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

표 II-3-5 2024년 가을 공동 경제전망(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단위: %, 천명,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 GDP 성장률(%)	1.4	-0.3	-0.1	0.8	1.3
취업자 수(천명)	45,675	46,011	46,176	46,244	46,267
실업률(%)	5.3	5.7	6.0	6.0	5.7
소비자물가상승률(%)	6.9	5.9	2.2	2.0	2.0
일반정부 재정수지(십억유로)	-84.9	-107.5	-92.3	-82.5	-85.8
(GDP 대비 %)	-2.1	-2.6	-2.1	-1.9	-1.9
경상수지(십억유로)	174.5	248.7	283.1	276.9	267.8
(GDP 대비 %)	4.4	5.9	6.6	6.3	5.9

주: 2024, 2025, 2026년도는 전망치

자료: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4: Deutsche Wirtschaft im Umbruch – Konjunktur und Wachstum schwach," (Tabelle 2.4), p. 35.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4년 가을 경제 전망' 발표(2024. 10. 9.)³⁹³⁾

- (개요) 독일의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0월 9일, '2024년 가을 경제 전망'을 발표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는 매년 봄과 가을에 세수 추계, 예산 편성 관련 거시경제 지표 기준, EU 제출 보고서 등의 기초가 되는 경제 전망을 발표
- (경제 전망) 산업생산, 기업여건 등의 지표를 보면 2024년 하반기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부터 점차 회복될 전망

393)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Herbstprojektion: Bundesregierung rechnet mit Belebung der Wirtschaft im kommenden Jahr," 2024. 10. 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10/20241009-herbstprojektion.html>, 검색일자: 2024. 10. 15.;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4" 2024. 10. 9.,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41009-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4.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4. 10. 15.

- (GDP)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0.2%에서 경제활동 회복을 통해 2025년 1.1%, 2026년 1.6%로 점차 개선될 전망
 -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 하락, 실질소득 증가, 민간소비, 해외 공산품 수요, 투자활동 등이 회복되고, 연방정부의 성장 이니셔티브 조치에 따른 효과도 발현될 전망
 - 특히 인금인상, 물가상승률 하락, 세금감면 등으로 인한 가계 구매력 증가로 민간 소비가 다시 확대될 전망
 - 국제기구 예측에 따르면 독일의 해외 판매는 강력하게 성장하여 수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계, 시스템 및 차량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건설투자는 2026년부터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승
- (물가)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2%에서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2.0%, 1.9%로 점차 하락할 전망
 - 물가상승률 하락의 요인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 긴축적 통화정책 등이 있음
- (노동시장) 경기 회복은 노동 수요의 새로운 증가를 동반하고, 성장 이니셔티브 활성화와 함께 2025년부터 노동시장은 역동적으로 발전할 전망

표 II-3-6 독일의 2024년 가을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3	2024	2025	2026
실질 GDP 성장률	-0.3	-0.2	1.1	1.6
가계최종소비	6.3	2.8	3.1	3.1
정부최종소비	4.1	5.2	2.8	3.2
총고정자본형성	-1.2	-3.4	0.7	3.5
설비	-0.8	-6.8	1.4	5.3
건설	-3.4	-3.9	-0.6	2.6
기타	4.7	4.2	3.2	3.0
내수	-0.4	-0.6	1.1	1.7
수출 증가율	-0.3	-0.1	1.7	2.8
수입 증가율	-0.6	-1.2	1.9	3.1
실업률(연방 고용청 기준)	5.7	6.0	5.9	5.5
고용	0.7	0.4	0.3	0.3
소비자물가상승률	5.9	2.2	2.0	1.9

자료: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4," 2024. 10. 9.,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41009-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4.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4. 10. 15.

■ 독일 연방은행, 12월 독일 경제 전망 발표(2024. 12. 13.)³⁹⁴⁾

- 독일 연방은행은 12월 경제전망 발표에서 독일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 역풍과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발표
 - (경제성장률)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0.2%에서 2025~2027년에 각각 0.2%, 0.8%, 0.9%로 완만히 회복될 전망
 - 수출과 투자 부문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 시장 및 임금 상승의 둔화로 인해 민간 소비의 증가세는 한정적일 전망
 - (물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HICP)은 2024년 2.5%에서 2025년 2.4%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며, 2026년 이후 2%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 (재정적자 및 채무) 일반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3년 2.6%에서 2027년 2.4%로 감소하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3년 62.9%에서 2027년 61.7%까지 감소할 전망
 -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시행된 정부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재정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이자 지급, 사회 보장, 국방 지출 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위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구조적 변화 그리고 2025년 독일 총선 이후 경제·재정 정책 방향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표 II-3-7 독일 연방은행의 12월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변화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 GDP(달력조정)	-0.1	-0.2	0.2	0.8	0.9
실질 GDP(조정 없음)	-0.3	-0.2	0.1	1.1	1.0
소비자물가지수	6.0	2.5	2.4	2.1	1.9
소비자물가지수 (에너지, 식품 제외)	5.1	3.3	2.4	1.9	2.0

자료: 독일 연방은행, "The Bundesbank's Forecast for Germany: economy struggling with persistent headwinds," 2024. 12. 13. <https://www.bundesbank.de/en/press/press-releases/the-bundesbank-s-forecast-for-germany-economy-struggling-with-persistent-headwinds-947562>, 검색일자: 2024. 12. 17.

394) 독일 연방은행, "The Bundesbank's Forecast for Germany: economy struggling with persistent headwinds," 2024. 12. 13., <https://www.bundesbank.de/en/press/press-releases/the-bundesbank-s-forecast-for-germany-economy-struggling-with-persistent-headwinds-947562>, 검색일자: 2024. 12. 17.

나. 경제 및 재정정책

- 독일 연방내각, 구조조정기금 이체법(Restrukturierungsfonds-Übertragungsgesetz) 초안 통과(2024. 7. 24.)³⁹⁵⁾
 - 연방내각은 구조조정기금(Restrukturierungsfonds)의 기존 자원을 금융시장 안정화 기금(Finanzmarktstabilisierungsfonds)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승인
 - ※ 구조조정기금(RSF)은 금융 위기 시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독일에서 설립된 특별기금으로, 독일의 은행들로부터 부과된 은행세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며 문제 발생 시, 은행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
 - ※ 금융시장 안정화 기금(FMS)은 독일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기금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자본 기반을 강화하여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발생 비용이나 손실을 주로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 구조조정기금의 기존 자원을 금융시장 안정화 기금으로 이전하여 누적된 적자를 부분적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 이전 시 적자는 216억유로에서 23억유로까지 감소
 - 이를 통해 독일 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구조조정기금의 자금을 법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재배치
 - 또한 2024년부터는 은행세³⁹⁶⁾에 대한 세제 혜택 금지 규정³⁹⁷⁾이 폐지되어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2024년부터 은행세는 운영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유럽 내 다른 금융기관들과 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95) 독일 연방 재무부, "Bundeskabinett beschließt Gesetz zur Übertragung von Altmitteln aus der Bankenrestrukturierung," 2024. 7.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7/2024-07-24-altmittel-aus-bankenrestrukturierung.html>, 검색일자: 2024. 7. 30.

396) 은행세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특별 세금으로,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었으며,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금융위기 시 구제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어 법인세와는 별도로 구분됨.

397) 금융기관들이 은행세를 납부할 때 그 금액을 세금 공제 항목으로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금융기관이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 독일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및 경제기후보호부와 함께 독일의 성장 및 혁신 자금 조달 강화를 위한 WIN-이니셔티브(Wachstums- und Innovationskapital für Deutschland)³⁹⁸⁾ 합의(2024. 9. 17.)³⁹⁹⁾

- 독일 연방정부는 정부부처, 은행, 산업계, 학계, 투자자들과 함께 스타트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WIN-이니셔티브 약 120억유로를 투자하기로 합의
 - WIN-이니셔티브의 핵심 조정자는 독일개발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이며, 대학, 투자자,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며, 성장 및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둠
 - WIN-이니셔티브에서 열 가지 핵심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각 조치는 정부, 독일개발 은행, 금융업계 및 기업들이 협력하여 실행

표 II-3-8 WIN-이니셔티브 핵심조치

핵심조치	주요 내용
대학-투자자-기업 협력 확대	'EXIST-Leuchtturmettbewerb'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생태계 발전
개인 투자자를 위한 혁신 자본 투자 기회 확대	- 고액 자산가 및 적합한 개인 투자자 대상 금융 상품 제공 - 자본 확장을 위한 투자 기회 마련
펀드 구조 강화	- 리스크 분산을 위한 펀드-오브-펀드 확대 - 투자 조건 개선을 통해 자본 유치
클린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 클린테크 스타트업의 산업화 단계 확장 지원 - 정부와 민간 자본의 협력을 통한 자금 지원
혁신 자본 투자에 대한 지식 전수	- 투자 교육 프로그램과 노하우 전수 확대 - 혁신 자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 증진
공공 자금을 통한 혁신 자본 투자 확대	- 공공 자금을 활용한 벤처 캐피탈 투자 확대 방안 연구 - 공공 기금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
IPO 및 엑시트(exit) 조건 개선	- 스타트업 상장(IPO) 및 투자 회수 환경 개선 - 상장 절차 간소화를 통한 벤처 캐피탈 투자 활성화
벤처 캐피탈 펀드의 2차 시장 강화	- 벤처 캐피탈 펀드 지분 거래를 위한 2차 시장 구축 - 자본 유동성 및 투자자 참여 확대
혁신 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 개선	- 혁신 자본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자본 유입 촉진

398) 독일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 지원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자본을 제공해, 기술 혁신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금 조달은 정부와 민간 투자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유럽 투자은행(EIB) 등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399)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Breites Bündnis aus Wirtschaft, Verbänden, Politik und KfW bekennt sich im Rahmen der WIN-Initiative zum Start-up-Standort Deutschland," 2024. 9. 17.,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9/20240917-breites-buendnis-bekannt-sich-zum-start-up-standort-deutschland.html>, 검색일자: 2024. 9. 19.

핵심조치	주요 내용
보험 및 연금 기금의 혁신 자본 투자 가능성 확대	- 보험사 및 연금 기금의 혁신 자본 투자 가능성 강화 - 법적, 규제적 장벽 완화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

자료: 독일 연방정부, "WIN-Initiative Wachstums- und Innovationskapital für Deutschland," 2024. 9.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Internationales-Finanzmarkt/Start-ups/win-initiative-absichtserklaerung.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4. 9. 19.

■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와 Digital Pact 2.0 합의(2024. 12. 13.)⁴⁰⁰⁾

-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총 6년의 기간으로 구성된 50억유로 규모의 Digital Pact 2.0에 합의
 - Digital Pact 2.0은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교육 및 학습 방법 개발 촉진을 목표로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수립
 - (디지털 인프라) 모든 학교에 Wi-Fi 네트워크, 최신 장비 및 디지털 학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연방정부는 22억 5천만유로, 주정부는 5억유로 재정을 지원
 - (디지털화를 위한 학교 및 수업 개발) 교사들의 교육, 연수, 재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정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 (디지털 학습) 디지털 교육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억 5천만유로를 투자하여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도구 개발 및 질적 연구 지원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의 50%씩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며, 2025년 2월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할 예정
 - 연방정부 25억유로 중 22억 5천만유로는 디지털 인프라에 사용되며, 주정부는 25억유로 중 20억유로를 기존 계획에 활용할 예정

다. 안정화위원회 자문

■ 독일 안정화위원회, '새로운 EU 재정준칙⁴⁰¹⁾에 대한 특별의견서' 발표(2024. 10. 11.)⁴⁰²⁾

400)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 "Bund und Länder einigen sich auf Digitalpakt 2.0," 2024. 12. 13., <https://www.bmfbf.de/SharedDocs/Kurzmeldungen/DE/2024/12/Digitalpakt.html?templateQueryString=Digitalpakt+2.0>, 검색일자: 2024. 12. 16.; 독일 연방정부, "Bund und Länder stellen Weichen für Digitalpakt 2.0," 2024. 12.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digitalpakt-2-0-2325422>, 검색일자: 2024. 12. 16.

401) EU 재정 규칙은 각 회원국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새로운 규칙은 각국의 GDP, 이자율, 경제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특정 지출 증가율을 설정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4년 4월호 재정동향」 참고

402) 독일 안정화위원회, "Pressemitteilung des Beirats zur Außerordentlichen Stellungnahme, Herbst 2024,"

- 독일 안정화위원회는 특별의견서를 통해 2024년부터 독일의 재정 운영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2024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EU 재정준칙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EU에서 제공한 기준 경로에 따르면 독일의 2024년 지출 증가율이 약 2.5%로 설정되었으나, 독일 정부의 추정 지출 증가율은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안정화위원회는 독일이 독자적인 지출 증가율 경로(reference path)를 설정하고 EU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2024년 지출이 EU가 권고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초과지출 보안 방안 마련을 촉구
 - 또한 지출 증가를 제한하고 재정 계획 수립 시 유럽 차원의 규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EU의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독일 재정 안정화위원회,⁴⁰³⁾ 제30차 회의 개최(2024. 12. 5.)⁴⁰⁴⁾

- (주요 논의) 독일 재정 안정화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예산원칙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구조적 일반정부 적자 한도 준수와 잠재적인 예산 위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브레멘 재정회복 프로그램에 합의
 - 독일은 현재 경제 성장과 공공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개정된 EU 예산 모니터링 체제를 위한 국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가 탈탄소화, 인구 고령화, 그리고

2024. 10. 11., https://www.stabilitaetsrat.de/SharedDocs/Downloads/DE/Beirat/2024/20241011_Pressemittteilung_Beirat.html, 검색일자: 2024. 10. 28.; 「Außerordentliche Stellungnahme des Beirats, Herbst 2024.」, 2024. 10. 11., https://www.stabilitaetsrat.de/SharedDocs/Downloads/DE/Beirat/2024/Stellungnahme/20241011_Au%C3%9Ferordentliche_Stellungnahme_Beirat.pdf?_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4. 10. 28.

403) 독일의 재정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연방 재무장관과 경제기후보호부장관, 주 정부 재무장관들로 구성되어 통상 연 2회 회의를 개최.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을 정기 모니터링해 예산 비상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EU 안정성장협약의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해 필요시 건전화 방안을 권고

404) 독일 연방 재무부, “30.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5. Dezember 2024,” 보도자료, 2024. 12. 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12/2024-12-05-30-sitzung-stabilitaetsrat.html>, 검색일자: 2024. 12. 9.;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 “30. Sitzung 12/2024 Pressemitteilung,” 2024. 12. 5., https://www.stabilitaetsrat.de/SharedDocs/Downloads/DE/Sitzungen/20241205_30.Sitzung/Pressemitteilung/20241205_Pressemitteilung.html, 검색일자: 2024. 12. 9.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으며,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

- 독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중기재정계획(FSP)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안정화 위원회는 새로운 연방정부가 2026년 연방예산안과 2029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독일 총선으로 인해 중기재정계획 제출이 2025년으로 연기된 상태이며, 안정화 위원회는 국내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
 - 안정화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연방 및 모든 주에서 부채제한을 준수했으며, 2025년도 대부분에서 준수할 것으로 예상
 - 잘란트의 예산 지표가 예산 위기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위기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브레멘은 예산 위기가 예상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
 - 브레멘주는 계속해서 예산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어 2028년까지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합의
- (자문위원회⁴⁰⁵)의 평가) 최근 안정화위원회는 재정 전망 및 재정적자 상한 준수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유럽 재정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시행하지 않아 EU 및 독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
- 자문위원회는 연방정부 수립 전까지 중기재정계획의 제출 연기와 새로운 재정 전망을 작성할 수 없다는 안정화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며, 2025년 봄까지 최신 재정 전망과 세수 추정치 작성 재개를 권고
 - 모니터링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EU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재개를 권고

라. 기타

■ 독일 연방정부, 우크라이나에 5천만유로 상당 의료지원 추가 제공(2024. 9. 18.)⁴⁰⁶

405) 자문위원회는 안정화위원회법(Stabilitätsratsgesetz) 제8조에 근거해 의견 및 권고를 제시하여 재정 안정화위원회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 연방은행, 경제전문가위원회, 공동 경제 전망(Gemeinschaftsdiagnose)에 참여하는 독일 경제연구소 대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보험에서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

406)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land beschließt weitere medizinische Hilfe für die Ukraine," 2024. 9. 18., ht

-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 재무부, 연방 보건부와 의 공동성명을 통해 부상 당한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을 위해 추가로 최대 5천만유로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
 - 추가 지원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원활하게 의료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방행정청을 통해 치료 비용은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될 예정
 - 독일은 2022년부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치료해 왔으며, 가장 많은 중증 부상자를 치료한 국가
 - 이번 지원은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 인프라가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
- 독일 연방은행, 2023년 독일 신용기관 성과 개선 발표(2024. 9. 17.)⁴⁰⁷⁾
 - 독일 연방은행은 2024년 9월 월간보고서를 통해 2023년 독일 신용기관의 실적이 전년 대비 80% 증가하면서 대폭 개선되었다고 발표
 - 경제환경이 낙관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순이자수입이 금리 인상의 결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수수료 및 비은행 활동에서의 수익 증가도 신용기관 실적 개선에 기여
 - 독일 은행의 수익성과 비용 효율성도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자산 수익률은 0.46%로 높은 수치에 도달
 - 은행의 행정지출이 2.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수입 비율은 25년 만에 가장 낮은 59.2%를 기록
 -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존
 - 침체된 신규 대출 수요와 당좌 예금을 정기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순이자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독일 연방정부의 지속가능금융 자문위원회(Sustainable Finance Advisory Board, SFB),

[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9/2024-09-18-medizinische-hilfe-fuer-die-ukraine.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9/2024-09-18-medizinische-hilfe-fuer-die-ukraine.html), 검색일자: 2024. 9. 19.

407) 독일 연방은행, "German credit institutions' performance improved significantly in 2023," 2024. 9. 17., <https://www.bundesbank.de/en/tasks/topics/german-credit-institutions-performance-improved-significantly-in-2023-940238>, 검색일자: 2024. 9. 24.

제20차 입법기간 최종보고서 제출(2024. 11. 22.)⁴⁰⁸⁾

- * 금융·실물경제·시민사회·과학계 고위 인사 34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금융 자문위원회는 2022년에 독일 연방정부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규제와 민간 자본을 활용한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전문위원회
-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발전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금융 시스템) 독일은 2034년까지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통합, 실물 경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독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적 및 사회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는 리더십이 필요
 - 금융시장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을 적절히 배분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방향이 필요
 - 독일 기업들은 디지털화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보고
 - (지속가능한 금융 규제) 지속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들이 상호 연계되고 민간 자본이 효율적으로 경제에 투입되어야 함
 - *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는 Taxonomy,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s Regulation, SFDR),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를 포함
 - EU의 Taxonomy⁴⁰⁹⁾ 및 ESG 등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ESG 등급의 표준화를 통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
 -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 개선과 단순화 필요

408) 독일 연방 재무부, "Sustainable Finance-Beirat übergibt Abschlussbericht für die 20. Legislaturperiode an die Bundesregierung," 2024. 11. 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11/2024-11-22-sustainable-finance-abschlussbericht.html>., 검색일자: 2024. 11. 26.; Empfehlungen des Sustainable Finance-Beirats der Bundesregierung, FUNDING OUR TOMORROW, 2024.

409) Taxonomy는 비 재정적 및 재무적 이해 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 계산 및 비교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정의하는 분류 시스템

표 II-3-9 Taxonomy, SFDR, CSRD의 차이점

구분	Taxonomy	SFDR	CSRD
의의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 정의 및 분류	금융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대상	경제활동과 투자	금융 시장 참여자와 금융상품 제공자	대기업, 상장 기업, 중소기업
목적	지속가능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융 시장 내 지속가능성 투명성 강화	ESG 정보 공시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법적기준	녹색 경제활동 정의를 위한 6개 환경 목표	지속가능 금융 상품 분류 및 공시 기준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적용범위	경제활동 및 프로젝트	금융 상품 및 투자 전략	전체 기업 운영 및 공급망 정보

자료: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자료(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Implementing and delegated acts - SFDR,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를 참조하여 저자 정리

- (산업 및 인프라 투자) 산업과 인프라는 기후전환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
 - 독일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 비율은 낮은 편이며,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기술 및 프로세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이 필요
 - 에너지 전환 및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PPP) 강조
 -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인프라(전력망,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 등) 투자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민간 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민간 자본 동원) 기후변화와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 부문에서 동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금융의 핵심
 - 녹색 채권 발행을 통해 기후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발행된 녹색 채권 총액은 557억유로
 - 자산가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펀드와 저축 상품과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제공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가. 경제 통계

1) 경제성장률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2분기 독일 GDP 성장률 발표(2024. 8. 27.)⁴¹⁰⁾
 - (전 분기 대비) 독일의 2024년 2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는 전 분기 대비 0.1% 감소
 - 전 분기 대비 정부소비지출은 1.0%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는 0.2% 감소
 - 전 분기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특히 기계, 장치 및 차량 부문에서 -4.1%로 크게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독일의 2024년 2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 장비투자 -6.5%, 건물투자 -3.2% 등 전년 동기 대비 투자가 크게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3% 증가, 수입은 2.0% 감소
 - 상품 수출은 0.4%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출은 0.3% 감소
 - 상품 수입은 3.7%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입은 2.3% 증가
 - 2024년 2분기 EU의 GDP 성장률은 0.3%이며, 독일의 성장률은 0.1%로 EU 전체 및 주요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
 - 2024년 2분기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은 각각 0.8%, 0.3%, 0.2%

410) 독일 연방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stagnant in 2nd quarter of 2024," 2024. 7. 30.,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7/PD24_289_811.html, 검색일자: 2024. 8. 6.;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2. Quartal 2024" 2024. 8. 27.,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25_811.html, 검색일자: 2024. 8. 28.

표 II-3-10 독일 GDP 성장률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0.4	0.0	0.6	-0.5	0.1	-0.1	0.2	-0.4	0.2	-0.1
전년 동기 대비	4.0	1.2	1.6	-0.1	0.6	-0.4	-0.7	-0.4	-0.8	0.3

주: 1.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계절 및 달력효과 조정 값

2.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값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2. Quartal 2024," 2024. 8. 27.,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25_811.html, 검색일자: 2024. 8. 28.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3분기 독일 GDP 성장률 발표(2024. 11. 22.)⁴¹¹⁾

- (전 분기 대비) 독일의 2024년 3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증가
 - 전 분기 대비 정부소비지출은 0.4%, 민간소비는 0.3% 증가
 - 전 분기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장비(기계, 장치 및 차량)와 건설에서 각각 0.2%, 0.3%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독일의 2024년 3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는 0.1% 증가에 그친 반면, 정부소비는 2.5% 증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현금지원 증가에 기인
 - 장비투자 -5.7%, 건물투자 -2.6% 등 전년 동기 대비 투자가 크게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3% 감소, 수입은 1.2% 증가
 - 교통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수수료 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입이 증가
- 2024년 3분기 EU의 GDP 성장률은 0.3%이며, 독일의 성장률은 0.1%로 EU 전체 및 주요 회원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2024년 3분기 스페인,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각각 0.8%, 0.4%

411)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3. Quartal 2024," 2024. 11. 22.,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38_811.html, 검색일자: 2024. 11. 25.

표 II-3-11 독일 GDP 성장률

(단위: %)

구분	2023				20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0.1	-0.2	0.2	-0.4	0.2	-0.3	0.1
전년 동기 대비	0.6	-0.4	-0.7	-0.4	-0.8	0.1	0.1

주: 1.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계절 및 달력효과 조정 값

2.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값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3. Quartal 2024," 2024. 11. 22.,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38_811.html, 검색일자: 2024. 11. 25.

2) 고용률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2분기 독일 고용률 발표(2024. 8. 16.)⁴¹²⁾

- 독일의 2024년 2분기 고용률은 약 4,61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0.1%(5만 4천명), 전년 동기 대비 0.4%(16만 7천명) 증가
 - 봄철 외부 일자리의 전반적인 증가로 2분기 고용률은 계절조정되었으며, 계절조정 없는 2분기 고용률은 1분기 대비 0.5%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서비스업(0.7%)이었으며, 제조업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0.5%를 기록
- 유럽 통계청에 따른 EU 및 유로지역의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고용률은 각각 0.7%, 0.8% 증가하였으며, 이는 독일(0.4%)보다 높은 수치

412) 독일 연방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stagnant in 2nd quarter of 2023," 2024. 8. 1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14_13321.html, 검색일자: 2024. 8. 19.

표 II-3-12 독일 고용 증가율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0.4	0.3	0.2	0.2	0.2	0.2	0.0	0.1	0.1	0.1
전년 동기 대비	1.6	1.6	1.2	1.1	0.9	0.8	0.7	0.5	0.4	0.4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stagnant in 2nd quarter of 2023," 2024. 8. 1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14_13321.html, 검색일자: 2024. 8. 19.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3분기 독일 고용률 발표(2024. 11. 15.)⁴¹³⁾

- 독일의 2024년 3분기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약 4,61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0.1% (4만 5천명) 감소
 - 계절조정 취업자수 감소세는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 발생하였으며, 2024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4만 6천명, 2만 9천명이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3분기 취업자 수가 증가한 분야는 서비스업이었으며, 제조업에서의 하락세는 지속
 -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7만명(0.5%)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만 3천명(-0.9%) 감소
 - 2024년 3분기 유럽연합(EU) 27개국과 유로지역의 고용률은 각각 0.8%, 1.0% 증가

표 II-3-13 독일 고용 증가율

(단위: 만명, %)

구분	2022				2023				20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취업자 수	4,551	4,564	4,572	4,583	4,594	4,601	4,603	4,607	4,612	4,615	4,610
직전 분기 대비	0.4	0.63	2.2	0.2	0.2	0.2	0.0	0.1	0.1	0.1	-0.1
전년 동기 대비	1.5	1.6	13.	1.1	0.9	0.8	0.7	0.5	0.4	0.3	0.2

주: 계절조정값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Erwerbstätige: Deutschland, Quartale, Inlands-/Inländerkonzept, Original- und bereinigte Daten,"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13321/table/13321-0002>, 검색일자: 2024. 11. 18.

413) 독일 연방 통계청, "Schwächere Entwicklung der Erwerbstätigkeit im 3. Quartal 2024 als in den Vorquartalen," 2024. 11. 1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1/PD24_427_13321, 검색일자: 2024. 11. 18.

나. 재정 통계

- 독일 연방 통계청, 2023년 공공채무 통계 발표(2024. 7. 29.)⁴¹⁴⁾
 - 2023년 말 기준, 독일의 공공채무 규모는 2조 4,451억유로를 기록
 - 이는 2022년 말 대비 771억유로(3.3%) 증가해 연말 채무 통계로 측정된 국가채무 수준 중 최고치를 기록
 - 2023년도 49유로티켓(Deutschlandticket)의 도입으로 지방 대중교통 회사의 채무가 공공채무에 포함
 - 대중교통 회사의 채무 미포함 시 2023년 말 채무는 2조 4,354억유로로, 2022년 말 대비 673억유로(+2.8%) 증가
 - 2022년 말에 비해 2023년 말 채무 수준은 주정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모두에서 증가
 - 2023년 연방정부 채무는 1조 6,963억유로로 2022년 말 대비 759억유로(4.7%)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과 연방군특별기금의 채무 증가에 기인
 - 2023년 주정부 채무는 5,942억유로로 2022년 말 대비 127억유로(2.1%) 감소
 - 1인당 채무는 브레멘(3만 4,012유로), 함부르크(1만 7,095유로), 베를린(1만 6,602유로) 순으로 높음
 -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22년 대비 138억유로(9.8%) 증가한 1,546억유로, 사회보장 채무는 2022년 대비 86.4% 증가한 4,100만유로를 기록

414) 독일 연방 통계청, "Pro-Kopf-Verschuldung steigt im Jahr 2023 auf 28 943 Euro," 보도자료, 2024. 7. 29.,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7/PD24_288_713.html, 검색일자: 2024. 7. 30.

표 II-3-14 독일의 2023년 공공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채무 규모		변화율 (B-A)/A
	2022년 12월 31일(A)	2023년 12월 30일(B)	
합계	2,368,049	2,445,132	3.3
연방	1,620,357	1,696,263	4.7
주정부	606,863	594,196	-2.1
지방자치단체	140,807	154,633	9.8
사회보장	22	41	86.4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GENESIS-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sequenz=tabelleErgebnis&selectionname=71321-0005#abreadcrumb>, 검색일자: 2024. 7. 30.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 발표(2024. 8. 27.)⁴¹⁵⁾

- * 연방 통계청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에서 정의하는 재정수지와 재정통계에서 정의하는 재정수지에는 방법론적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국민계정에서는 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대출 및 상환, 자산 매각 및 매입과 같은 금융거래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지만, 재정통계에서는 국가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수지를 계산⁴¹⁶⁾
- (재정수지) 독일의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는 전년 동기 대비 13억유로 감소한 381억유로(GDP 대비 1.8%)
 -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46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주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32억유로 증가한 72억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 동기 대비 39억유로 증가한 64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
 - 사회보장 부문은 2024년 상반기에 20억유로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3년 상반기의 96억유로 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
- (수입)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수입은 9,735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 2024년 상반기 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415) 독일 연방 통계청, "Staatsdefizit sinkt im 1. Halbjahr 2024 leicht auf 38,1 Milliarden Euro," 2024. 8. 27.,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26_813.html, 검색일자: 2024. 8. 28.

416) Otto Dietz, *Finanzierungssaldo des Staates - einige methodische Anmerkungen*, Statistisches Bundesamt, 2006.

- 전년 동기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은 2.5%, 소득세 수입은 4.1% 증가
- 2023년 7월부터 지속되는 견고한 노동시장, 임금인상,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공헌 기여금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 (지출)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 지출은 1조 116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 2024년 상반기 보조금은 전년 동기 대비 39.8% 감소하였으며, 주로 2023년 말 종료된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에 기인
 - 전년 동기 대비 사회보장 수혜금, 정부 이자지출, 총 투자 역시 각각 6.7%, 31.9%, 9.8% 증가

표 II-3-15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연간			반기	
	2021	2022	2023	2023 상반기	2024 상반기
일반정부 순용자(+)/순차입(-)	-116.4	-84.9	-107.5	-39.3	-38.1
일반정부 수입	1,747.9	1,852.6	1,917.4	929.4	973.5
일반정부 지출	1,864.3	1,937.5	2,025.0	968.8	1,011.6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Important economic indicators,"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National-Accounts-Domestic-Product/Tables/domestic-product-important-economic-indicators.html>, 검색일자: 2024. 8. 27.; "Government Revenue and Expenditure since 1991 - Semi-annual and annual results,"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National-Accounts-Domestic-Product/Tables/domestic-product-revenue-expenditure1991-pdf.pdf?_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4. 8. 27.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2분기 공공채무 통계 발표(2024. 9. 24.)⁴¹⁷⁾
 - 2024년 2분기 말 기준, 독일의 공공채무(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 규모는 총 2조 4,598억유로를 기록
 - 이는 2023년 말 대비 147억유로(+0.6%) 증가하고, 2024년 1분기 대비 17억유로 (-0.1%) 감소한 수준
 - 2023년 말 대비 2024년 2분기 채무 수준이 연방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17) 독일 연방 통계청, "Öffentliche Schulden im 2. Quartal 2024 um 0,6 % höher als Ende 2023," 보도자료, 2024. 9. 2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9/PD24_366_713.html, 검색일자: 2024. 9. 25.

상승하였으나 사회보장 부문은 소폭 감소

- 2024년 2분기 연방정부 채무는 1조 6,972억유로로 2023년 말 대비 0.1% 증가
 - 같은 기간 코로나19 경제안정화기금의 채무는 326억유로로 11.8% 감소한 반면, 연방군 특별기금의 채무는 112억유로로 93.3% 증가
- 2024년 2분기 주정부 채무는 6,037억유로로 2023년 말 대비 83억유로(+1.4%) 증가
 - 2023년 말과 비교하여 채무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베를린(+8.6%), 메클렌부르크-서포메라니아(+7.7%), 라인란트-팔츠(+7.3%) 순임
- 2024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23년 말 대비 50억유로(+3.2%) 증가한 1,588억유로, 사회보장 채무는 4,060만유로를 기록

표 II-3-16 독일의 2024년 2분기 공공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총채무 규모		변화율
	2024년 6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대비
합계	2,459,792	2,445,691	0.6
연방	1,697,241	1,696,384	0.1
경제안정화기금(코로나19)	32,559	36,912	-11.8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 ¹⁾	-	71,744	-100.0
연방군 특별기금	11,228	5,808	93.3
주정부	603,670	595,418	1.4
지방자치단체	158,840	153,866	3.2
사회보장 ¹⁾	41	22	86.4

주: 1)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의 채무는 2023년 말부터 종료되어 연방정부 핵심예산으로 이관됨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Genesis-online; Vierteljährliche Schulden des Öffentlichen Gesamthaushalts,"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Finanzen/Schulden-Finanzvermoegen/Publikationen/Downloads-Schulden/statistischer-bericht-vj-schulden-oeffentl-gesamthaushalt-2140520243225.xlsx?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4. 9. 25.

- 연방 통계청, 2024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⁴¹⁸ 잠정실적 발표(2024. 10. 4.)⁴¹⁹
 - (지출) 2024년 상반기 지출은 9,929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 연방정부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87억유로(-29.7%) 감소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6억유로(35.9%) 증가
 - 2024년 상반기 연방 및 주 차원에서의 교부금과 보조금 지원은 계속해서 감소
 - 49유로티켓(Deutschlandticket)⁴²⁰의 도입으로 2023년 2분기부터 대중교통 회사들이 공공부문 예산 통계에 포함되면서 2024년 상반기 인건비가 크게 증가
 - (수입) 2024년 상반기 수입은 9,246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 상반기 공공부문 전체의 조세수입⁴²¹은 약 7,900억유로를 기록해 전년 동기(7,573억유로) 대비(4.3%) 증가
 - 수입의 증가는 주로 원천징수세(Zinsabschlag)와 자본이득세(Kapitalertragsteuer)에 기인하며, 사회보험 수입은 7.3% 증가
 - (재정수지) 2024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의 재정적자는 약 684억유로로 전년 동기(761억유로) 대비 적자 규모가 10.1% 감소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 전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함
 - 2024년 상반기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55억유로로 2023년 상반기 642억유로 대비 크게 감소
 - 2024년 상반기 주정부는 실질적 균형에 가까운 71억유로 적자, 지방자치단체는 173억유로의 적자가 발생

418) 공공부문 총예산은 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법적 사회보험 부문이 통합된 개념임.

419)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im 1. Halbjahr 2024 bei 68,4 Milliarden Euro," 2024. 10. 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0/PD24_380_711.html, 검색일자: 2024. 10. 10.

420) 에너지 가격 급등을 고려해 국민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월 49유로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대중교통 이용권

421) 조세 및 조세와 유사한 수입을 의미

표 II-3-17 독일의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합계
지출					
2024년 상반기	285.1	270.6	185.7	428.5	992.9
2023년 상반기	311.7	259.6	167.6	401.8	965.8
2022년 상반기	264.9	250.0	151.0	399.7	874.3
수입					
2024년 상반기	249.5	263.6	168.4	420.0	924.6
2023년 상반기	247.4	259.5	160.3	397.3	889.7
2022년 상반기	219.7	267.8	149.4	395.7	841.4
재정수지					
2024년 상반기	-35.5	-7.1	-17.3	-8.5	-68.4
2023년 상반기	-64.2	-0.1	-7.3	-4.4	-76.1
2022년 상반기	-45.2	17.8	-1.6	-3.9	-32.9

주: 2024년은 잠정치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im 1. Halbjahr 2024 bei 68,4 Milliarden Euro," 2024. 10. 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0/PD24_380_711.html, 검색일자: 2024. 10. 10.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3분기 공공채무 통계 발표(2024. 12. 19.)⁴²²⁾

- 2024년 3분기 말 기준, 독일의 공공채무(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 규모는 총 2조 4,886억유로를 기록
 - 이는 2023년 말 대비 435억유로(+1.8%) 증가하고, 2024년 2분기 대비 285억유로(1.2%) 증가한 수준
- 2023년 말 대비 2024년 3분기 채무 수준이 연방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승하였으나 사회보장 부문은 1.7% 감소
 - 2024년 3분기 연방정부 채무는 2023년 말 대비 228억유로(1.3%) 증가
 - 같은 기간 코로나19 경제안정화기금의 채무는 281억유로로 24.0% 감소한 반면, 연방군 특별기금의 채무는 155억유로로 166.7% 증가
 - 2024년 3분기 주정부 채무는 6,061억유로로 2023년 말 대비 119억유로(+2.0%) 증가

422) 독일 연방 통계청, "Öffentliche Schulden im 3. Quartal 2024 um 43,5 Milliarden Euro höher als Ende 2023," 보도자료, 2024. 9. 2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2/PD24_482_713.html, 검색일자: 2024. 12. 29.

- 2023년 말과 비교하여 채무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메클렌부르크-서포메라니아(+13.0%), 라인란트-팔츠(+10.6%), 베를린(+8.1%) 순임
- 2024년 3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23년 말 대비 87억유로(+5.6%) 증가한 1,634억유로, 사회보장 채무는 4,030만유로를 기록

표 II-3-18 독일의 2024년 3분기 공공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총채무 규모		변화율 2023년 12월 31일 대비
	2024년 9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합계	2,488,590	2,445,691	0.6
연방	1,719,104	1,696,384	0.1
경제안정화기금(코로나19)	28,059	36,912	-11.8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 ¹⁾	-	71,744	-100.0
연방군 특별기금	15,486	5,808	93.3
주정부	606,086	595,418	1.4
지방자치단체	163,360	153,866	3.2
사회보장	40	22	86.4

주: 1)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의 채무는 2023년 말부터 종료되어 연방정부 핵심예산으로 이관됨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Genesis-online: Statistischer Bericht - Vierteljährliche Schulden des Öffentlichen Gesamthaushalts - 3. Vierteljahr 2024,"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Finanzen/Schulden-Finanzvermoegen/Publikationen/Downloads-Schulden/statistischer-bericht-vj-schulden-oeffentl-gesamthaushalt-2140520243235.xlsx?_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4. 12. 29.

IV 프랑스⁴²³⁾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회계연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표 3-I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4. 7. 11.	프랑스 재정감사국, 재정수입 분석 보고서 발표
2024. 7. 15.	프랑스 회계감사원, 공공재정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발표
2024. 7. 19.	프랑스 재무부, 녹색산업 프로젝트 시행 절차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발표
2024. 7. 30.	프랑스 통계청,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
2024. 8. 2.	프랑스 예산국, 2024년 2분기 중앙정부 예산집행 결과 발표
2024. 8. 9.	프랑스 통계청, 2024년 2분기 실업률 발표
2024. 9. 18.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거시경제 및 재정의 전망과 실적치 비교 보고서 발표
2024. 9. 19.	프랑스 농업부, 와인 산업에 대한 구조 전환 지원 발표
2024. 10. 1.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신임 총리, 주요 개혁 및 정책 방향 발표
2024. 10. 10.	프랑스 재무부, 2025년 예산법안 발표
2024. 10. 10.	프랑스 재무부,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발표
2024. 10. 10.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5년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
2024. 10. 10.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5~2028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 발표
2024. 10. 11.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2024. 10. 13.	프랑스 재무부, 2025년 녹색예산 발표
2024. 10. 22.	프랑스 재무부,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다년간 전략 보고서 발표
2024. 10. 23.	프랑스 재무부, 2025년 재정계획안 발표
2024. 10. 30.	프랑스 통계청, 2024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
2024. 10. 31.	프랑스 재무부, 2025~2029 중기재정계획 발표

4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인 선임연구원(leejungin@kipf.re.kr)

표 3-IV-1 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24. 11. 5.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예산종료법안 발표
2024. 11. 5.	프랑스 예산국, 2024년 3분기 중앙정부 예산집행 결과 발표
2024. 11. 6.	프랑스 회계감사원, 사회보장부문 재정분석보고서 발표
2024. 11. 13.	프랑스 통계청, 2024년 3분기 실업률 발표
2024. 12. 4.	프랑스 하원,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및 2025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 의회에서 폐기
2024. 12. 11.	프랑스 재무부, 특별예산법안 발표
2024. 12. 14.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하향 조정

자료: 저자 작성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프랑스 총리, 각 부처에 지출 한도 서한 송부(2024. 8. 20.)⁴²⁴⁾⁴²⁵⁾
 - 조기 총선 결과로 사임 의사를 밝힌*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각 부처에 2025년 예산법안 지출 한도 서한을 송부
 - * 기존 총선은 2027년으로 예정되었으나, 202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 계획을 발표함. 총선에서 어떤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PF)이 제1당을 차지함. 총선 결과가 나오고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사임 의사를 밝혔고,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을 수용하면서도 파리 올림픽 등을 감안해 새 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일상 업무를 맡아 달라고 요청

424) France24, "Le gouvernement démissionnaire établit un projet de budget "réversible" pour 2025," 2024. 8. 20., <https://www.france24.com/fr/info-en-continu/20240820-gabriel-attal-transmet-%C3%A0-son-successeur-une-trame-de-budget-%C3%A0-broder>, 검색일자: 2024. 8. 22.

425) 프랑스 상원 공영 채널(Public Sénat), "Budget 2025 : « Nous ne sommes pas dans une situation où nous pouvons travailler sur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 estime le rapporteur général du budget au Sénat," 2024. 8. 20., <https://www.publicsenat.fr/actualites/parlementaire/budget-2025-nous-ne-sommes-pas-dans-une-situation-ou-nous-pouvons-travailler-sur-le-projet-de-loi-de-finances-estime-le-rapporteur-general-du-budget-au-senat>, 검색일자: 2024. 8. 22.

- 총리 인선이 늦어지며 예산법안 처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총리가 예산법안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황
 - 지출 한도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각 부처에 2025년도 지출 한도를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출 한도 서한만 발송됨
 - 지출 한도 서한에 수정 가능한 예산(budget réversible)으로 명시해, 총리 임명 후 수정의 여지를 남겨 둠
 - 상원에서는 총리 임명 지연으로 사임한 총리가 예산법안을 준비하게 하여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새로 임명될 총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현재 설정한 예산법안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 프랑스 재무부, 2025년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PLF 2025) 발표(2024. 10. 10.)⁴²⁶⁾⁴²⁷⁾⁴²⁸⁾
- (경제전망) 프랑스는 2024년과 2025년 1.1%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4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민간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가 안정의 영향으로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23년 4.9%에서 2024년 2.1%로 낮아질 전망이며,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됨
 - (2025년) 내수 확대와 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 증가로 1.1%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식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에너지 가격은 하향 추세를 보여, 물가상승률은 1.8%로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는 원자재 가격과 무역에 하방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426)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LF 2025," 2024. 10. 10., <https://presse.economie.gouv.fr/presentation-du-plf-2025/>, 검색일자: 2024. 10. 15.

427)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et du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pour la Sécurité sociale 2025," 2024. 10. 10.,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presentation-du-projet-de-loi-de-finances-pour-2025-et-du-projet-de-loi-de-financement>, 검색일자: 2024. 10. 15.

428)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2024. 10. 14., <https://www.vie-publique.fr/loi/295632-budget-2025-projet-de-loi-de-finances-plf>, 검색일자: 2024. 10. 15.

표 3-IV-2 프랑스 2025년 예산법안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GDP(십억유로)	2,822	2,921	3,005
실질 GDP 성장률	1.1	1.1	1.1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0.9	0.7	1.3
수출 증가율	2.5	2.1	3.4
수입 증가율	0.7	-1.1	2.6
소비자물가상승률	4.8	2.0	1.8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Chiffres clés, p. 13, 2024. 10. 10.

- (재정수지 전망)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6.1%에서 2025년 5.0%로 다소 개선될 전망
 -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6.1%로 2023년보다 0.6%p 악화될 전망
 - 2024년 2월 100억유로 규모의 예산지출 취소 조치가 재정 악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함
 - (2025년) 프랑스 2025년 예산법안은 2025년 GDP 대비 재정적자 5.0%를 목표로 함
 - 2025년 예산법안이 담고 있는 조치가 없었다면 2025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29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중기 목표로 함
- (공공채무 전망)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5년 114.7%로, 2024년 112.9%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표 3-IV-3 프랑스 2025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정수지(Déficit public)	-5.5	-6.1	-5.0
재정지출(Taux de dépenses publiques (hors CI))	43.2	42.8	43.6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56.4	56.8	56.4
공공채무(Dette publique)	109.9	112.9	114.7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Projet de loi de finances 2025*, p. 6., 2024. 10. 10.

- (재정적자 감축 조치) 2025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는 총 600억유로로, GDP의 2%에 해당함
 - 600억유로 중 2/3에 해당하는 400억유로는 재정지출 삭감에서 발생
 - 200억유로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수 조치에서 발생
- (재정지출 삭감) 재정지출 삭감 노력은 모든 정부 부문을 통해 시행
 -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약 57%로, 유럽 국가 평균이 50% 미만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
 - 중앙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지출 계획 대비 총 215억유로의 지출을 절감
 - 사회보장부문에서 의료비 지출 효율성에 대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추세에 비해 약 40억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해 148억유로 절감
 - 지방정부는 재정적자 통제를 위한 노력으로 50억유로 절감
- (세수 증대 조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일시적인 세수 조치를 통해 GDP 대비 총조세 부담률은 2024년 42.8%에서 2025년 43.6%로 증가할 전망
 - (법인세)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수 조치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정됨
 -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출액 10억유로 이상 30억유로 미만 기업은 법인세의 20.6%, 매출액 30억유로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의 41.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429) 약 400개 기업이 해당될 전망으로, 이러한 조치로 2025년 80억유로, 2026년 40억유로의 세수 증대가 예상됨
 - 매출액이 10억유로를 넘는 해운업체는 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9%, 2026년 5.5%의 세율이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2025년 5억유로, 2026년 3억유로 세수 창출
 - (소득세) 초고소득자에 대한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증세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
 - 1인가구의 경우 연 소득 25만유로, 부부의 경우 50만유로를 초과하는 가구에 최저 소득세율을 20%로 조정⁴³⁰⁾

429) 기본 법인세율은 25%이고, 매출액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기본 법인세 외에 추가 기여세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되는 것.

430) 최소한의 소득세 비율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다양한 소득 공제나 세금 감면을 통해 실제 소득세율이 20% 미만으로 낮아진 가구에 공제를 제한하거나 특정 세율을 더해 실제로 최소 20%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함.

- (녹색세) 탄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녹색세(Verdissement de la fiscalité) 조치가 포함될 예정
- 상기 조치로 인해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은 2022년 45.0%, 2023년 43.2%에서 2024년 42.8%, 2025년 43.6%를 기록할 전망

표 3-IV-4 프랑스 2025년 예산법안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예산법	2024년 전망	2025 예산법안	2024~2025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516.2	512.5	507.2	513.8	6.6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48.1	445.8	440.1	446.3	6.2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8.1	66.7	67.2	67.5	0.3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4.3	45.1	44.9	44.2	-0.8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3.9	21.6	22.3	23.3	1.1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48.0	371.2	345.9	379.6	33.8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322.9	348.5	322.5	359.1	36.6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8.6	93.4	88.1	93.8	5.7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56.8	72.0	57.7	56.2	-1.5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6.8	15.4	15.5	16.5	1.0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5.2	100.8	96.1	106.2	10.2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65.5	66.9	65.1	86.3	21.2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5.1	22.7	23.4	20.5	-2.8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5.1	-5.7	-5.4	-1.7	3.7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3	0.2	0.2	0.3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173.0	-146.9	-166.6	-135.6	31.0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pp. 14~15; p. 19, 2024. 10. 10.

- (주요 정책)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 주권 강화 등 우선순위 프로젝트 지원

- (농업부문 지원)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조치를 시행하고, 농업 및 임업 부문의 생태학적 전환에 대한 지원 지속
- (생태학적 전환) 전기차 및 철도 운송 등 지속가능한 교통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및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지원 지속
- (주권 강화) 국방 미션 지출을 확대하고, 사법 서비스 및 교정 행정 부문 인력 증대, 국가경찰 보수 개선

■ 프랑스 재무부,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PLFSS 2025) 발표(2024. 10. 10.)⁴³¹⁾⁴³²⁾

- 2025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는 160억유로 적자로 전망되며, 이는 2024년 180억 유로보다 20억유로 개선된 수치
 -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397억유로를 기록하였고, 이후 경제 활동의 재개와 코로나19 관련 비용의 점진적 철폐로 재정적자는 2021년 243억유로, 2022년 197억유로, 2023년 108억유로로 개선됨
 - 2024년에는 물가와 연동되는 연금 급여 지출의 상승으로 2023년보다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
- 2025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⁴³³⁾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2,640억유로로 설정
 - 의료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의료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35억유로의 새로운 조치 시행
 - 의료비 지출 효율성 제고 및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 약 40억유로의 예산 절감 효과 예상
- 의료 접근성, 완화 의료, 정신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2024년 12월부터 주치의 진료비를 기존 26.5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

431)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et du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pour la Sécurité sociale 2025," 2024. 10. 10.,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presentation-du-projet-de-loi-de-finances-pour-2025-et-du-projet-de-loi-de-financement>, 검색일자: 2024. 10. 15.

432)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4. 10. 14., <https://www.vie-publique.fr/loi/295695-plfss-2025-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 검색일자: 2024. 10. 16.

433)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차년도 건강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의미함.

- 원격 진료 및 이동 진료 버스 개발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
- 완화 의료⁴³⁴⁾ 강화를 위한 10년 전략 시행
 - 2034년까지 각 지역에 소아 완화 의료 병동 설립
 - 202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완화 의료 병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완화 의료 교육 역량 확대를 통해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완화 의료 방식을 더 잘 이해하도록 지원
- 정신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지원
 - 심리 치료 프로그램(Mon Soutien Psy)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기존 성인 대상에서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

표 3-IV-5 프랑스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재정수지 전망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강보험(Maladie)	-1.5	-30.5	-26.1	-21.0	-11.1	-14.6	-13.4
산재보험(AT-MP)	1.1	-0.1	1.3	1.7	1.4	0.7	0.2
국립노령연금기금(Vieillesse)	-1.3	-4.9	-1.1	-3.9	-2.6	-6.3	-3.1
가족수당국가기금(Famille)	1.5	-1.8	2.9	1.9	1.0	0.4	0.0
자율연대국가기금(Autonomie)	-	-	0.3	0.2	-0.6	0.9	-0.4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1.6	-2.5	-1.5	1.3	1.1	0.8	0.7
사회보장부문(ROBSS+FSV)	-1.7	-39.7	-24.3	-19.7	-10.8	-18.0	-16.0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4. 10. 10.

434) 호스피스·완화 의료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팀이 통증 등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울대학교 암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 http://cancer.snuh.org/board/B034/view.do?bbs_no=3666&searchKey=all&searchWord=&pageIndex=1)

■ 프랑스 재무부, 2025년 녹색예산(budget vert) 발표(2023. 10. 13.)⁴³⁵⁾

* 녹색예산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위험 대비,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및 폐기물,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및 보호 등 총 여섯 가지 환경 목표에 대한 2025년 예산안의 정책 등급을 제시⁴³⁶⁾

◦ 2025년 예산법안에 포함된 총지출 5,755억유로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554억유로에 대해 분석

- 2025년 예산법안에서 여섯 가지 환경 목표 중 한 가지 이상의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426억유로로, 2024년 예산법의 405억유로, 2023년 결산 336억유로에 비해 증가함

- 재생에너지, 바이오메탄, 수소 생산, 원자력 에너지 지원, 철도 운송 부문, 친환경 차량 지원을 비롯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정책 등이 포함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합비용은 47억유로

- 신규 철도 및 수로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되는데, 대규모 건설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토양의 인공화가 진행되나, 철도 및 수로 운송은 도로와 항공 운송에 비해 오염이 적어 장기적으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81억유로로, 2024년 예산법의 96억유로 대비 15억유로 감소

- 화석에너지 생산, 연료에 대한 세율 인하, 도로 개발 및 항공 운송 지원, 우주 탐사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

435) 프랑스 재무부, "Budget vert - PLF 2025," 2024. 10. 21.,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documents-budgetaires/exercice-2025/le-projet-de-loi-de-finances-et-les-documents-annexes-pour-2025/budget-vert-plf-2025>, 검색일자: 2024. 10. 28.

436) 프랑스 예산국, "Le budget vert : un outil de transparence au servic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2023. 11. 3.,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_vert/articles/le-budget-vert-un-outil-de-transparence-au-service-de-la-transition, 검색일자: 2024. 10. 29.

■ 프랑스 하원,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및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의회에서 폐기(2024. 12. 4.)⁴³⁷⁾

-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⁴³⁸⁾의 의회 채택을 위해 의회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항*을 발동⁴³⁹⁾

*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총리가 지정하는 법률안이 하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 발동 선언 이후 24시간 이내에 하원 재적 1/10 이상의 동의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 정부 불신임안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부결되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폐기⁴⁴⁰⁾

- 이후 좌파연합(NFP)⁴⁴¹⁾과 국민연합(RN)⁴⁴²⁾이 각각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좌파연합이 발의한 불신임안이 하원 전체 577명 중 331표로⁴⁴³⁾ 가결됨에 따라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되며,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사임서를 제출⁴⁴⁴⁾
- 내각 불신임안 통과에 따라 2025년 예산법안(PLF)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어 예산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짐
- 의회가 기한 내 예산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예산을 유지하는 임시적 예산인 특별예산을 법률 명령(Ordonnance)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⁴⁴⁵⁾⁴⁴⁶⁾
 - 이러한 경우 2024년에 승인된 예산의 구조를 기준으로 정부 기능 유지에 필요한

437)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Motion de censure : le gouvernement de Michel Barnier a démissionné," 2024. 12. 5.,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6487-article-493-sur-le-plfss-2025-censure-du-gouvernement-barnier>, 검색일자: 2024. 12. 11.

438) 프랑스는 중앙정부 예산법(LF)과는 별도로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FSS)을 편성

439) 프랑스 의회, "Engagement de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2024. 12. 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l17b0638-n0_rapport-fond, 검색일자: 2024. 12. 11.

440)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헌법」, 2022. 10. 5.

441) 프랑스 의회, "MOTION DE CENSURE présentée par Mme Mathilde PANOT, M. Boris VALLAUD, Mme Cyrielle CHATELAIN, M. André CHASSAIGNE et 181 de leurs collègues," 2024. 12. 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l17b0638-n2_motion-censure, 검색일자: 2024. 12. 11.

442) 프랑스 의회, "MOTION DE CENSURE présentée par Mme Marine LE PEN, M. Éric CIOTTI et 138 de leurs collègues," 2024. 12. 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l17b0638-n3_motion-censure, 검색일자: 2024. 12. 11.

443)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

444) 프랑스 법률사이트, "Décret du 5 décembre 2024 relatif à la cessation des fonctions du Gouvernement," 2024. 12. 5.,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0748889>, 검색일자: 2024. 12. 11.

445)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Qu'est-ce qu'une loi de finances spéciale ?," 2024. 12. 3., <https://www.vie-publique.fr/fiches/296434-quest-ce-quune-loi-de-finances-speciale>, 검색일자: 2024. 12. 11.

446) 한국법제연구원, 『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2011.

최소한의 지출만 허용되며, 특별예산법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프랑스 재무부, 특별예산법안(loi spéciale pour une situation exceptionnelle) 발표 (2024. 12. 11.)⁴⁴⁷⁾448)

- 내각 불신임안 통과로 2025년 예산법의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프랑스 재무부는 2025년 임시적 특별예산법을 발표함
- 헌법 제47조⁴⁴⁹⁾와 재정조직법 제45조⁴⁵⁰⁾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차년도 예산법을 공포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특별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은 12월 31일 이전에 공포되어야 함
 - 1월 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산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 세금을 징수하고 필수적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예산법을 제출⁴⁵¹⁾
- 특별예산법안은 2025년 예산법이 채택될 때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부문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조항이 포함
 - 특별예산법안은 기존 세금 징수 권한, 중앙정부 및 사회보장부문의 차입 승인 권한을 부여⁴⁵²⁾
- 해당 법안은 12월 16일 하원,⁴⁵³⁾ 12월 18일 상원⁴⁵⁴⁾에서 채택되어 연말 공포될 예정

447) 프랑스 예산국, "Budget 2025 : une loi spéciale pour une situation exceptionnelle," 2024. 12. 11. https://www.budget.gouv.fr/reperes/loi_de_finances/articles/budget-2025-projet-de-loi-speciale, 검색일자: 2024. 12. 13.

448)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spéciale prévue par l'article 45 de la loi organique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2024. 12. 11., <https://www.vie-publique.fr/loi/296554-projet-de-loi-speciale-prevue-par-larticle-45-de-la-loi-organique-du-1er-aout-2001-relative-aux-lois-de-finances>, 검색일자: 2024. 12. 13.

449) 프랑스 법률 사이트,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2008. 6. 25.,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19241054, 검색일자: 2024. 12. 13.

450) 프랑스 법률 사이트,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2022. 9. 26.,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44611965, 검색일자: 2024. 12. 13.

451)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Qu'est-ce qu'une loi de finances spéciale ?," 2024. 12. 11., <https://www.vie-publique.fr/fiches/296434-quest-ce-quune-loi-de-finances-speciale>, 검색일자: 2024. 12. 13.

452)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Qu'est-ce qu'une loi de finances spéciale ?," 2024. 12. 3., <https://www.vie-publique.fr/fiches/296434-quest-ce-quune-loi-de-finances-speciale>, 검색일자: 2024. 12. 11.

453) 프랑스 하원, "projet DE LOI spéciale prévue par l'article 45 de la loi organique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ADOPTÉ PAR L'ASSEMBLÉE NATIONALE EN première lecture," 2024. 12. 16.,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117t0020_texte-adopte-seance, 검색일자: 2024. 12. 19.

나. 추경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예산종료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LFG 2024) 발표(2024. 11. 5.)⁴⁵⁵⁾⁴⁵⁶⁾

* 예산종료법(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LFG)은 2021년 공공재정 현대화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법의 범주로, 수정예산법과는 달리 새로운 지출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매년 연말에 발표되어 예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치 조정을 제시

- (경제전망) 2024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5년 예산법안 전망(2024. 10.)과 동일한 1.1%로 전망
 - 2024년 3분기 가계소비가 0.5%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파리 올림픽의 경제 효과로 분석됨
 - 2024년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
- (재정전망)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5년 예산법안 전망과 동일한 6.1%로 전망
 - 2024년 예산법(2023. 12.)의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은 4.4%였는데, 재정수입이 전망보다 낮아 재정이 악화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예산법 전망에 비해 각각 143억유로(19.9%), 38억유로(3.8%) 감소한 577억유로와 970억유로로 전망
 - 국가지출범위(périmètre des dépenses de l'État, PDE)는 2024년 예산법 전망 4,920억유로에 비해 60억유로 감소한 4,860억유로로 전망
-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변동) 예산 관리 상의 변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2억유로의 추가적인 예산 반영
 -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따른 치안 강화 비용과 뉴칼레도니아의 재난 복구 비용을 반영하여 치안(Sécurités) 미션에 9억유로의 예산 추가 배정

454) 프랑스 상원, "Projet de loi spéciale," 2024. 12. 18., <https://www.senat.fr/actualite/projet-de-loi-special-e-4223.html>, 검색일자: 2024. 12. 19.

455)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our 2024 (PLFG 2024)," 2024. 11. 5.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documents-budgetaires/exercice-2024/projet-loi-finances-fin-gestion>, 검색일자: 2024. 11. 19.

456)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our 2024," 2024. 11. 7., <https://www.vie-publique.fr/loi/296065-loi-de-finances-de-fin-de-gestion-lfg-pour-2024>, 검색일자: 2024. 11. 19.

- 해외 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비용을 반영해 국방부 예산 3억유로 증액
- 교직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미션에 2억유로 증액
- 성인 장애인 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예산 2억유로 증액, 소득 기반 장학금(Bourses sur critères sociaux) 예산 1억유로 증액
- 조기 총선 선거 비용 반영 등
- (예산 삭감)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의 최근 전망치인 6.1%를 유지하기 위해 56억유로의 지출 취소를 포함
 - 국가지출범위에서 총 56억유로를 삭감하며, 각 부처의 집행 목표를 기반으로 삭감이 이뤄짐
 - 56억 중 45억유로는 편성된 예비비(reserve de précaution) 삭감을 반영

표 3-IV-6 프랑스 2024년 예산종료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23 실적	2024 예산법 (a)	2024 예산종료 법안(b)	2024 차이 (b-a)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516.2	512.5	505.7	-6.8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48.1	445.8	438.5	-7.4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8.1	66.7	67.2	0.6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4.3	45.1	44.9	-0.1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3.9	21.6	22.3	0.7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48.0	371.2	347.8	-23.3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322.9	348.5	324.1	-24.3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8.6	93.4	88.1	-5.3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56.8	72.0	57.7	-14.3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6.8	15.4	15.9	0.5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5.2	100.8	97.0	-3.8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65.5	66.9	65.4	-1.5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5.1	22.7	23.7	1.0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5.1	-5.7	-5.6	0.1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3	0.2	0.2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173.0	-146.9	-163.2	-16.3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our 2024," 2024. 11. 5.

다. 결산

- 해당 사항 없음

02 정책적 이슈

가. 경제 지원 조치

- 프랑스 재무부, 녹색산업 프로젝트 시행 절차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발표(2024. 7. 19.)⁴⁵⁷⁾
 - 친환경 부문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심사와 협의 과정 간소화를 통해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프로젝트의 행정 절차 가속화를 위해 사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허가와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함
 -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여덟 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가속화를 지원
 - 저탄소 재료 및 단열재, 히트펌프 등 건물의 탈탄소화 촉진
 - 전기차 및 저탄소 차량, 철도, 해상, 하천 및 항공 등 교통부문 탈탄소화 지원
 - 탄소 포집 및 저장, 탄소 이용, 전기 보일러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 강화
 - 유기 비료, 비료 생산의 탈탄소화, 화석 연료 대체 바이오 솔루션 및 농업에 사용되는 저탄소 장비 도입 지원
 - 저탄소 에너지의 생산, 네트워크 및 저장 기술 개발 촉진
 - 재생 가능한 바이오 연료 등 바이오 기반 제품 생산 기술 개발 촉진
 - 목재 가공을 포함한 장비 및 기술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지원
 -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457) 프랑스 재무부, "Industrie verte : entrée en vigueur de mesures concrètes pour accélérer l'implantation de sites industriels," 2024. 7. 19.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industrie-verte-entree-en-vigueur-de-mesures-concretes-pour-accelerer-limplantation-de>, 검색일자: 2024. 7. 25.

■ 프랑스 농업부, 와인 산업에 대한 구조 전환 지원 발표(2024. 9. 19.)⁴⁵⁸⁾

- 와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포도밭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총 1억 2,000만유로의 예산을 지원
 - 프랑스 통계청(INSEE) 따르면,⁴⁵⁹⁾ 가계 소비 예산에서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6.4%에서 2018년 2.9%로 감소했고, 주류 중 일상용 와인의 소비 비중은 1960년 49.1%에 비해 2018년 9.1%로 감소
- 2024~2029년 포도 재배 허가를 포기하거나 신규 신청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 헥타르당 최대 4천유로의 국가보조금을 지급
 - 프랑스의 포도밭 면적 80만헥타르 중 최대 3만헥타르를 줄이게 됨

나. 정책 방향 및 계획

■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신임 총리, 주요 개혁 및 정책 방향 발표(2024. 10. 1.)⁴⁶⁰⁾⁴⁶¹⁾

-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9월 5일 미셸 바르니에를 신임 총리로 선임함⁴⁶²⁾. 신임 총리는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개혁 및 조치를 의회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이 있음⁴⁶³⁾.
- 프랑스 총리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안전 강화, 이민 문제 해결, 사회적 연대 증진 등 다섯 가지 정부 우선순위를 포함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
 - (국민 생활 수준 향상) 주택 임대료 및 교통비 부담 경감, 식량 주권 확보와 농업 지원, 고용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 (공공서비스 개선) 교육 부문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며,

458) 프랑스 농업부, "Soutien structurel à la filière viticole, le Gouvernement notifie un dispositif de restructuration de la réduction définitive du potentiel viticole," 2024. 9. 19. <https://agriculture.gouv.fr/soutien-structurel-la-filiere-viticole-le-gouvernement-notifie-un-dispositif-de-restructuration-de>, 검색일자: 2024. 9. 24.

459) 프랑스 통계청(INSEE), "Les dépenses des ménages en boissons depuis 1960," 2020. 2. 28.,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319377>, 검색일자: 2024. 9. 25.

460) 프랑스 정부, "Ce qu'il faut retenir d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e Michel Barnier," 2024. 10. 1., <https://www.info.gouv.fr/actualite/ce-quil-faut-retenir-d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de-michel-barnier>, 검색일자: 2024. 10. 8.

461) 프랑스 정부,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evant le Sénat," 2024. 10. 2., <https://www.info.gouv.fr/actualite/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du-premier-ministre-au-senat>, 검색일자: 2024. 10. 8.

462) 프랑스 법률 사이트, "Décret du 5 septembre 2024 portant nomination du Premier ministre," 2024. 9. 6.,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50185112>, 검색일자: 2024. 10. 8.

463) 프랑스 정부, "Qu'est-ce qu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 2022. 7. 5., <https://www.info.gouv.fr/actualit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 검색일자: 2024. 10. 8.

- 의사 수를 늘리고 원격 의료를 지원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
 - (안전 강화) 치안 강화, 범죄 예방 및 범 집행 개선
 - (이민 문제 해결) 불법 이주민 추방 명령이 보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민 관리 체계 개혁 및 합리적 통합 정책 추진
 - (사회적 연대 증진) 장애인, 빈곤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을 강화
 - 현재 GDP 대비 6% 수준인 재정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조
 - 재정지출 증가율 통제 및 보다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노력
 -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금 인상
 - 생태학적 전환 및 에너지 혁신에 대한 우선순위 강조
- 프랑스 재무부,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다년간 전략 보고서(SPAFTE) 발표(2024. 10. 22.)⁴⁶⁴⁾
- 본 보고서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생태학적 전환 및 국가 에너지 정책 자금 조달을 위한 다년간 전략을 담고 있음
 - 프랑스의 전기차, 건물의 에너지 혁신, 산업의 탈탄소화 등 저탄소 투자는 2023년 1천억유로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1,100억유로로 증액 필요
 - 2021~2023년 건물, 교통, 에너지 분야의 저탄소 투자가 약 230억유로 증가
 - 친환경 부문 투자 증가와 더불어 내연기관 차량 구입은 줄고 전기차 구입이 증가함
 - 생물다양성 보존, 물 및 폐기물 관리, 오염 저감을 위한 투자도 병행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저탄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2022년 저탄소 투자 비중은 공공부문이 20%, 민간부문이 13%였음
 - 민간부문이 2027년까지 저탄소 투자 비중을 공공부문 수준인 20%까지 확대하고,

464) 프랑스 재무부, "La Stratégie Pluriannuelle des Financements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SPAFTE): une mobilisation collective pour financer les investissements pour le climat et l'environnement," 2024. 10. 22., <https://www.tresor.economie.gouv.fr/Articles/2024/10/22/la-strategie-pluriannuelle-des-financements-de-la-transition-ecologique-spaft-e-une-mobilisation-collective-pour-financer-les-investissements-pour-le-climat-et-l-environnement>, 검색일자: 2024. 10. 24.

공공부문도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 저탄소 투자는 2022년 대비 2027년 63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민간부문은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비금융 기업은 건물 에너지 리모델링, 전기차 도입, 산업·운송·농업 부문 탈탄소화에 기여하고 있고, 금융 부문은 투자 자금 조달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재정지출은 2025년 430억유로에 달할 것이며, 그중 100억유로는 탈탄소화에 투입됨
 - 지방정부의 친환경 예산도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약 70~80억유로로 추정됨
 - 화석연료 투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탈탄소화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절반으로 축소 필요
 - 탈탄소화 이외에도 생물다양성 보호, 물 관리, 공기 및 토양 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
- 프랑스 재무부, 2025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 2025) 발표(2024. 10. 23.)⁴⁶⁵⁾
 - * EU 규정에 따라 유로화 사용 국가들은 매년 EU 집행위원회에 차년도 예산 목표, 경제성장률, 재정 전망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함
 - (경제 전망) 프랑스는 2024~2025년 1.1%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4년)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2024년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할 전망
 -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물가상승률은 2023년 4.9%에서 2024년 2.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가계 소비 증가로 2025년 경제성장률은 1.1%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안정이 예상되어 물가상승률은 1.8%로 안정화될 전망

465) EU 집행위, "Draft budgetary plan France 2025," 2024. 10. 23.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preventive-arm/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5_en?prefLang=sv#france, 검색일자: 2024. 10. 24.

- 고금리와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기업 투자와 공공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도 잔존

표 3-IV-7 프랑스 2025년 재정계획안 경제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질GDP 성장률	1.1	1.1	1.1	1.4	1.5	1.5
소비자물가상승률	4.8	2.0	1.8	1.75	1.75	1.75

자료: EU 집행위, *Draft budgetary plan France 2025*, 2024. 10. 23.

- (재정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6.1%에서 2025년 5.0%로 낮아질 전망
 - (2024년) 전망보다 낮은 세수로 인해 2024년 재정적자는 GDP의 6.1%로 전망
 -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4년 112.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세수 회복과 지출 절감 정책을 반영해 2025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5.0%로 감소할 전망
 - 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 지출 절감 노력을 통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낮추고, 2029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
 - 2025년 GDP 대비 공공채무는 114.7%로 증가할 전망
- (주요 정책) 정부의 정책 전략은 프랑스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장
 - 지출 절감 및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기여금과 친환경 세제를 도입
 -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은 중앙정부, 사회보장부문, 지방정부 등 모든 공공부문에 걸쳐 추진될 예정
 - 생태학적 전환 및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산 및 소비 수단의 탈탄소화를 추진
 -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체계적 배분을 위한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다년간 전략 도입
 - 정부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2020년부터 녹색 예산을 편성해 주요 예산

지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급여 인상을 장려하고 고용을 촉진해 프랑스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
 - 가계 구매력과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용 접근성을 확대하고 실업률을 낮게 유지
 - 기업과 경제 전반에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지속
 - 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 경쟁력, 혁신, R&D를 강화하여 경제 역동성을 강화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생태학적 전환은 향후 산업 경쟁력 강화의 주요 요소로, 전기차 배터리, 저탄소 항공기, 재생에너지 생산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산업 기술 개발에 투자
-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교육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
 - 교육 접근성과 질 향상을 목표로, 학생 성취도를 높이고 교사의 직업적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개혁 추진
 - 의료 공백 지역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을 통한 접근성 확대 전략 추진
 -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행정 절차와 서비스 제공 속도를 높여 행정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목표

■ 프랑스 재무부, 2025~2029 중기재정계획(Plan budgétaire et structurel à moyen terme- PSMT pour 2025-2029) 발표(2024. 10. 31.)⁴⁶⁶⁾⁴⁶⁷⁾⁴⁶⁸⁾

- 중기재정법(LFPF)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는 반면, 중기재정계획(PSMT)⁴⁶⁹⁾⁴⁷⁰⁾은 일정한 제재 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행됨

466) EU 집행위,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France," 2024. 10. 3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national-medium-term-fiscal-structural-plans_en?prefLang=sv#france, 검색일자: 2024. 11. 12.

467) 프랑스 상원, "SEANCE du mercredi 30 octobre 2024 (compte rendu intégral des débats du Sénat)," 2024. 10. 31., https://www.senat.fr/basile/visio.do?id=s20241030_12&idtable=&c=PSMT+pour+2025-2029&rch=gs&de=20041112&au=20241112&rqg=drqsqpt&dp=20+ans&radio=dp&aff=sep&tri=p&off=0&afd=ppr&afd=ppl&afd=pjl&afd=cvn&isFirst=true, 검색일자: 2024. 11. 12.

468) 프랑스 상원, "Séance du 30 octobre 2024," 2024. 10. 30., <https://www.senat.fr/seances/s202410/s20241030/s20241030011.html>, 검색일자: 2024. 11. 12.

-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에 따라 재정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기 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가 6개월마다 15억유로의 제재금⁴⁷¹⁾을 부과할 수 있음
- 중기재정계획은 프랑스의 4~5년 동안의 재정 목표와 개혁, 투자 우선순위를 정의함
- 프랑스 2025~2029 중기재정계획은 GDP 대비 공공채무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조정 기간*을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청하여 2029년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는 2025년 5.0%, 2026년 4.6%, 2027년 4.0%, 2028년 3.3%, 2029년 2.8%
- 프랑스는 2025년 공공 서비스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지출의 삭감 조치를 통해 순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
 - 이후 순지출 증가율을 2026~2028년 1.4%, 2029년 1.9%로 설정
 - 해당 기간 동안 주요 개혁 과제로는 연금제도 개혁과 세제 체계 단순화이며, 투자 우선순위는 녹색 전환과 디지털화 확대에 중점을 둠
- 경제성장률은 2024~2028년 1.2%, 이후 1.0%로 전망하며, 이는 IMF 전망과 일치
- 재정조정 노력을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24년 6.1%에서 2025년 5.0%, 2026년 4.6%로 개선되고 이후 2029년 2.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다. 국가 신용등급 조정

- 피치(Fitch),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2024. 10. 11.)⁴⁷²⁾⁴⁷³⁾

469) 영문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470)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준칙 개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적합한 재정·개혁·투자 목표를 통합한 것으로, 재정조정 기간은 4년이나 최대 7년으로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상반기 재정동향」 pp. 24~26 참고 바람.

471) EDP에서 부과하는 제재금은 GDP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정 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GDP의 0.2%까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최대 15억유로 규모의 제재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472) Fitch Ratings, "Fitch Revises France's Outlook to Negative; Affirms at 'AA-'," 2024. 10. 11.,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revises-france-outlook-to-negative-affirms-at-aa-11-10-2024>, 검색일자: 2024. 10. 15.

- 피치는 프랑스의 재정정책 리스크를 반영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확대되면서 GDP 대비 공공채무가 2028년 118.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5%로 낮추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일시적인 조치로 판단됨
 - 2024년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6.1%로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25~2026년 5.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9년까지 3% 이하로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우파 연합 정부가 구성되었으나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2025년 예산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AA-’를 유지
 - 2024년 경제성장률은 1.2%로 전망되며, 무역 개선으로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민간 소비 회복으로 2025년과 2026년 각각 1.2%와 1.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프랑스 은행 부문은 낮은 부실 채권 비율(2%)과 견고한 자본비율(15.9%)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보임
- 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하향 조정(2024. 12. 14.)⁴⁷⁴
 -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의 범위와 실행 가능성을 제한할 것이라는 평가에 따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
 -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
 - 정치적 분열이 심화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적자를 꾸준히 감소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

473) 프랑스 국고청(AFT; Agence France Trésor), “FRANCE’S CREDIT RATINGS,” <https://www.aft.gouv.fr/en/frances-credit-ratings>, 검색일자: 2024. 10. 15.

474) Le monde, “Moody’s downgrades France credit rating to Aa3,” 2024. 12. 14.,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12/14/moody-s-downgrades-france-credit-rating-to-aa3_6736050_7.html, 검색일자: 2024. 12. 16.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통계

1) 경제성장률

■ 프랑스 통계청,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4. 7. 30.)⁴⁷⁵⁾

- 2024년 2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로, 완만한 성장을 기록
 - 수출이 0.6% 증가하여 대외무역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0.2%p를 기록
 - 가계소비는 전 분기 -0.1%에서 0.0%로 0.1%p 증가했고, 국내 수요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0.1%p를 기록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총고정자본형성이 전 분기 -0.4%에서 0.1%로 회복

표 3-IV-8 프랑스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3Q3	2023Q4	2024Q1	2024Q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0.1	0.4	0.3	0.3	1.1	1.0
가계 소비		0.6	0.1	-0.1	0.0	0.9	0.3
정부 소비		0.4	0.4	0.6	0.3	0.8	1.4
총고정자본형성 ²⁾		-0.1	-0.9	-0.4	0.1	0.7	-1.0
수출		-1.2	0.7	0.7	0.6	2.5	1.8
수입		-0.8	-2.1	-0.3	0.0	0.7	-2.0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³⁾	0.4	0.0	0.0	0.1	0.9	0.3
	재고투자	-0.2	-0.6	0.0	0.0	-0.4	-0.5
	대외무역	-0.1	1.1	0.3	0.2	0.6	1.3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2)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by 0.3% in Q2 2024," 2024. 7. 30.

475)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by 0.3% in Q2 2024," 2024. 7. 30.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237184>, 검색일자: 2024. 8. 19.

■ 프랑스 통계청, 2024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4. 10. 30.)⁴⁷⁶⁾

- 2024년 3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0.4%로, 완만한 성장을 기록
 - 2024년 여름 파리 올림픽 개최로 입장권과 증계권 판매 등이 이뤄져 GDP 증가가 촉진
 - 가계소비가 반등(+0.5%)하며 국내수요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총고정자본형성(GFCF)은 감소함
 - 수출(-0.5%)보다 수입(-0.7%)이 더 크게 감소하며 대외무역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0.1%p를 기록

표 3-IV-9 프랑스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3Q4	2024Q1	2024Q2	2024Q3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0.5	0.2	0.2	0.4	1.1	1.1
가계소비		0.3	0.1	0.0	0.5	0.9	0.8
정부소비		0.5	0.7	0.5	0.5	0.8	2.0
총고정자본형성 ²⁾		-0.9	-0.6	-0.1	-0.8	0.7	-1.6
수출		0.8	0.6	0.5	-0.5	2.5	1.6
수입		-1.9	0.1	0.1	-0.7	0.7	-1.5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³⁾	0.1	0.1	0.1	0.2	0.9	0.5
	재고투자	-0.7	0.0	0.0	0.1	-0.4	-0.5
	대외무역	1.0	0.1	0.2	0.1	0.6	1.1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2)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 "GDP accelerated slightly in Q3 2024 (+0.4% after +0.2%)," 2024. 10. 30.

2) 실업률

■ 프랑스 통계청, 2024년 2분기 실업률 발표(2024. 8. 9.)⁴⁷⁷⁾

- 프랑스의 2024년 2분기 실업률은 7.3%로 전 분기 대비 0.2%p 하락하고, 전년 동기 대비 0.1%p 상승함

476) 프랑스 통계청, "GDP accelerated slightly in Q3 2024 (+0.4% after +0.2%)," 2024. 10. 30.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278367>, 검색일자: 2024. 11. 19.

477)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4,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d by 0.2 points," 2024. 8. 9.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239957>, 검색일자: 2024. 8. 19.

- 15~24세 실업률은 17.7%로 전 분기 대비 0.4%p 하락
- 25~49세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1%p 낮은 6.7%, 50세 이상 실업률은 5.1%로 전 분기와 동일
- 고용률은 전 분기보다 0.2%p 상승한 69.0%를 기록

표 3-IV-10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구분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증감(%p)		2024년 2분기 실업자 수 (천명)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2	7.4	7.5	7.5	7.3	-0.2	0.1	2,293
15~24세	16.9	17.7	17.5	18.1	17.7	-0.4	0.8	595
25~49세	6.6	6.8	7.0	6.8	6.7	-0.1	0.1	1,191
50세 이상	5.1	5.1	5.0	5.1	5.1	0.0	0.0	507
남자	7.3	7.5	7.6	7.6	7.3	-0.3	0.0	1,168
15~24세	18.0	18.9	18.1	19.0	17.5	-1.5	-0.5	321
25~49세	6.5	6.5	6.9	6.6	6.5	-0.1	0.0	590
50세 이상	5.1	5.1	5.1	5.2	5.1	-0.1	0.0	258
여자	7.1	7.4	7.4	7.3	7.4	0.1	0.3	1,124
15~24세	15.7	16.4	16.7	16.9	17.9	1.0	2.2	274
25~49세	6.7	7.1	7.1	7.0	6.9	-0.1	0.2	601
50세 이상	5.1	5.2	4.9	4.9	5.0	0.1	-0.1	249
장기실업률	1.8	1.8	1.8	1.8	1.7	-0.1	-0.1	539
고용률	68.6	68.4	68.5	68.8	69.0	0.2	0.4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4,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d by 0.2 points," 2024. 8. 9.

■ 프랑스 통계청, 2024년 3분기 실업률 발표(2024. 11. 13.)⁴⁷⁸⁾

- 프랑스의 2024년 3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하고 전 분기 대비 0.1%p 상승한 7.4%를 기록
 - 15~24세 실업률은 19.7%로 전 분기 대비 1.8%p 상승
 - 25~49세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1%p 낮은 6.6%, 50세 이상 실업률은 4.7%로 전

478) 프랑스 통계청, "In Q3 2024,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4%," 2024. 11. 13.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283457>, 검색일자: 2024. 11. 19.

분기 대비 0.3%p 낮아짐

- 고용률은 전 분기보다 0.2%p 상승한 69.0%를 기록

표 3-IV-11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구분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증감(%p)		2024년 3분기 실업자 수 (천명)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4	7.5	7.5	7.3	7.4	0.1	0.0	2,333
15~24세	17.3	17.6	18.3	17.9	19.7	1.8	2.4	671
25~49세	6.8	7.0	6.8	6.7	6.6	-0.1	-0.2	1,183
50세 이상	5.2	5.0	5.0	5.0	4.7	-0.3	-0.5	479
남자	7.4	7.7	7.6	7.3	7.6	0.3	0.2	1,231
15~24세	18.4	18.3	19.3	17.7	19.4	1.7	1.0	360
25~49세	6.4	6.9	6.6	6.5	6.9	0.4	0.5	630
50세 이상	5.1	5.1	5.2	5.1	4.7	-0.4	-0.4	241
여자	7.4	7.4	7.3	7.4	7.2	-0.2	-0.2	1,102
15~24세	16.0	16.7	17.0	18.2	20.0	1.8	4.0	312
25~49세	7.2	7.1	7.0	6.8	6.3	-0.5	-0.9	553
50세 이상	5.2	4.9	4.9	5.0	4.8	-0.2	-0.4	237
장기실업률	1.8	1.8	1.8	1.7	1.7	0.0	-0.1	533
고용률	68.4	68.5	68.8	69.0	69.1	0.1	0.7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4,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d by 0.2 points," 2024. 8. 9.

나. 재정 통계

■ 프랑스 예산국, 2024년 2분기 중앙정부 예산집행결과 발표(2024. 8. 2.)⁴⁷⁹⁾

- (재정수지) 2024년 2분기 프랑스의 총재정수지는 -1,034억 7천만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6억유로 개선
- (재정지출) 2024년 2분기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2,305억 7천만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7억유로(2.1%) 증가
 - 교사 임금 인상, 단기 및 장기 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증가 반영

479)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0 juin 2024," 2024. 8. 2.,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23567>, 검색일자: 2024. 8. 19.

- (재정수입) 2024년 2분기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1,713억 4,200만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01억 7,600만유로(6.3%) 증가
 - 소득세(+8억유로), 법인세(+9억유로), 부가가치세(+10억유로) 수입의 증가를 반영

표 3-IV-12 프랑스 2024년 2분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2년 2분기	2023년 2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61,328	-96,372	-88,573	-
재정지출(Dépenses)	237,987	260,665	263,650	1.1
재정수입(Recettes)	176,659	164,293	175,078	6.6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14,756	-19,810	-14,897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76,084	-116,181	-103,470	-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0 juin 2024," 2024. 8. 2.

표 3-IV-13 프랑스 2025년 2분기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3	2024	증감률 (%)
총재정지출(Dépenses(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	260,665	263,650	1.1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225,840	230,570	2.1
정부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1,077	1,138	5.7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71,044	76,807	8.1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40,217	42,331	5.3
부채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26,368	27,544	4.5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9,408	10,237	8.8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76,125	71,269	-6.4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1,601	1,244	-22.3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34,825	33,080	-5.0
지방자치단체 이전(Prele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2,284	22,302	0.1
EU 부담금(Prele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12,541	10,778	-14.1
총재정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avec fonds de concours))	164,293	175,078	6.6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161,246	171,342	6.3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154,404	156,320	1.2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41,656	42,458	1.9

구분	2023	2024	증감률 (%)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27,265	28,138	3.2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8,104	7,715	-4.8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48,058	49,070	2.1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29,321	28,939	-1.3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6,842	15,022	119.6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1)	3,047	3,736	22.6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부담금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0 juin 2024," 2024. 8. 2.

■ 프랑스 예산국, 2024년 3분기 중앙정부 예산집행결과 발표(2024. 11. 5.)⁴⁸⁰⁾

- (재정수지) 2024년 3분기 프랑스의 총재정수지는 -1,738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3억유로 개선
- (재정지출) 2024년 3분기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3,359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억유로(0.1%) 증가
 - 군사비 지출 증가, 교사 급여 인상 등이 증가 요인
 - 에너지 가격 보호 지원 정책의 종료 감소 요인
- (재정수입) 2024년 3분기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2,459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14억유로(4.9%) 증가
 - 법인세(+16억유로), 부가가치세(+5억유로), 기타 조세수입(+18억유로)의 증가를 반영

표 3-IV-14 프랑스 2025년 3분기 중앙정부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119,277	-148,684	-135,371	-
재정지출(Dépenses)	370,257	388,275	387,150	-0.3
재정수입(Recettes)	250,99	239,591	251,778	5.1

480)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septembre 2024," 2024. 11. 5.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28517>, 검색일자: 2024. 11. 19.

구분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27,334	-37,439	-38,412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146,611	-186,123	-173,783	-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septembre 2024," 2024. 11. 5.

표 3-IV-15 프랑스 2024년 3분기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3	2024	증감률(%)
총재정지출(Dépenses(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	388,275	387,150	-0.3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35,695	335,893	0.1
정부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1,077	1,138	5.7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106,715	114,310	7.1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57,984	60,825	4.9
부채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42,411	37,313	-12.0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13,929	15,072	8.2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111,458	105,717	-5.2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2,122	1,519	-28.4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52,580	51,256	-2.5
지방자치단체 이전(Prele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4,112	35,029	2.7
EU 부담금(Prele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18,468	16,227	-12.1
총재정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avec fonds de concours))	239,591	251,778	5.1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234,507	245,897	4.9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24,939	227,728	1.2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49,906	48,939	-1.9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39,001	40,640	4.2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12,285	12,054	-1.9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73,515	74,034	0.7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50,232	52,062	3.6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9,568	18,169	89.9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1)	5,084	5,882	15.7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부담금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septembre 2024," 2024. 11. 5.

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보고서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거시경제 및 재정의 전망과 실적치 비교 보고서 발표(2024. 9. 18.)⁴⁸¹⁾
 - 2004년부터 2023년까지 프랑스 정부의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과 실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 (성장률 전망)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실적보다 평균 0.4%p 높았음
 - 2014년 최고재정자문위원회 설립 이후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까지 전망 정확도가 다소 개선됨
 -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2022~2023년 에너지 위기 및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시 큰 차이를 보임
 - 최고재정자문위원회 설립 이후 정부의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소비와 투자 전망)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가계소비 증가율 전망은 실적보다 평균 0.6%p 높게 나타남
 - 2014년 이후 전망 정확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됨
 - 특히 2022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가계소비 증가율은 6.9%를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7%에 그쳤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속도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에서 기인
 - 2004~2023년 기간 기업 투자 증가율 전망은 실적보다 0.7%p 높게 나타남
 - 2014년 이후 더 신중하게 전망되었으나, 2023년 기업 투자 실적은 2.8%로, 정부의 전망치인 0.9%보다 높게 나타남
 - (인플레이션 전망) 소비자 물가 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 전망은 2004년에서 2023년

481) 최고재정자문위원회(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HCFP), "Le secrétariat permanent du 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a publié une note d'étude sur les prévisions macroéconomiques et de finances publiques du Gouvernement et leur réalisation," 2024. 9. 18. <https://www.hcfp.fr/node/264>, <https://www.hcfp.fr/sites/default/files/2024-09/Note%20d%27%C3%A9tude%202024-2.pdf>, 검색일자: 2024. 9. 20.

사이 대체로 실적과 유사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실적이 전망을 크게 상회함

- 2022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1.5%였으나, 실적은 5.2%를 기록
 - 2022년과 2023년 인플레이션의 전망과 실적 차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예측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
 - 에너지 가격 상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실적이 전망을 초과함

◦ (재정전망) 재정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전망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실적과 유사했음

- GDP 대비 재정수입은 전망이 실적보다 평균적으로 0.2%p 낮았고, GDP 대비 재정지출은 전망이 실적보다 0.25%p 낮았음
- GDP 대비 재정수지는 대체로 전망과 유사했으나, 위기 상황에서는 실제 수치가 전망보다 더 악화됨
- GDP 대비 공공채무 전망은 낙관적이었으며, 2004~2023년 평균 실적이 전망보다 1.6%p 높게 나타남
 - 하지만 금융위기(2009년)와 코로나19 위기(2020~2021년) 기간을 제외하면 차이는 0.4%p로 감소함

■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5년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4. 10. 10.)⁴⁸²⁾

-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예산법안과 사회보장 예산법안을 검토하여 거시경제 전망을 포함한 주요 가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연간 재정 목표가 다년도 재정 계획과 얼마나 일치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행함
-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가 예산법에서 4.4%로 전망되었으나, 이후 6.1%로 수정되어 1.7%p의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함
 - 재정 전망에 있어 신중한 가정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
- 2024년 경제성장률 1.1% 전망 및 물가상승률 2.1% 전망은 현실적이라 평가

482)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x projets de lois de finances et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année 2025," 2024. 10. 10.,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4-3-lois-de-finances-2025>, 검색일자: 2024. 10. 16.

- 2024년 재정 전망은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지만 예산 정보 및 거시경제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평가
 - 2025년 1.1%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재정정책의 긴축적인 기초를 고려할 때 다소 낙관적이라 평가됨
 - 경제 전망이 세계 무역, 기업투자, 가계 소비에 대한 낙관적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2025년 1.8%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2024년의 물가 상승 수준을 고려할 때 조금 높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
 - 2025년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이 재정수입 증가 및 재정지출 억제 조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4~2025년 다시 증가하여 코로나19 위기 당시 최고치였던 1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준수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재정지속가능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경제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의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는 2.8%인데, 이 목표가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
 - 예상된 의료비 절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5~2028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 발표(2024. 10. 10.)⁴⁸³⁾**
- 최고재정자문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 2025년 이후 경제 성장과 가계 및 기업 소득 전망이 명확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정부의 경제 성장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평가됨
 - 예산 조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 재정적자가 2029년까지 GDP의 3% 이하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7년으로 설정되었던 이전 목표보다 2년 연기됨

483)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 plan budgétaire et structurel à moyen terme 2025-2028," 2024. 10. 10.,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4-4-psmt-2025-2028>, 검색일자: 2024. 10. 16.

-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7년까지 증가하다가 202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특히 2025년 예산법안의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함
 - 이로 인해 GDP 대비 공공채무 감소 시점이 2028년 이후로 더 늦어질 수 있음
- 프랑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라. 사회보장부문 보고서

■ 프랑스 회계감사원, 사회보장부문 재정분석보고서 발표(2024. 11. 6.)⁴⁸⁴⁾⁴⁸⁵⁾

- *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적 악화를 지적하고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한 비정기적 보고서로 사회보장 재정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2024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180억유로로 전망되어, 2023년 108억유로 및 2024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전망치인 105억유로 대비 악화
 -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낮았고, 의료지출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며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함
-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의 회복 조치에 따라 2025년 재정적자는 160억유로로 개선될 전망
 - 추가적인 수입 증가 및 지출 절감을 통해 124억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 조치 추진
 - 사회보험료 면제 축소와 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추가 수입 확보
 - 연금 지급액 인상을 2025년 1월에서 7월로 연기하여 비용 절감
- 다만 2025~2028년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8년 재정적자가 199억유로로 증가할 전망
 - 노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
- 2025년의 재정조치는 단기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재정

484) 프랑스 회계감사원, "La situation financière de la sécurité sociale," 2024. 11. 6.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a-situation-financiere-de-la-securite-sociale>, 검색일자: 2024. 11. 19.

485)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Déficits de la sécurité sociale : une "impasse de financement" selon la Cour des comptes," 2024. 11. 13.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6089-securite-sociale-une-impasse-de-financement-selon-la-cour-des-compte>, 검색일자: 2024. 11. 19.

확보를 위해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

- 재정적자의 지속은 사회보장이 약화되고, 새로운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음
- 다년간의 체계적 재정개혁, 사회보장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 검토 필요

V

영국 486)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25회계연도: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

표 3-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4. 7. 10.	영국 총리실, 변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6가지 주안점 발표
2024. 7. 17.	영국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 예산안 발표
2024. 7. 18.	영국 재무부, 「예산 책임 및 감사법 2011」 개정을 통한 'fiscal lock' 규정 도입 발표
2024. 7. 29.	영국 재무부, 공공지출 감사(audit of public spending) 결과 발표
2024. 8. 1.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5.25→5.00%) 결정
2024. 9. 12.	영국 예산책임청(OBR), 「2024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i>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September 2024</i>) 발표
2024. 9. 24.	영국 재무부,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발표
2024. 10. 9.	영국 예산책임청(OBR), 「2024 복지 지출 보고서」(<i>Welfare trends report - October 2024</i>) 발표
2024. 10. 10.	영국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 평가 보고서」(<i>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4</i>) 발표
2024. 10. 30.	영국 재무부, 2024 가을 예산안(Autumn Budget 2024) 발표
2024. 11. 7.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5.00→4.75%) 결정
2024. 11. 12.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휴면자산제도(Dormant Assets Scheme)를 통한 지원 계획 발표
2024. 11. 15.	영국 통계청, 2024년 3분기 GDP 성장을 발표
2024. 11. 26.	영국 재무부, 2022-23회계연도 공공부문 통합 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2-23) 발표
2024. 11. 26.	영국 고용노동부, 노동백서 Get Britain Working 발표
2024. 12. 12.	영국 재무부, 지출검토 2단계(Spending Review Phase 2) 작업 개시
2024. 12. 17.	영국 통계청, 2024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2024. 12. 18.	영국 통계청,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2024. 12. 20.	영국 통계청, 2024년 11월 공공재정 현황 발표

자료: 저자 작성

48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김은숙 선임연구원(kesdww@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본예산

- 영국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 예산안⁴⁸⁷⁾ 발표(2024. 7. 17.)⁴⁸⁸⁾
 - 2024-25회계연도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약 1조 394억파운드, 전년 대비 472억파운드(4.8%) 증가
 - 부처별 지출한도(DEL)⁴⁸⁹⁾는 약 5,009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⁴⁹⁰⁾은 약 4,415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각각 109억파운드(2.1%) 감소, 593억파운드(15.5%) 증가
 -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⁴⁹¹⁾은 약 97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1억파운드(1.1%) 감소
 - 2024-25회계연도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은 약 8,504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188억파운드(2.3%) 증가

표 3-V-2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2-23 실적치	2023-24 잠정치	2024-25 계획
부처별 지출한도(DEL)(a)	449,697	511,847	500,906
자원 DEL	359,789	412,438	397,941
자본 DEL	89,907	99,408	102,966
연간 관리 지출(AME)(b)	212,745	382,215	441,522
자원 AME	182,822	300,360	342,450
자본 AME	29,923	81,855	99,073
총 순예산(a+b) (Total Net Budget)	662,442	894,062	942,428
총 비예산 지출(c)	86,664	98,145	97,020

487)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법률로 지출권한을 확정하기 위한 세출예산안

488) HM Treasury, "Main Supply Estimates 2024 to 25," 2024. 7. 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in-supply-estimates-2024-to-2025>, 검색일자: 2024. 7. 18.

489) Department Expenditure Limit: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490)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491)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 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구분	2022-23 실적치	2023-24 잠정치	2024-25 계획
(Total Non-Budget Expenditure)			
총 지출(a+b+c) (Total Resource and Capiture in Estimates)	749,105	992,207	1,039,448
현금주의 조정(d) (Resource to cash adjustment)	-41,922	-160,591	-189,001
총 순현금소요액(a+b+c+d) (Total Net Requirement)	707,184	831,616	850,447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4-25: Main Supply Estimates*, 2024. 7., <Table 1: 2.> 재구성

■ 재무부, 2024 가을 예산안(Autumn Budget 2024) 발표(2024. 10. 30.)⁴⁹²⁾

- (경제 전망) 영국 경제는 2023년에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2024년 상반기부터 급격히 회복되어 2026년까지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금리가 하락하고 가계 저축률이 정점을 지났으며 재정정책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킴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1%에서 2025년 2.0%, 2026년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사라지고 재정정책의 수요 지원이 약해짐에 따라, 2027년부터 성장률은 약 1.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물가) 2022년 10월, 41년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5%, 2025년 2.6%로 예상되고, 이후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3분기에 약 2%를 기록하였으나, 가스·전기 가격 상승,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 플러스(+의 산출 갭 등으로 인해 2025년에는 일시적인 상승(2.6%) 전망
 - 산출 갭의 플러스(+) 폭이 축소되고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2025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점차 하락하여 2029년에는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2024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높은 4.3%로 전망되고, 이후 4.0%에 가까운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고용률은 2024년 60.0%, 2025년 60.1%, 2026년 60.1%로 단기적으로 다소 상승하고, 이후 60.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492) 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Policy paper, 2024. 10. 3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budget-2024>, 검색일자: 2024. 11. 6.

- (가계)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RHDI)은 2024-25회계연도에 1.4%, 2025-26 회계연도에 1.1% 증가하고,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25-26회계연도까지의 증가세는 임금 기대치가 물가상승 대비 유지되고 있고 순이자 수입이 증가한데 기인
- 이후 둔화는 고용주들의 국민보험기여금 부담 증가가 상당 부분 실질 임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예측과 기타 세금들의 인상 등에 기인

표 3-V-3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실질 GDP 성장률	0.1	1.1	2.0	1.8	1.5	1.5	1.6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7.3	2.5	2.6	2.3	2.1	2.1	2.0
고용자 수	33.2	33.1	33.4	33.7	33.9	34.1	34.3
실업률	4.0	4.3	4.1	4.0	4.1	4.1	4.1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2.0	1.4	1.1	0.0	-0.2	0.6	0.7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 10., p. 168, <Table A.1.> 재구성

- (재정 전망) 2025-26회계연도의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1조 2,295억파운드(GDP 대비 41.7%), 총관리지출은 1조 3,351억파운드(GDP 대비 45.3%) 전망
- (수입)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3-24회계연도에 1조 1,008억파운드(GDP 대비 40.5%)를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1조 4,399억파운드(GDP 42.4%)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는 고용주의 국민보험기여금 인상, 명목소득 성장, 2027-28회계연도까지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 기준(threshold) 동결,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영한 수치
- (지출) 총관리지출은 2023-24회계연도에 1조 2,227억파운드(GDP 대비 44.9%)를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1조 5,105억파운드(GDP 대비 44.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공공지출 감사⁴⁹³)에서 예상한 219억파운드의 초과 지출과 공공부문 근로자 급여 인상, 국가의료서비스 개선, 교육시스템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소요를 반영한 수치

- (순차입)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4-25회계연도에 GDP 대비 4.5%(1,275억파운드)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여 2029-30회계연도에는 2.1%(76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순채무)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4-25회계연도에 60년 만에 최고치인 GDP 대비 98.4%에서 2028-29회계연도에 97.3%, 2029-30회계연도에 97.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3-V-4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2029-30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¹⁾	1,100.8	1,148.7	1,229.5	1,290.5	1,346.0	1,389.8	1,439.9
GDP 대비(a)	40.5	40.8	41.7	42.2	42.5	42.4	42.4
총관리지출(TME) ¹⁾	1,222.7	1,276.2	1,335.1	1,379.0	1,418.1	1,461.7	1,510.5
GDP 대비(b)	44.9	45.3	45.3	45.1	44.8	44.6	44.5
공공부문 경상지출(c)	40.0	40.3	40.1	39.9	39.7	39.6	39.7
공공부문 순투자(d)	2.6	2.6	2.7	2.7	2.6	2.5	2.4
감가상각(e)	2.4	2.5	2.5	2.5	2.5	2.4	2.4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4.5	4.5	3.6	2.9	2.3	2.2	2.1
경기조정 순차입	4.7	4.4	3.7	3.1	2.5	2.3	2.1
경상재정수지 적자(c+e-a)	1.9	2.0	0.9	0.2	-0.3	-0.3	-0.3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 ²⁾	97.8	98.4	96.9	97.0	97.2	97.3	97.1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³⁾	82.8	83.5	83.8	84.2	84.1	83.9	83.4

주: 1) 단위는 십억파운드

2) 공공부문 순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유동성 금융 자산

3)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기타 부채 - 유동성 금융 자산 - 비유동성 금융 자산*

*학자금 대출, 금융위기 동안 인수된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등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 10, p. 176, <Table A.9.> 재구성

◦ (주요 정책) 기반 확립을 통한 영국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첫 예산안을 편성하여 경제

49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 국제기구 및 주요국」, 2024. 8., pp. 40-41 참고

성장 미션을 완료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보도자료⁴⁹⁴)를 통해 다음 다섯 가지를 강조

- (국가의료서비스(NHS) 개선과 공공서비스 개혁) 국가의료서비스 개선과 교육 시스템 강화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상지출을 평균 3.3% 증액(2023-24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의 실질 증가율 기준)
 - 2024-25 및 2025-26 회계연도 동안 경상지출 보건·사회복지부에 226억파운드를 추가 배정하여, NHS가 매주 4만건의 추가 선택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개선을 위해 2024-25회계연도에 40억파운드를 추가 지원하되, 그중 23억 파운드는 핵심 학교(core schools) 예산에 배정하여 학생 1인당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액
-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호) 근로자에 대한 세금 인상 없는 정책 유지, 최저임금 인상, 연료세 동결, 탄소중립 자동차 지원, 돌봄 수당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호
 - 근로자의 국민보험기여금,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
 - 2025년 4월부터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시간당 11.44파운드에서 12.21파운드로 인상
 - 연료세 동결과 함께 휘발유·경유에 대한 리터당 5펜스 인하 정책을 2026년 3월까지 연장
- (영국 재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 학교, 병원, 도로 등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며,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등 영국을 재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 향후 5년간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3월 봄 예산안 대비 1천억파운드 이상 확대하되,⁴⁹⁵)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성은 유지
- (공공재정 회복) 기업과 부유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사용
 - 2025년 4월부터 고용주 국민보험기여금 기본요율을 15%로 1.2%p 인상하고,

494) HM Treasury, "Chancellor chooses a Budget to rebuild Britain," Press release, 2024. 10. 30.

495) 3월 봄 예산안에서는 공공부문 순투자의 GDP 대비 비율이 2024-25회계연도 2.4%에서 2028-29회계연도 1.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향후 5년(2025-26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 동안 연평균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액(Secondary Threshold)은 연간 9,100파운드에서 5천파운드로 하향 조정⁴⁹⁶⁾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저세율은 10%에서 18%로, 고세율은 20%에서 24%로 인상하여 주거용 부동산 세율과 동일하게 조정
- 상속세 면세 기준은 2030년 4월까지 현수준(32만 5천파운드)에서 동결되나, 2027년부터 상속받은 연금펀드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
-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재정준칙을 개정하고 지출검토(Spending Review)⁴⁹⁷⁾를 정비하는 등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혁하여 재정의 확실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 안정성 규칙(stability rule)과 투자 규칙(investment rule)⁴⁹⁸⁾을 기반으로 재정수지 준칙과 채무 준칙을 개정
- 2년마다 지출검토를 실시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지출계획을 수립

나. 결산

- 영국 재무부, 2022-23회계연도 공공부문 통합 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2-23)⁴⁹⁹⁾ 발표(2024. 11. 26.)⁵⁰⁰⁾
 - (당기 순지출) 2022-23회계연도 당기 순지출은 -146억파운드(당기 순수입 146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742억파운드 감소하였는데, 재무부는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 순지출이 344억파운드 과소 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표 3-V-5〉 참고)

496) 고용주의 국민보험기여금 관련 정책 결정으로 인해 2025-26회계연도부터 2029-30회계연도까지 연평균 약 245억 파운드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ctober 2024*, 2024. 10, p. 136, 〈Table 6.1〉 참고)

497) 보통 2~4년마다 이루어지는 중기재정지출계획으로, 향후 3년 동안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지출검토에서 2024-25회계연도까지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지난 7월에 노동당 정부는 2025년 지출검토를 계획하였고, 1단계 검토결과를 이번 예산안에 반영

498) stability rule: 경상지출은 세수로만 충당하여 경상재정수지는 균형을 유지(투자지출에 한해 차입을 허용한다는 의미), investment rule: GDP 대비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비율은 감소

499)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위임 행정부, NHS, 공기업 등 영국 공공부문의 1만개 이상 계정에 대한 통합 감사 회계보고서

500)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2-23," Policy paper, 2024. 11.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22-23>, 검색일자: 2024. 12. 2.; National Audit Office, "Spending watchdog disclaims government's accounts for the first time," Press release, 2024. 11. 26., <https://www.nao.org.uk/press-releases/spending-watchdog-disclaims-governments-accounts-for-the-first-time/>, 검색일자: 2024. 12. 2.

- (공공서비스 순지출) 2022-23회계연도의 공공서비스 순지출은 1,591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7억파운드 감소
 -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2억파운드 증가, 총수입은 929억파운드 증가
- (장기 부채 금융 비용) 2022-23회계연도 장기 부채 금융 비용은 -1,419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391억파운드 감소
 - 이는 주로 2022-23회계연도에 총당금의 단기, 중기, 장기 할인율이 모두 크게 상승하여 총당금⁵⁰¹⁾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⁵⁰²⁾
 - * 2021-22회계연도 1,499억파운드, 2022-23회계연도 -2,228억파운드
- (순부채) 2022-23회계연도의 순부채는 2조 3,891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조 4,858억파운드 감소하였는데, 재무부는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 순부채가 317억파운드 과대 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표 3-V-6> 참고)
 - (총자산) 2022-23회계연도 총자산은 2조 5,543억파운드, 전년 대비 1,400억 파운드 증가
 - 이는 주로 토지, 건물, 도로 및 철도망 등의 유형고정자산 증가(949억파운드)에 기인
 - (총부채) 2022-23회계연도 총부채는 4조 9,434억파운드, 전년 대비 1조 3,458억 파운드 감소
 - 이는 주로 공공부문 연금 부채* 감소(1조 2,241억파운드)에 기인
 - * 공공부문 연금 부채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의 변화와 물가상승률, 급여 상승, 기대 수명, 인력 규모와 같은 보험 수학적 가정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
- (감사 의견) 감사원은 잉글랜드 426개 지자체⁵⁰³⁾의 회계 감사 지연(미처리)(backlog) 문제로 인해 “의견을 형성할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라며 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통합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거부(disclaim)
 - 426개 지자체 중 10%(43개)만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였고, 46%(196개)는 감사를 받지 않은 데이터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44%(187개)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501) provision: 차기 이후의 지출할 것이 확실한 특정 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그 이전에 각 기간의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에 미리 계상하는 금액으로, 영국의 경우 핵 폐기물(Nuclear Decommissioning) 처리, 임상 과실(Clinical Negligence) 관련 비용 등을 총당금에 설정

502) 할인율이 크게 상승하여 총당금이 음수(-)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미래 경제적 상황이 현재에 비해 극도로 낙관적이라는 가정, 미래 지출 자체의 큰 불확실성, 미래의 기술적 발전이나 규제 완화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503) 행정 구역의 수가 아니라 통합 결산에 참여해야 하는 독립 회계 주체(계정)의 수를 의미

않음⁵⁰⁴)

-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감사 기한 고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2023-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감사 의견 거부 가능성은 높은 상황

표 3-V-5 수입 및 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항 목	2021-22	2022-23
공공서비스 총지출(Total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a]	1,044.4	1,133.6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259.7	276.1
인건비(Staff costs)	284.5	306.7
재화, 서비스 구매 및 기타 지출 (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 other expenditure)	256.2	254.3
교부금 및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121.0	122.4
감가상각 및 감손(Depreciation and impairment)	47.9	52.8
차입이자(Interest costs on government borrowing)	47.1	85.1
기타(Other)	28.0	36.2
공공서비스 총수입(Total public services revenue)[b]	881.6	974.5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774.7	857.7
기타수입(Other revenue)	106.9	116.8
공공서비스 순지출(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a-b]	162.8	159.1
장기 부채 금융 비용 (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c]	197.2	-141.9
금융 자산·부채의 재평가 (Revalu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d]	-0.4	-31.8
당기 순지출(Net expenditure for the year)[a-b+c+d]	359.6	-14.6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2-23*, 2024. 11., p. 121, 재구성

504) 영국 공인회계사 협회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 부족 심화, 감사 인력 부족, 감사 일정의 누적 지연 등으로 인해 외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을 통한 지자체의 자체 회계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데이터 미제출 추세가 2019-20회계연도 이후 증가하고 있음도 언급(2019-20 21개, 2020-21 155개, 2021-22 178개)(자료: ICAEW, "Spending watchdog disclaims government's accounts," Viewpoints December 2024, 2024. 12. 3., <https://www.icaew.com/insights/viewpoints-on-the-news/2024/dec-2024/spending-watchdog-disclaims-governments-accounts>, 검색일자: 2024. 12. 12.)

표 3-V-6 자산 및 부채

(단위: 십억파운드)

항 목	2021-22	2022-23
총자산(Total assets)[a]	2,414.3	2,554.3
유형고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340.4	1,435.3
기타 금융자산(Other financial assets)	724.8	721.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Trade and other receivables)	215.6	232.9
기타 자산(Other assets)	133.5	165.0
총부채(Total liabilities)[b]	6,289.2	4,943.4
공공부문 연금(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2,639.1	1,415.0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s)	1,575.7	1,754.0
기타 금융부채(Other financial liabilities)	1,334.0	1,251.2
충당금(Provisions)	527.8	306.9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Trade and other payables)	212.6	216.3
순부채(Net liabilities)[b-a]	3,874.9	2,389.1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2-23*, 2024. 11., pp. 123~124, 재구성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재정 감사 및 평가

- 영국 재무부, 「예산 책임 및 감사법 2011」⁵⁰⁵⁾ 개정을 통한 ‘fiscal lock’ 규정 도입 발표(2024. 7. 18.)⁵⁰⁶⁾

◦ (목적·배경)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가구 금융을 보호하기 위함

- 2022년 9월에 당시 보수당 정부는 대규모 감세 조치를 포함한 ‘2022년 성장계획’을

505)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정부 재정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예산책임청의 영구화, 감사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1년 제정된 법으로, 예산 책임(Budget Responsibility)에 대한 부분과 감사(National Audit)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

506) OBR, “The Budget Responsibility Bill,” News, <https://obr.uk/the-budget-responsibility-bill/>, 검색일자: 2024. 7. 22.; “Draft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text on the fiscal lock,” Policy pap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raft-charter-for-budget-responsibility-text-on-the-fiscal-lock>, 검색일자: 2024. 7. 22.; “Government introduces new Fiscal Lock Law to deliver economic stability and protect family finances,” Press release,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introduce-s-new-fiscal-lock-law-to-deliver-economic-stability-and-protect-family-finances>, 검색일자: 2024. 7. 22.; UK Parliament, “Budget Responsibility Bill,” Parliamentary Bills, <https://bills.parliament.uk/bills/3731>, 검색일자: 2024. 7. 22.

발표하였으나, 금융시장 혼란(국채 금리 급등,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이 심화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주요 정책들을 철회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정부는 ‘대규모 재정 정책(fiscally significant measure)’ 수립 시 경제 및 재정적 영향에 대해 예산책임청(OBR)의 독립적인 평가가 수반되도록 하는 ‘fiscal lock’을 도입하고, 이를 동 법에 규정
 - ‘fiscal lock’은 ‘일시적(temporary)이고 비상적인(emergency) 상황에 대한 대응’의 경우에는 미적용
 - ‘대규모 재정 정책’, ‘일시적이고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의 정의 등 세부사항은 예산책임청⁵⁰⁷⁾에 명시
 - ‘대규모 재정 정책’은 GDP* 대비 1%(현재 기준, 약 300억파운드) 이상의 영구세⁵⁰⁸⁾ 또는 재정지출 변동을 수반하는 정책을 의미
 - * 예산책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예측에서 해당 연도의 명목 GDP를 의미
 - ‘일시적이고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같이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일시적이면서 비상적인 조치를 의미
 -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나 예산책임청에 평가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산책임청은 재량적으로 ‘fiscal lock’을 작동할 수 있음
- (평가) 영국산업연맹(CBI)의 루이스 헬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안정성은 경제 성장과 기업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세 및 재정지출의 대규모 정책이 예산책임청의 독립적인 평가를 받도록 보장하면 기업과 투자자에게 공공재정의 안정성에 대해 추가적인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507)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예산 책임 및 감사법 2011」의 ‘Part 1. 예산 책임’ 규정에 따라 재무부의 재정 목표(재정 준칙), 연간 예산 보고서에 필요한 내용,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재무부의 목표, 예산책임청의 역할 등에 대한 것을 수록한 문서

508) permanent tax: 영국의 조세는 영구세와 연간세(annual tax)로 구분되는데, 간접세는 대부분 영구세이며 세율이 매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소득세, 법인세 등은 연간세로, 경제여건이나 조세정책에 따라 세율과 구간, 감면 한도 등이 매년 바뀜(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 p. 27.)

■ 영국 재무부, 공공지출 감사(audit of public spending) 결과 발표(2024. 7. 29.)⁵⁰⁹⁾

- (배경) 지난 7월 4일에 조기 총선을 통해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7월 8일에 신임 재무부 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2024-25회계연도 공공지출에 대한 감사를 지시
- (감사 결과) 자원(경상) 부처별 지출한도(RDL)에서 2024년 봄 예산 대비 219억 파운드의 초과 지출이 예상되고, 이러한 초과 지출 압력의 원인은 다음 네 가지
 - 2021년 지출검토(Spending Review)⁵¹⁰⁾ 이후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unfunded) 여러 정책 결정으로 인해 2024-25회계연도 지출 압력이 총 26억파운드 증가
 - 2021년 지출검토에서 2024-25회계연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할 때 예측된 향후 3년의 누적된 물가상승의 영향이 예상보다 커 최소 150억파운드의 지출 압력이 증가
 - 2021년 지출검토에서 예산책임청(OBR)은 향후 3년 동안 누적된 물가상승률을 약 7%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2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13%를 기록하였고 3년으로는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망명과 이민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철도 승객 수요의 더딘 회복 등 국내외의 최근 이슈로 인해 지출 압력이 상당히 증가
 - 2021년 지출검토에서 공공부문 근로자 급여 인상률*을 향후 3년 동안 각각 3%, 2%, 2%로 적용하였으나, 실제로는 2022-23회계연도에 5%, 2023-24회계연도에 6%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4-25회계연도의 급여 지출 압력 또한 증가
 - * 공공부문 근로자 급여 인상률은 독립적인 급여 검토 기관인 PRBs(Pay Review Bodies)의 권장 사항에 따라 설정
- (즉각적 조치) 보수당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 중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정책을 철회하는 등 향후 2년간 약 135억파운드를 절감

509) HM Treasury, "Fixing the foundations: public spending audit 2024-25," Policy paper, 2024. 7. 2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xing-the-foundations-public-spending-audit-2024-25>, 검색일자: 2024. 8. 19.

510) 보통 향후 3년의 기간에 대해 각 연도의 정부 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

표 3-V-7 공공지출 감사에 따른 즉각적 절감 조치

(단위: 백만파운드)

부처	절감 내용	절감액	
		2024-25	2025-26
모든 부처	행정 예산 2% 삭감, 커뮤니케이션(의견청취, 공청회 등) 관련 비필수 지출 중단, 2024-25회계연도 컨설팅 관련 비필수 지출 중단, 2025-26 회계연도 컨설팅 지출 절반 삭감	3,150	3,150
노동·연금부	2024-25회계연도 겨울부터 동절기 연료 보조금(Winter Fuel Payment) 대상 축소	1,400	1,500
내무부	르완다 이주 파트너십 종료 및 불법이주법(Illegal Migration Act)의 소급 적용 종료	800	1,400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투자기회기금(Investment Opportunity Fund) 사업 및 기타 소규모 프로젝트 철회	70	50
보건·사회복지부	성인 사회적 돌봄 비용 개혁(adult social care charging reform)(돌봄 비용 부담 상한 설정, 자산에 따른 돌봄 비용 차등 지원 등) 중단	30	1,075
교통부	교통 인프라 포트폴리오 검토, A303 스톤헨지 터널 및 A27 계획 철회, 철도 복원 프로그램 철회	0	785
교육부	A레벨(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대체하는 고급영국표준(Advanced British Standard) 철회	0	185
합계		5,455	8,145

자료: HM Treasury, *Fixing the foundations - Public spending audit 2024-25*, 2024, p. 9, <Table 2>, 재구성

- (중장기적 조치) 공공지출 통제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시행
 - 추가적인 절감을 파악하고 2024-25회계연도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재확정하여 이를 2024년 10월 30일에 가을 예산안⁵¹¹⁾을 통해 발표
 - 2025년 봄에 지출검토를 통해 중기적인 지출 통제를 시행하고 정부의 광범위한 재정 전략에 따라 지출 정책을 설정
 - 지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고, 재무부와 예산책임청이 공유하는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여 초과 지출 압력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제(이하 개혁 관련 세부사항은 예산책임헌장을 개정하여 명시)
 - 충격(shock)에 직면할 경우에도 부처별 지출을 재계획할 수 있도록 5년의 예측 기간에 대한 지출검토를 2년마다, 최소 3번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서비스를 중기적으로 계획

511) 보수당 정부하에서 지난 3월에 봄 예산안이 발표된 바 있음.

- 예산책임청은 현재 및 다음 회계연도의 부처별 지출 압력에 대해 평가하고 재무부는 이를 공유(정부는 부처별 과소 지출 또는 초과 지출 가능성을 총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GDP 대비 1% 이상의 대규모 재정 정책 수립 시 예산책임청의 독립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는 ‘fiscal lock’⁵¹²⁾ 규정을 도입

나. 지출검토

- 영국 재무부, 지출검토 2단계(Spending Review Phase 2) 작업 개시(2024. 12. 12.)⁵¹³⁾
 - (개요 및 배경) 지출검토는 보통 2~4년마다 이루어지는 중기 재정 지출 계획으로, 향후 3년 동안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 정부는 지출검토 1단계 결과를 10월 30일 발표된 ‘가을 예산안 2024’에 반영⁵¹⁴⁾ 하였고, 이어 2단계를 진행하여 ‘지출검토 2025’를 2025년 늦은 봄에 발표할 예정임을 밝힘
 - (2단계 검토 방향) 공공부문 지출을 철저히 검토하여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세금이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
 - (지출 항목별 정밀 검토) 모든 지출이 노동당 정부가 강조하는 ‘변화’를 위한 계획에 부합하고 비용 대비 가치(VfM)가 있는지 항목별로 정밀 검토(line-by-line review)를 통해 확인
 - (제로 베이스 검토) 2007년 지출검토 이후 17년 만에 제로 베이스 검토(zero-based review) 방식⁵¹⁵⁾을 채택하여 모든 지출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 (우선순위 지출) 경제 성장 촉진, NHS 개선, 치안 강화, 청정에너지 발전, 아동복지 증진, 국경 및 국가 안보 강화 등의 주요 우선순위에 자금을 배분하여 납세자의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

512) 주요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4. 7. 참고

513) HM Treasury, “Chancellor: Every pound spent will deliver Plan for Change,” Press release, 2024. 12. 1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every-pound-spent-will-deliver-plan-for-change>, 검색일자: 2024. 12. 16.

514) 김빛마로·김정환·김은숙, 『주요국 예산안 - 영국 2024 가을 예산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4. 12., pp. 17~20 참고

515) 기존의 지출 항목과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모든 예산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방법. 즉 기존 예산에 약간의 변화(증액 또는 감액)를 더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음.

- (외부 전문가 검토) Lloyd's Banking Group, Barclays Bank, Co-operative Group⁵¹⁶)의 전직 고위 경영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독립적 검토를 수행
 - 패널은 정부 지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식별하고 절감 방안을 제안
- (우선순위 無기여 지출 중단)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기여하지 않는 지출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침을 각 부처에 서한을 통해 전달
 - 이를 통해 정부가 낭비를 근절하고 국민의 세금을 최우선 과제에 사용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
- (VfM⁵¹⁷) 평가) 비용 대비 가치가 낮은 지출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
 - 일례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Social Workers in Schools 프로그램의 650만파운드 지출에 대한 평가를 이미 실시하였는데, 사회복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비용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다. 새 정부 출범

- 영국 총리실, 변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여섯 가지 주안점 발표(2024. 7. 10.)⁵¹⁸)
 - (배경) 지난 7월 4일에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이 하원 650석 중 412석을 확보하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고, 이에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변화'를 위한 여섯 가지 주안점을 발표
 - (경제적 안정 제공)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고 모든 분야의 향상을 도모
 - 경제 성장을 통해 영국의 번영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 엄격한 지출 규정을 세우고, 세금과 물가, 모기지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
 - (국가의료서비스(NHS) 대기시간 단축) 저녁과 주말 동안 매주 4만건의 예약을 더 제공하여 국가의료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

516) 영국 기반의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소매업, 금융, 장례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다각화된 기업 그룹

517) VfM 보고서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https://www.nao.org.uk/reports/>)

518)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Our first steps for change," News story, <https://www.gov.uk/government/news/our-first-steps-for-change>, 검색일자: 2024. 7. 19.

- 조세회피와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단속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 자금을 이용해 국가의료서비스 CT 및 MRI 스캐너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매년 긴급예약을 포함한 70만 건의 치과 패키지를 제공
- (신규 국경경비대 출범) 국경 보안을 위해 새로운 국경경비대를 출범시키고, 경찰과 수사관을 증원 배치하여 불법 밀수 및 밀거래 조직을 검거하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
 - 테러 방지 전술과 정보·경찰력을 총동원한 인신매매 조직 파괴 또한 포함
- ('Great British Energy' 설립) 국영 재생에너지 개발 기업인 'Great British Energy'를 설립하여 국민에게 전력을 공급
 -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두고, 국내 재생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국 전역에 공급망을 구축
 -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에 부과되는 횡재세⁵¹⁹⁾ 수입이 투입될 예정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반사회적 행위 단속) 1만 3천명의 지역 경찰과 치안 보조 인력을 순찰에 투입하고, 모든 지역 사회에 필요 시 연락할 수 있는 전담 경찰을 배치
 -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범죄에 빠질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
 - 마약 거래나 음주, 도심과 문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혼란 등에 대한 단속이 용이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
- (신규 교사 6,500명 모집) 인력이 부족한 주요 과목에 6,500명의 신규 교사를 모집하여 아이들이 삶을 준비하고 기회 장벽을 허무는 데에 도움을 줄 계획
 -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종료하고, 이로 인해 생긴 절감분은 교육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이 고품질의 교육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
 - 청년들이 삶과 일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성, 디지털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 커리큘럼을 풍부하고 광범위하게 검토

519) windfall tax: 기업 경영의 본질과 무관하게 얻은 뜻하지 않은 이익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영국 재무부,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발표(2024. 9. 24.)⁵²⁰⁾

- (초등학교 조식 시범 사업) 최대 750개의 초등학교가 조식 시범 사업⁵²¹⁾에 참여할 수 있도록 700만파운드를 지원(2025년 여름 학기(4~7월) 시행)
 - 교육부는 사업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예정
 - 아동의 식량 불안 증가를 해결하여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목표를 지원
- (코로나 부패 위원) 코로나 부패 위원(Covid Corruption Commissioner)을 10월에 임명하여 개인 보호 장비(PPE) 계약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평가를 시행
 - 이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수당 집권 시기에 발주한 6억파운드 상당의 계약을 조사할 방침
- (산업 전략) 10월 예산안 발표 시기에 맞춰 정부의 장기적인 부문별 성장과 우선 산업을 설명하는 녹색(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봄에 최종 전략을 발표
 - 청정 에너지, 탄소중립 가속화, 지역 성장의 장벽 제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통해 경제에 장기적인 변화를 주는 데 중점
- (세무제도 개선) 전자 송장 도입, 디지털 전환 로드맵 등을 통해 세무제도를 개선
 - 전자 송장(e-invoicing)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전자 송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도입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수집
 - 전자 송장을 도입하면 행정 업무 감소, 현금 흐름 개선, 생산성 향상, 세무 신고 오류 감소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2025년 봄에 발표
 - 로드맵에는 디지털 포용성⁵²²⁾을 보장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고객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계획

520) HM Treasury, "Chancellor unveils package to deliver on promises of new government," Press release, 2024. 9. 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unveils-package-to-deliver-on-promises-of-new-government>, 검색일자: 2024. 9. 24.

521) School Breakfast Club Pilot: 영국은 학교식량계획(School Food Plan)의 일환으로 1교시 시작 전에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Breakfast Club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것

522) Digital Inclusion: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

라. 노동정책

- 영국 고용노동부, 노동백서 *Get Britain Working* 발표(2024. 11. 26.)⁵²³⁾
 - (개요) 비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고용, 보건, 기술 지원에 대한 종합 개혁안
 - (주요 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노동 시장 참여 배제, 기술 또는 교육(훈련) 부족,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여성의 경력 단절, 노동력 부족과 기술 격차로 인한 고용주의 채용에 대한 어려움, 지역 또는 집단 간 노동시장 격차
 - (주요 개혁안) 국가의료서비스(NHS) 확대, 지역사회 주도의 지원, 청년층 지원, 구직 및 경력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개혁안을 제시
 - (국가의료서비스 확대) 고용률 개선을 위해 NHS 및 광범위한 보건 시스템을 확대
 - NHS가 매주 4만건의 추가적인 선택 진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건강 관련 비경제활동이 심각한 20개 지역의 NHS trust⁵²⁴⁾에 전담 인력과 시설을 마련하여 대기자 명단을 감축
 - Talking Therapies⁵²⁵⁾ 확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⁵²⁶⁾ 도입, 비만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
 - (지자체 주도의 지원)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 건강 및 기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
 - 2025-26회계연도에 1억 2,500만파운드를 투입하여 비경제활동 감소를 위한 8개 지역 기반 Trailblazer 이니셔티브⁵²⁷⁾를 시행
 - 내년엔 1억 1,500만파운드를 투입하여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Connect to Work⁵²⁸⁾ 등을 통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연간

523) HM Treasury, "Get Britain Working White Paper," Policy paper, 2024. 11.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t-britain-working-white-paper>, 검색일자: 2024. 12. 2.

524) NHS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이나 전문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525) 심리 치료를 통해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성인들을 지원하는 NHS 프로그램

526) Tobacco and Vapes Bill: 흡연율 감소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도입한 법안으로, 담배 판매 연령 제한 강화, 전자담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527) 노동 정책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로, 특히 직업 훈련 및 기술 교육을 혁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이니셔티브

528) 장애인,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 기타 복잡한 취업 장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고용 프로그램

최대 10만명 지원 목표)

- (청년층 지원) 18~21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견습 기회를 보장하는 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을 지원
 - 2025-26회계연도에 4,500만파운드의 자금을 투입하여 8개 지역 기반 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을 지원
 - 견습세⁵²⁹⁾를 성장·기술세⁵³⁰⁾로 전환하여 기업이 직원 교육과 기술 향상을 위해 자금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직 및 경력 지원 시스템 구축) 고용 촉진, 비경제활동 문제 해결,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Jobcentre Plus⁵³¹⁾와 National Careers Service⁵³²⁾를 통합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경력 서비스를 구축
 -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제공
 - 개인 맞춤형 지원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고 기술을 개발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 (고용주 지원) 고용주가 건강하고 포용적인 직장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검토를 시행하되 다음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
 - 장애인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및 경력 서비스를 통해 이를 촉진

529) Apprenticeship Levy: 견습제도의 확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제도로, 연간 급여 총액이 3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12개월 분할 납부). 동 세금은 디지털 계정(digital account)에 적립되고 납부 대기업을 24개월 동안 이 자금을 이용하여 수습생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음. 연간 급여 총액이 300만파운드 이하인 중소기업은 디지털 계정에서 남은 금액과 정부 일반 재정을 통해 수습생 교육비의 95%를 지원받음 (Department for Education, "How are apprenticeships funded and what is the apprenticeship levy?," The Education Hub, 2023. 3. 10.,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3/03/10/how-are-apprenticeships-funded-and-what-is-the-apprenticeship-levy/?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4. 12. 20.)

530) Growth and Skills Levy: 기존 견습제는 주로 견습 프로그램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성장·기술세는 다양한 교육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또한 12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학습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Multiverse, "Labour's Growth and Skills Levy: What it means for employers," Employers, 2024. 7. 5., https://www.multiverse.io/en-GB/blog/labour-growth-and-skills-levy-what-it-means-for-employers?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4. 12. 20.)

531)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하고, 구직자에게 복지 혜택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는 노동·연금부

532) 경력 상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경력 개발을 돕는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는 정부

-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

마. 통화정책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5.25→5.00%) 결정(2024. 8. 1.)⁵³³⁾

- (경제 현황 논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 투표에 앞서 세계경제 및 영국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
 - (국제 경제) 세계 GDP는 2024년 1분기에 0.5% 성장하였고, 2분기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미국은 가계 소비 강세가 연초 이후 다소 완화되었으나, 강력한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로 상쇄되어 GDP는 1분기에 0.4%, 2분기에 0.7% 성장하였고, 하반기에는 분기별 0.5%씩의 성장 예상
 - 유로지역의 GDP 성장률은 1분기와 2분기 모두 0.3%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유로지역의 성장은 실질 소득의 강한 성장과 과거 통화 긴축 영향의 감소로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의 정점 대비 하락하였으나, 목표(2%)보다 다소 높은 수준(각각 6월 2.5%, 7월 2.6%)을 기록
 - (영국 경제) 영국의 GDP 성장률은 1분기에 0.7%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성장세는 2분기에도 지속되었으나 이후 3분기에 0.4%, 4분기에 0.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기업 서비스 및 제조업의 활동은 증가한 반면, 건설 활동은 감소
 - 최근 가계 실질 소득의 강한 성장은 소비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 통화 정책 강화는 수요에 계속하여 부담으로 작용
 -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률은 4.4%를 기록하였는데, 통화 정책의 제한적 입장이 수요에 계속하여 부담을 주면서 이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5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연율)은 목표치인 2%를 하회하였고 6월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국내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해 하반기에 2.75%까지 증가할 것으로

533) Bank of England, "Bank Rate reduced to 5% - August 2024," News & Events, 2024. 8. 1.,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4/august-2024>, 검색일자: 2024. 8. 5.;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August 2024*, 2024. 8.

예상

- (금리 인하) 통화정책위원회의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4명은 5.25%로 유지할 것을 선호하였으나, 5명은 5.00%로 인하 의견을 제시
 -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저치인 0.10%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결정된 첫 인하

표 3-V-8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3년								2024년				
	2.2	3.23	5.11	6.22	8.3	9.21	11.2	12.14	2.1	3.21	5.9	6.20	8.1
금리	4.00	4.25	4.50	5.0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0

자료: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4. 8. 1.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5.00→4.75%) 결정(2024. 11. 7.)⁵³⁴⁾

- (경제 현황 논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 투표에 앞서 국제 경제 및 영국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
 - (국제 경제)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2분기에 0.5%를 기록하였고, 3분기와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GDP 성장률은 2분기에 0.7%였고, 3분기에도 같은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4분기에는 0.5%로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의 GDP 성장률은 2분기 0.2%에서 3분기 0.4%로 증가했으나, 유로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국인 독일의 성장률은 부진한 모습
 - 중국의 GDP 성장률은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2분기 0.5%에서 3분기 0.9%로 증가하였으나, 소비 지출 부진과 부동산 부문 악화가 계속해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
 -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9월에 2.1%로 하락하였고, 유로지역은 10월에 ECB의 2% 목표에 도달하는 등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근접

534) Bank of England, "Bank Rate reduced to 4.75% - November 2024," News & Events, 2024. 11. 7.,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4/november-2024>, 검색일자: 2024. 11. 15.;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November 2024*, 2024. 11. 7.

- (영국 경제) 영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2분기에 0.5%로 지난 8월 전망(0.7%) 대비 약세를 보였고, 3분기 0.2%, 4분기 0.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기업투자와 정부지출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주택 투자 부진이 이를 상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에 1.7%로 목표치인 2%를 하회하였으나, 국내 에너지 요금 인하 효과가 악화되면서 연말까지 2.5%로 상승하고, 이후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8월까지, 3개월 동안 4%를 기록하였고, 이후 중기적으로 4.5%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민간부문의 연간 평균 주당 소득(AWE) 성장률은 8월까지, 3개월 동안 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금리 인하) 통화정책위원회의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8명이 4.75%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였고, 나머지 1명만이 5.00%로 유지할 것을 선호

표 3-V-9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3년								2024년						
	2.2	3.23	5.11	6.22	8.3	9.21	11.2	12.14	2.1	3.21	5.9	6.20	8.1	9.19	11.7
금리	4.00	4.25	4.50	5.0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00	5.00	4.75

자료: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4. 11. 7.

바. 기타

-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휴면자산제도(Dormant Assets Scheme)를 통한 지원 계획 발표(2024. 11. 12.)⁵³⁵⁾
 - (개요) 휴면자산제도는 정부와 금융서비스 회사 간 독특하고 잘 확립된 파트너십으로, 오랫동안⁵³⁶⁾ 사용되지 않은 금융자산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동 제도는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되찾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535)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ormant Assets Scheme: Allocating £350 million for England," 2024. 11. 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dormant-assets-scheme-allocating-350-million-for-england>, 검색일자: 2024. 11. 15

536) 일반적으로 15년 이상.

- 설계되어 자산 소유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받을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음
- 금융자산에는 은행 계좌, 건축조합⁵³⁷⁾ 계좌가 포함되고, 최근에는 논의를 통해 보험, 투자 자산(펀드, 주식, 채권 등), 연금까지 범위가 확대
 - (현황) 지난 10년 동안 휴면자산제도를 통해 영국 전역의 사회 및 환경 이니셔티브에 9억 8,200만파운드를 지원
 - (계획) 휴면자산제도를 통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억 5,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 자금은 다음 네 가지 목적을 위해 각각 8,750만파운드씩 분배
 -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시설 또는 기회 제공
 - 개인의 재정 관리 능력 개발 또는 개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사회적 투자 도매업체 지원(1,250만파운드는 청소년 성과 개선을 지원하는 조직에 배정)
 - 지역사회 재정 기금(Community Wealth Fund)⁵³⁸⁾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통계

- 영국 통계청,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11. 15.)⁵³⁹⁾
 - 실질 GDP는 2024년 2분기에 0.5%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3분기에는 0.1%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부문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은 0.1% 증가, 건설 부문은 0.8% 성장, 생산 부문은 0.2% 감소
 -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순 무역량, 가계 지출, 기업 투자, 정부 소비는 증가했으나, 총 자본형성은 감소

537) building society: 주로 주택 대출(모기지 대출)과 저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538)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기금

539)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July to September 2024," Economy, 2024. 11. 15.,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firstquarterlyestimateuk/julytoseptember2024>, 검색일자: 2024. 12. 31.

- 2024년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는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명목 GDP는 2024년 3분기에 0.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주로 피용자 보수 및 기타 수입의 증가에 기인
- 2024년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명목 GDP는 3.4%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3-V-10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 추이(계절조정)

(단위: %)

구분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2023년 1분기	0.1	2.1
2023년 2분기	0.0	1.9
2023년 3분기	-0.1	0.8
2023년 4분기	-0.3	0.0
2024년 1분기	0.7	1.4
2024년 2분기	0.5	1.1
2024년 3분기	0.1	0.8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July to September 2024," Economy, 2024. 11. 15.

- 영국 통계청, 2024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2024. 12. 17.)⁵⁴⁰⁾
 - 2024년 8~10월, 16~64세의 고용률은 74.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전 3개월 대비 0.1%p 증가한 수치
 - 고용률은 2012년 초부터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감소
 - 2020년 말부터 증가한 후 2023년 중반부터 2024년 초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 2023년 8~10월 이후로 전일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부분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 감소로 상쇄
 - 2023년 8~10월 이후로 두 번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 8~10월에는 그 수가 감소
 - 2024년 8~10월, 16세 이상의 실업률은 4.3%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전 3개월 대비

54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market overview, UK: December 2024," 2024. 12. 17.,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employeetypes/bulletins/uklabourmarket/december2024>, 검색일자: 2024. 12. 31.

0.1%p 증가한 수치

- 실업률은 2013년 후반 이후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
 - 2021년 초부터 2022년 중반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로 감소
 - 2023년 하반기에 감소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크게 증가
- 2023년 8~10월 이후 1년 동안 실업자 수의 증가는 6개월 이상 실업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2024년 8~10월 실업자 수의 증가는 최대 12개월 동안 실업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
- 2024년 8~10월, 16~64세의 비경제활동률은 21.7%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전 3개월 대비 0.2%p 감소한 수치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전까지 비경제활동률은 대체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하였고, 이 증가율을 중심으로 변동하다가 2023년 8월부터 감소

그림 3-V-1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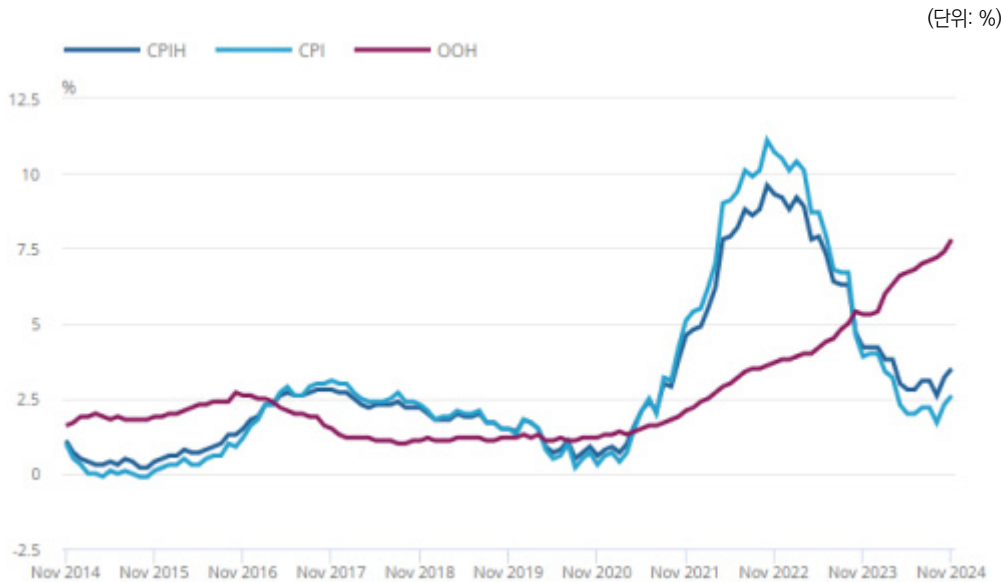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market overview, UK: December 2024," 2024. 12. 17.

■ 영국 통계청,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2024. 12. 18.)⁵⁴¹⁾

- 2024년 11월 CPIH⁵⁴²⁾는 전년 동월 대비 3.5%, CPI는 2.6% 상승하여, 10월 대비 각각 0.3%p씩 증가
 - CPIH의 연간 상승률 월별 변화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운송(0.1%p), 주거 및 가구 서비스(0.1%p) 등이 상승에 기여하였고, 음식점과 호텔(-0.03%p)이 하락에 기여
 - CPI의 연간 상승률 월별 변화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운송(0.13%p), 레크레이션과 문화(0.08%p) 등이 상승에 기여하였고, 음식점과 호텔(-0.04%p)이 하락에 기여
- 2024년 11월 OOH⁵⁴³⁾는 전년 동월 대비 7.8% 상승하여, 10월 대비 0.4%p 증가
-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2024년 11월 Core CPIH와 Core CPI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 3.5% 상승하여, 10월 대비 각각 0.3%p, 0.2%p 증가

그림 3-V-2 물가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November 2024," 2024. 12. 18.

54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November 2024," 2024. 12. 18.,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november2024>, 검색일자: 2024. 12. 31.

542) Consumer Prices Index including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주민세(Council tax)와 자가 거주자의 주택 소유, 유지, 거주 비용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543)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자가 거주비용): CPIH의 구성요소로, CPIH의 16%를 차지하며, CPIH와 CPI 상승률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동인

나. 재정 통계

■ 영국 통계청, 2024년 11월 공공재정 현황 발표(2024. 12. 20.)⁵⁴⁴⁾

- (재정적자) 2024년 11월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동월 대비 34억파운드 감소한 147억파운드를 기록
 - 이는 3년 동안 가장 낮은 11월 차입에 해당
- (채무) 2024년 11월 말 기준, 공공부문 순채무는 2조 8,178억파운드(GDP 대비 98.1%)로 추정
 - 이는 1993년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치
- (수입·지출) 2024년 11월 중앙정부 경상수입은 815억파운드, 중앙정부 경상지출은 882억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2억파운드 증가, 2억파운드 감소
- (순현금소요액) 2024년 11월 중앙정부 순현금 소요액(Central government net cash requirement)⁵⁴⁵⁾은 전년 동월 대비 11억파운드 감소한 246억파운드를 기록

표 3-V-11 2024년 11월 공공부문 재정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p)

구분	2023년 11월(a)	2024년 11월(b)	b-a
공공부문 순차입	14.7	11.2	-3.4
공공부문 순채무	2,678.3	2,817.8	139.5
(GDP 대비 %)	(96.9)	(98.1)	(1.2)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2,413.8	2,598.0	184.2
(GDP 대비 %)	(87.4)	(90.4)	(3.0)
중앙정부 경상수입	78.3	81.5	3.2
중앙정부 경상지출	88.4	88.2	-0.2
중앙정부 순현금 소요액	17.4	16.3	-1.1

주: 1. 순차입과 순채무는 공공부문 은행이 제외된 공공부문 기준

2.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은 UK Asset Resolution Ltd와 Network Rail이 제외된 기준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November 2024," 2024. 12. 20., 재구성

54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November 2024," 2024. 12. 20.,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november2024>, 검색일자: 2024. 12. 31.

545) 현금 지출과 현금 수입의 차이로 정부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현금 규모를 의미

다. 주요 보고서

- 영국 예산책임청(OBR), 「2024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September 2024*)⁵⁴⁶⁾ 발표(2024. 9. 12.)⁵⁴⁷⁾
 - (개요) 재정 적자나 채무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재정 위험 요인 중 기후 변화 피해⁵⁴⁸⁾ 및 인구 보건과 관련해 분석하고, 장기 재정 전망을 업데이트
 - (기후 변화 피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 상승하는 경우와 3℃ 상승하는 경우⁵⁴⁹⁾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피해의 직·간접적인 경제·재정 비용을 분석
 - (총 재정 비용⁵⁵⁰⁾) 기후 변화 피해로 인해 기온이 2℃ 상승하는 경우 2073-74회계연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약 0.8%, 3℃ 상승하는 경우 약 1.2% 증가하고, 채무는 각각의 경우 GDP 대비 23%,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간접 경제 비용)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지구 기온이 2℃ 상승하는 경우 2073-74 회계연도까지 실질 GDP를 약 3%, 3℃ 상승하는 경우 약 5%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기온 상승과 이와 관련된 극심한 기상 현상은 만성적 효과(질병 및 사망률 증가, 농업 생산량 감소, 산업 에너지 비용 증가 등)와 급성적 효과(인명 손실, 사업 폐쇄, 부동산 피해, 농업 수확량 감소 등)를 발생시키고, 이는 경제에 물리적 비용을 야기
 - (간접 재정 비용) GDP가 낮아지면서 정부 수입은 감소하고, 복지 및 연금 관련 지출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2℃ 상승하는 경우 2073-74회계연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7%, 3℃ 상승하는 경우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직접 재정 비용) 빈번하고 심각한 기상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2℃ 상승하는 경우 2073-74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0.05%, 3℃ 상승하는 경우 0.08%의 직접적인

546) 예산책임청은 2011년부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2017년부터는 “재정 위험 보고서(*Fiscal risks report*)”를 각각 발간해 왔으나, 2022년부터 이를 통합한 동 보고서를 매년 발표. 기존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공공재정 장기 전망에 대한 분석을, “재정 위험 보고서”는 재정에 위험이 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포함

547)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September 2024,” Publications, 2024. 9. 12., <https://obr.uk/frs/fiscal-risks-and-sustainability-september-2024/>, 검색일자: 2024. 9. 13.

548)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재정적 위험은 세 가지 광범위한 범주로 구분. ① 기후 변화 완화: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드는 재정 비용 ② 기후 변화 피해: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의 경제·재정적 영향 ③ 기후 변화 적응: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 비용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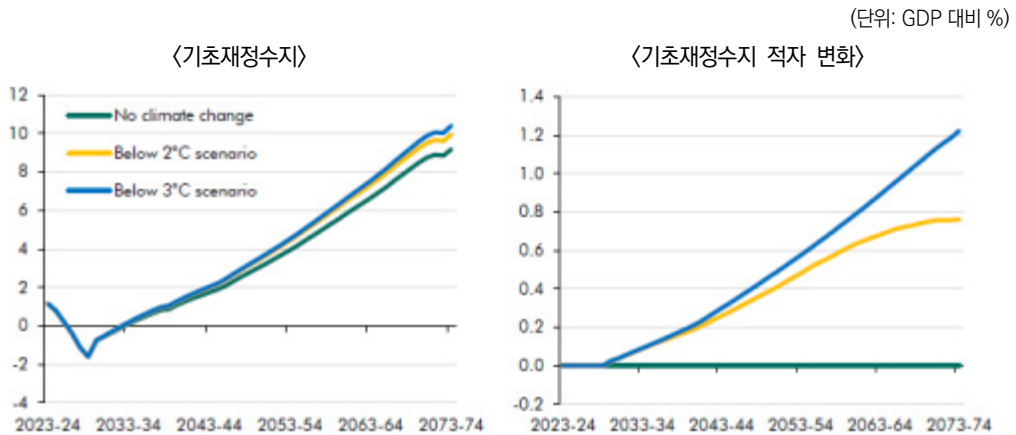
549) 지구 기온의 2℃ 상승은 2070년경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이 성공적으로 달성됨을 의미하고, 지구 기온의 3℃ 상승은 현재 세계적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2070년대 초까지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함을 의미

550) 간접 재정 비용과 직접 재정 비용, 이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추가 채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합친 것

재정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폭염, 연안 침수, 범람과 홍수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료서비스 및 응급 서비스, 공공 건물 및 인프라 피해 복구, 가계·기업에 대한 무보험 피해 보상 등의 추가 비용을 포함

그림 3-V-3 기후 변화 피해가 기초재정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



자료: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September 2024*, 2024, p. 45, [Chart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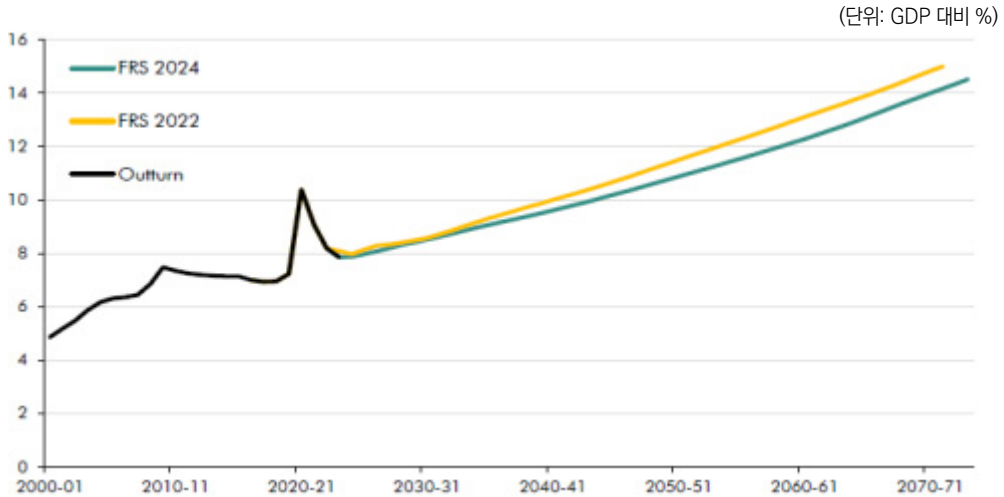
- (인구 보건) 정부의 보건 지출 규모를 전망하고, 보건 상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보건 상황 개선, 보건 상황 악화)⁵⁵¹⁾ 분석을 수행
 - 정부의 보건 지출은 2023-24회계연도에 GDP 대비 약 8%에서 2073-74회계연도에는 1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2022년 보고서 전망치 대비 다소 낮은 수치
 - 국가의료서비스(NHS) 인력 계획의 예상 비용, 1인당 소득 증가, 인구 통계적 요인, 의료 대면 서비스의 생산성 제약(보물 효과),⁵⁵²⁾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신기술 비용 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50년간 보건 지출의 연간 실질 증가율을 평균 3.1%로 가정하여 전망
 - 2024년 보건 지출 전망이 2022년 전망 대비 다소 낮게 산출된 것은 전망 초기에

551) 보건 상황 개선은 50년 후 일을 제한하는 건강 악화 발생률이 기준선 전망* 대비 25% 낮아지는 것을, 보건 상황 악화는 50년 후 일을 제한하는 건강 악화 발생률이 기준선 전망 대비 25% 높아지는 것을 의미(* 장기 재정 전망 파트에서의 기준선 전망시 가정된 연령별 건강 악화 발생률을 의미)

552) Baumol effect: 제조업의 경우 대량생산이나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상승하지만, 의료 서비스와 같이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임금 상승에 편승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것

의료비 단위 비용 증가률이 다소 낮았고, 이민 유입이 유출보다 크게 전망되면서 노령층 부양 비율이 약간 낮아졌기 때문

그림 3-V-4 정부 보건 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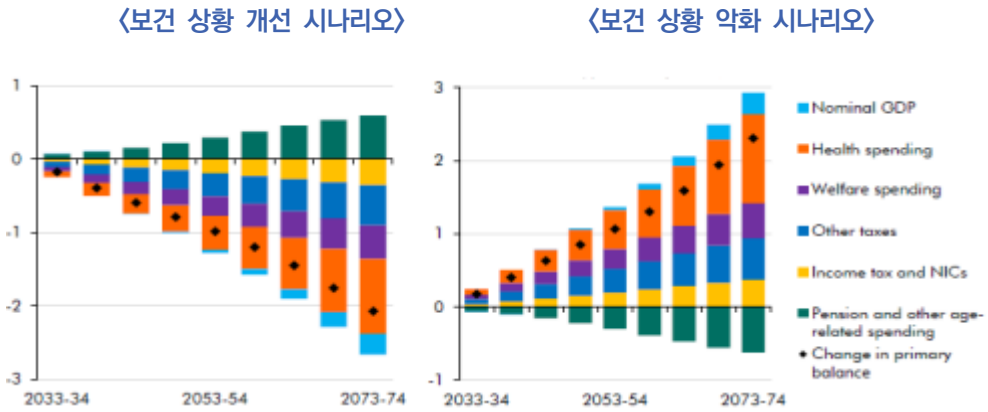


자료: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September 2024*, 2024, p. 75, [Chart 3.14.]

- 보건 상황의 개선은 2073-74회계연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1% 낮추고, 보건 상황의 악화는 2.3% 높이는 것으로 분석
 - 보건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보건·복지 지출 감소, 세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나, 이러한 영향은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 및 기타 연령 관련 지출 증가로 다소 상쇄
 - 보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보건·복지 지출 증가, 세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나, 이러한 영향은 연금 및 기타 연령 관련 지출 감소로 다소 상쇄

그림 3-V-5 보건 상황이 기초재정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September 2024*, 2024, p. 13, [Chart 1.7.]

- 보건 상황의 개선은 2073-74회계연도 정부 채무를 GDP 대비 44% 낮추고, 보건 상황 악화는 49% 높이는 것으로 전망, 이는 차입 및 채무 이자 지출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
- (장기 재정 전망) 2073-74회계연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
- 총 관리 지출은 2023-24회계연도에 GDP 대비 44.5%에서 50년 후인 2073-74 회계연도에는 60.1%까지 증가하지만, 공공부문 경상 수입은 40% 내외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3-24회계연도에 GDP 대비 4.2%에서 2073-74회계연도에는 20.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연료세와 기타 배출세에서 발생하는 수입 감소, 보건 지출 압력 증가, 연금 지출 증가, 채무 이자 비용 증가 등에 기인
 - 2028-29회계연도의 순차입(1.2%)과 2073-74회계연도의 순차입(20.5%) 간 변화는 19.3%p로, 이를 분해하면 채무 이자 비용 증가(8.4%p), 보건 지출 증가(6.9%p), 연금 지출 증가(3.0%p), 배출세 관련 수입 감소(0.9%p) 등의 순으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남
-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3-24회계연도에 GDP 대비 98%에서 2073-74회계연도에는 2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최근 채무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던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와 같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의 재정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충격까지 고려하면 채무는 GDP 대비 300%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대로 금융 위기 이전의 생산성 증가율로 복귀하면, 높은 성장을 통해 얻은 재정 수입을 지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50년 동안 채무가 전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준선 전망의 경우 생산성 증가율을 1.5%로 가정하였는데, 이를 2.5%로 가정할 경우 2073-74회계연도의 채무는 GDP 대비 6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3-V-12 장기 재정 전망(기준선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년 3월 전망		2024년 “재정 위험 및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망				
	2023-24	2028-29	2033-34	2043-44	2053-54	2063-64	2073-74
공공부문 경상 수입	40.4	41.2	40.8	40.3	40.0	39.8	39.6
총 관리 지출	44.5	42.5	44.0	45.9	49.2	54.0	60.1
공공부문 순차입	4.2	1.2	3.2	5.6	9.2	14.3	20.5
공공부문 순채무	98	94	90	100	130	188	274

자료: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September 2024*, 2024, p. 104, <Table 4.4>, 발췌

- 장기적으로 공공 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높음
 - 채무를 GDP 대비 100%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10년마다 GDP의 약 1~1.5%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재정 긴축(기초재정수지 적자 개선)이 필요
 - 지출 통제 확대를 통한 재정 조정의 경우, 공공부문 생산성을 크게 개선하거나 지출 우선 순위를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음
 - 세금 추가 인상을 통한 재정 조정의 경우, 일, 투자,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얻게 되는 세수입 증가와 직접적인 세금 인상을 통해 얻는 추가 수입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영국 예산책임청(OBR), 「2024 복지 지출 보고서」(*Welfare trends report - October 2024*)⁵⁵³ 발표(2024. 10. 9.)⁵⁵⁴

- (개요)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s)의 역사와 2010년 이후 수급자 유입과 유출에 대해 분석
 - 장애급여는 건강 악화로 인해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생산 가능 연령대 사람들을 위한 소득 대체 수단
- (장애급여 역사) 장애급여는 상병급여(invalidity benefit),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로 변화
 - (1980대~1990년대 중반) ‘상병급여’(IVB) 도입으로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단기 병가급여(shorter-term sickness benefit)를 통해 보완
 - 1980년대 초반에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였으나, 1984-85회계연도에 3.6%에서 1994-95회계연도에는 6.9%로 빠르게 증가
 - 이는 구직활동이 요구되는 실업급여보다 장애급여가 상대적으로 더 관대(generous)하여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근로를 유지하고 장애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여러 정책적 요인 때문
 - (199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1995년에 상병급여와 병가급여를 대체하는 ‘장애급여(IB)’를 도입
 - 이전 상병급여와 달리 관대성(generosity)이 감소하고 새로운 의료 검사가 도입되면서 수급자격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는 수급자 유입 감소에 기여
 -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2-03회계연도에 7.6%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7-08회계연도에는 7.0%로 완만하게 감소
 - (2000년대 후반~2010년대 후반) 2008년부터 신규 청구에 대해 ‘고용·지원수당’

553) 재정준칙에 복지 지출 한도(welfare cap)에 대한 규정이 2015년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복지 지출 추세와 동인에 대한 분석을 예산책임청에 요청하였고, 이에 예산책임청은 2015년부터 1~2년마다 복지 지출 보고서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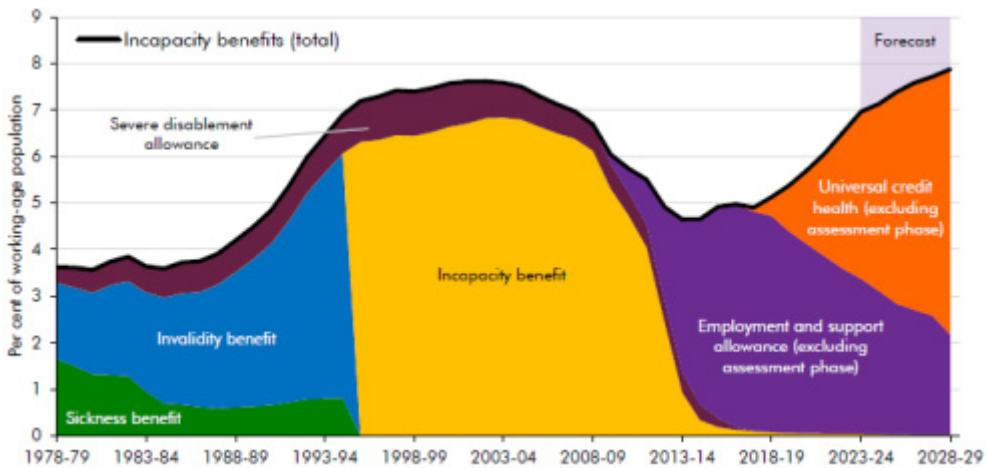
554)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Welfare trends report - October 2024,” Publications, 2024. 10. 9., <https://obr.uk/wtr/welfare-trends-report-october-2024/>, 검색일자: 2024. 10. 11.

(ESA)이 이전 장애급여를 대체하였고, 기존 장애급여 청구자는 2010년대 초반까지 고용·지원수당 수급자격에 대해 점진적으로 재평가

- 이전보다 더 일 중심적인 근로역량평가(WCA)가 도입되어 청구자를 두 그룹(중증 장애, 경증 장애)으로 분류하였는데, 경증 장애 그룹은 일부 조건 충족 시 더 낮은 급여를 수급
- 기존 장애급여 수급자의 자격 재평가를 통해 수급자 유출이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8-09회계연도에 6.7%에서 2017-18회계연도에 4.9%로 감소
- (2010년대 후반~2020년대 후반) 2016년부터 ‘통합급여(UC)⁵⁵⁵⁾가 고용·지원수당을 대체
 - 이전 제도 변경에 있었던 평가 제도, 관대성 등에서 변화는 없었으나, 2017년에 경증 장애 그룹에 대한 급여를 삭감
 -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17-18회계연도와 2023-24회계연도 사이에 2.1%p 증가하여 7.0%가 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3-V-6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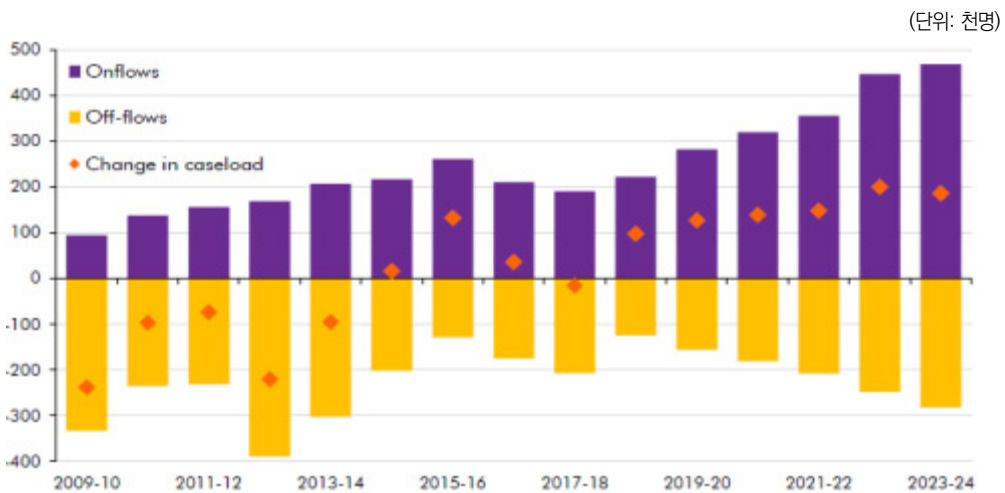


주: severe disablement allowance는 중증 장애수당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자료: OBR, *Welfare trends report - October 2024*, 2024, p. 5, [Chart 1.]

555) 4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 소득보조, 주거급여)와 2개의 조세급여(근로세액공제, 아동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로, 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에 도입

- (장애급여 유입·유출) 2008-09회계연도와 2023-24회계연도 사이에 장애급여 수급자 수는 34만명(13.2%) 증가
 - 2010년대 초반에는 비교적 높은 유출로 인해 수급자 수가 감소(연평균 14만 5천명)
 - 유출 증가는 새롭게 도입된 근로역량평가에 주로 기인하는데, 2011-12회계연도와 2014-15회계연도 사이에 130만건의 수급자격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5만명의 청구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평가
 - 2018-19회계연도 이후에는 유입이 유출을 넘어서면서 수급자 수가 증가(연평균 16만명)
 - 2022-23회계연도 유입 규모는 2018-19회계연도에 비해 27만명 증가하였는데, 유입 증가 요인을 급여 청구 프로세스의 세 단계*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 초기 급여청구, 중도탈락(근로역량평가의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철회),⁵⁵⁶⁾ 승인(근로역량 평가에서 자격을 인정)
 - 중도탈락을 감소가 가장 크게 기여(13만명)하였고, 초기 급여청구의 증가와 승인을 증가가 비슷한 수준의 기여(각각 7만명)를 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V-7 장애급여 수급자 수와 유입·유출의 연간 변화



자료: OBR, *Welfare trends report - October 2024*, 2024, p. 6, [Chart 2.]

556) 중도탈락의 유형으로 청구 후 최종 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중도 탈락하는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증빙하는 fit note가 만료되었으나 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청구 후 중간에 건강이 호전된 경우 등이 있음.

- 영국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 평가 보고서」(*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4*)⁵⁵⁷⁾ 발표(2024. 10. 10.)⁵⁵⁸⁾
 - (개요) 2023년 3월에 수행한 2023-24회계연도 경제·재정 전망과 실적치를 비교·분석⁵⁵⁹⁾
 - (경제전망 평가) 2023-24회계연도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4.1%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평균 5.7%를 기록
 -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급등하였고 이후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추이는 급격한 물가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대체로 일치
 - 전망 대비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원인은 식품 및 기타 교역재 물가가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였고, 예상보다 높은 명목 소득으로 인해 비교역재 물가상승률이 전망 대비 0.9%p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
 - (노동시장 및 생산성) 총 근무 시간 측면에서 전년 대비 노동공급 증가율은 전망과 실적이 대체로 일치(0.0%), 이는 노동시장 상황이 전년 대비 덜 완화되었음을 시사
 - 총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성장률은 -1.5%로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훨씬 높은 3.0%를 기록, 이는 부분적으로 명목 임금 성장률이 높은 물가상승률에 예상보다 더 크게 반응했기 때문
 - 생산성 성장률은 0.1%로, 전망치 0.2%와 매우 근접한 수치를 기록
 - (실질 GDP)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전망치(0.2%)와 매우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구성은 다소 상이
 - 전망치는 민간소비 -0.4%p, 기업투자 -0.4%p, 순무역 -1.4%p, 민간 주거용 투자 -0.4%p, 정부 소비 및 투자 1.3%p, 기타 1.4%p로 구성
 - 실적치는 민간소비 0.1%p, 기업투자 0.3%p, 순무역 -0.5%p, 민간 주거용 투자 -0.4%p, 정부 소비 및 투자 0.7%p, 기타 -0.2%p로 구성

557) 예산책임청은 2011년부터 「경제·재정 전망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제·재정 전망의 정확성을 매년 평가

558)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4," Publications, 2024. 10. 10., <https://obr.uk/fer/forecast-evaluation-report-october-2024/>, 검색일자: 2024.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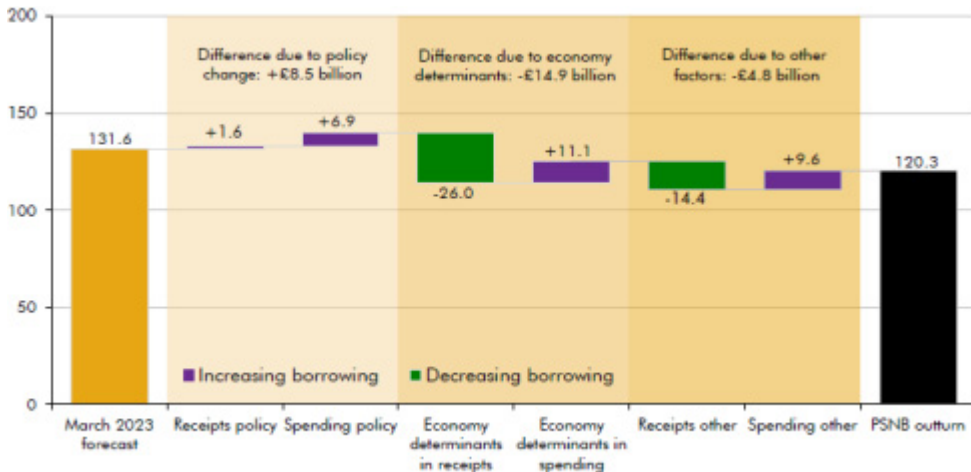
559) 예산책임청의 전망은 OBR macroeconomic model을 활용하는데, 여기에는 국민계정의 항등성과 정의를 명시하는 방정식, 계량경제학적 방정식, 전망 가정에 기반한 방정식 수십개를 포함(OBR, *The macroeconomic model*, Briefing paper No. 5, 2013. 10.)

◦ (재정전망 평가) 2023-24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차입 및 순채무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

- (순차입) 공공부문 순차입은 1,316억파운드(GDP 대비 5.1%)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1,203억파운드(GDP 대비 4.4%)를 기록하여 112억파운드를 과대 예측
- 2023년 3월 이후 정책 변경으로 인해 순차입이 85억파운드 증가
- 피고용자의 사회보험기여금 삭감으로 수입 감소(16억파운드), 국가의료서비스(NHS) 급여 상승으로 지출 증가(69억파운드)
-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순차입이 149억파운드 감소
- 예상 보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명목 소득으로 인한 수입 증가, 가스 및 전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세금 수입 감소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수입이 260억파운드 증가
- 높은 물가상승률과 이자율로 인한 채무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지출이 111억파운드 증가
- onshore 기업⁵⁶⁰에 대한 높은 실효세율 반영, 공공부문 총 투자 증가 등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순차입이 48억파운드 감소

그림 3-V-8 2023-24회계연도 순차입 전망과 실적치 간 오차 분해

(단위: 십억파운드)



자료: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4*, 2024, p. 28, [Chart 3.3.]

560) onshore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으로, onshore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동일한 국가 내의 다른 회사에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의미

- (순채무) 공공부문 순채무는 GDP 대비 103.1%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98.1%를 기록하여 5.0%p 과대 예측
- 전망 대비 높게 나타난 명목 GDP가 예측 오차의 4.7%p를 설명하고, 현금주의 적용에서 0.3%p의 오차 발생

VI 호주⁵⁶¹⁾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25회계연도: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표 3-V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4. 8. 2.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국가 전기차 전략 업데이트 발표
2024. 8. 6.	호주 중앙은행, 2024년 8월 경제 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동결 발표
2024. 9. 3.	호주 통계청, 2024년 2분기 정부재정통계 발표
2024. 9. 4.	호주 통계청, 2024년 2분기 국민계정 발표
2024. 9. 12.	호주 연방정부, 노인돌봄 개혁안 발표
2024. 9. 30.	호주 연방정부, 2023-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발표
2024. 10. 15.	호주 연방정부, 퀘즐랜드 남동부 신규주택건설 발표
2024. 10. 30.	호주 의회예산처, 2024-25회계연도 국가 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
2024. 11. 5.	호주 중앙은행, 2024년 11월 경제 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동결 발표
2024. 12. 3.	호주 통계청, 2024년 3분기 정부재정통계 발표
2024. 12. 4.	호주 통계청, 2024년 3분기 국민계정 발표
2024. 12. 13.	호주 재무부, 재스퍼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 발표
2024. 12. 17.	호주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반기경제·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

자료: 저자 작성

56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김진아 선임연구원(jina@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호주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반기경제·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2024. 12. 17.)⁵⁶²⁾

- ※ 호주 재무부는 공정예산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따라 반기경제·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제 및 재정 전망 보고서의 주요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세입·세출·채무명세서를 작성
 - (경제) 호주 경제성장률은 2023~2024년 1.4%에서 2024~2025년 1.75%, 2025~2026년 2.25%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가계 소비의 점진적인 회복과 정부의 생계비 완화 정책,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지속적 고용 및 임금 성장은 2024~2025년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성장을 견인하여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주로 상품가격 상승률 정상화에 기인하여 완화되고 있으며, 2025년 말에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로 회복될 전망
 - 2022년 중반 이후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노동참여율은 정점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명목임금상승률은 완화되고 있으나 10년 전 평균인 2.7%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임금은 견고한 임금 성장 및 완화된 물가상승으로 인해 예측기간 동안 증가할 전망
 - 기업투자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주택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가 전망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562) 호주 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4-25," 2024. 12. 17., <https://budget.gov.au/content/myefo/index.htm>, 검색일자: 2024. 12. 18.

표 3-VI-2 주요 경제 변수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실질 GDP 성장률	1.4	1.75	2.25	2.5	2.75
고용성장률	2.2	1.75	1	1.5	1.75
실업률	4.1	4.5	4.5	4.5	4.25
소비자물가지수	3.8	2.75	2.75	2.5	2.5
임금물가지수	4.1	3	3	3.25	3.5
명목 GDP 성장률	4.1	3.25	3.5	5	5.5

주: 실질 및 명목 GDP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분기(June Quarter) 기준

자료: 호주 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4-25," p. 4, <Table 1.1>, 2024. 12. 17.

- (재정) 현금수지는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후 2024-25회계연도에 269억호주달러 적자가 예상되나, 전망기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2034-35회계연도에 균형재정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4-25회계연도 적자는 선거전보고서(PEFO)⁵⁶³ 대비 약 200억호주달러, 예산안 대비 14억호주달러 개선된 수치
 - 수취(receipts)는 2024~2025년 예산 이후 향후 4년간 204억호주달러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수취는 25.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Shadow Economy Compliance Program 강화, 세무 행정시스템 현대화 등 정책 변동으로 2027~2028년까지 4년간 세수 8억호주달러 증가
 - 개인소득세 및 연금기금 세입에 대한 전망개선, 법인세 및 담배세 하향 조정 등 모수 및 기타 변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4~2025년에 53억호주달러 증가하고 2027~2028년까지 188억호주달러 증가
 - 지급(payments)은 2024~2025년 예산 이후 향후 4년간 422억호주달러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지급은 2025-26회계연도에 27.2%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
 -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근로자 임금 인상,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 개선, 국가 장애인 보험제도 지원 등의 정책 변동으로 2024~2025년에 25억호주달러 증가하고

563) 호주 재무부,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2," 2022. 4. 20.,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2022-pefo>, 검색일자: 2024. 12. 18.

2027~2028년까지 191억호주달러 증가

- 노인 요양 및 수요 주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액 증가, 주·준주 부가가치세 지원 증가, 부채 상환 비용 증가 등 모수 및 기타 변수 변동에 따라 2024~2025년에 19억호주달러 증가하고 2027~2028년까지 230억호주달러 지급 증가
- GDP 대비 총채무는 2024~2025년에 34.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6~2027년에 36.7%로 안정화 된 후 예산 상황 개선 및 이자지급 감소에 따라 2034~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1.4%를 나타낼 전망

표 3-VI-3 예산총량 및 채무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전망							
	2024-25		2025-26		2026-27		2027-28	
	십억호주 달러	% GDP	십억호주 달러	% GDP	십억호주 달러	% GDP	십억호주 달러	% GDP
현금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MYEFO	-26.9	-1.0	-46.9	-1.6	-38.4	-1.3	-31.7	-1.0
Budget	-28.3	-1.0	-42.8	-1.5	-26.7	-0.9	-24.3	-0.8
수취(Receipts)								
MYEFO	704.2	25.5	728.4	25.5	763.4	25.4	804.1	25.4
Budget	698.4	25.3	719.4	25.1	760.0	25.1	801.8	25.2
지급(Payments)								
MYEFO	731.1	26.5	775.3	27.2	801.7	26.7	835.7	26.4
Budget	726.7	26.4	762.2	26.6	786.7	26.0	826.2	26.0
총채무(Gross Debt)								
MYEFO	940.0	34.0	1,028.0	36.0	1,100.0	36.7	1,161.0	36.7
Budget	934.0	33.9	1,007.0	35.1	1,064.0	35.2	1,112.0	34.9
순채무(Net Debt)								
MYEFO	540.0	19.6	609.3	21.3	669.2	22.3	708.6	22.4
Budget	552.5	20.0	615.5	21.5	660.0	21.8	697.5	21.9

자료: 호주 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4-25," p. 51, <Table 3.1>, 2024. 12. 17.

나. 추경

- 관련 내용 없음

다. 결산

■ 호주 정부, 2023-24회계연도⁵⁶⁴⁾ 결산보고서 발표(2024. 9. 30.)⁵⁶⁵⁾

- (현금주의) 2023-24회계연도 일반정부 부문 연방정부의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158억호주달러(GDP 대비 0.6%) 흑자를 기록하여 2024-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4억호주달러 개선됨
- 2022-23회계연도에 221억호주달러 흑자에 이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 통화정책 지원에 따른 정부의 책임감 있는 예산관리의 결과임을 강조
 - 수취(receipts)는 예상보다 37억호주달러 감소한 6,886억호주달러(GDP 대비 25.8%)를 기록
 - 지급(Payments)은 예상보다 102억호주달러가 감소하여 6,728억호주달러(GDP 대비 25.2%)를 기록
 - 지급 감소는 주로 국가파트너십 협정(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s) 관련 프로그램 지연으로 인한 지급액 42억호주달러,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5억호주달러 감소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 지연 및 수요 감소에 기인
- (발생주의) 재정수지(fiscal balance)는 120억호주달러(GDP 대비 0.4%) 흑자,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는 186억호주달러 흑자를 기록
 - 수입(revenue)은 예상보다 24억호주달러 감소한 7,045억호주달러(GDP 대비 26.4%)를 기록
 - 비용(expenses)은 예상보다 52억호주달러 감소한 6,859억호주달러(GDP 대비

564) 2023-24회계연도: 2023.7월~2024.6월

565) 호주 정부, "Final Budget Outcome 2023-24," 2024. 9. 30., <https://archive.budget.gov.au/2023-24/index.htm#fbo>, 검색일자: 2024. 10. 16.; 호주 재정부, "Labor delivers biggest ever back-to-back surpluses," 2024. 10. 4., <https://ministers.finance.gov.au/financeminister/media-release/2024/10/04/labor-delivers-biggest-ever-back-back-surpluses>, 검색일자: 2024. 10. 21.

25.7%)를 기록

표 3-VI-4 2023-24회계연도 호주 재정수지 결산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2024-25 예산 편성 당시 2023-24 전망 (A)	2023-24 결산 (B)	(B)-(A)
수취(Receipts)	692.3	688.6	-3.7
(GDP 대비 %)	25.8	25.8	
지급(Payments) ¹⁾	683.0	672.8	-10.2
(GDP 대비 %)	25.4	25.2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9.3	15.8	6.4
(GDP 대비 %)	0.3	0.6	
순이자지급(Net interest payments) ²⁾	12.3	12.3	0.0
(GDP 대비 %)	0.5	0.5	
수입(Revenue)	706.9	704.5	-2.4
(GDP 대비 %)	26.3	26.4	
비용(Expenses)	691.1	685.9	-5.2
(GDP 대비 %)	25.7	25.7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15.8	18.6	2.8
(GDP 대비 %)	0.6	0.7	
순자본투자(Net capital investment)	7.8	6.7	-1.1
(GDP 대비 %)	0.3	0.2	
재정수지(Fiscal balance)	8.1	12.0	3.9
(GDP 대비 %)	0.3	0.4	

주: 1) 운영 활동, 비금융자산 구매, 리스부채 원금상환을 위해 지출한 현금 값과 같음

2) 순이자지급은 이자 지급과 이자 수취의 차이와 같음

자료: 호주 정부, "Final Budget Outcome 2023-24," <Table 1.2>, 2024. 9. 30. 발췌

표 3-VI-5 2023-24회계연도 호주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2024-25 예산 편성 당시 2023-24 전망 (A)	2023-24 결산 (B)	(B)-(A)
일반 공공서비스	31,442	31,563	121
국방	45,128	45,103	-25
공공질서 및 안전	7,960	7,739	-221
교육	49,099	48,011	-1,087
보건	107,416	106,589	-827
사회보장 및 복지	252,342	253,184	842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7,955	6,982	-973
여가 및 문화	5,050	5,088	38
연료 및 에너지	13,273	12,988	-284
농림·임업·수산	4,068	3,554	-514
광업·제조·건설	5,968	5,123	-844
교통·통신	14,928	14,041	-887
기타 경제부문	14,011	13,491	-521
기타	132,430	132,399	-31
총비용	691,070	685,857	-5,214

자료: 호주 정부, "Final Budget Outcome 2023-24," <Table 1.5>, 2024. 9. 30.를 참고하여 재구성

- (부채) 2023-24회계연도 말 총채무(gross debt)는 9,069억호주달러(GDP 대비 34.0%), 순채무(net debt)는 4,915억호주달러(GDP 대비 18.4%)를 나타냄
 - 순자산(net worth)은 -5,316억호주달러,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은 -7,463억호주달러로 2024-25 예산 전망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예상보다 큰 퇴직연금 지급, 기타 고용 부채⁵⁶⁶ 및 총당부채에 기인

566) Leave and other entitlements(휴가 등), Accrued salaries and wages(미지급급여 및 임금), Workers compensation claims(근로자 보상 청구), Military compensation(군인 보상) 등이 하위 항목으로 포함

표 3-VI-6 2023-24회계연도 호주 부채 결산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2024-25 예산 편성 당시 2023-24 전망 (A)	2023-24 결산 (B)	(B)-(A)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614.2	637.9	23.7
(GDP 대비 %)	22.9	23.9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211.7	214.7	3.0
(GDP 대비 %)	7.9	8.0	
총자산(Total assets)	825.9	852.6	26.7
(GDP 대비 %)	30.8	31.9	
총부채(Total liabilities)	1,334.6	1,384.3	49.7
(GDP 대비 %)	49.7	51.8	
순자산(Net worth)	-508.6	-531.6	-23.0
(GDP 대비 %)	-18.9	-19.9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¹⁾	-720.3	-746.3	-26.0
(GDP 대비 %)	-26.8	-27.9	
총채무(Gross debt) ²⁾	904.0	906.9	2.9
(GDP 대비 %)	33.7	34.0	
순채무(Net debt) ³⁾	499.9	491.5	-8.4
(GDP 대비 %)	18.6	18.4	
총이자지출(Total interest payments)	22.7	22.8	0.1
(GDP 대비 %)	0.8	0.9	
순이자지급(Net interest payments)	12.3	12.3	0.0
(GDP 대비 %)	0.5	0.5	

주: 1) 순금융자산은 총금융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2) 총채무는 정부채권의 액면가로 측정

3) 순채무는 예금, 정부채권(시장가), 대출 및 기타 차입금에서 현금 및 예금, 선급금, 투자, 대출 및 출자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자료: 호주 정부, "Final Budget Outcome 2023-24," <Table 1.9>, 2024. 9. 30.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경제 및 재정 전망

■ 호주 중앙은행(RBA), 2024년 8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동결 발표(2024. 8. 6.)⁵⁶⁷⁾

* 호주 중앙은행은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Statement on Monetary Policy”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호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발표

- (경제) 호주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2.3%)보다 상향 조정된 2.5%로 전망
 - 예상보다 강한 공공수요, 소비수준 증가,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지출 증가 등이 성장 회복의 주요 요인
 - 반면 수입 증가, 주택투자 증가율 둔화로 인한 일부 상쇄 효과 예상됨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2024년 4.3%, 2025년에는 4.4%로 전망
 -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시간⁵⁶⁸⁾은 회복세를 나타냄
 - 실업률은 2025년까지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경제성장의 회복은 노동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5년 하반기 중앙은행의 목표범위인 2~3%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물가상승률 목표 범위의 중간 지점에 도달할 전망
 -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예상했던 속도보다 느리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생계비 완화 조치⁵⁶⁹⁾로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8월 회의에서 중앙은행 이사회는 기준금리 목표를 4.35%로 동결하기로 결정

567)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August 2024,” 2024. 8. 6.,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4/aug/contents.html>, 검색일자: 2024. 8. 19.

568) 평균 근무시간은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세였는데 주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감소하고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임. 최근에는 평균 근무시간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6개월 전보다 약간 높은 상황임.

569) 개인소득세 감면, 에너지 요금 지원, 임대료 지원, 의약품 비용 지원, 학자금 이자 상환 지원 등 2024-25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조치

표 3-VI-7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4년 6월	2024년 12월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26년 6월	2026년 12월
GDP 성장률	0.9	1.7	2.6	2.5	2.5	2.4
(5월 전망)	(1.2)	(1.6)	(2.1)	(2.3)	(2.4)	(n/a)
실업률	4.0	4.3	4.4	4.4	4.4	4.4
(5월 전망)	(4.0)	(4.2)	(4.3)	(4.3)	(4.3)	(n/a)
소비지물가상승률	3.8	3.0	2.8	3.7	3.2	2.6
(5월 전망)	(3.8)	(3.8)	(3.2)	(2.8)	(2.6)	(n/a)

주: 전망은 7월 31일 기준. 기준금리는 2025년 초까지 현재 목표 수준인 4.35%를 유지한 후 2026년 말 약 3.3%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 인구증가율은 2023년 3분기 2.6%로 정점을 찍은 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1.4%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 실업률은 분기별 평균.

자료: 호주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August 2024," p. 6, <Table> 발췌, 2024.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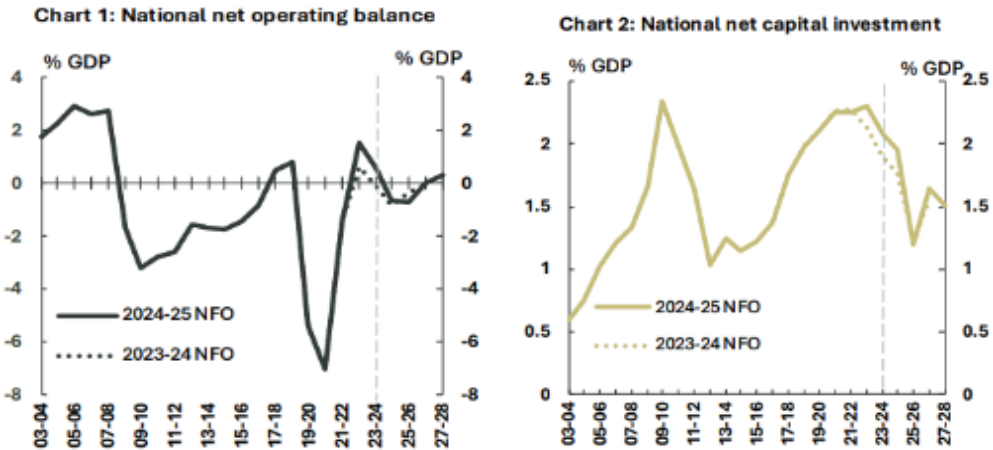
■ 호주 의회예산처, 2024-25회계연도 국가 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2024. 10. 30.)⁵⁷⁰⁾

- * 의회예산처는 매년 일반정부 부문, 전체 정부 수준의 국가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
 - (수지) 호주 전체 정부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4-25회계연도 2.6%(717억 호주달러) 적자에서 2027-28회계연도 1.2%(381억호주달러) 적자로 개선될 전망
 - 지난 전망 보고서(2023. 10월)와 비교해 국가 재정수지는 상향 조정(2023-24 회계연도에 102억호주달러)되었는데, 이는 상품 가격 상승 및 강력한 노동시장에 기인한 연방 정부 재정수지 개선에 주로 기인
 - 주정부(state) 재정수지는 모든 주에서 수입 전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및 건강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상황은 악화될 전망
 - 그러나 전체 주의 순운영수지는 2025-26회계연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됨
 - (순자본투자)⁵⁷¹⁾ GDP 대비 순자본투자는 2024-25회계연도 1.9%에서 2027-28 회계연도 1.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보고서 보다는 덜 가파를 것으로 전망
 - 이는 South Australia 인프라 프로젝트 재조정 및 Queensland와 Northern Territory의 인프라 투자의 상당한 상향 조정을 반영

570) 호주 의회예산처, "2024-25 National fiscal outlook," <https://www.pbo.gov.au/publications-and-data/publications/2024-25-national-fiscal-outlook>, 검색일자: 2024. 11. 21., <https://www.pbo.gov.au/sites/default/files/2024-10/2024-25%20National%20Fiscal%20Outlook-NFO.pdf>, 검색일자: 2024. 11. 21.

571)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지출

그림 3-VI-1 국가 순운영수지, 순자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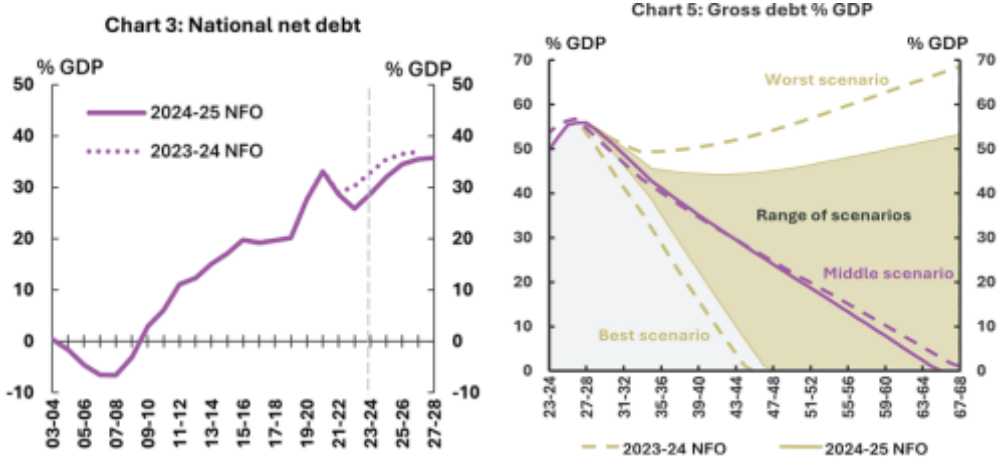
자료: 호주 의회예산처, “2024-25 National fiscal outlook,” [chart 1,2], 2024. 10. 30.

- (순채무) GDP 대비 국가 순채무는 2024-25회계연도 32.0%(8,819억호주달러)에서 2027-28회계연도 35.7%(1조 1,363억호주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전망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
 - 지난 전망과 비교하여 2023-24회계연도 785억호주달러, 2026-27회계연도 68억호주달러 하향 조정
 - 연방정부의 예산수지 개선으로 국가 순채무는 감소하였으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공공 채무 이자 지급액은 증가
 - 지난 전망과 비교하여 2026-27회계연도 공공채무 이자 지급액은 481억호주달러에서 45억호주달러 증가한 526억호주달러로 전망
 - GDP 대비 주정부 순채무는 2024-25회계연도 13%(3,575억호주달러)에서 2027-28회계연도 14.8%(4,719억호주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난 전망과 비교하여 2023-24회계연도 22억호주달러 개선, 2026-27회계연도 382억호주달러 악화 전망
- (지속가능성) 재정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분석⁵⁷²⁾한 결과,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40년간 GDP 대비 채무 비율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호주의 국가 재정상황이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572) 의회예산처의 재정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40년 동안의 국가 GDP 대비 채무를 27개 시나리오로 분석

- 중간 시나리오(middle scenario)에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망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65-66회계연도에 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채무비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2047-48회계연도에 0%에 도달할 전망

그림 3-VI-2 국가 순채무 및 총채무 장기 전망



자료: 호주 의회예산처, “2024-25 National fiscal outlook,” [chart 3,5], 2024. 10. 30.

■ 호주 중앙은행(RBA), 2024년 11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동결 발표(2024. 11. 5.)⁵⁷³⁾

- * 중앙은행은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Statement on Monetary Policy”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호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발표
- (경제) 호주의 경제성장은 서서히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및 2026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보다 소폭 하향 조정된 2.3%, 2.2%로 전망
 - 가계소비는 실질 가계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면서 회복되나 8월 전망 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수출은 국제 학생 비자 정책이 엄격해짐에 따라 약화될 전망
 - 호주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후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2025년 경제성장 전망이 소폭 상향 조정됨

573)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November 2024,” 2024. 11. 5.,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4/nov/>, 검색일자: 2024. 11. 11.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2024년 4.3%, 2025년 이후에는 4.5%로 전망
 - 실업률은 2025년까지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이 완화됨에 따라 임금상승률은 둔화될 전망
- (물가) 2026년 물가상승률 목표 범위의 중간 지점에 도달할 전망이며, 2026년 말 평균 물가상승률 2.5% 예측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3분기 연료 및 전기 가격 인하가 반영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3.8→2.8%)하였으나, 기초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23년 증반 이후 하락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물가상승 압력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과 노동시장의 긴축 정도가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반영하여 느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2024년 11월 회의에서 중앙은행 이사회는 기준금리 목표를 4.35%로 동결하기로 결정
 - 물가상승률이 합리적 기간 내에 목표치로 지속가능하게 복귀시키는 것이 이사회 최우선 과제이며, 현재는 물가상승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표 3-VI-8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4년 6월	2024년 12월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26년 6월	2026년 12월
GDP 성장률	1.0	1.5	2.3	2.3	2.3	2.2
(8월 전망)	(0.9)	(1.7)	(2.6)	(2.5)	(2.5)	(2.4)
실업률	4.1	4.3	4.4	4.5	4.5	4.5
(8월 전망)	(4.0)	(4.3)	(4.4)	(4.4)	(4.4)	(4.4)
소비자물가상승률	4.0	3.4	3.0	2.8	2.7	2.5
(8월 전망)	(3.8)	(3.0)	(2.8)	(3.7)	(3.2)	(2.6)

주: 전망은 10월 30일 기준. 기준금리는 2025년 초까지 현재 목표 수준인 4.35%를 유지한 후 2026년 말 약 3.3%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 인구증가율은 2023년 3분기 2.6%로 정점을 찍은 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1.4%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 실업률은 분기별 평균.

자료: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November 2024," p. 4, <Table> 발췌, 2024. 11. 5.

나. 경제 및 재정정책

- 호주 정부, 2024년 7월부터 변화하는 정책 소개(2024. 7. 1.)⁵⁷⁴⁾⁵⁷⁵⁾
 - (소득세 감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으로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호주 국민에 대한 생활비 지원
 -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최저 세율은 19%에서 16%로 인하, 최고 세율 45% 적용 기준선 상향(18만→19만호주달러) 조정하는 등 저소득 및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3.75% 인상되어 최저시급이 23.23호주달러에서 24.10호주달러로 상향 조정
 - 노인 요양보호사(aged-care workers) 임금은 15% 인상
 - (에너지요금 지원) 모든 가구의 전기 요금에 대해 300호주달러, 중소기업은 325호주달러⁵⁷⁶⁾를 지원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고통 완화에 도움
 - (의약품 비용 동결 및 메디케어 확대) 정부는 의약품 보조금 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의 본인부담금 및 PBS의 처방 최대 비용을 동결하고, 무료 메디케어 긴급 클리닉을 확대하여 필요한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20주에서 22주로 확대 시행되며, 2025년 및 2026년에 2주씩 추가 연장 예정
 - (기타)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탕감 및 연방 임대료 지원 추가 인상 등 지원 확대
- 호주 재무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발표(2024. 7. 4.)⁵⁷⁷⁾
 - 호주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의 공정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발표
 - 동 법안은 다국적 기업 조세 공정성 확보를 위해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574) 호주 정부 홈페이지, "Labor is delivering on help for households and a fairer society," 2024. 7. 1., <https://www.pm.gov.au/media/labor-delivering-help-households-and-fairer-society>, 검색일자: 2024. 7. 16.

575) 세부 내용은 「KIPF 재정동향 5월호」, 6. 호주 부분에서 확인

576) 정책 지원이며, 현금 지급이 아닌 에너지 요금에서 청구 할인 형식으로 지원

577) 호주 재무부, "New legislation to ensure multinationals pay a fairer share," 2024. 7. 4.,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new-legislation-ensure-multinationals-pay-fairer-share>, 검색일자: 2024. 7. 19.

다자간 협약인 OECD/G20 필라2에 따른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것이며, Albanese 정부의 2023-24회계연도 예산안에 명시

-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연간 글로벌 수익이 최소 7억 5천만 유로(약 12억호주달러) 이상인 모든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및 국내 최저한세 적용

■ 호주 정부 및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 학생 대상 무료 인터넷 지원 정책 (School Student Broadband Initiative;SSBI⁵⁷⁸) 발표(2024. 8. 1.)⁵⁷⁹

- 호주 정부는 880만호주달러를 투자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확대를 지원
 - 2025년까지 최대 3만가구의 인터넷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현재까지 1만 5천가구 이상이 무료 인터넷 지원을 받음
 - SSBI 시행 이후 무료 인터넷 지원 정책으로 수혜 가구당 수천호주달러의 절약 효과가 있었으며, 한부모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 등을 포함한 취약가구 학생 및 가정에 혜택을 제공
 - 무료 인터넷 지원 대상은 학교에 등록된 자녀가 있어야 하며,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등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국가 전기차 전략(National Electric Vehicle Strategy) 업데이트 발표(2024. 8. 2.)⁵⁸⁰

- (배경) 호주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및 호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4월 국가 전기차 전략⁵⁸¹)을 발표

578) SSBI는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가정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 1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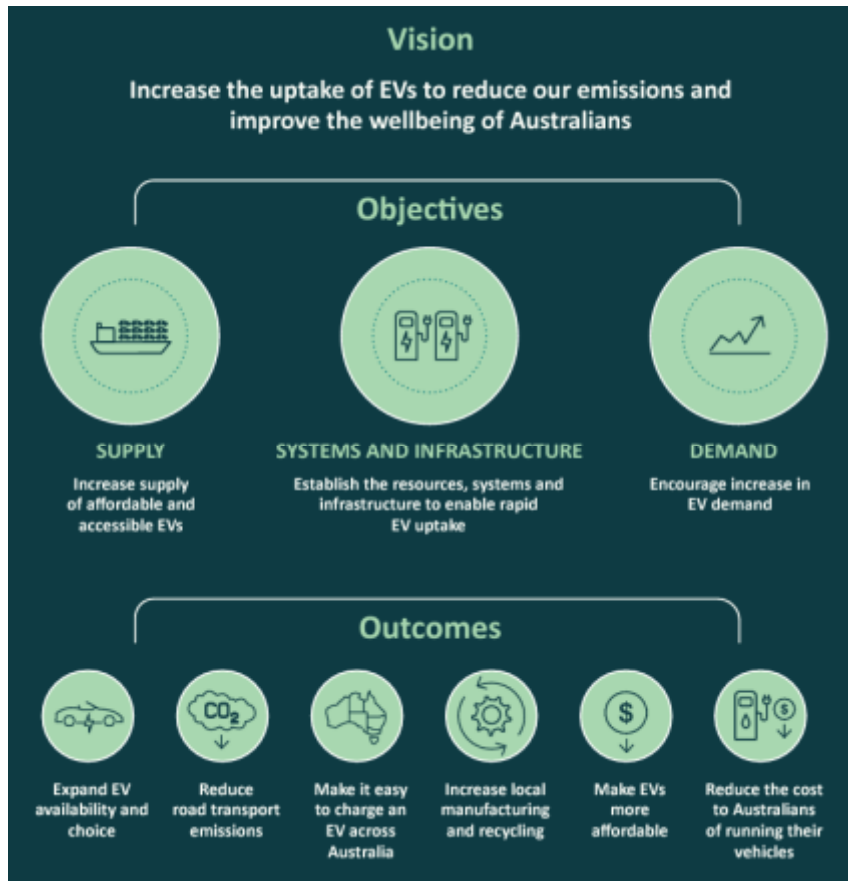
579)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 "School Student Broadband Initiative (SSBI)," <https://www.infrastructure.gov.au/media-communications-arts/internet/national-broadband-network/school-student-broadband-initiative-ssbi>, 검색일자: 2024. 8. 21.; 호주 정부, "Free broadband hits major milestone as digital gap shrinks for thousands of families," 2024. 8. 1., <https://www.pm.gov.au/media/free-broadband-hits-major-milestone-digital-gap-shrinks-thousands-families>, 검색일자: 2024. 8. 21.

580)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보도자료, "National Electric Vehicle Strategy update," 2024. 8. 2., <https://www.dccceew.gov.au/about/news/national-electric-vehicle-strategy-update-2024#dccceew-main>, 검색일자: 2024. 8. 26.

581) <https://www.dccceew.gov.au/energy/transport/national-electric-vehicle-strategy>, 검색일자: 2024. 8. 26.

- 목표(objectives) ① 경제적이고 구매 가능한 전기차 공급확대 ②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③ 전기차 수요 증가 촉진
- 결과(outcomes) ① 전기차 가용성 및 선택 확대 ② 운송 배출 감소 ③ 호주 전역의 충전소 확충 ④ 현지 제조 및 재활용 증가 ⑤ 구매 가능한 전기차 ⑥ 차량 유지비 절감

그림 3-VI-3 국가 전기차 전략의 비전, 목표, 결과 로드맵



자료: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National Electric Vehicle Strategy," 2023. 4.

- (성과) 전기차 판매량 증가, 호주 전역 충전소 확대, 전기차 할인 프로그램 시행 등 국가 전기차 전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① 전기차 가용성 및 선택 확대: 2023년 호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종류가 2022년보다 56% 증가(148종), 전기차 판매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50% 증가하였으며 2024년 4월 기준 신차 경차 판매의 9.4%를 차지

- 또한 2024년 5월 '신차효율표준(New Vehicle Efficiency Standard)'⁵⁸²⁾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표준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신차 승용차 배출량을 60%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
- ② 운송 배출 감소: 신차효율표준 법안 통과로 배출량은 기존 전망 대비 2030년 2천만톤, 2050년 3억 2,100만톤 감소할 전망, 2023년 배출량 예측에 따르면 총 운송배출량 중 자동차 및 경상용차의 비중이 2023년 59.7%에서 2035년 57.8%로 감소할 전망
- ③ 호주 전역의 충전소 확충: 2023년 호주 전역에서 운영 중인 공공 고속/초고속 충전소는 812개로, 2022년 464개 대비 75% 증가했으며, 2024년 3월 충전소는 900개로 확대
 - 충전소는 약 2,000개의 고속/초고속 충전 플러그를 지원하며, 이는 2022년 12월 대비 이용 가능 충전소가 90% 이상 증가한 수준
- ④ 현지 제조 및 재활용 증가: 기후변화·전기차 및 대형 배터리 재활용, 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1만명의 견습생이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견습하도록 지원하는 등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지속
- ⑤ 구매 가능한 전기차: 전기차 할인 프로그램(electric car discount)을 발표하여 2022년 7월 이후 전기차를 구매한 사업주는 부가혜택세금(fringe benefit tax) 면제, 2023년 6만호주달러 이하 전기차 생산 확대 등
- ⑥ 차량 유지비 절감: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차량 평균 연료 소비량이 시간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차효율표준은 호주 자동차 시장에 더 효율적인 연료 절약 기술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호주 연방정부, 56억호주달러 규모의 노인 돌봄 개혁안 발표(2024. 9. 12.)⁵⁸³⁾

- (배경) 지난 10년 동안 홈케어를 받는 노인 인구수가 4배로 증가하였으며, 노인요양 시설의 포화로 정부 지원 부담이 확대되고 요양 시설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노인

582) 차량 공급업체가 친환경 차량을 판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기준이며, 신차는 이 기준에 따라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 평균 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충족해야 함. 법안의 통과로 신차효율표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583) 호주 총리실, "Once in a generation aged care reforms," 2024. 9. 12., <https://www.pm.gov.au/media/once-generation-aged-care-reforms>, 검색일자: 2024. 9. 23.; 호주 보건 및 노인부, "Case studies - Support at Home," 2024. 9. 12., <https://www.health.gov.au/resources/publications/case-studies-support-at-home>, 검색일자: 2024. 9. 23.

돌봄에 대한 개편이 필요

- (목표) 노인들이 집에서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홈케어를 지원하고, 개인부담금에 대한 개편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장
- (주요 내용) 호주 정부는 이번 개혁 패키지에 56억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
 - 가장 큰 예산 투입 항목으로 2025년 7월 1일에 발효되는 ‘Support at Home’에 43억 호주달러 투입 예정
 - 약 140만명의 호주인이 2035년까지 새로운 홈케어 프로그램의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
 - 새로운 개편안의 핵심 부분 중 하나는 다양한 홈케어 서비스를 하나의 간소화된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제도 개편을 통해 홈케어를 세 가지 범주(의료, 독립, 일상생활)로 나누어 지원
 - 현재는 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me, Home Care Package, Short-term Care, Aged Care Homes 등 다양한 노인 돌봄 프로그램이 있으며, 비용 또한 서비스 종류,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이용자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
 - 이번 개편으로 정부는 노인 돌봄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 전액 부담하지만 일상생활 비용(청소, 쇼핑, 식사준비 등)과 독립비용(샤워 및 약 복용 보조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개인이 부담하며, 개인부담금은 노인 연금 소득/자산조사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
 - 예로 전액 노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 비용의 17.5%를 부담하고, 비수급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비용의 80%까지 부담

그림 3-VI-4 노인 돌봄 개혁안 개인부담 비율

	Clinical care	Independence	Everyday living
Full pensioner	0%	5%	17.5%
Part pensioners and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holders	0%	5% - 50% depending on income/assets	17.5% - 80% depending on income/assets
Self-funded retiree	0%	50%	80%

자료: 호주 보건 및 노인부, "Case studies - Support at Home," 2024. 9. 12.

- 거주 요양시설에서 비의료 비용에 대한 평생 부담금 상한선(lifetime contribution cap)이 현재 7만 8천호주달러에서 13만호주달러로 상향
- ‘no worse off’ 원칙에 따라 현재 홈케어 및 요양시설 수혜자에게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예산 영향) 이번 개혁안 시행으로 정부는 4년간 9억 3천만호주달러를 지출하고, 11년간 126억호주달러를 절감한다는 계획
 - 노인 돌봄 지출은 예산의 가장 큰 압박 요인이며, 추가 조치가 없다면 향후 40년 동안 GDP 대비 지출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번 개편으로 2034~2035년까지 10년 동안 노인 돌봄 지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에서 5.2%로 하락하고, GDP 대비 노인 돌봄 지출 비중 또한 수혜자 수와 돌봄의 질이 증가하더라도 1.5%에서 1.4%로 완화될 전망
 - 정부는 현재 거주 요양비용의 76%와 홈케어 비용의 95%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번 개혁안으로 의료비용의 100%, 거주 요양비용의 73%, 홈케어 비용의 89%를 지불하게 됨

- 호주 재무부, 퇴직연금 기여금⁵⁸⁴⁾ 지급 보장(payday super) 정책 발표(2024. 9. 19.)⁵⁸⁵⁾
 - (배경) 호주 국세청(ATO)⁵⁸⁶⁾에 따르면 2020~2021년 미지급된 퇴직연금 기여금이 36억호주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연금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고용주가 퇴직연금 기여금 적립을 급여일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 (주요 내용) 이번 개편안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원들이 임금을 받을 때 퇴직연금도 함께 적립받을 수 있도록 보장
 - 현재 고용주는 퇴직연금 기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으로 약 890만명의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연금 기여금을 더 일찍, 더 자주 받음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잔액을 늘려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개편안에서 근로자는 퇴직연금 지연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고, 퇴직연금 지급을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지급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
 -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호주의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보다 품위있게 은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

- 호주 연방정부, 퀸즐랜드 남동부에 1천채 이상 신규 주택 건설 발표(2024. 10. 15.)⁵⁸⁷⁾
 - (배경) 호주의 주택 공급 부족은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이며, 현 정부는 2022-23회계연도 이후 주택 부족 현상 완화 및 국민의 주택 구입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 관련 투자를 확대해 옴⁵⁸⁸⁾
 - (주요 내용) 연방정부는 퀸즐랜드 남동부에 1천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제공하는

584) 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s: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가 반드시 직원의 급여에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강제사항으로 1992년 처음 3% 기여금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고용주가 11.5%를 계좌에 적립하는데 2025년 12%까지 인상할 예정

585) 호주 재무부, “Payday Super,” 2024. 9. 18.,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2024-581438>, 검색일자: 2024. 9. 20.; “Payday superannuation design details to ensure super is paid on time,” 2024. 9. 18.,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payday-superannuation-design-details-ensure-super-paid>, 검색일자: 2024. 9. 20.

586) Australian Taxation Office

587) 호주 총리실 보도자료, “Over 1,000 more homes for Queensland,” 2024. 10. 15., <https://www.pm.gov.au/media/over-1000-more-homes-queensland>, 검색일자: 2024. 10. 25.; Housing Australia 보도자료, “Housing Australia Supports Brisbane Housing Company To Deliver Over 600 New Homes Across South East Queensland,” 2024. 10. 14., <https://www.housingaustralia.gov.au/media/housing-australia-supports-brisbane-housing-company-deliver-over-600-new-homes-across-south>, 검색일자: 2024. 10. 28.

58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호주(2024-25회계연도)」, 2024. 8. 참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호주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20억호주달러 규모의 Homes for Australia 계획의 일부임

- Housing Support Program을 통해 퀸즐랜드에 4천만호주달러를 지원하여 Meadowbrook에 500채의 신규 주택 건설 및 물, 하수도, 전력 인프라를 개발할 것임을 발표
- 또한 연방정부·퀸즐랜드 정부·Australian Retirement Trust⁵⁸⁹⁾ 간 파트너십을 통해 브리즈번 및 그 주변 지역 7곳⁵⁹⁰⁾에 약 600채 이상의 사회주택 및 저렴한(affordable) 주택,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
 - Housing Australia⁵⁹¹⁾ 3억호주달러, 퀸즐랜드 정부 4억 500만호주달러, Australian Retirement Trust가 1억 5천만호주달러를 지원하여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
 - 자녀를 둔 싱글 여성, 청년, 원주민, 55세 이상 세입자가 사회주택에 우선권을 부여받고, 핵심 근로자(key worker)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짐

■ 호주 재무부, 열대 사이클론 재스퍼 등 피해 복구를 위해 퀸즐랜드에 2억 800만호주달러 이상 추가 지원 발표(2024. 12. 13.)⁵⁹²⁾

- (배경) 2023년 12월 열대 사이클론 재스퍼 및 폭풍으로 인해 퀸즐랜드 지역은 큰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직후 호주 정부는 재난지원금, 소득지원금 제공 등 재난 지역에 대한 복구 정책을 시행해 옴
- (목표) 퀸즐랜드 지역 사회의 재건을 돕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미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기 회복지원 패키지를 지원

589) 호주의 주요 퇴직연금 운용 회사로 Australian Super의 뒤를 이은 두 번째 규모의 퇴직연금 회사임.

590) Redcliffe, Stones Corner, Toowoomba, Woolloongabba, Southport and two locations at Chermisde

591) Housing Australia는 독립적인 국가주택기관으로 민간 부문 및 모든 정부기관 등과 협력하여 더 많은 호주인이 사회적 및 저렴한 주택에 접근하거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592) 호주 재무장관 홈페이지, "Additional \$200 million to support FNQ recovery and resilience following impact of ex-Tropical Cyclone Jasper," 2024. 12. 13.,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additional-200-million-support-fnq-recovery-and>, 검색일자: 2024. 12. 17.
퀸즐랜드 정부 홈페이지, "\$208 million Phase 4 extraordinary assistance package for ex-Tropical Cyclone Jasper and SEQ storms recovery," 2024. 12. 13., <https://www.qra.qld.gov.au/news-case-studies/news/208-million-phase-4-extraordinary-assistance-package-ex-tropical-cyclone-jasper-and-seq-storms>, 검색일자, 2024. 12. 17.

- (자금조달) 이번 지원 패키지는 주-연방 재해 복구 기금 약정⁵⁹³)을 통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한 4번째 특별 지원 조치이며, 이로써 2023~2024년 재해 기간 이후 퀸즐랜드 지역 사회에 제공된 총 자금은 4억 5,500만호주달러를 초과함
- (주요 내용) 퀸즐랜드 최북 지역에 장기 재해 기금 2억 600만호주달러 이상 제공 및 남동부 퀸즐랜드 폭풍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 175만호주달러 지원
 - 재스퍼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인프라 재건 1억 3천만호주달러(Betterment Package)
 - 재스퍼로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정부 상하수도 인프라 지원 6,120만호주달러(Water and Sewerage Infrastructure Package)
 - Wujal Wujal 지역 특별 지원 1,390만호주달러 등
 - 이번 지원 패키지는 재스퍼 및 폭풍을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제공된 즉각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며, 약 27만 4,808명의 퀸즐랜드 주민에게 지급된 6,440만호주달러 이상의 개인 회생지원금이 포함됨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 호주 통계청, 2024년 3분기 정부재정통계 발표(2024. 12. 3.)⁵⁹⁴
 - 호주 일반정부의 2024년 3분기 세입(taxation revenue)은 전 분기 대비 17.3% 감소⁵⁹⁵)한 1,876억 6,600만호주달러, 총수입(total revenue)은 전 분기 대비 14.1% 감소한 2,322억 8,400만 호주달러를 기록
 - 총비용(total expenses)은 전 분기 대비 2.1% 감소한 2,505억 6,800만호주달러로 집계됨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는 182억 8,400만

593) 2018년 11월 1일 시작된 주-연방 재해 복구 기금 약정(State-Commonwealth Disaster Recovery Funding Arrangements)은 이전의 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를 대체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자금으로 지역 사회가 재해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공

594)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ustralia," 2024. 12. 3.,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government-finance-statistics-australia/sep-2024>, 검색일자: 2024. 12. 11.

595)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6월 30일이며, 법인세의 중간예납 시기가 2분기이므로, 3분기 세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호주달러 적자, 여기서 비금융자산 순취득을 차감한 순차입은 302억 4,200만 호주달러를 기록

표 3-VI-9 2024년 3분기 정부재정통계(일반정부)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전 분기 대비
세입(Taxation revenue)	201,687	193,046	226,854	187,666	-17.3
총수입(Total revenue)	239,376	237,110	270,282	232,284	-14.1
총비용(Total expenses)	235,948	232,269	255,846	250,568	-2.1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3,428	4,841	14,436	-18,284	-
순용자/차입(Net lending(+)/borrowing(-))	-11,638	-7,388	-6,296	-30,242	-

자료: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ustralia," 2024. 12. 3.

■ 호주 통계청, 2024년 3분기 국민계정 발표(2024. 12. 4.)⁵⁹⁶⁾

- 2024년 3분기 호주 경제성장률(계절조정)은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GDP는 0.8% 성장
 - 최종소비지출은 가계 0.0%, 일반정부 1.4%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0.4% 증가
 - 가계 소비지출은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16.7%), 차량구매(-0.9%), 주류(-1.0%) 등의 지출이 감소한 반면, 의복 등(2.2%), 임대 및 기타 주거 서비스(0.4%), 보건(0.8%) 등의 지출이 증가
 - 정부 소비지출은 주 및 지방정부(2.2%), 비국방 분야(0.9%)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국방부문 (-1.4%) 지출 감소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은 전 분기 대비 1.5% 증가
 - 전 분기 대비 민간 투자 0.1% 증가, 공공 투자 6.3% 증가
 -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
 - 수출: 금속 14.3%, 석탄 8.2%, 육류 4.5% 등이 증가한 반면, 비통화성 금 7.6%,

596)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4. 12. 4.,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national-accounts/australian-national-accounts-national-income-expenditure-and-product/sep-2024>, 검색일자: 2024. 12. 9.

여행서비스 4.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0.2% 증가

- 수입: ADP 장비 14.4%, 비산업운송장비 13.2%, 산업운송장비 6.4% 등이 감소한 반면, 1차 산업 공급재 68.3%, 자본재 26.2%, 비화폐성 금 13.9% 등이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0.3% 감소

표 3-VI-10 호주의 2024년 3분기 국민계정

(단위: %, 계절조정)

구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4	1.7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1.4	4.7
가계(Households)	-	0.4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1.5	1.6
재고증감(Changes in inventories)	na	na
국민총지출(Gross national expenditure)	0.2	1.5
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0.2	-1.1
수입(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0.3	2.7
통계적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na	na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0.3	0.8

자료: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4. 12. 4.

그림 3-VI-5 호주의 2024년 3분기 국민계정



자료: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4. 12. 4.

VII 네덜란드⁵⁹⁷⁾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회계연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일자	주요 내용
2024. 8. 14.	네덜란드 통계청, 2024년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2024. 8. 16.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2025년 거시경제 전망 발표
2024. 9. 17.	네덜란드 재무부, 2025년 예산안 발표
2024. 9. 17.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2025년 거시경제 전망 업데이트 발표
2024. 11. 14.	네덜란드 통계청, 2024년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2024. 11. 14.	네덜란드 통계청, 2024년도 3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
2024. 11. 29.	네덜란드 재무부, 가을각서 발표
2024. 11. 29.	네덜란드 재무부, 2024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4. 12. 13.	네덜란드 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 2024년 가을 기준」 발표

자료: 저자 작성

59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에스더 선임연구원(haesther@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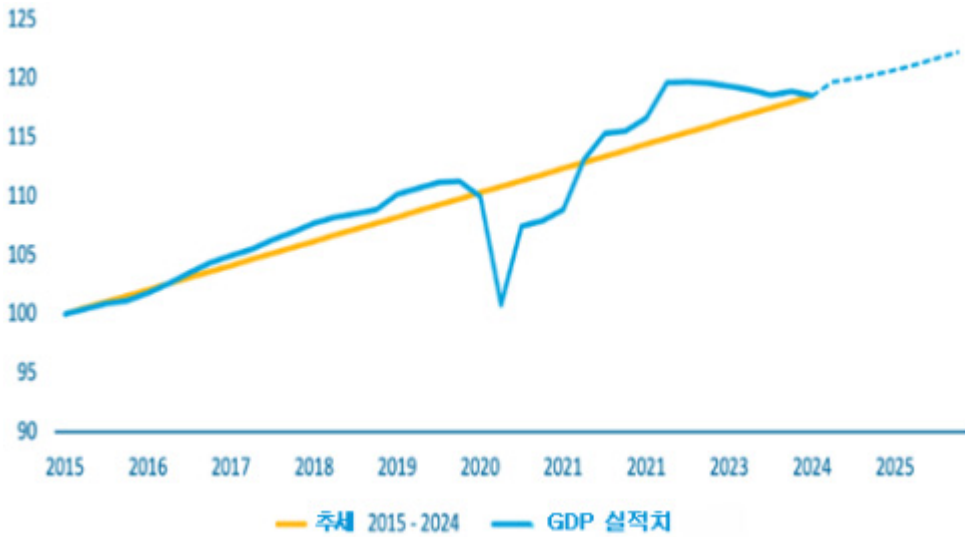
가. 예산

■ 네덜란드 재무부, 2025년 예산안 발표(2024. 9. 17.)⁵⁹⁸⁾

- (경제 전망) 2023년 경기침체 이후 2024년부터 세계무역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로 인해 경제가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은 2024년 0.6%, 2025년 1.5%, 2025~2028년 연평균 1.4%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
 - 2024년 경제는 실질소득 증가와 구매력 회복으로 가계소비 증가에 기인한 내수 주도형 성장이며, 2025년에는 수출과 기업투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재정 전망) 재정수지는 2026년을 제외하고 정부 임기 동안 EU 기준치인 GDP대비 -3% 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4년 -1.6%에서 2028년 -2.4%가 될 것으로 예상
 - 202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3.7%로 악화되며, 이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던 군인연금이 자본 자금조달(capital funding)로 전환되어 85억유로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
 - (재정수입) 일반정부 재정수입은 2024년 4,056억유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95억유로 증가한 4,251억유로로 전망되며, 대부분 내생적 성장(147억유로)에 기인
 - (재정지출)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2024년 4,234억유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36억유로 증가한 4,570억유로로 전망되며,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분야는 사회보장(1,149억유로)과 의료(1,146억유로)로 예상
 - (국가채무) 2024년과 2025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GDP 대비 44.2%와 46.6%로 전망되며, 정부 임기(2024~2029년) 동안 EU 기준치인 GDP 대비 6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598)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en begrotingen," 2024. 9. 17.,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5>, 검색일자: 2024. 9. 17.

그림 3-VII-1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주: 계절 조정된 실질 GDP 수치이며, 2021년 GDP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여 계산됨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en begrotingen," 2024. 9. 17.

표 3-VII-1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일반정부 재정수입	405.6	425.1	447.0	469.2	487.0	504.9
일반정부 재정지출	423.4	457.0	492.2	498.6	517.4	538.0
일반정부 재정수지	-18.5	-32.6	-45.9	-30.1	-31.1	-33.9
(GDP 대비 %)	-1.6	-2.8	-3.7	-2.4	-2.4	-2.5
정부채무	498.8	548.4	613.8	646.8	681.0	717.3
(GDP 대비 %)	44.2	46.6	50.1	50.7	51.6	52.5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en begrotingen," 2024. 9. 17.

- (예산 기초) 2025년 예산안은 지출 수준을 구조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건전한 공공 재정을 중시하며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네덜란드 경제를 목표로 함
 - 지난 몇 년 동안 야심찬 투자 계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
 - 정부는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출 통제 조치를 마련
 - 교육, 연구 및 혁신, 599) 개발 원조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고, 공무원 수 감축, 숙박 및

문화 상품,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율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

- (정책 우선순위) 정책 우선순위를 ‘현재의 포괄적 복지(Brede Welvaart)’⁶⁰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매력 개선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택시장의 문제 해결, 올바른 정치적 거버넌스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
 - (구매력 개선) 근로소득세의 최저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추가 구간을 도입
 - 근로소득세는 2028년부터 1차 구간 세율은 35.36%(소득 3만 8,441유로 미만), 2028년 2차 구간 세율은 37.44%(소득 3만 8,441~7만 6,817유로), 3차 구간 세율은 49.50%(소득 7만 6,817유로 초과)로 조정⁶⁰¹⁶⁰²
 -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현재 385유로인 국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⁶⁰³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의료 전문치료⁶⁰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치료당 최대 50유로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
 - (주택 건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10만호의 신규주택 실현을 목표로, 5년간 매해 15억유로(주택 건설에 10억유로, 인프라에 5억유로)를 배정
 - (정치적 신뢰 회복) 아동수당 스캔들⁶⁰⁵과 흐로닝언(Groning) 지역 가스 추출로 무너진 공무원과 정치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 헌법재판소 설립 등을 제안

599) 2025년 예산안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광범위한 번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교육, 연구 및 혁신 분야 등을 대폭 삭감함.
600) 포괄적 복지(Brede Welvaart)는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GDP 성장률 외에 환경, 사회적 영향, 개인의 행복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지금, 여기’ 차원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미래’ 차원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고 있음

601) 2024년 기준 네덜란드의 소득세율은 2단계 세율 구조로 나뉘어 적용. -1차 구간 세율(소득 73,071유로 이하): 36.93%, -2차 구간 세율(소득 73,071유로 초과): 49.5%

602) 근로소득세율 조정 및 추가 구간 도입으로 세입이 2025년 44억 5천만유로, 2026년 49억 66천만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603)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제도는 기본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년 일정 금액까지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최대 385유로임. 즉 보험 가입자는 이 금액까지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불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함.

604) 네덜란드의 기본 건강보험에 대부분의 전문 의료서비스가 포함되며, 의료 전문치료는 병원의 전문의가 제공하는 치료로, 예를 들면 심장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정형외과 등 특정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임. 현재 385유로인 국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의료 전문치료 본인부담금이 포함됨.

605) 네덜란드 아동수당 스캔들은 네덜란드의 세무당국이 네덜란드 주민들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한편, 아동수당 배급을 부당 청구한 사건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적어도 네덜란드의 2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부모가 육아 수당 청구에 대해 부정 행위가 일어나거나 의심되었으나 이후 이 명령이 오류에 기인했음이 드러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4월호 재정동향」, 2024. 4. 참고)

■ 네덜란드 재무부, 가을각서(Najaarsnota 2024)⁶⁰⁶ 발표(2024. 11. 29.)⁶⁰⁷

※ 네덜란드 재무부는 매년 12월 1일 전까지 최종 예산 보고서인 가을각서(Najaarsnota)를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집행과정을 보고하고, 정책의 변경이나 재정 흑자 또는 적자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반영

◦ (재정 전망) 2024년 재정적자는 2025년 예산안 대비 0.1%p 개선된 GDP 대비 1.5%로 수정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재정수지의 개선은 주로 2024년에 집행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 때문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수입은 2025년 예산안의 2024년 추정치(4,056억유로)에 비해 약 1억 1,500만유로 하향 조정되어 4,055억유로로 수정 전망

- 2025년 예산안과 비교한 하향 조정의 대부분은 환경세, 양도세, 소비세 등 간접세 감소에 기인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지출⁶⁰⁸은 2025년 예산안의 2024년 추정치(4,234억유로)에 비해 약 16억유로 감소한 4,218억유로로 수정 전망

- 2025년 예산안과 비교한 지출 감소분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지원 감소(-15억 4,900만유로)에 기인

- 2024년 가을각서의 지출체계⁶⁰⁹ 내 순지출⁶¹⁰은 2025년 예산안(3,960억유로) 대비 1억유로 증가한 3,961억유로

- 2024년 국가채무는 예산안의 추정치(44.2%) 대비 0.3%p 개선된 GDP대비 43.9%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무 개선은 그리스에 제공한 대출금 회수(4억 8천만유로)⁶¹¹에 기인

606) 가을각서는 2024회계연도의 지출 및 수입에 대한 최신 상황을 제공하며, 이는 9월 2025년 예산안 합의 이후 2024년에 발생한 변화와 2025년 예산안의 변경 사항을 보여줌.

607) 네덜란드 재무부, "Najaarsnota 2024," 2024. 11. 29., <https://www.rijksfinancien.nl/najaarsnota/2024>, 검색일자: 2024. 12. 9.

608) EMU 수지와 관련된 총 지출

609)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연간 지출 프레임워크(지출 체계)가 있음. 정부는 2024년 예산된 지출 수준이 설정된 지출 프레임워크 내에서 유지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임. 지출은 지출 체계에 포함되는 지출과 포함되지 않는 지출로 구분됨. 예를 들어 지출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에는 대출 비용, 정부의 사회보장기금 보험료, 우크라이나 관련 지출이 있음.

610) 순지출은 지출에서 세외수입을 공제한 것을 의미

611) 유럽 재정위기와 그리스 구제 금융: 2010년대 초, 그리스는 재정 위기로 인해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국제 지원이 필요했으며,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음. 그리스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기 시작했음. 네덜란드는 그리스에 제공한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받음으로써 네덜란드의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하며 재정상태가 개선됨.

표 3-VII-2 주요 재정지표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25년 예산안의 2024년 추정치	2024년 가을각서의 2024년의 추정치
일반정부 재정수입	405.6	405.5
일반정부 재정지출	423.4	421.8
-지출체계 내 순지출	396.0	396.1
-기타 순지출 및 수정	27.4	25.7
일반정부 재정수지	-18.5	-17.0
(GDP 대비 %)	-1.6%	-1.5%
국가채무	498.8	495.2
(GDP 대비 %)	44.2%	43.9%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 "Najaarsnota 2024," 2024. 11. 29.

표 3-VII-3 2024년 재정수입 추정치 비교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5년 예산안의 2024년 추정치	2024년 가을각서의 2024년의 추정치	차이
간접세(A)	117,303	117,129	-174
판매세	78,778	78,778	0
개별소비세	12,281	12,144	-137
환경세	6,612	6,440	-172
자동차세	4,983	4,983	0
수입세	3,929	4,198	269
보험료 세금	3,953	3,953	0
양도세	3,723	3,610	-113
승용차 및 오토바이 특별세	1,402	1,402	0
은행세	608	608	0
무알콜 음료 등에 대한 소비세	648	627	-21
대형 자동차에 대한 세금	207	207	0
한계 이하 세금 (Inframarginale heffing)	179	179	0
직접세 및 국민보험료(B)	193,164	193,223	59
근로소득세	136,720	136,859	139
법인세	46,109	45,509	-600
배당세	5,810	6,144	333
상속세 및 증여세	3,402	3,606	204
도박세	1,064	1,064	0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	59	41	-18
기타 세금(C)	376	376	0
총 세금 및 국민보험료(D=A+B+C)	310,842	310,727	-115
직장보험료(E)	94,724	94,724	0
재정수입(D+E)	405,567	405,451	-115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 "Najaarsnota 2024," 2024. 11. 29.

- (과소집행) 2024년 가을각서 기준 과소집행 목표(예산 미집행)⁶¹²)는 2025년 예산안 대비 32억 4,200만유로 감소한 총 51억 9,100만유로로
 - 2025년 예산안 기준 과소집행 목표 및 추가 과소집행은 총 84억 3,300만유로
 -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 2024년 과소집행 목표는 총 50억 1,900만유로로 설정되었음
 - 최근 몇 년간 부처 예산에서 과소집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더 현실적인 예산집행으로 만들기 위해 이전 정부는 2024년에 추가 과소집행 목표로 35억 유로를 설정했음
 - 2024년 가을각서 기준 32억 4,200만유로의 과소집행이 달성되었으며, 총 51억 9,100만 유로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음
 - 2024년 가을각서 기준 달성된 32억 4,200만유로의 과소집행은 부처별 예산 미집행분 21억유로와 사회 및 고용 분야, 보건, 복지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예산 초과 및 부족의 결과 12억유로⁶¹³)로 구성
 - 결론적으로 남은 과소집행 목표금액이 연말까지 충족되지 않을 경우 2024년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임

612) 과소집행 목표의 의미와 실행 방식. -과소집행 목표는 연말 잔여 예산(이월 예산)의 반대되는 개념임. 연말 잔여 예산은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최대 전체 예산의 1%까지만 가능함. 특정 예산 기금(예, 국방장비 기금, 델타 기금, 모빌리티 기금)의 경우 100% 이월이 허용됨. -이월 예산으로 인해 지출 한도가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금액만큼의 과소집행 목표가 동시에 계상됨. 이로 인해 다음 해로 이월된 예산은 추가적인 지출 여유분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이월 예산은 연도 중 과소집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쇄됨. -과소집행 목표는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할당되지 않고 연도가 진행되면서 점차 채워지며, 이 목표의 실질적 실행은 과소지출(미집행)이나 다른 예산의 예상외 수익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613) 이는 예산 초과분과 부족분을 합친 순효과

표 3-VII-4 2024년 과소집행 목표 및 과소집행 달성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안 기준 2024년 과소집행 목표(A)	-5,019
2025년 예산안 기준 2024년 추가 과소집행(B)	-3,500
2025년 예산안 기준 달성된 과소집행(C)	86
2025년 예산안 기준 총 과소집행 목표 및 추가 과소집행(D=A+B+C)	-8,433
2024년 가을각서 기준 달성된 과소집행 목표(E)	3,242
2024년 가을각서 기준 과소집행 목표 및 추가 과소집행(F=D+E)	-5,191
-과소집행 목표	-1,691
-추가 과소집행	-3,500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 "Najaarsnota 2024," 2024. 11. 29.

- (예산집행) 가을각서에서 2024년 분야별 예산 미집행분은 총 21억유로로 집계
 - 예산 미집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교육·문화·과학(5억 5,200만유로), 경제 및 기후(4억 5천만유로) 분야로 나타남

표 3-VII-5 2024년 예산 집행 미달

(단위: 백만유로)

항 목	2024년
교육, 문화, 과학	-552
경제 및 기후(국가성장기금 포함)	-450
추가 항목(Aanvullende Post)1)	-247
금융	-236
국방	-201
정의와 안보	-106
농업, 어업, 식량 안보 및 자연	-104
사회 및 고용	-78
대외무역개발원조	-37
공중 보건, 복지 및 스포츠	-36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모빌리티 펀드 및 델타펀드 포함)	-22
왕국 관계(BES 기금 포함)	-13
주 일반 및 고등 국가 평의회	-6
국무총리실과 국왕(Algemene Zaken en De Koning)2)	-1
총 예산 미집행분	-2,090

주: 1. 추가 항목은 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지출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설정되는 재정 항목을 의미

2. 국무총리실(Algemene Zaken)은 네덜란드 총리가 이끄는 부서로 총리와 내각의 주요 정책 결정, 국정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왕(De Koning)은 네덜란드 국왕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 "Najaarsnota 2024," 2024. 11. 29.

나. 추경

■ 네덜란드 재무부, 2024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024. 11. 29.)⁶¹⁴⁾

- 2024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43억유로(6.5%) 증가한 3,981억 유로로 편성
 - 이번 추경예산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유동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중점

표 3-Ⅶ-6 2024년 제2차 추경

(단위: 억유로)

분야	2024년 예산안(A)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B)	본예산 대비 증감률(B/A)
사회·고용	580.2	619.8	635.5	9.5%
교육, 문화, 과학	554.7	582.1	571.1	3.0%
금융과 국가부채	573.1	709.2	758.1	32.3%
지방자치단체 기금	428.7	433.4	439.7	2.6%
보건, 복지 및 스포츠	352.7	372.8	385.0	9.2%
정의와 안보	241.2	267.0	258.6	7.3%
국방	147.9	224.3	123.7	-16.3%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	146.5	142.9	139.5	-4.8%
외교	127.9	122.0	114.4	-10.5%
경제 및 기후 정책	122.4	142.5	108.5	-11.4%
내무	112.0	119.3	115.6	3.3%
국방 장비 예산 기금	107.2	98.1	83.1	-22.4%
모빌리티 펀드	102.5	104.1	98.8	-3.5%
대외 무역 및 개발 협력	36.4	39.3	39.6	9.0%
주정부 기금	33.4	36.1	39.5	18.4%
농수산물, 자연, 식품 품질	28.6	44.6	42.2	47.7%
델타 펀드 ¹⁾	18.2	15.8	16.4	-9.4%
국가성장기금	15.7	5.1	0.9	-94.2%
일반 주정부 ²⁾	2.4	2.9	2.8	17.4%
왕국	2.2	1.6	2.0	-8.3%
국가 고등 평의회	1.8	1.9	1.9	7.1%
총무	1.0	1.2	1.2	19.1%

614) 네덜란드 재무부, "Tweede Suppletoire Begrotingen," 2024. 11. 29., <https://www.rijksfinancien.nl/memo-rie-van-toelichting/2024/2SUPP>, 검색일자: 2024. 12. 9.; "Ontwerpbegroting 2024 Vergelijk tussen begroting, 1e suppletoire, 2e suppletoire en jaarverslag," 2024. 11. 29., <https://www.rijksfinancien.nl/visuals/vergelijk-fasen/2024/begroting/U/excl-premies>, 검색일자: 2024. 12. 9.

분야	2024년 예산안(A)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B)	본예산 대비 증감률(B/A)
BES 공공기관 지원 펀드	0.7	0.8	1.0	45.9%
왕실	-	0.6	0.6	100%
동물보건기금	0.3	0.4	0.4	31.9%
재정지출	3,737.8	4,087.8	3,981.0	6.5%

주: 1) 수질, 홍수 위험 관리에 대한 투자를 포함

2) 상원과 하원의 입법과 통제, 국회의원 및 전직 의원에 대한 비용을 포함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 "Ontwerpbegroting 2024 Vergelijk tussen begroting, 1e suppletoire, 2e suppletoire en jaarver slag," <https://www.rijksfinancien.nl/visuals/vergelijk-fasen/2024/begroting/U/excl-premies>, 검색일자: 2024. 12. 9. 재구성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경제 전망 보고서

■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CPB), 2025년 거시경제 전망 발표(2024. 8. 16.)⁶¹⁵⁾⁶¹⁶⁾

※ 정부는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9월 셋째 주 화요일 예산의 날(Budget Day)에 발표될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거시경제 전망치를 예측하며, 중앙정책기획국(CPB)은 예산의 날에 2025년 거시경제 전망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

○ (경제 전망) 네덜란드 경제는 지난 몇 분기 동안 경기침체를 겪은 후 임금 상승과 세계 무역의 회복으로 향후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며, GDP 성장률은 2024년 0.6%, 2025년 1.6%로 전망

- 경제성장은 부분적으로 가계소비 증가에 기인하며 임금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게 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회복되어 2024년과 2025년 구매력이 각각 2.5%,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 전망)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2.2%, 2025년 2.6%, 2026년 3.3%,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45.3%, 2025년 46.9%, 2026년 48.4%로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될 전망

615)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Augustusraming 2024(cMEV 2025)," 2024. 8. 16., <https://www.cpb.nl/augustusraming-2024-cmev-2025>, 검색일자: 2024. 8. 19.

616) 경제 전망은 2024년과 2025년 단기 전망치, 재정 전망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중장기 전망치, 그리고 경제·재정 전망 모두 2005~2028년 동안 4개년씩(2005~2008, 2009~2012, 2013~2016, 2017~2020, 2021~2024, 2025~2028) 평균 전망치를 제시

- 향후 몇 년 동안 재정적자는 확장적 재정정책, 인구고령화,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여 EMU 한도 값인 GDP 대비 3%를 초과할 것이며, 추가적인 정책이 없다면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재정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 이는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급격한 긴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⁶¹⁷⁾
- 국가채무는 상승 추세에 있으며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8년에는 채무가 GDP 대비 70%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EMU 기준인 60% 한계치를 초과함*
 - *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의 안정성장 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규정한 GDP 대비 60%의 국가채무 비율을 재정목표로 설정
- 상승세인 국가채무는 현재의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는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

그림 3-Ⅶ-2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Augustusraming 2024," 2024. 8. 16.

617) 연립내각 합의에서는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로 인해 구조적 개혁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즉흥적인 긴축 조치를 마련해야 할 위험이 있음.

표 3-VII-7 주요 거시경제 및 정부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내총생산(GDP)	5.0	0.1	0.6	1.6
가계소비	6.9	0.8	0.7	2.8
정부소비	1.3	2.9	2.6	1.3
기업투자	5.6	-9.1	-3.2	3.9
주택투자	1.1	-1.5	-1.1	5.0
수출	4.4	-0.5	-0.4	2.4
수입	4.4	-1.8	-0.7	3.7
인플레이션(HICP)	11.6	4.1	3.5	2.8
임금증가율	3.2	6.6	7.1	5.2
실업률	3.5	3.6	3.7	3.0
일반정부 재정수지	-0.1	-0.4	-2.2	-2.6
국가채무	48.3	45.1	45.3	46.9

자료: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Augustusraming 2024," 2024. 8. 16.

■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CPB), 2025년 거시경제 전망 업데이트 발표(2024. 9. 17.)⁶¹⁸⁾

- ※ 정부 예산안 발표일에 중앙정책기획국(CPB)은 지난 8월 발표된 2025년 거시경제전망 초안⁶¹⁹⁾을 업데이트하여 거시경제 전망 확정치를 발표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과 일치하도록 함
 - 경제성장률 확정치는 2024년 0.6%로 지난 8월 기준 추정치와 동일하고, 2025년 1.5%로 기준 추정치보다 0.1%p 낮음
 - 새 내각의 세금감면 조치가 연기되어 2025년에는 평균 구매력이 이전 예측보다 0.4%p 하락한 0.7%로 예상되며, 정부 임기(2024~2029년) 동안 연평균 구매력 증가율은 0.8%가 될 것으로 예상⁶²⁰⁾
 - 정부는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⁶²¹⁾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모든 예산 지출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일부 예산 흐름을 내년 이후로 연기

618)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Macro Economische Verkenning 2025," 2024. 9. 17., <https://www.cpb.nl/raming-september-2024-mev-2025>, 검색일자: 2024. 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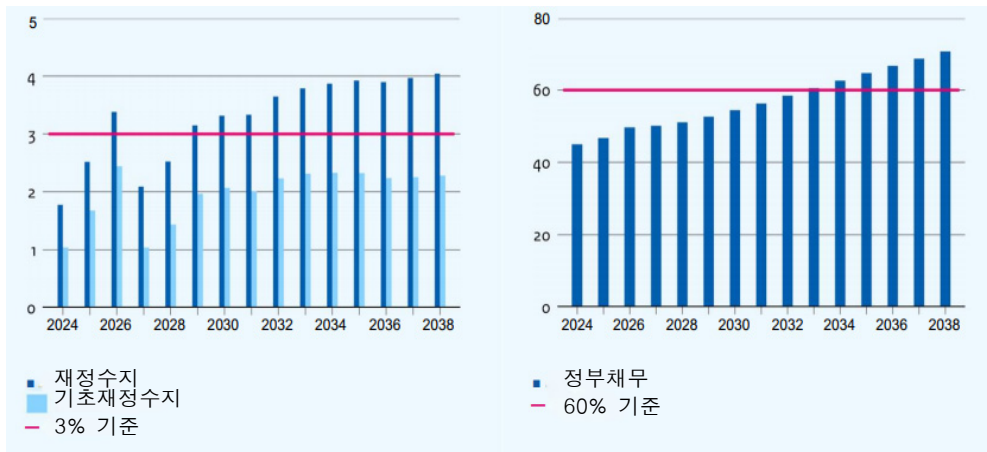
619) 2025년 거시경제 전망 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8월호 재정동향」, 2024. 8. 참고
620) 새로운 연립정부의 연립내각 합의서에서 합의된 세금 감면 중 일부는 2025년 이후 도입될 예정

621) 네덜란드 노동시장에는 경제 상황, 인구 고령화(노인 인구 증가), 저출산(젊은 인구 감소) 및 동시에 다른 정책 목표 추구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교육, 의료 및 건설 분야의 고용주는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40% 이상). 충원할 수 없는 빈일자리는 건설, 금융 기관 및 제조업에서 가장 높음(네덜란드 재무부, 「2025년 예산안」, 2024. 9. 17.)

- 지출 연기로 인해 2024년에 재정적자가 36억유로 개선
- o Box 3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세금감면 조치를 2025년 이후로 연기해 재정적자는 2024년 기존 전망치 2.2%→ 확정치 1.8%, 2025년 기존 전망치 2.6%→ 확정치 2.5%로 개선
- o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기존 전망치 45.3%→ 확정치 45.0%, 2025년 기존 전망치 46.9%→ 확정치 46.7%로 조정

그림 3-VII-3 네덜란드 재정수지(왼쪽)와 국가채무(오른쪽)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 "Macro Economische Verkenning 2025," 2024. 9. 17.

- 네덜란드 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 2024년 가을 기준」 발표(2024. 12. 13.)⁶²²⁾
 - o (경제 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0.9%, 2025년과 2026년 1.5%로 지난 6월 봄 전망치(2024년 0.5%, 2025년과 2026년 1.3%)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고, 경제 성장은 주로 가계소비와 정부지출에 의해 주도
 - 네덜란드 경제는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가계소비('24년 0.8%→ '25년 2.1%)가 회복되고, 이 추세는 2025년과 2026년에도 계속될 전망

622) 네덜란드 은행, "Economische groei zet door, onzekerheid neemt toe," 2024. 12. 13., <https://www.dnb.nl/algemeen-nieuws/persbericht-2024/economische-groei-zet-door-onzekerheid-neemt-toe/>, 검색일자: 2024. 12. 16.

- 건축 상태였던 정부지출('24년 2.5%→ '25년 1.7%)은 향후 몇 년간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이후 기업투자('24년 -0.9%→ '25년 2.1%)도 회복되고 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건설 보조금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 주택투자('24년 -1.2%→ '25년 2.6%)가 촉진되고 있음
- 그러나 무역수지 악화가 2025년과 2026년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수요 회복이 수입 증가를 동반하지만 수출 증가가 이에 못 미치기 때문
 - 네덜란드 수출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악화되고, 무역전쟁 상황에서는 더욱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해외 시장에서의 수입 관세는 네덜란드 수출업체에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인플레이션은 전망 기간 동안 유로존 전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약 3%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며,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주로 높은 임금 상승, 간접세 인상에 기인
- (재정 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0.7%, 2025년 2.1%, 2026년 3.1%,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43.7%, 2025년 45.0%, 2026년 47.9%로 악화될 전망
- 2024~2026년의 재정적자는 봄 전망치(2024년 2.4%, 2025년 2.5%, 2026년 3.7%)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2026년에는 재정적자가 3% EU 기준에 도달하여, 예기치 않은 경제 충격에 대응할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표 3-VII-8 주요 거시경제 및 정부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국내총생산(GDP)	0.1	0.9	1.5	1.5
가계소비	0.8	0.8	2.1	1.8
정부지출	2.8	2.5	1.7	2.8
기업투자	2.3	-0.9	2.1	1.8
주택투자	-1.7	-1.2	2.6	2.6
수출	-0.4	0.1	2.3	2.2
수입	-1.7	0.0	3.3	3.1
인플레이션(HICP)	4.1	3.2	3.2	2.8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근원 인플레이션	6.4	3.2	3.2	2.8
실업률	3.6	3.7	3.9	4.0
일반정부 재정수지	-0.4	-0.7	-2.1	-3.1
국가채무	45.1	43.7	45.0	47.9

자료: 네덜란드 은행, "DNB Najaarsraming December 2024," 2024. 12. 13.

- (정책제언) 네덜란드 경제는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의 위협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취약하며, 네덜란드가 어떤 행동 전략을 취해야 할지 네 가지 사항을 권고
 - 1. 유럽과 네덜란드의 경쟁력 강화
 - 생산성 성장 촉진 및 노동 시장 유동성 개선이 필요
 - 이를 위해 생산성 성장은 기업 동력(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으며 탄소 배출 가격 책정, 노동법 강화 등으로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
 - 유럽 내부시장과 자본시장 통합을 통해 EU 국내총생산(GDP) 약 7% 증가 효과 기대
 - 2. 수입관세 도입에 신중
 -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방경제로서 보호무역주의에 취약하며, 국제무역은 네덜란드 경제의 중요한 축
 - 보호무역주의, 관세 도입은 단기적으로 유리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저해
 - 특정 산업 보호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
 - 3. 3% 인플레이션이 표준화되지 않도록 방지
 - 3% 이상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경제의 경쟁력 저하, 실질 소득 감소, 저축 악화 위험을 초래
 - 정책 입안자와 사회적 파트너들은 3% 인플레이션이 표준화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
 - 4. 장기적인 공공재정 안정화
 - 정부 적자가 2026년 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예산을 통해 새로운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거의 부족

- 따라서 공공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구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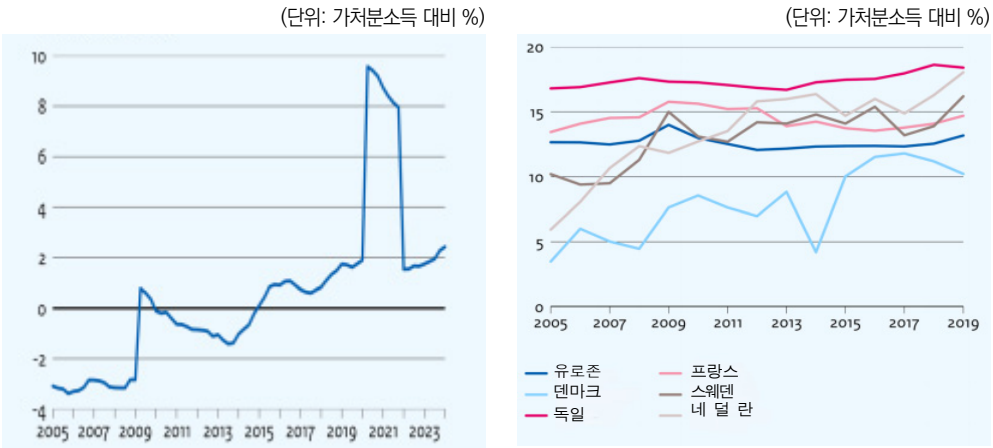
나. 기타 정책 및 보고서

-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CPB), 「네덜란드 가계저축 분석」 보고서 발표(2024. 7. 9.)⁶²³⁾
 - 네덜란드 가구는 2005~2024년 기간 동안 점점 더 많은 저축을 시작하여 저축률은 2005년 가처분소득 대비 -3%에서 2024년 현재 2%대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가계저축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황이 차지하는 비중⁶²⁴⁾도 증가하여 가계의 부채 상황은 개선
 - 주담대를 상환하는 가구의 비중은 2007년 25%에서 2019년 50% 이상으로 증가
 - 저축은 당좌예금이나 예·적금에 넣을 수 있지만 부채를 갚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주담대 상환 증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엄격해진 주담대 이자 납입액에 대한 세금공제 규정으로 이자 납입에 대한 공제율이 감소한 것에 기인
 - 특히 새로운 주담대 규정이 주로 젊은 세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젊은층의 상환액이 증가하여 주담대를 상환하는 가구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몇 년간 저축액에서 대출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타국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저축률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덴마크와 스웨덴은 예외
 -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위해 저축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623)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Besparingen van Nederlandse huishoudens," 2024. 7. 9., <https://www.cpb.nl/besparingen-van-nederlandse-huishoudens>, 검색일자: 2024. 7. 9.

624)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 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 소비목적 대출, 기타대출 순으로 나타남.

그림 3-Ⅶ-4 네덜란드 가계 저축률(왼쪽)과 주요 유럽국가의 저축률(오른쪽)



자료: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Besparingen van Nederlandse huishoudens,” 2024. 7. 9.

■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CPB), 장기 전망 보고서 「미래를 위한 선택: 2050년을 위한 네 가지 비전」 발표(2024. 10. 10.)⁶²⁵⁾

※ 중앙정책기획국(CPB)의 국장 피터 하세캄프(Pieter Hasekamp)는 2024. 10. 10일에 디 스키프(Dick Schoof) 총리에게 네덜란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장기 전망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전의 장기 전망은 2010년에 발표됨

- 보고서는 네덜란드가 2050년까지 직면하게 될 주요 경제적, 사회적 도전 과제들을 다루고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적 선택과 결과를 제시
- 네덜란드는 국제적 의존도 증가, 인구 고령화, 주택부족 문제, 경제성장 둔화, 부의 불평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
- 네 가지 시나리오는 경제, 노동시장, 사회보장, 의료, 주택의 다섯 가지 주제로 세분화되어 있음*

* <표 3-Ⅶ-9> 참고

- 1) 시장 시나리오: 경제성장이 중심이지만 불평등과 환경 문제가 발생
 - 이 시나리오에서 네덜란드는 국제 무역이 많고 이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갖춘 평균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

625)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Kiezen voor later: vier visies voor 2050,” 2024. 10. 10., <https://www.cpb.nl/kiezen-voor-later-vier-visies-voor-2050>, 검색일자: 2024. 10. 15.

- 그러나 사회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경제활동과 인구 증가로 인해 공간에 대한 압박을 받고 환경오염이 심화됨
- 2) 자립 시나리오: 자급자족과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나 경제성장 둔화
 - 네덜란드는 국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더 많은 경제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이주제한으로 인해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보유
 - 단점은 국제협력이 제한되어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인구 증가가 제한되며 소셜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음
- 3) 지속가능한 시나리오: 지구의 생존을 위해 환경보호를 중시하지만, 제품가격 상승과 규제가 증가
 - 국제적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과 소비를 제한하지만, 이는 많은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또한 가계와 기업의 선택을 제한하는 많은 환경 규제와 기타 정부 간섭이 존재
- 4) 연대 시나리오: 사회적 연대와 복지 확대로 세금 인상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상승
 - 관대한 복지, 접근 가능한 돌봄, 저렴한 주택 등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에 대한 많은 신뢰가 있음
 - 그러나 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해 세금이 인상되고 은퇴 연령이 더 빨리 상승할 것임
- 이 시나리오들은 예측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정책적 선택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장기 목표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토론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Ⅶ-9 네 가지 시나리오별 주요 특징과 정책적 선택의 결과

시나리오 종류	핵심 가치	테마	특징	결과
시장 시나리오	물질적 부와 경제성장 중심	경제	- 경제성장이 최우선 과제 -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 장려	- 경제가 급성장하지만, 불평등이 증가하고 환경 문제 대응은 부족
		노동시장	-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 - 직업 안정성은 줄어들어 계약직 및 프리랜서가 증가	- 높은 노동 참여율과 기술 혁신 -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평등 심화
		사회보장	- 사회보장제도는 최소한으로 유지	- 저소득층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

시나리오 종류	핵심 가치	테마	특징	결과
		의료	- 의료 시스템도 최소한으로 유지 - 개인이 의료비 부담 증대	- 부유한 사람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의료 접근성 저하
		주택	-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주택공급은 증가하지만 환경은 고려되지 않음	- 많은 주택이 건설되지만, 주거 환경의 질 저하
자립 시나리오	자급자족과 공동체 중심	경제	- 자급자족과 지역 중심 경제가 강조되며, 국제 무역과 외부 의존을 최소화	- 경제성장은 제한적이지만, 지역경제가 강화되고,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
		노동시장	- 고용안정성 강조, 지역경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보호 강화
		사회보장	- 중앙정부의 개입은 줄어들고, 지역 차원에서 복지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
		의료	- 지역 중심의 의료 시스템 구축 -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의료시스템은 약화	-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 발생
		주택	- 도시보다는 농촌 및 지역 개발이 우선시	- 도시 개발은 제한적이고, 농촌지역과 지역사회 중심 주거 형태 확산
지속가능한 시나리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중심	경제	- 환경보호와 순환 경제가 중시	- 경제성장은 느리지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익
		노동시장	-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전환 관련 일자리가 증가	- 녹색 일자리가 늘어나고, 환경보호 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
		사회보장	- 사회보장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환경 및 사회적 보호가 중요	- 복지와 환경 보호가 결합된 형태로 사회적 안전망이 유지
		의료	- 정부는 환경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공공 건강프로그램에 집중	- 예방적 의료와 건강한 생활환경이 중시되지만, 개인의 선택이 제한
		주택	- 도시화보다는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한 주거 개발을 중시, 친환경 주택을 건설	- 도시 외곽에 자연 공간이 많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주택 우선시
연대 시나리오	평등과 집단적 책임 중심	경제	- 경제성장보다는 사회적 평등과 복지 시스템의 유지를 중시	- 경제성장은 제한되지만, 사회적 평등이 크게 강화
		노동시장	- 일자리는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 - 직업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	-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공공 부문 일자리가 증가하지만, 민간 부문의 성장은 제한
		사회보장	-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 목표	- 높은 세금을 통해 재정 지원 -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강력하게 유지
		의료	-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의료 시스템이 운영	- 누구나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
		주택	- 공공 주택정책이 강화 - 주택 건설은 정부의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주도	- 주거 불평등이 줄어들지만, 주택 공급의 질이 저하

자료: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Kiezen voor later: vier visies voor 2050," 2024. 10. 10.

■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CPB),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소득과 위험의 연대」 보고서 발표 (2024. 10. 15.)⁶²⁶⁾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Zorgverzekeringswet, Zvw)에서 소득 연대성과 위험 연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과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담 정도를 분석
- (개요)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소득과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연대성과 위험 연대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도
 -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재정 원천은 소득기반 기여금(Inkomensafhankelijke Bijdrage, IAB), 명목 보험료(nominale premie), 일반 세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구성⁶²⁷⁾
- (소득 연대성) 소득 연대성은 소득이 높은 가구가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원칙
 - (소득기반 기여금 비율의 차이) 소득이 높은 가구는 절대적인 액수로 더 많은 기여금을 내지만, 소득 대비 비율로는 중위소득 가구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중위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9.7%를 건강보험료에 사용하며, 반면 상위 20% 소득 가구는 소득의 약 6.6%를 건강보험료에 사용
 - 기여금은 소득에 비례하지만, 상한선⁶²⁸⁾이 존재하여 특정 소득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고소득자들의 기여 비율이 제한됨
 - (소득 연대성의 문제) 2019년 기준 KI 지수⁶²⁹⁾가 -0.101로, 소득 연대성은 낮은

626)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Inkomens- en risicosolidariteit in de Zorgverzekeringswet," 2024. 10. 15., <https://www.cpb.nl/inkomens-en-risicosolidariteit-de-zorgverzekeringswet>, 검색일자: 2024. 10. 18.

627) 건강보험의 재정은 네 가지 주요 원천에서 마련된다. ① 소득기반 기여금(inkomensafhankelijke bijdrage, IAB):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약 50%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기여금에서 총당되며, 이 기여금은 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주를 통해 징수된다. ② 명목 보험료: 명목 보험료는 건강보험의 전체 재정에서 약 29%를 차지하며, 이 보험료는 매년 모든 국민에게 개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③ 일반 세금: 일반 세금은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약 15%를 차지하며,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에서 18세 이하 아동은 명목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의료비는 정부가 일반 세금으로 총당한다. ④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일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다. 현재 본인부담금은 385유로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165유로로 줄어든 예정이다.

628) 소득 상한선 2024년 7만 1,624유로, 2025년 7만 5,860유로

629) KI 지수는 Kakwani Index(카크와니 지수)의 약자로, 소득 연대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주로 건강보험 체계에서 소득별 기여의 불평등을 나타낸다. KI 지수는 -2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값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기여의 누진성(progressivity) 또는 역진성(regressivity)을 나타낸다. -0에 가까운 값: 소득에 비례한 기여, 즉 모든 소득 계층이 소득에 비례해서 동일한 비율로 기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양수(+) 값: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이 기여

수준으로 평가

- (위험 연대성) 위험 연대성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의료비 지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칙이며, 건강이 나쁜 사람의 의료비 지출이 과하지 않도록 보호
 - (건강 상태에 따른 의료비 부담) 상위 1%의 고비용 환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9만 유로의 의료비를 지출하지만, 그들이 건강보험에 부담하는 금액은 평균 6천유로에 불과함
 - 반면 의료비 지출이 적은 하위 25%의 가구는 건강보험에 평균적으로 5천유로를 부담
 - 이는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담된다는 것을 보여주어 위험 연대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 (향후 정책) 2025년 소득기반 기여금(IAB) 비율은 2024년(6.57%)보다 0.06%p 감소한 6.51%, 본인부담금은 385유로에서 165유로로 감소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소득 연대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위험 연대성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짐

표 3-Ⅶ-10 기본 모델과 정책 변경에 대한 소득 및 위험 연대성 변화

	소득 연대성	위험 연대성		
		모든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기본 모델	-0.101	0.953	1.046	1.033
정책 변경				
소득기반 기여금(IAB) 조정	-0.084	0.942	1.055	1.041
본인부담금 385유로→165유로로 감소	-0.098	0.951	1.064	1.049

자료: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Inkomens- en risicosolidariteit in de Zorgverzekeringswet," 2024. 10. 15.

하는 누진적인 재정 구조를 나타낸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비율로 부담한다. -음수(-) 값: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역진적인 재정 구조를 의미한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기여하는 상황이다.

-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부,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예산 삭감 발표(2024. 11. 11.)⁶³⁰⁾
 - 레이네트 클레버(Reinette Klever) 대외무역개발부 장관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의 중점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시민단체(NGO)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계획을 하원에 제출
 - 정부는 2026~2030년 5년 동안 ODA 예산을 약 10억유로 삭감할 예정
 - 현행 14억유로 규모인 시민단체(NGO)에 대한 보조금 체계는 2025년에 만료되고,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로 대체됨
 - 2026~2030년 동안의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는 약 3억 9천만유로~5억 6,500만유로의 예산이 시민단체(NGO)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임
 - 레이네트 클레버(Reinette Klever)은 “2025년 예산안대로 정부는 개발원조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며 “나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첫 번째 결정은 NGO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NGO와의 협력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
 -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NGO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하는 대신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다음 영역의 프로그램에 계속 사용
 - 개발도상국의 의료, 에이즈 퇴치, 공정한 무역 촉진, 취약계층 구성원의 인권, 여성 기업가정신 고취
 - 네덜란드에는 민간에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 기부금을 장려
 - 정부는 NGO가 정부 자금을 덜 의존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NG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구 사항을 도입할 계획
 - 앞으로는 NGO 전체 수입의 최소 50%가 민간 기부 등 자체 수입이 되어야 할 것임

630) 네덜란드 정부, “First development budget cuts announced: overhaul of grants for NGOs,” 2024. 11. 11.,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11/11/first-development-budget-cuts-announced-overhaul-of-grants-for-ngos>, 검색일자: 2024. 11. 11.

- 네덜란드 국무부, 교도소에 드론 탐지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지원 조치 발표(2024. 11. 14.)⁶³¹⁾
 - 국무부는 수감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범죄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600만유로를 추가로 할당하는 조치를 발표
 - 이 조치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투자하는 3억유로 기금의 일부
 - 소수의 위험한 수감자 집단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외부 세계에서 범죄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하며, 그들은 때때로 밀반입된 전화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활동
 -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 자금은 교도소에서 전화 및 마약과 같은 기타 밀반입품을 퇴치하고 교도소의 드론 탐지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될 것임
 - 이 자금은 드론이 교도소에 밀반입품을 운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임
 - 이 기금은 구금 상태에서 범죄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고위험 수감자를 수용하는 집중 감독 부서를 지원할 것임
 - 또한 이 고위험 수감자 집단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임
 - 세부 실행 계획은 2025년 봄에 하원에 제출될 예정

631) 네덜란드 정부, "Multi-million boost to continue developing drone detection in prisons," 2024. 11. 1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11/14/multi-million-boost-to-continue-developing-drone-detection-in-prisons>, 검색일자: 2024. 11. 14.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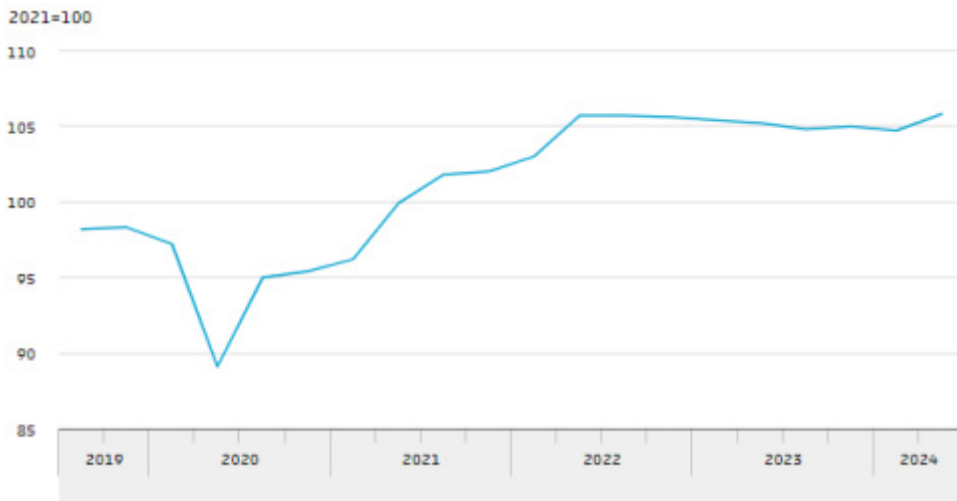
가. 경제 통계

1) 경제성장률

■ 네덜란드 통계청, 2024년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4. 8. 14.)⁶³²⁾

-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계절조정)은 전 분기 대비 1.0%로 증가했으며, 주로 수출과 고정자산 투자, 정부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
 - 2분기 수출은 호조세로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고, 수입은 0.4% 증가하여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임
 - 2분기 정부는 의료, 공공행정, 난민 수용에 지출을 확대하여 정부소비는 1.0% 증가
 - 고정자산 투자도 0.4% 증가하였으며, 특히 운송수단, 주택, 기계에 대한 투자가 증가

그림 3-Ⅶ-5 네덜란드 분기별 실질 GDP 추이(2019Q1~2024Q2)



주: 계절 조정된 실질 GDP 수치이며, 2021년 GDP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여 계산됨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Economie groeit in tweede kwartaal 2024 met 1 procent,” 2024. 8. 14.

632) 네덜란드 통계청, “Economie groeit in tweede kwartaal 2024 met 1 procent,” 2024. 8. 14., <https://www.cbs.nl/nl-nl/nieuws/2024/33/economie-groeit-in-tweede-kwartaal-2024-met-1-procent>, 검색일자: 2024. 8. 21.

표 3-VII-11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 부문별 지출

(단위: 전 분기 대비 % 변화)

구분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	-0.3	1
상품 및 서비스 수출	-1.4	1.3
상품 및 서비스 수입	-0.6	0.4
정부소비	0	1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0.8	0.4
가계소비	0.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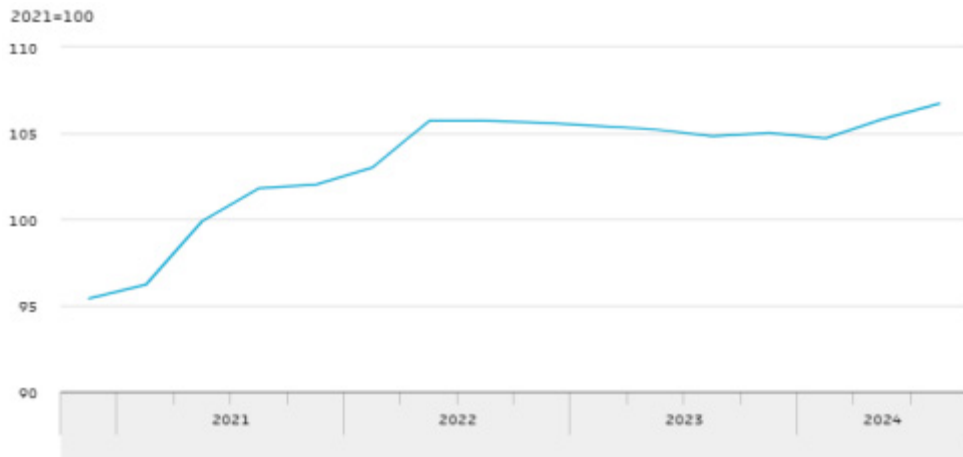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Economie groeit in tweede kwartaal 2024 met 1 procent," 2024. 8. 14.

■ 네덜란드 통계청, 2024년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4. 11. 14.)⁶³³⁾

- 2024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계절조정)은 전 분기 대비 0.8%로 증가했으며, 주로 가계소비와 정부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
 - 3분기 가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주로 의류, 가정용품 및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증가
 - 정부는 의료, 공공행정 분야에 지출을 확대하여 정부소비도 0.8% 증가
 - 고정자산 투자는 0.7%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택,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증가
 - 수출은 0.4% 증가하고, 수입은 수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0.6%를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 무역수지는 1.0% 감소

633) 네덜란드 통계청, "Economie groeit in derde kwartaal 2024 met 0,8 procent," 2024. 11. 14., <https://www.cbs.nl/nl-nl/nieuws/2024/46/economie-groeit-in-derde-kwartaal-2024-met-0-8-procent>, 검색일자: 2024. 11. 14.

그림 3-Ⅶ-6 네덜란드 분기별 실질 GDP 추이(2019Q1~2024Q3)



주: 계절 조정된 실질 GDP 수치이며, 2021년 GDP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여 계산됨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Economie groeit in derde kwartaal 2024 met 0,8 procent," 2024. 11. 14.

표 3-Ⅶ-12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 부문별 지출

(단위: 전 분기 대비 % 변화)

구분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	1.1	0.8
상품 및 서비스 수출	1.7	0.4
상품 및 서비스 수입	1.1	0.6
정부소비	1.1	0.8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0.8	0.7
가계소비	-0.8	0.8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Economie groeit in derde kwartaal 2024 met 0,8 procent," 2024. 11. 14.

2) 실업률

■ 네덜란드 통계청, 2024년도 2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4. 8. 14.)⁶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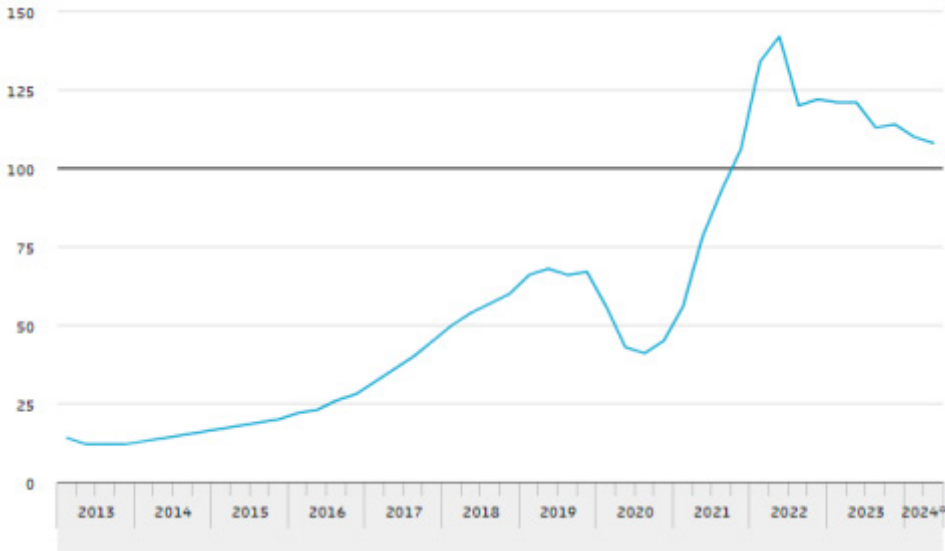
- 2024년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빈 일자리 수가 1만명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3천명 소폭 감소(실업률은 3.6%)하여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은 다소 완화
 - 그러나 실업자 100명당 빈 일자리는 108개(2024년 1분기 110개)로 나타나 여전히

634) 네덜란드 통계청, "Arbeidsmarkt in eerste kwartaal iets minder krap," 2024. 8. 14., <https://www.cbs.nl/nl-nl/nieuws/2024/33/minder-vacatures-meer-banen-in-tweede-kwartaal-van-2024>, 검색일자: 2024. 8. 20.

노동시장 긴장도는 높은 상태

- 2024년 2분기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2만 6천명)와 자영업자(+1만 4천명)는 전 분기 대비 증가하고 임시직 근로자(-2만 5천명)는 전 분기 대비 감소

그림 3-VII-7 네덜란드 실업자당 빈 일자리 개수 추이(2013Q1~2024Q2)



주: 실업자 100명당 일자리 개수를 나타냄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Arbeidsmarkt in eerste kwartaal iets minder krap" 2024. 8. 14.

■ 네덜란드 통계청, 2024년도 3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4. 11. 14.)⁶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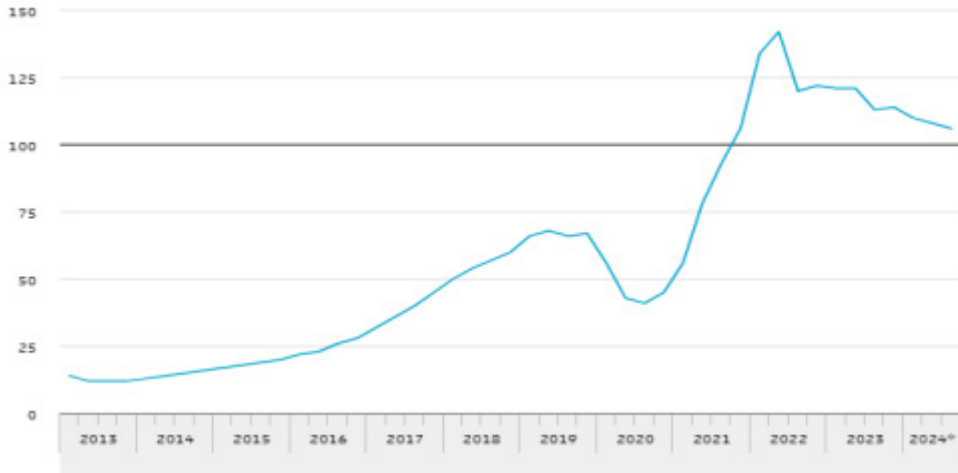
- 2024년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실업자가 4천명 증가하였으나 빈 일자리 수가 5천개로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은 소폭 감소
 - 실업자 100명당 빈 일자리는 106개(2024년 2분기 108개)로 나타나 여전히 노동시장 긴장도는 높은 상태
 - 2024년 1분기 실업률은 3.7%, 노동시장 참가율은 75.9%로 나타남(2024년 2분기 실업률 3.6%, 노동시장 참가율 76.1%)
 - 2024년 1분기부터 청년실업이 증가하여 2024년 3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8.6%에서

635) 네덜란드 통계청, "Arbeidsmarkt iets minder krap in derde kwartaal van 2024," 2024. 11. 14., <https://www.cbs.nl/nl-nl/nieuws/2024/46/arbeidsmarkt-iets-minder-krap-in-derde-kwartaal-van-2024>, 검색일자: 2024. 11. 14.

8.8%로 증가

- 1년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장기실업자 수가 2024년 3분기에 6만 1천명에서 6만 8천명으로 증가

그림 3-Ⅶ-8 네덜란드 실업자당 빈 일자리 개수 추이(2013Q1~2024Q3)



주: 실업자 100명당 일자리 개수를 나타냄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Arbeidsmarkt iets minder krap in derde kwartaal van," 2024. 11. 14.

나. 기타 통계

■ 네덜란드 통계청, 소득불평등 비교 통계 발표(2024. 7. 3.)⁶³⁶⁾⁶³⁷⁾

※ 네덜란드 통계청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득불평등 비교 통계 잠정치, 가을에 전년도 최종 수치와 전년도 잠정 수치를 정례적으로 발표

- 2022년 네덜란드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에 따른 소득불평등은 0.285였으며, 부의 불평등은 0.711로 나타나 소득격차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로 표현되며, 0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완전평등, 1은 한 가구만 소득이 있고 나머지 가구는 소득이 없는 완전불평등을 의미

- 1980년대 후반 심각한 경기침체 이후 임금 상승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 최저임금 및

636) 네덜란드 통계청, "Inkomensongelijkheid in Nederland ruim onder het EU-gemiddelde," 2024. 7. 3., <http://www.cbs.nl/nl-nl/nieuws/2024/27/inkomensongelijkheid-in-nederland-ruim-onder-het-eu-gemiddelde>, 검색일자: 2024.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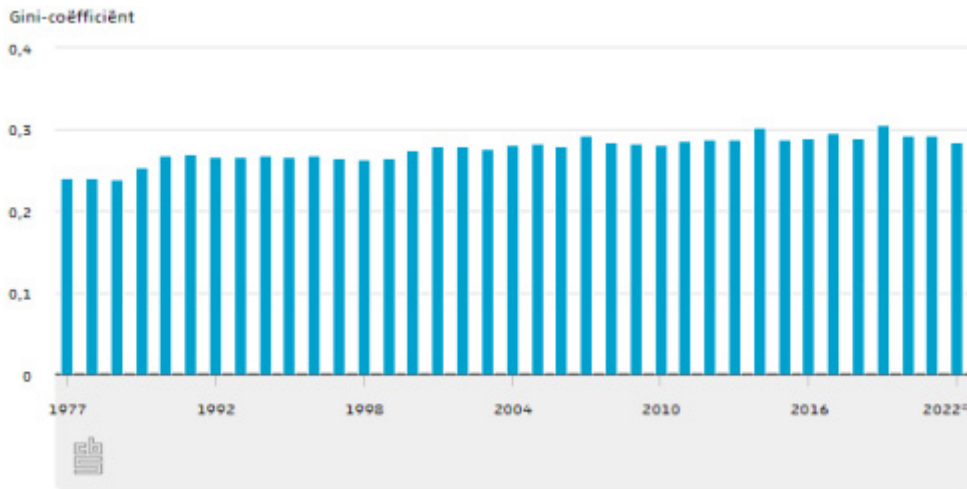
637) 2022년 수치는 잠정치이며, 2022년 최종 수치와 2023년 잠정 수치는 2024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

각종 복지혜택 동결 등으로 소득불평등은 증가했으며, 1990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소득불평등은 거의 변하지 않고 안정적

- 2014~2021년 소득불평등은 평균적으로 0.290을 넘었고 최고치는 0.3을 상회하여 해당 기간의 불평등이 2022년(0.285)보다 약간 높았음
- 2022년에 소득불평등이 소폭 감소한 것은 저소득 가구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보조금(연간 1,300유로) 지급 대책에 기인
- 2022년 네덜란드 가계의 총자산중 최저소득층 보유 비중은 4%, 최고소득층 보유 비중은 33%로 최고소득 집단이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
-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구 간 부의 불평등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경제위기 당시 주택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결과⁶³⁸⁾
- 2015년부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의 불평등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평균 소득이 높은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블로멘달(Bloemendaal), 라렌(Laren), 블라리쿰(Blaricum), 바센나르(Wassenaar))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저소득 고령자가 많은 지자체인 림뷔르흐(Limburg) 지역과 네덜란드 북부의 페켈라(Pekela), 베엔담(Veendam), 스타트스카날(Stadskanaa) 지자체에서 소득 불평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EU 27개 회원국의 소득불평등을 낮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네덜란드는 5위를 차지
 - 소득불평등이 가장 작은 국가는 슬로바키아(0.216), 가장 큰 국가는 불가리아(0.372)로 나타남

638) 2022년 1월 1일 기준 네덜란드 전체 가구의 총 자산은 2조 4,900억유로에 달하며, 이는 자산 3조 4,210억유로, 부채 9,310억유로로 구성됨. 2022년에는 10가구 중 약 6명이 자가 주택을 소유했으며, 자가 주택이 자산의 62%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산이어서 이들의 자산은 주택가격 변동에 민감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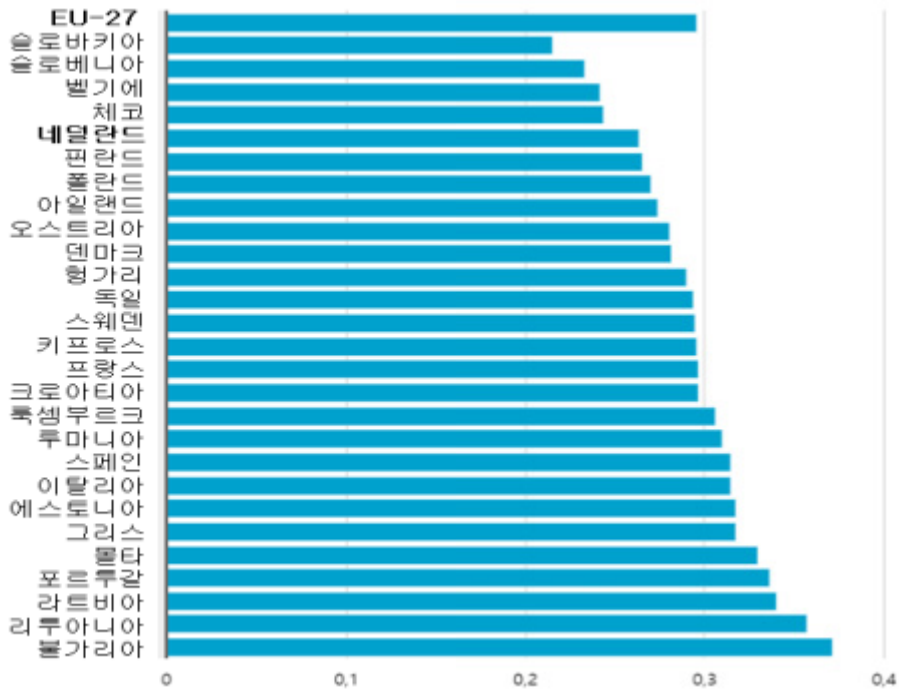
그림 3-Ⅶ-9 네덜란드의 소득불평등도



주: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Inkomensongelijkheid in Nederland ruim onder het EU-gemiddelde," 2024. 7. 3.

그림 3-Ⅶ-10 EU 회원국의 소득불평등도



주: 지니계수를 나타냄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Inkomensongelijkheid in Nederland ruim onder het EU-gemiddelde," 2024. 7. 3.

VIII 스웨덴⁶³⁹⁾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회계연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표 3-VI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4. 7. 12.	스웨덴 통계청, 2025년 물가기준액(Prisbasbeloppet) 발표
2024. 7. 18.	스웨덴 노동부·재무부·기후경제부,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
2024. 7. 25.	스웨덴 재무부·기후경제부,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폐차 프리미엄 제공
2024. 8. 8.	스웨덴 법무부, 스웨덴 이민 통계 결과 발표
2024. 8. 13.	스웨덴 노동부, 소득 기반 실업보험에 대한 설명
2024. 8. 21.	스웨덴 재무부, 스웨덴 경제 현황 및 2025년 예산 계획 발표
2024. 8. 29.	스웨덴 통계청,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4. 9. 9.	스웨덴 정부 및 국방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46억코로나 규모의 제17차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
2024. 9. 13.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2055년까지 스웨덴 장기 경제 전망(Långsiktigt scenario för svensk ekonomi till 2055)을 발표
2024. 9. 19.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예산안 발표
2024. 9. 25.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금리는 3.25%로 인하
2024. 9. 27.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스웨덴 경제 보고서를 발표
2024. 10. 9.	스웨덴 외교부, 레바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8,350만코로나 증액 발표
2024. 11. 7.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경제활동 지원 및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금리를 2.75%로 인하
2024. 11. 7.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중앙정부 채무관리 지침 발표
2024. 11. 15.	스웨덴 재무부, 흑자 목표에서 균형 목표로 전환(Från överskottsmål till balansmål) 보고서를 발표
2024. 11. 15.	스웨덴 국방부, 항공 방어 강화에 50억코로나 이상 투자
2024. 11. 15.	스웨덴 외교부, COP29 기후 재정 패키지 발표
2024. 11. 18.	스웨덴 외교부, 다자간 투자기금IV(Multilateral Investment Fund IV, MIF IV)에 기여 결정
2024. 11. 29.	스웨덴 통계청,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4. 12. 6.	스웨덴 국방부, 250억 코로나 규모의 전투차량 공동 조달 계약 체결

63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지혜 선임연구원(jihye0105@kipf.re.kr), 박신아 선임연구원(sinapark@kipf.re.kr)

일자	주요 내용
2024. 12. 6.	스웨덴 외교부, 세계은행 국제개발협력기금(IDA)에 82억코로나 기여 발표
2024. 12. 13.	스웨덴 외교부,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위기대응기금(SPUR)에 1억 2,000만코로나 추가 기여 발표
2024. 12. 14.	스웨덴 외교부, 아시아개발기금(ADF)에 2억 5,800만코로나 기여 발표
2024. 12. 14.	스웨덴 외교부, 우크라이나 'Grain from Ukraine'에 1억 1,000만코로나 추가 지원 발표
2024. 12. 18.	스웨덴 재무부, 스웨덴 경제 전망 발표
2024. 12. 19.	스웨덴 통계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2.50%로 인하

자료: 저자 작성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및 추경

- 스웨덴 재무부, 스웨덴 경제 현황 및 2025년 예산 계획 발표(2024. 8. 21.)⁶⁴⁰⁾
 - (경제 현황)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목표치인 2.0%(CPIF 기준⁶⁴¹⁾)를 약간 밑도는 1.9%로 전망
 - 스웨덴 경제 성장은 지난 2년간 정체되었으며 2024년 2분기 GDP가 감소했지만, 2024년 말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25년과 2026년에는 민간 소비와 특히 주택 투자 증가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노동 시장은 2023년부터 실업률이 증가하고, 2024년까지 낮은 노동 수요를 유지하겠으나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6월 경제 전망의 전반적인 전망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스웨덴 경제는

640) 스웨덴 재무부, "Lågkonjunktur i svensk ekonomi, men ljusare framtidsutsikter," 2024. 8. 22.,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8/lagkonjunktur-i-svensk-ekonomi-men-ljusare-framtidsutsikter/>, 검색일자: 2024. 8. 23.

641) 스웨덴 통계청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계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Riksbank)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사용. CPI와 CPIF의 차이점은 CPIF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이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 또한 에너지요금을 제외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XE)도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자주 사용(『재정동향 2024년 1월호』 참고)

아직 침체기에 있으나 앞으로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금융 시장의 혼란, 해외 경제 및 지정학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존재

- (2025년 예산) 2025년 스웨덴 개혁 예산에 약 600억크로나가 투입될 계획
 - 더욱 부유하고 안전한 스웨덴을 건설하는데 집중하여 ① 가계 구매력 및 노동 우선 원칙⁶⁴²을 회복하고, ② 인프라·연구 및 교육에 대하여 투자하며, ③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에 투자
 -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부 장관은 “스웨덴 경제는 현재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스웨덴을 더 강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조치에 초점을 맞춰 2025년 개혁 예산에 약 600억크로나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언급

표 3-VIII-2 2023~2027 스웨덴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연간 변화율, %)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4. 6. 24. 기준	GDP	-0.2	1.4	2.4	3.1	2.2
	CPI	8.5	2.8	0.9	1.7	2.1
	CPIF	6.0	1.9	1.7	2.0	2.0
	민간소비	-2.3	1.0	2.6	3.8	3.2
	실업률(15~74세 노동력)	7.7	8.4	8.3	7.8	7.6
	고용률(15~74세 노동력)	69.4	69.1	69.4	69.8	70.0
	정책 금리	3.46	3.73	2.70	2.25	2.25
2024. 8. 22. 기준	GDP	-0.2	0.8	2.5	3.2	2.4
	CPI	8.5	2.8	0.9	1.4	2.1
	CPIF	6.0	1.9	1.7	2.0	2.0
	민간소비	-2.3	0.3	2.9	4.1	3.1
	실업률(15~74세 노동력)	7.7	8.3	8.3	7.9	7.6
	고용률(15~74세 노동력)	69.4	69.3	69.6	69.9	70.2
	정책 금리	3.46	3.66	2.57	2.00	2.00

자료: 스웨덴 재무부, “Key indicators forecast 22 August 2024,” 2024. 8. 22.,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c0c47d4b1a534b1bb574c73530a096f8/key-indicators-forecast-22-august-2024.pdf>, 검색일자: 2024. 8. 23.

642)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2024년 4월호』 “스웨덴 재무부, 2024년 춘계재정정책법안 발표(2024. 4. 15.)” 참고

■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예산안 발표(2024. 9. 19.)⁶⁴³⁾

- (경제성장률)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2024년 0.8%, 2025년 2.5%로 전망
 - 2023년부터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수요가 둔화된 상황
 - 2024년 말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물가 상승률 하락, 금리인상 속도의 완화, 실질 임금 상승이 향후 가계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수출입) 수출 증가율은 2025년 2.8%, 2026년 3.8%로 예상되고, 수입 증가율은 2025년 2.8%로 수출 증가율과 동일하고 2026년에는 4.0%로 예상
 - 스웨덴의 서비스 수출⁶⁴⁴⁾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2025년 스웨덴의 수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수입은 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으로 인해 2023년 감소했고 2024년에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 내수 증가로 인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노동시장) 실업률은 낮은 노동 수요로 인해 2025년까지 8.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은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할 전망
 - 실업률은 2024년 8.3%, 2025년 8.3%, 2026년 3.9%로 전망
- (물가) 에너지 가격 하락⁶⁴⁵⁾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 및 2025년 물가상승률은 스웨덴 중앙은행 목표치인 2.0%(CPIF 기준⁶⁴⁶⁾)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스웨덴의 2024년 고정금리 소비자 물가지수(CPIF)는 1.9%, 2025년 1.7%로 예상
- (총채무) 2024년과 2025년 일반정부 기준 총채무는 GDP 대비 33.0%로 전망
- (위험요인) 지정학적 긴장,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잔존 효과, 높은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영향이 상존

643) 스웨덴 정부, 2025년 예산안 "Budgetpropositionen för 2025," 2024. 9. 19.,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4/09/prop.-2024251>, 검색일자: 2024. 9. 19.

644) 스웨덴의 서비스 수출은 스웨덴 전체 수출의 31%를 차지하며, GDP의 17%에 해당(2023년 기준), 서비스 수출의 품목은 비즈니스 서비스(주로 연구 개발 서비스), 통신,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 운동 서비스 등이 해당

645) 2022년 겨울 이후 전기요금 하락, 연료가격도 세금 감면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 완화에 힘입어 하락

646) 스웨덴 통계청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계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Riksbank)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사용. CPI와 CPIF의 차이점은 CPIF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이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 또한 에너지요금을 제외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XE)도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자주 사용(『재정동향 2024년 1월호』 참고)

표 3-VIII-3 주요 경제 변수 전망

(단위: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GDP 성장률	-0.2	-0.2	0.8	1.4	2.5	2.4	3.2	3.1	2.4	2.2
가계소비 증가율	-2.3	-2.3	0.3	1.0	2.9	2.6	4.1	3.8	3.1	3.2
정부소비 증가율	1.0	1.0	0.7	0.7	1.3	0.1	0.8	0.4	0.0	-0.5
수출 증가율	3.3	3.3	2.2	2.2	2.8	2.8	3.8	3.8	3.7	3.7
수입 증가율	-1.0	-1.0	0.4	0.4	2.8	2.0	4.0	3.7	3.7	3.8
소비자 물가지수(CPI)	8.5	8.5	2.8	2.8	0.9	0.9	1.4	1.7	2.1	2.1
고정금리 소비자 물가지수(CPIF) ¹⁾	6.0	6.0	1.9	1.9	1.7	1.7	2.0	2.0	2.0	2.0
실업률(15~74세)	7.7	7.7	8.3	8.4	8.3	8.3	7.9	7.8	7.6	7.6
일반정부 순차입금(GDP 대비 %)	-0.6	-0.6	-1.7	-1.4	-1.3	-0.1	-0.6	0.7	0.4	1.6
일반정부 구조적재정수지 (잠재 GDP 대비 %)	0.2	0.1	-0.2	-0.2	-0.4	0.7	-0.1	1.1	0.6	1.8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 %)	31.7	31.7	33.0	33.0	33.0	31.9	32.5	30.2	31.4	28.0

주: 1. 이탤릭체는 2024년 6월 전망

2. 일반정부 순차입 및 일반정부 구조적재정수지와 총부채는 2023년 08월 05일 및 2023년 8월 10일까지의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함.

1) 고정금리를 적용한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 스웨덴 재무부 홈페이지,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forecast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ministry-of-finance-economic-forecasts/>의 Key indicators forecast 19 September 202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24. 9. 23.

◦ (재정)⁶⁴⁷⁾ 2024년 말부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재정 상황 또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세입) 2025년 세입은 1조 4,020억크로나로 GDP 대비 41.0% 수준으로 전망

• 2024년 세입 증가율은 2.6%로 예상되며, 2000~2022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정부의 근로소득세 공제 등 세금 감면 정책에 따라 2025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0.5%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1980년 이후 최저 세율이 될 것으로 예상

- (지출) 2025년 정부 지출은 1조 4,310억크로나, 총 지출 상한(Takbegränsade utgifter)⁶⁴⁸⁾은 2024년 대비 800억크로나 증가한 1조 8,270억크로나에 이를 것으로

647) 스웨덴의 예산안은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648) 스웨덴 예산편성은 top-down 방식으로 총 지출 상한(Takbegränsade utgifter) → 분야별 지출 한도(Utgiftsramar) → 세부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결정함. 총 지출 상한은 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재정준칙(재정 흑자 GDP 대비 0.3%)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3개년 총 지출 상한 도출, 분야별 지출한도는 27개 지출 부문 각각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지출 한도, Utgiftsramar) 제시. 27개 지출 부문에 대한 전체 재정지원 규모와 노령연금 제도 등을 포함한 총 지출이 총 지출 상한이 되며, 이 차액이 예산 마진이 됨(유보금 비축을 통해 의회가 승인한 총 지출 상한을 수정하지

추산

- (재정수지) 2024년 중앙 정부 예산은 930억크로나 적자, 2025년 55억크로나의 적자가 예상됨
- (노령연금제도 재정)⁶⁴⁹⁾ 2025년 노령연금제도(älderspensionssystemet) 재정은 연평균 GDP의 0.5%에 해당하는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기여금만 고려하는 경우 예측 기간 동안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자 소득과 AP 펀드 자산에 대한 직접 수익으로 인해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표 3-Ⅷ-4 주요 재정 변수 전망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입	1,243	1,303	1,374	1,408	1,462
조세수입	1,318	1,363	1,402	1,469	1,542
정부사업수입	56	45	48	49	46
자산매각수입	0	5	5	5	5
융자회수	0	0	1	1	1
귀속소득	20	22	24	24	23
EU 보조금	18	15	49	18	13
조세시스템 관련 상계	-170	-146	-154	-156	-167
세입계정에 대변항목으로 분류된 지출	0	0	0	0	0
지출	1,246	1,384	1,431	1,459	1,450
지출한도 ²⁾ (국가채무 이자 비용 제외)	1,214	1,337	1,402	1,435	1,431
국가채무 이자 비용	32	47	29	23	19
순융자	-11	12	-3	3	4
현금조정	-10	0	0	-2	0
중앙정부 재정수지	19	-93	-55	-52	7

주: 스웨덴 중앙정부 기준 재정 전망

1) 수입 타입 1000~8000의 합계

2) 27개 분야별 지출 중 국가채무 이자비용인 26번째 분야를 제외한 금액

자료: 스웨덴 재무부 홈페이지, "Statens budget i siffror,"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statens-budget/statens-budget-i-siffror/>, 검색일자: 2024. 9. 23.,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않기 위한 조치). 따라서 분야별지출한도(Utgiftsramar) < 실제 총 지출 상한(Takbegränsade utgifter) < 예산마진(일종의 예비비)을 포함한 총 지출 상한(Utgiftstak)이 t년도에 사용 가능한 재정 총액이 됨.

649) 노령연금제도 재정은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출한도는 적용됨.

- (예산 기초) '더욱 번영하고 안전한 스웨덴 건설'을 목표로 ① 가계 구매력 강화 ② 노동시장 회복 ③ 경제성장 촉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스웨덴 예산을 개혁
 - (2025년 예산 중점 영역) 가계 구매력 강화 및 노동 우선 원칙 제고,⁶⁵⁰⁾ 교육과 저축에 대한 보상, 성장과 생산성 향상, 효과적인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범죄 퇴치 및 치안 강화 등을 포함한 약 600억크로나 규모⁶⁵¹⁾의 개혁 예산을 제시
 - (가계 구매력 강화 및 노동 우선 원칙) 근로소득세 공제 강화 및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세금 감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금 감면, 취약계층 가계 지원, 복직 지원 등
 - (교육과 저축에 대한 보상) 연금수급권자의 소득세 공제, 투자 저축계좌와 보험 기금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에 대한 세금 공제 단계적 폐지 등
 - (성장과 생산성 향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에너지 연구 지원 강화, 전력공급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2026~2037년 교통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재정 프레임워크, 농업, 입업 및 양식업을 위한 경유 세금 감면 등
 - (효과적인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풍력발전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프리미엄(EU 사회기후기금의 자금 조달),⁶⁵²⁾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존 등
 - (범죄 퇴치 및 치안 강화) 스웨덴 경찰청에 대한 기금 증가, 스웨덴 교도소 및 보호관찰 서비스 확대, 민방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 (신뢰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 학교 추가 인력에 대한 정부 보조금, 건강 및 의료 서비스 부문 보조금, 학습 보조금 인상, 국가 의료 위탁 센터, 영양병상수 증가와 정밀의료에 대한 특별 투자, 정신과 치료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총지출) 2025년 총 지출 상한(Takbegränsade utgifter)은 2024년 대비 800억크로나 증가한 1조 8,270억크로나로 예상

650) 스웨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64세 장기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취업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또한 실업률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문 역량을 갖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동주들 사이의 부정적 인식은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함. 2025년 말에는 장기 실업자가 15만명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취업 기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함.(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 노동시장 동향」, 2023. 12. 19., 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7989/view.do?seq=1346595&page=1, 검색일자: 2024. 9. 23.)

651)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 물자 지원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약 840억크로나 규모

652) 스웨덴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높은 에너지 및 운송 비용에 영향을 받는 취약가구,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차 프리미엄 8억크로나를 제공. 그중 75%는 EU 사회기후기금(SCF)에서 조달되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도입 가능(스웨덴 재무부 보도자료, 2024. 9. 9.,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9/satsningar-pa-elektrifiering-och-gron-omstallning/>, 검색일자: 2024. 9. 25.)

- 2025년 GDP 대비 총지출 상한 비율은 27.8%로 2024년 대비 0.6%p 증가할 전망

표 3-VIII-5 2025년도 스웨덴 예산안 총지출 상한(takbegränsade utgifter)

(단위: 십억크로나,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의회가 승인한 총지출 상한 ¹⁾	1,665	1,747	1,827	1,866	1,935
정부가 제안한 총지출 상한	-	-	1,856	1,894	1,938
GDP 대비 총지출 상한 비율(%)	26.8	27.2	27.8	26.9	26.4
잠재 GDP 대비 총지출 상한 비율(%)	26.8	26.8	27.3	26.8	26.3
예산 마진(budgeting margin)	90	44	71	66	100
총지출 상한 대비 예산 마진(%)	5.7	2.6	4.0	3.6	5.4
GDP 대비 예산 마진 비율(%)	1.5	0.7	1.1	0.9	1.4
GDP 대비 재정수지(%)	-0.6	-1.7	-1.3	-0.6	0.4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0.2	-0.2	-0.4	-0.1	0.6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비율(%)	48.2	49.1	48.6	47.8	46.9

주: 1) 2024년 봄 춘계재정정책법안 총지출 상한

자료: 스웨덴 정부, "Budgetpropositionen för 2025," <Tabell 4.4> Utgiftstak och takbegränsade utgifter, p. 69, 2024. 9. 19.

- (분야별 지출) 2025년 27개 지출 영역에 대한 분야별 지출한도(Utgiftsramar)는 2024년 대비 950억크로나 증가한 1조 4,420억크로나
 - 2024년 승인된 총 지출 상한 1조 3,470억크로나
 - 물가 및 임금 재조정으로 인해 2024년 대비 160억크로나 증가
 - 기 결정되었거나 현재 제안 및 발표된 조치로 인해 530억크로나 증가
 - 거시경제 발전 등에 따른 수당 단가 조정으로 2025년 지출한도 100억크로나 증가
 - 지원 규모 변화로 20억크로나 증가 추정
 - EU에 대한 부담금 조정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140억크로나 증가
- (2025년 노령연금 제도 지출) 2024년 예산보다 170억크로나 증가한 3,830억크로나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평균 연금 인상으로 인해 2025~2027년 연금 지급액이 연평균 3.6%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

표 3-VIII-6 2025년 스웨덴 예산안 분야별 지출한도

(단위: 백만크로나)

구분	실적		예산	전망		
	2023년	2024년 ¹⁾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 거버넌스	18,304	19,776	19,657	20,131	20,476	20,783
2. 경제 및 금융행정	18,919	20,993	20,825	21,734	21,921	22,271
3. 국세 및 관세, 세무행정	13,438	17,311	17,275	14,812	15,201	15,493
4. 사법	69,772	78,775	80,018	86,792	93,463	100,485
5. 국제협력	2,179	2,430	2,437	2,278	2,285	2,292
6. 국방 및 국가비상사태 대비	95,987	132,802	129,119	169,680	178,277	166,800
7. 국제개발협력	46,511	50,015	50,276	44,500	43,413	43,819
8. 이민정책	11,999	13,753	12,348	11,938	13,216	12,376
9. 보건·의료·복지서비스	108,833	118,452	116,847	120,255	116,371	113,077
10.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사회보장	110,618	125,751	120,955	123,059	124,663	127,585
11. 노령연금	56,427	64,253	63,707	62,890	58,835	57,710
12. 가족 및 자녀양육	101,665	107,335	103,791	104,531	105,672	106,706
13. 양성평등 및 신규 이민자 정착 지원	4,490	4,959	4,906	6,266	4,426	2,747
14. 노동시장 및 근로	79,842	93,540	89,659	93,539	92,828	91,048
15. 장학지원	25,335	30,604	28,504	33,793	36,267	37,393
16. 교육 및 대학연구	92,967	100,121	98,011	103,845	102,288	103,067
17. 문화·언론·종교·여가활동	16,691	16,670	16,614	16,862	16,613	16,410
18. 주택건설 공급 및 소비자정책	5,950	6,088	5,885	3,240	2,155	2,213
19. 지역개발	3,706	4,006	3,159	4,294	4,712	3,773
20. 환경 및 자연보호	17,880	19,623	17,843	16,439	17,554	14,481
21. 에너지	4,426	5,674	5,310	6,631	6,171	7,486
22. 교통 및 통신	80,407	84,943	82,758	94,447	105,719	109,866
23. 농림·축산·식품	18,602	24,425	21,472	21,698	20,830	21,253
24. 산업 및 무역	7,640	9,614	10,740	8,315	8,221	8,249
25. 지방정부 보조금	157,904	174,380	174,305	173,107	173,822	170,834
26. 국가채무 이자비용	31,626	48,322	46,913	28,755	23,355	18,955
27. EU부담금	43,585	40,760	40,334	47,762	54,794	58,173
분야별 지출한도	1,245,704	1,415,376	1,383,670	1,441,596	1,463,548	1,455,346

주: 1) 2024년 추가경정예산 포함(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 물자 및 경제적 지원, 국립은행 자본금 지원 등)

자료: 스웨덴 정부, "Budgetpropositionen för 2025," (Tabell 6.3) Utgiftsramar 2024-2027, p. 99, 2024. 9. 19.

나. 결산

- 관련 내용 없음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경제 및 재정 전망

-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⁶⁵³ 2055년까지 스웨덴 장기 경제 전망(Långsiktigt scenario för svensk ekonomi till 2055)을 발표(2024. 9. 13.)⁶⁵⁴
 - (연구 목적) 보고서는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장기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
 - (연구 주기) 2024년부터 격년 발표
 - (연구 가정) 보고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으며, 단기 및 중기는 2023년 12월에 발표된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의 예측 및 중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함
 - 2027년 이후부터는 경기 변동 요인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가정
 - 실업률은 자연 수준에 수렴한 상태로 가정
 - (연구 데이터) 스웨덴 통계청 국민계정(NR), 노동력 조사(AKU), 환경계정(MR), 인구전망 등의 자료를 사용
 - (연구 방법론) KAMEL 모형(인구통계와 노동시장 변수 분석), KAKA 모형(공공소비 추세에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 EMEC 모형(산업 간 상호작용과 일반 균형 효과 분석), KAVEL 도구(장기 경제 시나리오 제공)
 - (유의점) 보고서 내용은 ‘전망(prognos)’이 아니며, 해석 시 신중함이 요구됨
 - (기본 시나리오 거시경제변수 전망) 노동시간 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여

653) 스웨덴 국립경제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는 1937년 설립, 재무부 산하의 정부기관, 스웨덴 경제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경제에 대한 분석·전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654)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Långsiktigt scenario för svensk ekonomi till 2055,” 2024. 9. 13., <https://www.konj.se/publikationer/specialstudier/specialstudier/2024-09-13-langsiktigt-scenario-for-svensk-ekonomi-till-2055.html>, 검색일자: 2024. 12. 11.

2024년부터 2055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7%로 예상

- (인구 구조) 80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35세 이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물가) 물가 상승률은 스웨덴 중앙은행 목표인 2% 수준으로 예상
 - (소비 및 투자) 가계 소비는 점차 회복하여 GDP 내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는 GDP 대비 약 26% 수준으로 안정적 유지가 예상
 - (재정) 현재의 재정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균형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지출⁶⁵⁵⁾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
 - (재정 지속 가능성) 재정 잉여 목표(GDP 대비 0.33%)를 유지함으로써, 2055년까지 순자산 및 마스트리히트 채무 비율은 각각 GDP 대비 3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높은 생산성을 가정한 시나리오1) 기본 시나리오보다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가정할 경우, 2055년까지 GDP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19%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표 3-VIII-7 높은 생산성을 가정한 시나리오1의 거시경제변수 변화

(단위: %)

거시경제 변수(고정가격 기준)	2030년	2040년	2055년
노동시간	+0.2	+0.7	+1.5
생산성	+2.8	+7.7	+17.3
가계 소비	+4.7	+13.5	+30.8
공공 소비	+0.0	+0.0	+0.0
투자	+3.6	+9.7	+20.9
수출	+3.3	+9.2	+19.8
수입	+3.5	+9.7	+21.0
GDP	+3.0	+8.5	+19.0

자료: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Långsiktigt scenario för svensk ekonomi till 2055," 2024. 9. 13., <https://www.konj.se/publikationer/specialstudier/specialstudier/2024-09-13-langiktigt-scenario-for-svensk-ekonomi-till-2055.html>의 Tabell 2, 검색일자: 2025. 1. 8.

- (강화된 기후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2)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시 2055년까지 GDP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0.4% 낮아질 것으로 예상

655) 재정지출은 현재의 규모와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이전지출의 경우 임금 인상률에 따라 증가, 공공소비의 경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조정, 투자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GDP 및 지방 소비 증가율에 맞춰서 조정

표 3-Ⅷ-8 높은 생산성을 가정한 시나리오1의 거시경제변수 변화

(단위: %)

거시경제 변수(고정가격 기준)	2030년	2040년	2055년
노동시간	-0.1	-0.1	-0.1
생산성	-0.1	-0.2	-0.3
가계 소비	-0.2	-0.9	-1.3
공공 소비	+0.0	+0.0	+0.0
투자	-0.1	-0.5	-0.7
수출	-0.6	+0.1	+1.3
수입	-0.4	-0.1	+0.9
GDP	-0.2	-0.4	-0.4

자료: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Långsiktigt scenario för svensk ekonomi till 2055,” 2024. 9. 13., <https://www.konj.se/publikationer/specialstudier/specialstudier/2024-09-13-langiktigt-scenario-for-svensk-ekonomi-till-2055.html>의 Tabell 2, 검색일자: 2025. 1. 8.

■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스웨덴 경제 보고서⁶⁵⁶)를 발표(2024. 9. 27.)⁶⁵⁷658)

- (경제성장률) 2024년 말부터 스웨덴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및 2025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0.7%, 1.8%로 전망됨
 - 2024년 경제성장률의 약화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응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선택한 결과
 - 2025년에는 정부와 민간의 건설, 인프라, 국방 부문 투자 확대 및 수출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출) 2025년 수출은 유럽연합 외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24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수출 증가율은 2024년 1.7%, 2025년 2.4%, 수입 증가율은 2024년 0.5%, 2025년 2.6%로 각각 전망되며, 이는 2025년 스웨덴 예산안 전망치 대비 다소 보수적인 수치임
- (노동시장) 2024년 4분기부터 경제성장이 고용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656) Swedish Economy Report, September 2024.

657)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IER), “Swedish Economy Report September 2024,” 2024. 9. 27., <https://www.konj.se/english/publications/swedish-economy-report/swedish-economy/2024-09-27-swedish-economy-report-september-2024.html>, 검색일자: 2024. 10. 21.

658)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는 거시경제 및 재정변수를 전망하는 스웨덴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연 4회(3월, 6월, 10월, 11월) 스웨덴 경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예상되나, 현재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도가 낮아 2024년 4분기 및 2025년 고용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이다⁶⁵⁹⁾

- 초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이 고용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가계 소비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서비스 부문에서도 고용 증가가 예상됨
- 실업률은 내년 말까지 서서히 하락하여 2025년 8.2%로 전망
- (가계소비) 실질임금 상승 기대와 금리인하로 가계소비는 점차 증가하여 2025년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및 2025년 가계소비 증가율은 각각 0.0%, 2.4%로 예상됨
- (물가)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하락하며, 2025년까지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가 2% 이하로 유지될 전망
 -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는 에너지, 일부 금속,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이 최고점에서 하락한 것에 기인함
 - 또한 스웨덴 코로나의 강제로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에 수입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금리) 스웨덴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계획을 반영해 2025년 정책금리는 1.75%로 전망
 - 현재 정책금리는 3.25%⁶⁶⁰⁾이고 인플레이션과 경제전망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2024년 11월 또는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됨
 - 2025년 상반기에도 추가 금리인하가 한두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⁶⁶¹⁾
- (재정) 일반정부 총채무는 GDP 대비 35%의 정부 채무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1,060억크로나의 재정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는 2024년 33%, 2025년 31.9%로 예상되며, GDP 대비 일반정부 순차입금은 2024년 -1.5%, 2025년 -0.6%로 전망
 - 2024년 일반정부 기준 순차입금 비중은 경기 침체와 스웨덴 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659) 기업의 기존 인력으로 일정 수준의 생산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률 증가는 제한적임을 의미

660) 스웨덴 중앙은행 발표(2024. 9. 25.)

661)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3,25 procent," 2024. 9. 25.,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sank-sanks-med-025-procentenheter-till-325-procent/>, 검색일자: 2024. 10. 23.

250억코로나 재정지원에 따른 영향이 반영

표 3-Ⅷ-9 스웨덴 경제보고서 및 2025년 스웨덴 예산안의 주요 경제 변수 전망치 비교

(단위: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GDP 성장률	-0.2	0.7	0.8	1.8	2.5	3.0	3.2	2.1	2.4
가계소비 증가율	-2.3	0.0	0.3	2.4	2.9	3.9	4.1	2.5	3.1
정부소비 증가율	1.0	1.2	0.7	1.4	1.3	1.3	0.8	1.2	0.0
수출 증가율	3.3	1.7	2.2	2.4	2.8	3.2	3.8	2.8	3.7
수입 증가율	-1.0	0.5	0.4	2.6	2.8	4.2	4.0	3.6	3.7
소비자 물가지수(CPI)	8.5	2.8	2.8	-0.3	0.9	1.5	1.4	2.5	2.1
고정금리 소비자 물가지수(CPIF) ¹⁾	6.0	1.8	1.9	1.4	1.7	1.8	2.0	2.0	2.0
실업률(15~74세)	7.7	8.3	8.3	8.2	8.3	7.8	7.9	7.4	7.6
일반정부 순차입금(GDP 대비 %)	-0.6	-1.5	-1.7	-0.6	-1.3	0.2	-0.6	0.4	0.4
일반정부 구조적재정수지 (잠재 GDP 대비 %)	0.2	-0.2	-0.2	0.7	-0.4	1.1	-0.1	1.8	0.6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 %)	31.7	33.0	33.0	31.9	33.0	30.2	32.5	28.0	31.4

주: 1.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IER) 스웨덴 경제보고서 2024년 9월 전망치와 2025년 스웨덴 예산안의 주요 경제변수 전망치(이탈릭체)를 비교

2. 2025년 스웨덴 예산안의 일반정부 순차입 및 일반정부 구조적재정수지와 총부채는 2023년 08월 05일 및 2023년 8월 10일까지의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함.

1) 고정금리를 적용한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 스웨덴 재무부 홈페이지,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forecast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ministry-of-finance-economic-forecasts/>의 'Key indicators of forecast 19 September 2024' 검색일자: 2024. 10. 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Swedish Economy Report September 2024," <https://www.konj.se/english/publications/swedish-economy-report/swedish-economy/2024-09-27-swedish-economy-report-september-2024.html>의 (Table A2, A6, A12, A18, A19), 검색일자: 2024. 10. 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스웨덴 재무부, 흑자 목표에서 균형 목표로 전환(Från överskottsmål till balansmål) 보고서를 발표(2024. 11. 15.)⁶⁶²⁾⁶⁶³⁾

◦ (배경) 스웨덴 공공재정은 GDP 대비 약 1/3% 흑자 목표(överskottsmål)를 기반으로

662) 스웨덴 재무부, "Från överskottsmål till balansmål,"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statens-offentliga-utredningar/2024/11/sou-202476/>, 검색일자: 2024. 11. 21.

663) 스웨덴 재정정책 프레임워크는 1990년대 초 경제위기 당시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됨. 이를 계기로 재정정책이 대대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예산규율 강화를 위해 예산 프로세스도 개편되었음. 또한 공공 부문의 재정 흑자 목표가 설정되고, 국가와 연금 시스템 지출에 다년간의 지출 상한제가 적용됨.

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과제 및 EU 재정준칙을 고려하여 균형 목표(balansmå)로 전환이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기존 재정정책 프레임워크의 기능은 유지하되, 목표 수준, 회계 기준에 맞는 용어 조정 등이 변경됨
 - (공공재정 목표 전환) 장기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7년부터 공공재정 목표를 기존 흑자 목표에서 균형 목표로 전환
 - (EU 재정준칙 기준과 정합성 강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EU 재정준칙 기준 이하로 관리하여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고 경제 불황 시 재정여력(Budgetutrymme)을 확보
 - GDP 대비 공공 채무 60% 이하,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산법 개정 예정
 - (목표범위 이탈시 보고 요구)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ellt sparande)가 GDP 대비 0.5%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명백한 목표 이탈로 간주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이 요구됨
 - (재정정책 평가 강화)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Finanspolitiska rådet)의 재정정책 평가 및 감독 역할을 확대
- (발효)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사항이 발효된 다음 의회 임기 중 재검토 예정

■ 스웨덴 재무부, 스웨덴 경제 전망 발표(2024. 12. 18.)⁶⁶⁴⁾

- (경제 전망) 스웨덴 경제는 장기 경기침체 상태에 있으나, 2025년 초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가계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 회복이 기대되며, 이는 이자 비용 감소와 실질 소득 증가에 기인
 - 주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 건설 및 투자 회복세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2026년 주택 투자가 증가가 경제성장률의 상승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664) 스웨덴 재무부, "Lågkonjunkturen dröjer sig kvar men ekonomisk återhämtning i sikte," 2024. 12. 1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lagkonjunkturen-drojer-sig-kvar-men-ekonomisk-aterhamtning-i-sikte/>, 검색일자: 2024. 12. 19.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5년 2.0%로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시장) 2024년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실업률이 상승했으나, 2025년 이후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

표 3-Ⅷ-10 2023~2027년 스웨덴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연간 변화율, %)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4. 12. 18. 발표 기준	GDP	-0.2	0.6	2.0	3.0	2.5
	CPI	8.5	2.8	0.4	1.6	2.1
	CPIF	6.0	1.9	2.0	1.8	2.0
	민간소비	-2.2	0.2	2.3	3.0	2.7
	실업률(15~74세 노동력)	7.7	8.4	8.4	8.1	7.6
	고용률(15~74세 노동력)	1.4	-0.5	0.3	1.1	1.1
	정책 금리	3.46	3.62	2.22	2.00	2.00
2024. 9. 발표기준	GDP	-0.2	0.8	2.5	3.2	2.4
	CPI	8.5	2.8	0.9	1.4	2.1
	CPIF	6.0	1.9	1.7	2.0	2.0
	민간소비	-2.3	0.3	2.9	4.1	3.1
	실업률(15~74세 노동력)	7.7	8.3	8.3	7.9	7.6
	고용률(15~74세 노동력)	1.4	-0.2	0.7	0.8	0.8
	정책 금리	3.46	3.66	2.57	2.00	2.00

자료: 스웨덴 재무부, "Nyckeltal-prognos-18-december-2024," 2024. 12. 18.,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statens-budget/prognoser/>, 검색일자: 2024. 12. 19.

나. 경제 및 재정 정책

■ 스웨덴 통계청, 2025년 물가기준액(Prisbasbeloppet) 발표(2024. 7. 12.)⁶⁶⁵⁾

- 현행 사회보험법(2010:110) 규정에 따라 물가기준액은 1998년 물가기준액의 기준이 되는 36,396을 사용하여, 매년 물가기준액이 적용되는 전년도의 6월의 물가 수준과 1997년 6월 물가 수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교 수치를 곱하여 계산

665) 스웨덴 통계청, "Price base amount for 2025," 2024. 7. 12.,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rices-and-consumption/consumer-price-index/consumer-price-index-cpi/peng/statistical-news/price-basic-amount-2025/>, 검색일자: 2024. 7. 25.

$$\text{물가기준액} = 36,396 \times \frac{\text{전년도 6월 물가 수준}}{\text{1997년 6월 물가 수준}}$$

- 정부는 스웨덴 통계청에 물가기준액을 산출하도록 의뢰하였고, 계산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짐
- (물가기준액 계산) 2025년 물가기준액은 5만 8,800크로나로, 2024년 물가기준액과 비교하여 1,500크로나 인상
 - 물가기준액은 사회의 물가 동향을 반영하며 다양한 재정 한도 및 상한선에 대한 참고 수치로,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에 사용되며, 기여금과 보상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고, 소득, 혜택 및 수수료를 계산할 때도 사용⁶⁶⁶⁾
 - 1997년 6월과 2024년 6월의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이하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257.38, 415.86(1980=100)으로 계산되었고, 비교 수치는 415.86/257.38으로 1.6157로 나타남
 - 물가기준액을 구하는 기준 숫자 36,396에 비교 수치 1.6157을 곱하고 백의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계산
- (인상된 물가기준액 계산) 2025년 인상된 물가기준액(förhöjda prisbasbeloppet)은 6만크로나로, 2024년과 비교하여 1,500크로나가 인상
 - 인상된 물가기준액은 연금 수령 가능 소득 계산 및 연금 포인트 적립에 사용
 - 인상된 물가기준액은 일반 물가기준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나 기준 숫자가 37,144라는 차이가 있음(37,144x1.6157=60,000, 백의 자리까지 반올림)

$$\text{인상된 물가기준액} = 37,144 \times \frac{\text{전년도 6월 물가 수준}}{\text{1997년 6월 물가 수준}}$$

- 물가기준액과 인상된 물가기준액은 통계청이 계산한 제안을 정부가 최종 결정

666) Fremia, "Rejäl höjning av prisbasbeloppet 2024," <https://www.fremia.se/nyhetsrum/nyheter/2023/prisbasbelopp-2024/>, 검색일자: 2024. 7. 26.

표 3-Ⅷ-11 2017~2025년 스웨덴 물가기준액 및 인상된 물가기준액

연도	물가기준액 (Prisbasbeloppet)	전년 대비 증가율 (%)	인상된 물가기준액 (förhöjda prisbasbeloppet)	전년 대비 증가율 (%)
2017	44,800	0.7	45,700	0.7
2018	45,500	1.6	46,500	1.8
2019	46,500	2.2	47,400	1.9
2020	47,300	1.7	48,300	1.9
2021	47,600	0.6	48,600	0.6
2022	48,300	1.5	49,300	1.4
2023	52,500	8.7	53,500	8.5
2024	57,300	9.1	58,500	9.3
2025	58,800	2.6	60,000	2.6

자료: 스웨덴 통계청, "Prisbasbeloppet (Basbeloppet). År 1960 - 2025,"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_PR__PR0101__PR0101E/Basbeloppet/, 검색일자: 2024. 7. 18.; "Förhöjt prisbasbelopp. År 1996 - 2025,"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_PR__PR0101__PR0101E/Basbelopp/, 검색일자: 2024. 7. 18.

■ 스웨덴 노동부·재무부·기후경제부,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2024. 7. 18.)⁶⁶⁷⁾

◦ (배경) 스웨덴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 단순화 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을 통하여 5,150만크로나를 투자

- 2024년 4월 10일, 정부 기자회견에 따른 지금까지의 규제 단순화 시행은 다음과 같음⁶⁶⁸⁾

- 규제 단순화를 위한 약 30개 기관에 업무 배정 및 보고 요건 강화
- 기업에 중요한 플랫폼인 Verksam.se의 강화
- 지방정부 행정부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
- 2024년 7월 1일부터 실물 영수증 보관 의무 폐지하여 연간 39억크로나 절감
-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업 수 감소
- 댄스허가(danstillståndet)⁶⁶⁹⁾ 폐지 및 호텔 허가 요건 폐지 추진 중

- 규제 단순화 정책은 비즈니스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더 많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667) 스웨덴 노동부·재무부·기후경제부, "Regeringen tar ytterligare steg för att minska företagens regelbörda," 2024. 7. 1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7/regeringen-tar-ytterligare-steg-for-att-minska-foretagens-regelborda/>, 검색일자: 2024. 7. 25.

668) 스웨덴 기후경제부, "Nytt Förenklingsråd ska minska företagens regelbörda," 2024. 4. 10.,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4/nytt-forenklingsrad-ska-minska-foretagens-regelborda/>, 검색일자: 2024. 7. 31

669) 공공 장소에서 공개 모임 및 공개 행사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경찰청의 허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스웨덴에서 사업을 시작·운영·발전하는 것이 쉽도록 하고, 기업과 기업가가 핵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제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도록 함
 - 그러나 스웨덴 경제개발청(Tillväxtverket)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규제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깨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규제 단순화를 추진
- (내용) 정부는 공격적으로 규제 단순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청의 지원을 받아 11개 기관이 작업을 진행하는 중
- 11개 기관은 노동안정청(Arbetsmiljöverket), 공공보건청(Folkhälsomyndigheten), 스웨덴 해양수자원관리청(Havs- och vattenmyndigheten), 화학물질청(Kemikalieinspektionen), 식품청(Livsmedelsverket), 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 국세청(Skatteverket), 농업위원회(Statens jordbruksverk),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위원회(Styrelsen för ackreditering och teknisk kontroll, SWEDAC), 지질조사국(Sveriges geologiska undersökning, SGU) 등이 있으며, 경제개발청(Tillväxtverket)은 이 작업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음
 - 이 작업에는 기업의 관점, 조건 및 필요에 기반하여 정부의 운영 영역 내에서 규제 간소화를 위한 기회를 매핑하고, 분석한다는 내용이 포함
 - 매핑을 통하여 기업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와 간소화 조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규제를 식별
 - 매핑과 분석을 바탕으로 당국은 자체 규정과 일반적인 조언을 검토하고 단순화
 - 효과적인 단순화 조치를 위해 법률 및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국은 해당 변경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 에바 부시 에너지산업부 장관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검토하여 기업과 기업가들이 핵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라고 언급
- 엘리자베스 스타테손 재무부 장관은 “정부는 현재 스웨덴에서 기업이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규제 간소화”라고 강조

■ 스웨덴 노동부, 소득 기반 실업보험에 대한 설명(2024. 8. 13.)⁶⁷⁰⁾⁶⁷¹⁾⁶⁷²⁾

- 지난 6월 18일 스웨덴 의회는 소득 기반 실업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 시킴
 - 실업보험 개혁은 40년 만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실업보험이 소득 기반으로 된다는 점이며, 보상 수준은 신청자의 소득 손실을 기준으로 제공
 - 즉 보상의 기초가 되는 계산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확실하며 확인이 어려운 근로시간보다 일정한 수입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
 - 따라서 새로운 실업보험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현대화·간소화⁶⁷³⁾되며 부정 수급을 줄여 모두에게 더 많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새로운 제도는 2025년 10월 1일에 도입될 예정
- 정부의 실업보험 기금 개혁은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상을 확실하게 삭감하여 노동 우선 원칙을 강화
 -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한 짧은 기간에 실업에서 고용으로 이동하도록 장려
 -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실업 전의 소득과 실업보험 가입 기간, 실직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상을 받게 됨
 - 실업급여 한도는 3만 4천크로나로 인상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높아짐
 - 실업급여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들
 - 실업급여는 지급일 100일 이후부터 10%p 줄어들고, 200일이 지나면 5%p가 더 줄어들

670) 스웨덴 노동부, "Så stärker den nya a-kassan arbetslinjen," 2024. 8. 13.,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8/sa-starker-den-nya-a-kassan-arbetslinjen/>, 검색일자: 2024. 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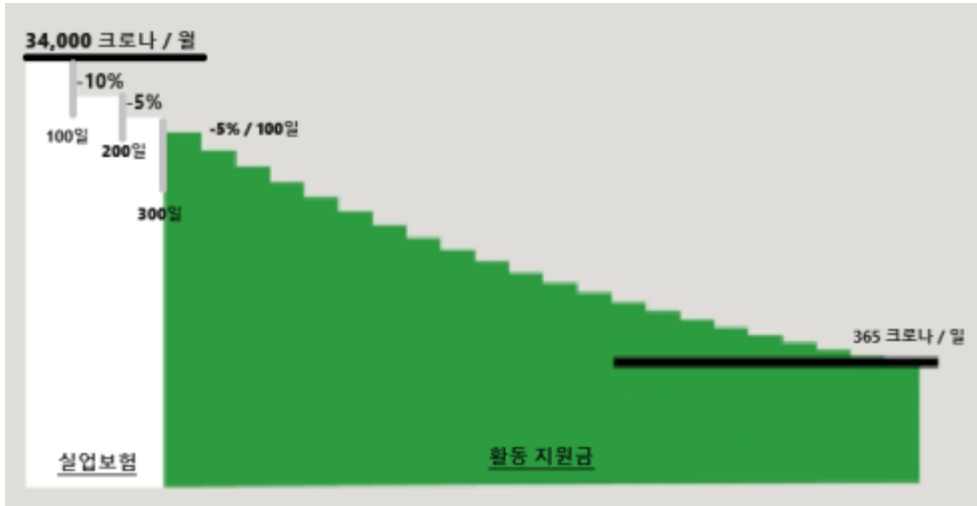
671) 스웨덴 노동부, "Sveriges a-kassor får 50 miljoner kronor till systemutveckling för den nya arbetslöshets försäkringen," 2024. 6. 27.,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6/sveriges-a-kassor-far-50-miljoner-kronor-till-systemutveckling-for-den-nya-arbetsloshetsforsakringen/>, 검색일자: 2024. 8. 22.

672) 스웨덴 노동부, "Frågor och svar om en inkomstbaserad arbetslöshetsförsäkring," 2024. 2. 14.,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2/fragor-och-svar-om-en-inkomstbaserad-arbetsloshetsforsakring/>, 검색일자: 2024. 8. 22.

673) 보상의 기준이 근로 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주가 스웨덴 국세청에 제출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지급 기한인 300일이 지나도 실직 상태인 사람은 활동 지원금(최대 3만 크로나)을 받을 수 있으며 100일마다 5%p씩 감액되어 365크로나까지 지원
 - 활동 지원금의 최소 수준이 1일 기준 223크로나에서 365크로나로 인상
- 정부는 새로운 실업보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5천만 크로나를 지원할 계획

그림 3-Ⅷ-1 스웨덴 소득 기반 실업 보험 및 활동 지원금 지급 기준



자료: 스웨덴 노동부, "Så stärker den nya a-kassan arbetslinjen"의 동영상상을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https://video.qbrick.com/play2/embed/qbrick-player?accountId=3175841&mediald=aca8a329-0c08-47bb-81b5-61d04ee95e9c&configId=qbrick-player&pageStyling=adaptive&autoplay=false&repeat=false&sharing=true&volume&language=sv&pageTitle=regeringen.se>, 검색일자: 2024. 8. 28.

-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중앙정부 채무관리 지침 발표(2024. 11. 7.)⁶⁷⁴⁾⁶⁷⁵⁾
 - (중앙정부 채무 현황 및 전망) 중앙정부 채무⁶⁷⁶⁾는 202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증가하다가 2026~2027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2023년 전년 대비 2%p 감소하여 17%를 기록했으나, 2024년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어 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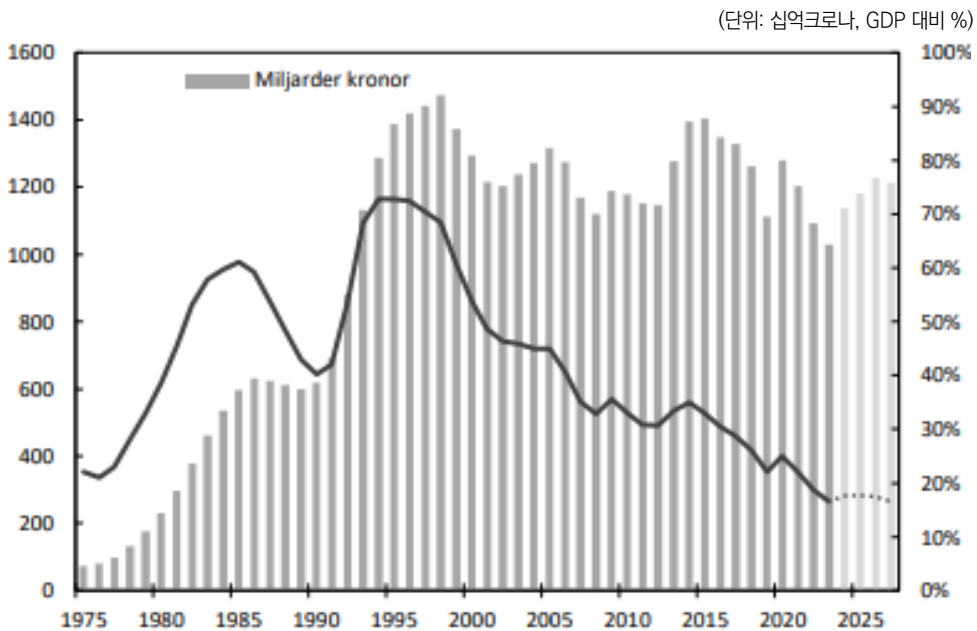
674) 스웨덴 재무부, "Riktlinjer för statsskuldens förvaltning 2025," 2024. 11. 7.,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1/riktlinjer-for-statsskuldens-forvaltning-2025/>, 검색일자: 2024. 11. 21.

675) 스웨덴 재무부, "Riktlinjer för statsskuldens förvaltning 2025," 2024. 11. 7.,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statens-offentliga-utredningar/2024/11/sou-202476/>, 검색일자: 2024. 11. 21.

676) 중앙정부 채무는 스웨덴의 경제발전, 경제 및 재정 정책, 국가 소유 기업의 주식 매각이나 스웨덴 중앙은행의 재대출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27년 GDP 대비 17%로 전망됨
- 중앙정부 총채무 규모는 2024년 말 1,136억크로나로 예상됨
- 중앙정부 총채무는 2025~2026년 매년 약 450억크로나 증가하다가 2027년 이후 매년 100억크로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⁶⁷⁷⁾

그림 3-Ⅷ-2 비통합 중앙정부 채무¹⁾



주: 1) 비통합 중앙정부 채무(Un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debt)에는 중앙정부 기관이 보유한 정부채권이 포함됨
 자료: 스웨덴 재무부, "Riktlinjer för statsskuldens förvaltning 2025," 2024. 11. 7., [Figure 2.1], p. 10.,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16b449caf0654f47b5fd478cb0a3a858/regeringens-riktlinjer-for-statsskulden-2025.pdf>, 검색일자: 2024. 11. 22.

- (2025년 채무관리 지침 변경사항) 채무관리 지침 절차, 국가 부채의 구성, 만기 측정 방식 등이 있음
 - (채무관리 지침 절차) 매년 10월 1일 이전 스웨덴 국채관리국은 채무관리 지침에 대한 제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스웨덴 국채관리국의 국가 채무 관리지침에 대해 결정해야 함

677) 2025년 스웨덴 예산안 총채무 전망에 따르면 환율효과(현재 환율과 차입시 환율을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이), 인플레이션 변화(차입 당시 물가와 비교해 발생하는 차이), 관리자산 변화(일시적으로 화폐시장에 배치된 자금을 의미하며, 국가의 예산 지출을 지급하거나 만기된 채권을 상환할 때 사용) 등에 기인하여 전망

- (변경 전) 매년 10월 1일 이전 스웨덴 국채관리국은 채무관리 지침에 대한 제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함
- (국가 부채의 구성) 실질 코로나 부채⁶⁷⁸⁾는 점차 감소하도록 하고 명목 부채는 인플레이션 차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
- (변경 전) 실질 코로나 부채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의 20%가 되도록 유지, 명목 부채는 환율을 적용하여 인플레이션 차이를 포함하고 계산
- (국가 부채의 만기) 국가부채 만기는 3.5~6년 사이에서 관리, 평균 금리 재설정 기간(Average Time to Refixing; ATR)⁶⁷⁹⁾을 기준으로 측정
- (변경 전) 듀레이션(Macaulay duration)⁶⁸⁰⁾을 기준으로 측정

다. 금리 정책

-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금리는 3.25%로 인하⁶⁸¹⁾(2024. 9. 25.)⁶⁸²⁾
 - (배경) 안정적인 물가상승률과 금리 하락이 스웨덴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있음
 - 2024년 스웨덴 고정금리 소비자 물가지수(CPIF)는 1.7%로 예상되며, 이는 중앙은행의 목표치 2.0%보다 0.3%p 낮은 수준⁶⁸³⁾
 - 2024년 스웨덴 정책금리는 4.0%에서 3.75%, 그리고 다시 3.25%로 인하됨
 - (전망)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과 경제전망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정책금리는 2024년 11월 또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한 차례 더 인하⁶⁸⁴⁾될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상반기에도 추가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

678) 2029년 말까지 실질 코로나 부채는 약 800억코로나 수준으로 예상됨.

679) ATR은 채무 포트폴리오 내 모든 채권의 금리 재설정 기간을 평균적으로 측정한 값. 각 채권별로 금리 재설정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해 계산.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제공

680) 2015년 정부의 지침 결정 이후 듀레이션으로 부채 만기기간을 측정하고 있음. 듀레이션은 채권의 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

681) 정책금리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적용

682)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3,25 procent," 2024. 9. 25.,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sanks-med-025-procentenheter-till-325-procent/>, 검색일자: 2024. 9. 26.

683) 2024년 9월 통화정책보고서 전망 기준

684) 2024년 4분기 중 0.5%p 인하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의 확장적인 전환으로 인해 가계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기업의 투자환경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위험요인)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함
 - 스웨덴의 경제회복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안정성, 코로나 환율과 관련 위험요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경제활동 지원 및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금리를 2.75%로 인하⁶⁸⁵⁾(2024. 11. 7.)⁶⁸⁶⁾
 - (배경) 지난 한 해 동안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통화정책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음
 - 2024년 10월 현재 물가상승률⁶⁸⁷⁾은 1.5%로, 스웨덴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0%를 하회⁶⁸⁸⁾
 - 스웨덴 중앙은행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 금리 인하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정책금리 결정) 2024년 스웨덴 정책금리는 3.25%에서 2.75%로 0.5%p 인하됨
 - (전망)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정책금리는 2024년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인하될 예정
 - 2025년 상반기에도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됨
 - (위험요인) 경제활동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지정학적 불안정성, 주요국 경제정책, 스웨덴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코로나 환율 등으로 인해 향후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이 있음

685) 정책금리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적용

686)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sänks med 0,5 procentenheter till 2,75 procent," 2024. 11. 7.,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tansanksmed05procentenheter-till-275procent/>, 검색일자: 2024. 11. 18.

687) 고정금리 소비자 물가지수(CPIF)

688) 스웨덴 중앙은행, "Inflationsmålet," <https://www.riksbank.se/sv/penningpolitik/inflationsmalet/>, 검색일자: 2024. 11. 18.

표 3-VIII-12 스웨덴 정책금리 인하 경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기준금리	2.50	3.00	3.50	3.75	4.00	4.00	4.00	4.00	3.75	3.75	3.50	3.25	2.75
변동폭(%p)	+0.75	+0.50	+0.50	+0.25	+0.25	0.00	0.00	0.00	-0.25	0.00	-0.25	-0.25	-0.50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 in- och utlåningsränta," 2024. 11. 13., <https://www.riksbank.se/sv/statistik/rant-or-och-valutakurser/styrranta-in-och-utlaningsranta/>, 검색일자: 2024. 11. 19.

- 스웨덴 통계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2.50%로 인하(2024. 12. 19.)⁶⁸⁹⁾
 - (배경) 경기 회복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회복세가 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결정
 - (정책금리 결정) 2024년 스웨덴 정책금리는 2.75%에서 2.50%로 0.25%p 인하됨
 - (전망) 인플레이션과 경제전망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정책금리는 2025년 상반기 한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됨
 - (위험요인) 경제활동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지정학적 불안,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유럽 내 정부위기 재발생 등 대외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작용

표 3-VIII-13 스웨덴 정책금리 인하 경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기준금리	2.50	3.00	3.50	3.75	4.00	4.00	4.00	4.00	3.75	3.75	3.50	3.25	2.75	2.50
변동폭(%p)	+0.75	+0.50	+0.50	+0.25	+0.25	0.00	0.00	0.00	-0.25	0.00	-0.25	-0.25	-0.50	-0.25

자료: 스웨덴 통계청,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2,5 procent," 2024. 12. 1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sanks-med-025-procentenheter-till-25-procent/>, 검색일자: 2024. 12. 20., 표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689) 스웨덴 통계청,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2,5 procent," 2024. 12. 1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sanks-med-025-procentenheter-till-25-procent/>, 검색일자: 2024. 12. 20.

라. 기타 정책

- 스웨덴 재무부·기후경제부,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폐차 프리미엄 제공(2024. 7. 25.)⁶⁹⁰⁾
 - 스웨덴 정부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2024년 8월 20일부터 폐차 프리미엄을 시행하기로 결정
 - 폐차 프리미엄은 내연기관이 장착된 15년 이상 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 또는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개인에게 1만크로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정부는 2025년 말까지 폐기 프리미엄에 2억 5천만크로나의 예산을 배정
 - 기후환경부 장관인 로미나 포우르모크타리(Romina Pourmokhtari)는 “폐차 프리미엄은 운송 부문의 전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스웨덴이 늦어도 2045년까지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신속한 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함
 -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결정한 폐차 프리미엄은 더 많은 가정이 화석 연료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

- 스웨덴 정부 및 국방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46억크로나 규모의 제17차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2024. 9. 9.)⁶⁹²⁾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총 481억크로나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
 - 스웨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17차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여 46억크로나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690) 스웨덴 재무부·기후경제부, “Skrotningspremie till den som skrotar en äldre bil med förbränningsmotor och byter till elbil,” 2024. 7. 2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7/skrotningspremie-till-den-som-skrotar-en-aldre-bil-med-forbranningsmotor-och-byter-till-elbil/>, 검색일자: 2024. 7. 26.

691) 스웨덴 경제기후부, “En tillfällig skrotningspremie införs för att påskynda omställningen av den svenska fordonsflottan,” 2024. 5. 2.,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departementsserien-och-promemorior/2024/05/en-tillfallig-skrotningspremie-infors-for-att-paskynda-omstallningen-av-den-svenska-fordonsflottan/>, 검색일자: 2024. 7. 31.

692) 스웨덴 정부, 국방부, “New military support package to strengthen Ukraine’s defence capabilities,” 2024. 9. 9.,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4/09/new-military-support-package-to-strengthen-ukraines-defence-capabilities/>, 검색일자: 2024. 9. 10.

- 제17차 군사지원 패키지에는 국방 물자 기부, 국방 물자 조달, 재정적 기부를 위한 재정지원이 포함됨
 - (국방 물자 기부) 전투차량(Combat Vehicle 90) 50대, 지상전투용 군사장비, 전투정(Combat Boat 90) 6대 등 약 16억크로나
 - (국방 물자 조달을 위한 재정지원) 전투기(JAS 39 Gripen) 부품 약 23억크로나
 - (재정적 기부) 기금 및 기타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부 약 7억크로나

- 스웨덴 외교부, 레바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8,350만크로나 증액 발표(2024. 10. 9.)⁶⁹³⁾
 - 2024년 스웨덴은 레바논에 총 1억 5,830만크로나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8,350만크로나의 추가 지원 패키지는 UN 난민기구, 레바논 적십자, 세이브더칠드런, UN 레바논 인도적 기금에 분배될 예정
 - (UN 난민기구)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지역의 긴급 지원에 5,300만크로나
 - (레바논 적십자) 응급의료, 혈액은행, 구급차 서비스 지원을 위해 700만크로나
 - (세이브더칠드런) 분쟁지역 어린이 지원을 위해 350만크로나
 - (UN 레바논 인도적 기금) 긴급구호를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위해 2천만크로나

- 스웨덴 국방부, 항공 방어 강화에 50억크로나 이상 투자(2024. 11. 15.)⁶⁹⁴⁾
 - 스웨덴 국방물자청(FMV)은 NATO 지원·조달청(NSPA)과 패트리엇 GEM-T(유도 강화 미사일) 미사일의 공동 조달 계약을 체결
 - 이번 계약은 스웨덴을 비롯하여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의 공동 조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대 1천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하여 총 사업 규모는 약 600억 크로나 수준

693) 스웨덴 정부, 국방부, "Sweden increasing humanitarian support to Lebanon by SEK 83.5 million," 2024. 10. 9.,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4/10/the-military-escalation-in-lebanon-has-had-major-humanitarian-consequences.-sweden-is-therefore-increasing-its-humanitarian-support-to-lebanon-by-a-total-of-sek-83.5-million.-the-support-will-be-divided-between-the-un-refugee-agency-unhcr-the-lebanese>, 검색일자: 2024. 10. 23.

694) 스웨덴 국방부, "Sverige satsar över fem miljarder kronor på stärkt luftförsvar,"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1/sverige-satsar-over-fem-miljarder-kronor-pa-starkt-luftforsvar/>, 검색일자: 2024. 11. 18.

■ 스웨덴 외교부, COP29 기후 재정 패키지 발표(2024. 11. 15.)⁶⁹⁵⁾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⁶⁹⁶⁾)에서 스웨덴의 새로운 기후 재정 패키지를 발표
 - (UN 녹색기후기금) 대규모 녹색 전환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지원,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후 투자 촉진을 위해 2024~2027년 80억코로나 지원
 -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직면한 취약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설립된 기금으로 2억코로나 지원
 - (적응기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1억 3천만코로나 지원
 - (조기 경보시스템)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주도로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천만코로나 지원
 - (국가 기후계획 파트너십) 각국의 국가 기후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위해 3천만코로나 지원
- 스웨덴의 2023년 총 기후 재정 지원 규모는 94억코로나로 나타남
 - 스웨덴의 주요 기후 재정 지원은 주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제개발협력청의 기후 재정 규모는 2022년 43억코로나, 2023년 52억 코로나로 나타남

695) 스웨덴 외교부, "Sveriges finansieringspaket till COP29,"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11/sveriges-finansieringspaket-till-cop29/>, 검색일자: 2024. 11. 21.

696)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됨. 총회는 파리협정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검토 및 이행방안 논의, 기후재정, 기후 적응, 손실 및 피해(Loss and Damage) 등 주요 세계기후 의제를 논의함.

표 3-VIII-14 스웨덴 기후 재정 패키지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코로나)

기금명	목적	지원 금액
UN 녹색기후기금(GCF)	- 대규모 녹색 전환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을 지원하며,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후 투자를 촉진 - 2024~2027년 다년간 지원	8,000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Fonden för att hantera skador och förluster)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직면한 취약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설립된 기금으로 다년간 지원	200
적응기금(Anpassningsfonden)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 2024년부터 지원	130
최빈개도국 기금(Fonden för de minst utvecklade länderna)	- 최빈개도국의 국가 기후 적응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농업, 식량안보, 보건, 물 접근성에 중점 지원	130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 4ALL)	-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주도로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2023년 결정된 6천만코로나 지원 이후 추가 지원	20
국가 기후계획 파트너십(NDC Partnership)	- 각국의 국가 기후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	30

자료: 스웨덴 외교부, "Sveriges finansieringspaket till COP29,"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11/sveriges-finansieringspaket-till-cop29/>, 검색일자: 2024. 11. 21.

표 3-VIII-15 2022~2023년 스웨덴의 기후 재정 규모

(단위: 억코로나)

기후 재정 항목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국제개발협력청(Sida) 기후 재정	43	52
스웨덴 개발금융기관(Swedfund) 기후 자본 조달	3	7
다자간 기후 기금	24	21
개발은행 및 기타	16	14
합계	86	94

자료: 스웨덴 외교부, "Sveriges finansieringspaket till COP29," 2024. 11.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11/sveriges-finansieringspaket-till-cop29/>, 검색일자: 2024. 11. 21.

- 스웨덴 외교부, 다자간 투자기금IV(Multilateral Investment Fund IV, MIF IV)에 기여 결정(2024. 11. 18.)⁶⁹⁷⁾
 - 스웨덴은 다자간 투자기금IV(MIF IV/IDB Lab)의 제4차 재원 조달에 최대 335만 미국달러(약 3,700만코로나)를 지원하기로 결정
 - 다자간 투자기금IV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산하기관 IDB Lab에서 운영하는 기금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민간 부문 개발, 혁신, 기후변화 대응, 양성평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이주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하고 있음

- 스웨덴 국방부, 250억코로나 규모의 전투차량 공동 조달 계약 체결(2024. 12. 6.)⁶⁹⁸⁾
 - 스웨덴 국방물자청(FMV)과 덴마크 국방부 물자 및 조달청(FMI)은 BAE 시스템즈 헤글룬스(BAE Systems Hägglunds)와 전투차량 205대 공동 조달 계약을 체결
 - 덴마크 115대, 스웨덴 50대(우크라이나에 기증한 차량 보충 목적), 우크라이나 40대(덴마크와 스웨덴 공동 기금으로 기증)
 - 스웨덴은 지원 패키지 10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투차량 50대를 이미 기증했으며, 지원 패키지 15를 통해 추가 40대를 기증할 예정

- 스웨덴 외교부, 세계은행 국제개발협력기금(IDA)에 82억코로나 기여 발표(2024. 12. 6.)⁶⁹⁹⁾
 - 스웨덴의 82억코로나 기여금을 통해 국제개발협력기금(IDA)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 기금은 세계 최빈국의 개혁, 투자 및 개발에 활용될 예정
 - 향후 3년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78개국의 19억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
 - 전체 기금의 최소 45%는 기후 대응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

697) 스웨덴 외교부, "Nytt svenskt bidrag till den Multilaterala Investeringsfonden," 2024. 11. 1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1/nytt-svenskt-bidrag-till-den-multilaterala-investeringsfonden/>, 검색일자: 2024. 11. 21.

698) 스웨덴 국방부, "Gemensam stridsfordonsupphandling för 25 miljarder undertecknad," 2024. 12. 6.,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gemensam-stridsfordonsupphandling-for-25-miljarder-undertecknad/>, 검색일자: 2024. 12. 18.

699) 스웨덴 외교부, "Svenskt bidrag om 8,2 miljarder kronor till Internationella utvecklingsfonden," 2024. 12. 6.,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svenskt-bidrag-om-82-miljarder-kronor-till-internationella-utvecklingsfonden/>, 검색일자: 2024. 12. 18.

- 스웨덴 외교부,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위기대응기금(SPUR)에 1억 2천만 크로나 추가 기여 발표(2024. 12. 13.)⁷⁰⁰⁾
 -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위기대응기금(SPUR)에 2023년 6억 크로나 기여한 이후, 추가로 1억 2천만 크로나를 기여
 - 이번 기여금은 공공서비스 유지, 에너지 및 주거 인프라 복구, 교육 강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사용되며, 일부는 몰도바의 긴급 예산 및 에너지 지원에 사용될 계획
- 스웨덴 외교부, 아시아개발기금(ADF)에 2억 5,800만 크로나 기여 발표(2024. 12. 14.)⁷⁰¹⁾
 - 스웨덴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 경제 발전 및 빈곤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개발기금(ADF)에 2억 5,800만 크로나를 기여하기로 결정
 - 기금은 지역 협력 및 통합,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강화, 교육 및 양성평등 등을 중점으로 사용될 예정
- 스웨덴 외교부, 우크라이나 ‘Grain from Ukraine’에 1억 1천만 크로나 추가 지원 발표(2024. 12. 14.)⁷⁰²⁾
 -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곡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억 1천만 크로나를 추가로 지원하며, 총 지원 규모는 7억 1천만 크로나에 이르렀음
 - ‘Grain from Ukraine’ 프로그램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실행되며,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량 안보 취약 지역으로 운송함

700) 스웨덴 외교부, “Svenskt bidrag om 120 miljoner kronor till Världsbankens krisfacilitet för Ukraina och Moldavien,” 2024. 12. 13.,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svenskt-bidrag-om-120-miljoner-kronor-till-varldsbankens-krisfacilitet-for-ukraina-och-moldavien/>, 검색일자: 2024. 12. 18.

701) 스웨덴 외교부, “Svenskt stöd om 258 miljoner kronor till den Asiatiska utvecklingsfonden,” 2024. 12. 14.,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svenskt-stod-om-258-miljoner-kronor-till-den-asiatiska-utvecklingsfonden/>, 검색일자: 2024. 12. 18.

702) 스웨덴 외교부, “Regeringen ger ytterligare 110 miljoner kronor till Grain from Ukraine,” 2024. 12. 14.,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regeringen-ger-ytterligare-110-miljoner-kronor-till-grain-from-ukraine/>, 검색일자: 2024. 12. 18.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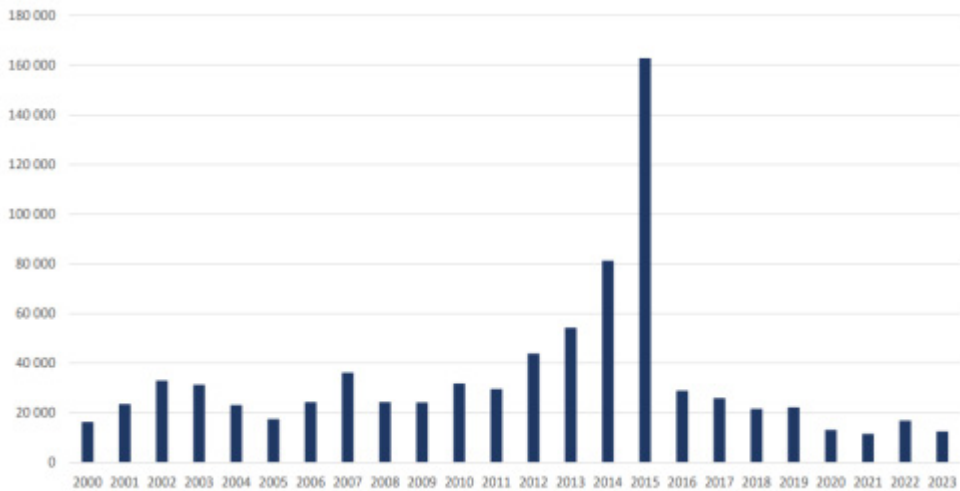
가. 경제 통계

- 스웨덴 법무부, 스웨덴 이민 통계 결과 발표(2024. 8. 8.)⁷⁰³⁾
 - 스웨덴 이민청에 의하면 1997년 이래로 난민 신청자가 가장 적은 해가 될 전망이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순이동(net migration)⁷⁰⁴⁾이 발생
 - EU 난민 신청자 수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었지만 스웨덴의 난민 신청자는 계속 감소
 -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상황으로, 이는 정부의 제한적 이민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
 - 2024년 5월 기준, 스웨덴으로의 전입(immigration) 인구는 15% 감소한 반면, 다른 나라으로의 전출(emigration) 인구는 60% 증가
 - 2023년에는 이라크, 소말리아,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전출이 증가
 - 2024년 7월 28일까지 총 5,600건의 난민 신청이 등록되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7% 감소한 수치(2023년에는 총 약 1만 2,500건 신청)

703) 스웨덴 법무부, "Fler utvandrar än invandrar till Sverige för första gången på över 50 år," 2024. 8. 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8/flu-utvandrar-an-invandrar-till-sverige-for-forsta-gangen-pa-over-50-ar/>, 검색일자: 2024. 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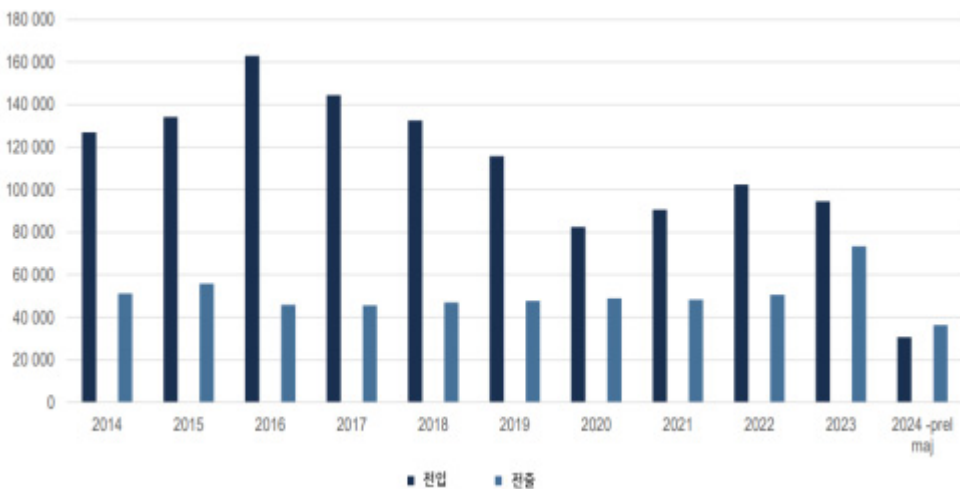
704) 순이동은 1년 동안 특정 지역으로의 이민(immigration, 전입)과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이민(emigration, 전출)의 차이를 말함. 순이동이 (+)이면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다는 뜻이며, 순이동이 (-)이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다는 뜻.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5월까지 스웨덴의 순이동은 (-)로 나타남.

그림 3-Ⅷ-3 스웨덴 난민 신청자 수 추이



자료: Maria Malmer Stenegerd, Migrationsminister, "Migrationen till Sverige 2024," <https://www.regeringen.se/globalassets/regeringen/dokument/justitiedepartementet/presentationer/2024-08/powerpoint-presstraff-8-augusti-.pdf>, 검색일자: 2024. 8. 20.

그림 3-Ⅷ-4 스웨덴 전입과 전출 인구 추이



자료: Maria Malmer Stenegerd, Migrationsminister, "Migrationen till Sverige 2024," <https://www.regeringen.se/globalassets/regeringen/dokument/justitiedepartementet/presentationer/2024-08/powerpoint-presstraff-8-augusti-.pdf>, 검색일자: 2024. 8. 20.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8. 29.)⁷⁰⁵⁾⁷⁰⁶⁾

- 스웨덴의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재고변화의 영향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0.3% 감소
 - (최종 소비 지출) 가계 최종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2%, 일반 정부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1%로 나타남
 - 가계 최종 소비는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2% 감소
 - 일반 정부 소비는 지방정부 소비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0.1% 증가
 - (재고변화) 재고변화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0.6%p로 나타남
 -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은 주로 기계 및 장비, 무기시스템에 대한 투자로 전 분기 대비 1.7% 감소
 - (수출입) 수출이 1.0% 증가한 반면 수입은 0.6% 감소, 순수출은 GDP 성장에 0.9%p 기여

표 3-Ⅷ-16 스웨덴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¹⁾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3Q1	2023Q2	2023Q3	2023Q4	2024Q1	2024Q2
GDP 성장률	0.2	-0.3	0.3	-0.2	0.8	-0.3
가계 최종 소비	-1.8	0.2	0.0	0.5	-0.6	-0.2
일반 정부 소비	0.1	0.3	0.0	0.4	0.3	0.1
총고정자본형성 ²⁾	-0.3	-0.1	0.1	-1.6	0.2	-1.7
수입	-0.2	0.2	-1.6	0.9	0.6	-0.6
수출	1.1	-0.2	1.6	0.3	-0.1	1.0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자료: 스웨덴 통계청, "GDP decreased in the second quarter 2024," 2024. 8. 29., GDP - Expenditure approach 및 National Accounts, quarterly and annual estimates를 참고하여 재구성.

705) 스웨덴 통계청, "GDP decreased in the second quarter 2024," 2024. 8. 29.,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quarterly-and-annual-estimates/pong/statistical-news/national-accounts-second-quarter-2024/>, 검색일자: 2024. 9. 9.

706) 스웨덴 통계청, "GDP Quarterly 1993-2024:2," 2024. 8. 29.,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quarterly-and-annual-estimates/pong/tables-and-graphs/tables/gdp-quarterly/>, 검색일자: 2024. 9. 9.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11. 29.)⁷⁰⁷⁾⁷⁰⁸⁾

- 스웨덴의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재고변화의 영향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0.3% 증가
 - (최종 소비 지출) 가계 최종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0%, 일반 정부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4%로 나타남
 - 가계 최종 소비는 식품 및 비 알코올 음료에 대한 지출 증가는 레스토랑 및 숙박 서비스 지출 감소로 상쇄되어 실질적으로 변동 없음
 - 일반 정부 소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비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0.4% 증가
 - (재고변화) 산업 재고 증가에 기인하여 GDP 성장률에 대한 재고변화 기여도는 0.6%p로 나타남
 - (총고정자본형성) 건물 및 건설 투자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0.3% 증가
 - (수출입) 수출 및 수입은 각각 0.6%, 1.7% 증가하였으며, 상품 순 수출의 부진으로 인해 순수출은 GDP 성장에 -0.5%p 기여함

표 3-Ⅷ-17 스웨덴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¹⁾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3Q1	2023Q2	2023Q3	2023Q4	2024Q1	2024Q2	2024Q3
GDP 성장률	0.2	-0.3	0.3	-0.2	0.8	-0.3	0.3
가계 최종 소비	-1.8	0.2	0.0	0.5	-0.6	-0.2	0.0
일반 정부 소비	0.1	0.3	0.0	0.4	0.3	0.1	0.4
총고정자본형성 ²⁾	-0.3	-0.1	0.1	-1.6	0.2	-1.7	0.3
수입	-0.2	0.2	-1.6	0.9	0.6	-0.6	1.7
수출	1.1	-0.2	1.6	0.3	-0.1	1.0	0.6

주: 1) 계절 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자료: 스웨덴 통계청, "GDP decreased in the third quarter 2024," 2024. 11. 29., GDP - Expenditure approach 및 National Accounts, quarterly and annual estimates를 참고하여 재구성

707) 스웨덴 통계청, "GDP increased in the third quarter 2024," 2024. 11. 29.,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quarterly-and-annual-estimates/pong/statistical-news/national-accounts-second-quarter-2024/>, 검색일자: 2024. 12. 20.

708) 스웨덴 통계청, "GDP Quarterly 1993-2024:3,"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quarterly-and-annual-estimates/pong/tables-and-graphs/tables/gdp-quarterly/>, 검색일자: 2024. 12. 20.

주요 자료 출처

- 미국 -

- 미국 감사원(GAO), <https://www.gao.gov>
- 미국 관리예산처(OMB), <http://www.whitehouse.gov/omb>
- 미국 노동부, <https://www.dol.gov>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https://www.bls.gov>
-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Briefing Room, <http://www.whitehouse.gov/briefing-room/signed-legislation>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https://www.bea.gov>
- 미국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
- 미국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
- 미국 의회예산처(CBO), <https://www.cbo.gov>
-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appropriations.house.gov>
- 미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
-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http://www.crfb.org>

- 일본 -

- 일본 내각관방, <https://www.cfa.go.jp>
- 일본 내각부, <http://www.cao.go.jp>
- 일본은행, <https://www.boj.or.jp>
-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
- 일본 정부통계 종합창구, <https://www.e-stat.go.jp>
- 일본 총리실, <https://www.kantei.go.jp>
-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

- 독일 -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공동경제전망, <https://gemeinschaftsdiagnose.de>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
-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 https://www.bmbf.de/DE/Home/home_node.html

-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https://www.bmas.de>
- 독일 재정 안정화위원회, <http://www.stabilitaetsrat.de>
- 독일 연방은행, <https://www.bundesbank.de/de>
- 독일 연방 의회, <https://www.bundestag.de>
- 독일 연방 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독일 연방 정부, <http://www.bundesregierung.de>
- 독일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설부, <https://www.bmwsb.bund.de>
- 독일 연방 통계청, <http://www.bundesregierung.de>

- 프랑스 -

-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
- 프랑스 사회보장서비스포털, <http://www.securite-sociale.fr/>
-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
- 프랑스 의회, <https://www.assemblee-nationale.fr/>
- 프랑스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
- 프랑스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https://www.hcfp.fr/>
-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default.asp>

- 영국 -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and-sport>
- 재무부(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prime-ministers-office-10-downing-street>
-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https://www.nao.org.uk>
-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https://obr.uk>
- 의회(UK Parliament), <https://www.parliament.uk>
- 중앙은행(Bank of England), <https://www.bankofengland.co.uk>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 호주 -

-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https://www.dcceew.gov.au>
- 호주 보건 및 노인부, <https://www.health.gov.au>
- 호주 예산안, <https://budget.gov.au/content/documents.htm>
- 호주 의회, <https://www.aph.gov.au>
-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 <https://www.infrastructure.gov.au>
- 호주 재무부, <https://treasury.gov.au>
- 호주 재정부, <https://www.finance.gov.au>
- 호주 중앙은행, <https://www.rba.gov.au>
- 호주 총리실, <https://www.pm.gov.au>
- 호주 퀸즐랜드 정부, <https://www.qra.qld.gov.au>
-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

- 네덜란드 -

- 네덜란드 은행, <https://www.dnb.nl/en>
- 네덜란드 재무부, <https://www.rijksfinancien.nl>
- 네덜란드 정부, <https://www.government.nl>
-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https://www.cpb.nl/en>
- 네덜란드 통계청, <https://www.cbs.nl/en-gb>

- 스웨덴 -

- 스웨덴 국방부(Försvars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orsvarsdepartementet>
-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 <https://www.konj.se>
- 스웨덴 노동부(arbetsmarknads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arbetsmarknadsdepartementet>
- 스웨덴 사회부(social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socialdepartementet>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https://www.riksbank.se>
- 스웨덴 재무부(Finans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
-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s://www.regeringen.se>
- 스웨덴 통계청(Statistikmyndigheten), <https://www.scb.se>

2024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4년 12월 24일 인쇄

2024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이 영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다원기획(044-865-8115)

I S S N 2093-3541

재정 동향

2024 | 하반기